

History of Korea Statistics

한국통계발전사

경제통계

위대한 숫자의 역사

미래로 통하는 빛, 통계



통계(統計, statistics)라 하면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속성이 규정된 집단의 현상을 숫자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통계는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속성과 그에 따른 제반 현상을 수치 정보 형태로 보여 줍니다. 또한 'Statistics'의 어원이 라틴어 'Status'(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통계는 '수치화된 한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계를 이용하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지의 발달과 역사 발전은 그 과정에서 통계적 인식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그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시기의 통계를 파악하고 그 시기 이전과 이후의 통계는 또 어떠한지를 '변화' 혹은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는 일에는 비교적 무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 디딤돌이 되어 주는 적절하고도 유익한 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통계를 한눈에 살펴보는 『한국통계발전사』를 1992년에 처음 편찬하였습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왔고 이러한 변화를 알고 수용하면서 그동안 괄목할 만한 통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새로운 시각과 체계로 한국통계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처음 선보였던 초판과 이번 개정판을 비교해 보면, 그간 우리나라 통계발전의 폭과 속도를 실감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개정판은 '분야사'편과 '시대사'편으로 나누어 발간하였습니다. '분야사'편은 통계일반과 국가승인 통계 분야를 중심으로 총 2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계정책, 통계조직은 물론 인구·가구통계, 물가·가계통계 등 각 부문의 통계발전을 담았습니다. 한편 '시대사'편에서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국통계의 패러다임 한 대목을 형성하는 시기를 7개 부문으로 구획하여 통계발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판 『한국통계발전사』는 '분야사'와 '시대사'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한국통계의 개설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통계발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과 대학의 통계학 강좌의 교재,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 그리고 통계이용자와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주로 각 통계부문에 대해 정통한 전직 공무원과 현직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 분들이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자료 발굴이나 역사적 연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또한 숨겨진 통계역사 자료를 발굴 분석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통계도 알아야 읽는 재미가 더해지는 법. 분야사의 경우 각 부문마다의 개요를 그리고 시대사의 경우에는 각 시대의 도입(intro)을 읽고 난 후에 통계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한국통계발전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이란 인고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원고를 써 주신 집필진들과 편찬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원고내용의 감수 등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관계기관과 담당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해온 통계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통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국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로 통하는 빛, 통계청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015년 12월

통계청장 유 경 준

유 경 준

경제
통계



	제1장		농림어업	006
	제2장		광공업 · 에너지	040
	제3장		건설 · 주택 · 토지	084
	제4장		교통	122
	제5장		정보통신	150
	제6장		도소매 · 서비스	170
	제7장		경기	204
	제8장		기업경영	244
	제9장		국민계정	276
	제10장		재정 · 금융	314
	제11장		무역 · 국제수지	352

경제통계

제1장

농림어업

1. 개요

2. 발전과정

3. 주요 농림어업통계의 발전과정

4. 맺음말

01

개요

의의

•• 농림어업은 식량을 비롯한 인간의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본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고려시대에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이앙법의 보급으로 그루갈이가 행해졌으며 고추, 호박, 감자 등 외래작물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광복 후에는 농업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수립·시행되어 왔다. 1962년부터 6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행하면서 단계적인 농업증산 및 식량증산계획이 실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전개와 더불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등 영농의 과학화를 꾸준히 추진한 데 힘입어 괄목할 만한 농업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고 이른바 녹색혁명을 통한 쌀의 자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80년대는 저환율·저금리·저유가 등 소위 3저 호황에 힘입어 1986~1989년 3년 연속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자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의 압력이 거세졌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과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국내외 농림어업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식량자원의 관리와 농림어업인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림어업통계는 관련 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를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의 합리화와 과학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국제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시장에서의 비관세장벽 철폐 및 쌀시장 개방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에 따른 쌀 관세화 유예기간(1995~2004) 재협상(2004)을 통해 10년간 연장하고 2015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산지쌀값조사 통계가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었다. 또한 국민의 주식으로서 중요한 쌀의 안정적인 공급관리 및 물가안정 등 정책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쌀 예상생산량조사 및 생산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어업통계는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직접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전략의 핵심지표로 활용되어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위와 종류

●● 농림어업통계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대분류 농업·어업 및 임업에 관련된 통계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농림어업총조사를 비롯한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통계, 농림어업의 생산물 및 생산비통계, 농가, 임가 및 어가의 수입 및 지출통계 등이 포함된다.

농림어업통계의 종류는 1960년까지 농업 6종, 임업 2종, 어업 3종 등 11종의 통계가 작성되었으나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수요의 증가로 2015년 3월 현재 농업 30종, 임업 9종, 어업 10종 등 49종의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이를 작성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38종,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11종을 각각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주기별로는 1년 주기가 30종으로 가장 많고, 5년 주기가 8종, 월별 주기 및 2년 주기도 각각 5종, 3종이다. 농업을 보면, 30종 중 중앙행정기관이 22종,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8종으로 지자체가 상당수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어업과 임업의 경우 19종 중에 중앙행정기관이 16종이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3종으로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의 농림어업통계 작성현황(2015. 09)

부문별 · 기관별	계	작성 주기						
		월	분기	반기	1년	2년	5년	
농업	중앙행정기관	22	3	1	-	16	-	2
	지자체 · 공공기관	8	1	-	-	1	3	3
임업	중앙행정기관	9	-	-	-	7	-	2
어업	중앙행정기관	7	1	-	2	4	-	-
	지자체 · 공공기관	3				2		1
계	49	5	1	2	30	3	8	

*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는 '농업'에 포함

국제동향

●● 농림어업통계 전반에 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이다. 1950년부터 세계 12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5~10년 주기로 농업총조사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FAO는 체계적인 국제적 식량수급 관리 및 곡물가격 안정 등 방향 설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농업 전반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1986년 AGROSTAT(현 FAOSTAT)을 구축하였다. 그 후 1994년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 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다수의 위원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비하기 위한 통계적 접근 및 발전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농림어업통계의 과학화를 위해 FAO 및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원격탐사기술을 활용하여 농림어업통계를 작성하는 기법을 연구해왔다. 1972년 미국이 지상관측위성 랜드샷(Landsat)을 발사하고 농업생산통계에 대한 위성영상의 이용을 추진한 이래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지면적 및 주요 작물 재배면적을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통계를 작성·활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원격탐사기술의 농업통계활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에는 최초로 경지면적조사의 실용화에 성공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주요 작물의 생산량조사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격탐사기술을 적용한 통계생산 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이러한 연구 작업에 착수하여 기초 연구 및 DB를 축적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각 국별 농어업 규모가 줄어들고 이에 대한 투자가 격감함에 따라 UN과 세계은행 등이 공동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 및 농촌통계 개선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마련하고, 2010년 UN 통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각 권역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2013년 각 국가에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서는 FAO 아·태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글로벌전략 지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국가의 농어업통계 문제점 등을 포함한 국가통계 수준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가지고 시범 국가 선정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해 현지에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농촌 및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아·태지역 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전략의 주요 내용은 국가별·부처별 상이한 농어업통계의 차이 해소 및 비교가능성·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① 국제기구 보고 핵심자료 생산 ② 농촌 및 농업통계의 국가통계시스템과 통합 ③ 관리 및 통계역량 강화 3가지의 핵심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3대 전략 중 ‘국제기구 보고 핵심자료 생산’과 관련하여 국가간 비교가능한 표준지표체계(농어업생산량, 경지면적, 수출입, 가축, 투입량, 가격, 농어촌 인프라 등)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 지표의 생산을 위해서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FAO 아·태지역 사무소에서는 아·태지역 통계연수소 등을 통해 추진과정과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우수사례 등을 각 국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2 발전과정

• 『한국중앙회보』에 따르면 1908년 농가구, 농가인구, 미곡, 맥류, 콩 등의 재배면적과 수확량 그리고 소, 말의 사육 마리수와 양잠과 뽕밭 등을 조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1910년부터 8년간 ‘토지조사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세부 측량이 실시되어 토지에 관한 통계가 완전히 정비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정책 목적에 따라 통계가 작성되었다.

광복 후에는 농업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1949년에는 「토지개혁법」에 의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농촌 및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농촌진흥법」 등이 차례로 제정 시행되었다. 1962년 이후에는 6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농업증산 또는 식량증산 계획과 새마을운동의 실시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농업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여 쌀의 자급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농업통계조사는 농정목적에 따라 1950년대에는 농촌부흥, 1960년대에는 식량증산, 농촌근대화 등을 위해 보완되었다. 1970년대에는 식량자급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특히 1974년부터는 통계조사 실시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 신설된 농업통계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통계조사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마련되고, 이때부터 대부분의 조사가 행정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방법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농업소득원 다각화, 1990년대에는 정보화에 따른 농촌의 복지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를 작성할 목적으로 통계조사가 실시되었다.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계기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통계기반 정책기반 정책평가제도의 실시로 각 부처가 정책추진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생산된 통계를 연대별로 보면 1960년대에는 농업총조사 등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통계 등 9종이 생산되었으며, 1970년대는 식량자급과 다양한 농림어업 분야의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무려 46종의 통계가 생산되었다. 1980~1990년대에는 농업소득의 다각화, 농촌의 복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22종의 통계가 생산되었고, 2000년대 이후는

어업 관련 통계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단위 통계 등 60종의 통계가 생산되었다. 이와 같이 생산된 137종의 통계 중 2015년 9월 현재 계속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49종이다.

연대별 농림어업통계 현황(2015. 09)

구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농업	생산통계	82	6	28	-	6	5
	계속통계	31	5	10	-	3	4
임업	생산통계	35	1	12	3	12	-
	계속통계	9	-	4	1	-	-
어업	생산통계	20	2	6	-	1	1
	계속통계	9	1	3	-	-	1
계	생산통계	137	9	46	3	19	6
	계속통계	49	6	17	1	3	5

* 1940년대 생산된 3종(중지통계)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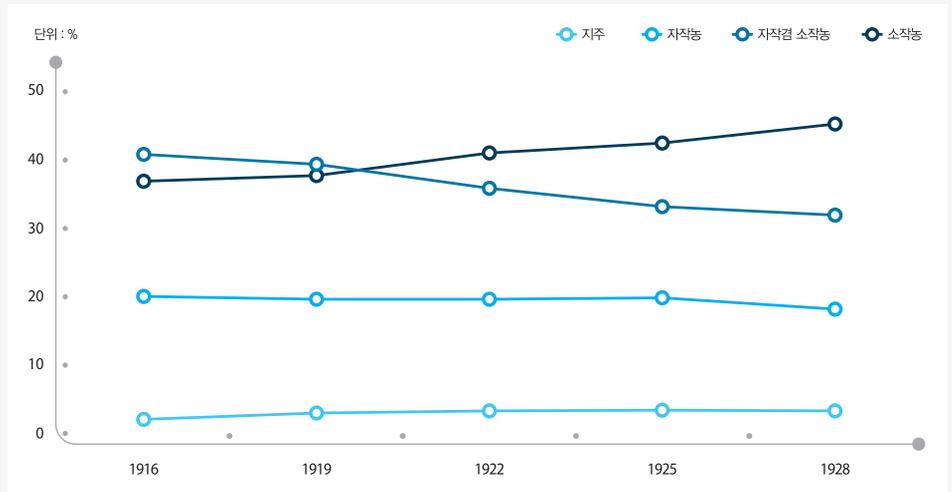
식량 수탈 기반으로서의 농림어업통계(광복 이전)

1906년에 조선에 통감부가 설치된 후 일본인 지주·자본가에 의한 토지 매수가 진행되었다. 1908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조선의 국유지와 민유지를 매수·약탈하였다. 1910년에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임시토지조사국 관제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총독부는 토지조사의 목적을 ‘지세 부담의 공평’, ‘소유권의 보호’, ‘생산력 증진’ 등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국인 소유의 토지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어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식민 통치의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일제는 1910년 4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 조사, 토지가격조사, 지형·지목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으로 지주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전통적으로 농민들이 누려왔던 관습상의 경작권, 도지권 등을 부정함으로써 대다수의 한국 농민들은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식민지 지주제와 소작 제도를 강화하여 식량수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후,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탈 정책으로 1920년부터 산미증산 계획을 실시하였다.

한편, 일제는 1908년에 ‘삼림법’을 제정하고 토지조사사업이 끝나갈 무렵에 ‘임야조사령’(1918)을 공포하여 임야의 수탈에 나섰다. 이때 일제가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것은 토지소유권 조사였다. 이 시대의 통계들은 대부분 총독부의 병합 및 통치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통계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총독부 농림국이나 식산국에서 농림어업통계를 작성하였다. 농지, 농가 및 농가인구 등 주요 농업 관련 현황 자료를 수록한 『통계연보』를 1906년부터 1942년까지 매년 발간하였다. 토지개량사업 현황과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1907년부터 1916년까지 매년 『조선토지개량사업요람』에 수록하였다. 1920년부터 산미증산 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1921년부터는 매년 조선의 경지, 작물별 생산량, 가축사육현황 등을 파악 수록한 『조선의 농업』을 1942년까지 발간하였으며,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매년 쌀 증산계획 및 실적을 파악하고 『조선산미증식계획』의 실적을 총독부 농림국에서 발간하였다.

농가경영별 지주와 농민 구성 비율



출처: 신형식 외 『신한국통사』 주류성, 2014

농가경영별 지주와 농민 구성 비율

(단위: %)

연도	지주	자작농	자작 겸 소작농	소작농
1916	2.5	20.1	40.6	36.8
1919	3.4	19.7	39.2	37.6
1922	3.7	19.7	35.8	40.8
1925	3.8	19.9	33.2	42.2
1928	3.7	18.3	32.0	44.9

출처: 신형식 외 『신한국통사』 주류성, 2014

주요 농림어업통계(일제강점기)

통계 또는 보고서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작성기간	주요내용
조선토지개량사업 요람	권업모범장	매년	1907~1916	토지개량사업 현황 및 실적
통계연보	한국통감부 총독부	매년	1906~1908 1909~1942	농지, 농가 및 인구 등 주요 농업 관련 일반현황
조선에 있어서 미(米)이외의 식용작물	총독부 식산국	3회한	1921, 1923, 1925	쌀 대체식량 개발 위한 작물현황
조선산미증식계획의 실적	총독부 농림국	매년	1933~1938	쌀 증산계획 및 실적
농업통계표	총독부 식산국농무과	매년	1923~1928 1929~1940	농지, 농가 및 인구 등 주요 농업관련 일반현황
조선의 농업	총독부 식산국 총독부 농림국	매년	1921~1932 1933~1942	경지, 작물별 생산량, 가축사육현황 등
조선소작연보	총독부 농림국	2회한	1937, 1938	소작쟁의 현황파악
조선농지관계 휘보	총독부 농림국	1회한	1939	농지 관계 현황 등
조선농지연보	총독부 농림국	1회한	1940	농지 일반현황 등
연초경작계약실적보고	총독부 농림국	매년	1940	재배면적, 조합별 경작허가개소 등

농림어업통계의 과학화(광복 이후~1960년대)

●● 농림어업통계의 경우에도 광복 이후 한동안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농림어업통계 보고서식을 따라 지방 읍면에서 작성하여 시군 및 도를 통하여 보고되었다. 1947년 6월에는 미군정청에서 동법령 제143호를 공포하고, 이 법령에 의하여 농업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작물생산량 및 각종 농림어업통계를 심의 결정케 하였다.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농림부 직제 제정으로 장관 비서실에 조사통계과를 설치하여 경지면적, 농가구, 농가인구 등 농업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물통계, 가축통계, 양잠통계 등을 작성하였다. 1950년 3월 농림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309호)으로 조사통계과가 차관실 직속으로 개편되었다. 1953년 7월부터 농가의 농업경영 및 경제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농촌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나, 1954년부터 한국은행과 분리하여 농림부에서 농가경제조사와 농작물생산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958년 부흥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가 설립되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때 계획 수립에 필요한 농업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비로소 농업통계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1958년 4월 한·미 간 합의에 의해 미국의 국제협력처(ICA)에서 한국농업통계 제도와 통계조사 활동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미국의 통계고문단이 5년 계약으로 내한하였다. 주요 자문내용은 통계제도, 통계조사방법 등 농업통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통계고문단의 자문을 받아 1958년부터 농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미국,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1961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농업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농가경제조사, 미곡생산량조사 표본을 설계하여 과학적인 농업통계 표본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64년 1월에는 1961년 표본조사구에 배치했던 농가경제조사원 90명 중 우수한 통계조사원 11명을 선발하여 시도에 1명씩 배치하고 11명의 조사원을 새로 채용하여 농가경제조사 지구에 배치하였다. 이때 시도에 배치된 통계요원이 1974년 지방 농업통계 전담조직 설치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9년에는 FAO의 통계전문가를 초빙하여 1970년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 가축통계, 경지면적과 작물통계 등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자문을 5년간 받았다. 농업통계 개선을 위해 1971년 조사원 및 통계요원 중 잡급직을 정규화하고 지방행정기관(시도 및 시군)에 배치된 통계요원은 내무부 소관 정원으로 하고 인사권은 농림부장관이 관장하였다.

이 시기는 농어업통계 표본의 기본 틀이 되는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이상 ‘농림어업통계조사로 통합’)와 ‘작물통계’(현 ‘재배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로 분할), ‘가축통계’(현 ‘가축동향조사’), ‘농작물생산비조사’(현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등 주요통계가 작성되는 중요한 시점이었으며 또한 농업총조사가 최초로 작성되는 역사적인 시기였다.

주요 농림어업통계(광복 이후~196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작성기간*	주요내용
조림실적 및 활착상황보고	산림청	매년	1946~2008	수종별·재원별·소유별 조림면적 및 본수
농업기본통계조사	농림부	매년	1948~계속	경지면적, 농가, 인구
어업기본통계조사	농림부	매년	1948~계속	어로형태, 어선보유현황 등
작물통계조사	농림부	매년	1948~계속	작물면적, 생산량
가축통계조사	농림부	분기	1948~계속	사육가구수, 성별·연령별 마리수 등
양잠통계조사	농림부	매년	1948~계속	양잠가구수, 면적 등
어업생산동향조사	농림부	매월	1948~계속	어구어법, 어업법 어(품)종별 생산량 등
농촌실태조사	농림부, 한국은행	1회한	1953	농가경제생산비 등
농산물생산비조사	농림부	매년	1954~계속	작물별 생산비 등
농가경제조사	농림부	매년	1954~계속	농가소득, 자산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조사	농업진흥공사	매년	1955~계속	농업 생산기반시설, 수리시설현황 등
농업총조사	농림부	5년	1960~계속	농업경영, 농가수 등
농작물생산조사	농림부	매년	1965~계속	작물별 생산량 등
어가경제조사	농림부	매년	1967~계속	어가소득, 자산 등

* 처음 작성된 후 다른 통계와 통합되었거나, 명칭 변경된 통계는 계속으로 표시하였음

농림어업통계의 정교화(1970~1990년대)

이 시기는 농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활용되는 농업통계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이에 농림부는 1971년 11월 직제 개정 시 농업통계 전담부서인 조사통계과를 국 단위인 조사통계관실로 확대 개편하였다.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조사통계관실을 두고 그 하부에 작물통계담당관실과 경제통계담당관실을 두었으며 정원은 79명으로 하였다.

이후 1973년 3월 정부조직 개편(법률 제2041호) 시 1974년 1월 조사통계관실을 농업통계관실로 개편하면서 농업통계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고 통계조사의 정확성 확보와 객관적 조사를 위한 독립된 조사 기구를 지방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전국적인 농업통계 기구와 조직을 갖추었다. 이 독립전담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첫째, 농업통계제도의 확립이다. 농업통계 업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분리하여 통계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둘째, 농업통계정보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농업통계는 각 행정 분야에서 통일되지 못한 채 자연발생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농수산부에서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생산,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통계를 과학적인 표본조사 기법을 도입하여 표본조사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한다.

농업통계 전담 지방조직으로 도 단위에 9개소의 도 농업통계사무소와 시군 단위에 139개의 시도 농업통계출장소를 설치하고 내무부 소관 정원인 1349명이 농수산부 정원으로 이체되었다. 그리고 국립농업경제연구소로부터 농업관측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새로이 농산물 유통통계조사 업무를 착수하였다. 1990년 3월에는 전국 시군에 설치된 농업통계 출장소가 142개소로 확대되었다.

한편, 1978년 4월 직제개정으로 수산통계 업무가 수산청에서 이관되면서 농업통계관실은 농수산통계관실로 개칭되어 차관 직속으로 두게 되었다. 그 소속부서로 농산통계담당관실, 수산통계담당관실, 경제통계담당관실, 유통통계담당관실을 두었다. 1978년 5월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통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농수산통계 전문가 10명 내외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던 농수산작황 통계심의위원회를 농수산통계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어업통계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1991년에는 각 도사무소에 중계 컴퓨터를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http://www.epis.or.kr>)

설치하였고, 1992년 9월 농업통계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 농림수산정보센터를 설립하여 1994년 10월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구축하고 대농업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농수산부 직제개정에 따라 농수산통계관실을 농수산통계정보관실로 명칭이 바뀌고 그 소속부서도 통계관리담당관실, 생산통계담당관실, 유통통계담당관실, 통계정보처리담당관실로 변경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통계정보기능을 강화하여 전산실을 통계정보처리담당관실로 격상시키고 수산통계기능은 생산통계담당관실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표본조사기법 및 통계작성 기법들이 고도화되면서 농어업통계가 크게 발전하게 된 시기이며 또한 산림기본통계 등 주요 임업통계들이 작성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하다.

1996년 8월에는 해양수산부가 발족함에 따라 어업통계 4종(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어가경제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이 농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에 이관되고 인원도 이체(본부 4명, 지방 86명)되었다.

1997년에는 농림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998년 7월 농업통계 업무 중 5종(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양곡소비량조사)의 통계가 통계청에 이관되고 농업통계인력도 410명이 이체되었으며 해양수산부의 어업통계 4종도 통계청에 이관되고 어업통계인력 90명도 이체되었다.

주요 농림어업통계(1970~199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작성기간*	주요내용
어업총조사	농림부	5년	1970~계속	어업종사자, 어업경영 등
농기계보유현황	농림부	매년	1975~계속	경운기 등 농기구 보유상황
도축감사보고	농림부	매월	1975~계속	품종별 도축실적 등
우유 및 유제품생산소비상황	농림부	매월	1975~계속	우유생산 수급상황 등
산림기본통계조사	산림청	5년	1975~계속	산림면적 변동상황 등
국가산림자원조사	산림청	5년	1981~계속	입목식생 등 산림자원 현황
독입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	산림청	매년	1989~2008	독입가 현황 등
주요임산물 생산실태조사	산림청	1회한	1990	임산물 재배현황 등
화훼류 재배현황	농림부	매년	1998~계속	화훼재배 및 생산현황 등
농업기계화율조사	농림부	2년	1998~2005	농기계이용현황 등
어항개발현황	해양수산부	매년	1997~2008	어항건설비 투자액 등
국내목재생산 및 유통실태조사	산림청	5년	1992~1999	수종별 생산 및 판매량 등
농지임대차조사	농림부	매년	1998~2008	임대차 면적, 임대료 등
축산물 생산비조사	농림부	매년	1999~계속	축종별 생산비 등

* 처음 작성된 후 다른 통계와 통합되었거나, 명칭 변경된 통계는 계속으로 표시하였음

농림부 본부의 통계조직은 농업정보통계관 밑에 통계기획담당관실, 정보화진흥담당관실, 경영유통정보담당관실로 직제가 조정(4개 담당관실 → 3개 담당관실)되었고 지방 농업통계조직과 지방 농산물검사소 조직이 통합되고 농림부 본부의 생산통계담당관실에서 관장하던 농업통계조사 기능을 국립농산물검사소의 농업정보통계과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조직은 9개도 농업통계사무소와 142개 시군 출장소, 11개 농산물검사소 도지사 및 118개 시군 출장소가 통합되어 6개 도지사(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와 80개 시군 출장소가 되었다. 통합으로 인한 지방통계 인력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880명에서 1208명으로 672명이 감축되었다.

1999년 5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내 정보 관련 부서인 정보화진흥담당관실과 경영유통정보담당관실이 통합되어 정보화담당관실이 되고, 농업정보통계관실 정원도 37명에서 5명이 감축되어 32명이 되었다.

농업통계조사 관장기관인 국립농산물검사소는 1999년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되고 정원도 2000년까지 383명(통계, 검사 등 인력)이 감축 조정되었다.

농림어업통계의 고도화(2000년 이후)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부에서 조사하던 조사통계 14종이 통계청에 이관되고 인력도 667명(농업경영체 경영실태조사 조사원 110명 별도)이 이체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업통계 2종(어업생산동향조사, 어류양식 생산비조사)이 이관되고 인력 32명(무기계약직 114명 별도)이 이체되었다.

농림어업통계 작성 조직 변천

구분	1947	1966	1978	1996	1998	2008
농업통계		농림부		농림부	통계청, 농림부	통계청, 농식품부
임업통계	농무부	산림청	농수산부 산림청	산림청	농림부, 산림청	통계청, 농식품부, 산림청
수산통계		수산청		해양수산부	통계청, 해양수산부	통계청, 해양수산부

2008년 2월 농어업통계의 이관 후 통계청은 농어업통계조사 효율화를 위해 유사통계를 통합폐합하는 한편 ICT 기술의 발달에 부응하여 CASI, CATI 등 전자 조사방법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경지면적조사에 원격탐사기술을 적용·실용화하는 등 조사방식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시기는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작성해 오던 통계를 국가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농림어업통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통계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계생산의 효율성과 조사방식 선진화를 도모함으로써 농림어업통계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 농림어업통계(2000년대 이후)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작성기간*	주요내용
농업면적조사	통계청	매년	2009~계속	논밭 등 경지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임업총조사	산림청	5년	2005~계속	임업경영 현황 등
귀농귀촌통계조사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2013~계속	지역별 귀농 및 귀촌인구, 연령 등

* 처음 작성된 후 다른 통계와 통합되었거나, 명칭 변경된 통계는 계속으로 표시하였음

통계청 이관 통계 현황

분야	이관 통계(농식품부·해양수산부 → 통계청)		이관 후 정비	
	1998	2008	내역	결과
기본 구조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통합)	농림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통합)	농림어업조사
경제 · 경영	농가경제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신설·통합)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축산물 생산비조사			
	어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생산	농업경영체 경영실태조사 (미승인)		(폐지)	
	농지임대차조사		(폐지)	
	어업생산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경지면적조사			농업면적(경지·재배면적)조사
	작물통계조사			농작물생산조사
	가축통계조사			가축동향조사
복지	과수실태조사		(폐지)	
	농어촌주민의 삶의질 만족도조사		(폐지)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조사 (미승인)		(폐지)	
	양곡소비량조사			양곡소비량조사
기타	농가판매 및 구입 가격조사			농가판매 및 구입 가격조사
	농업농촌동향 모니터링조사 (미승인)		(폐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실태조사 (미승인)		(폐지)	
	산지쌀값조사(미승인)		방법개선 → (승인)	산지쌀값조사(승인)

* 어업생산동향조사는 2003년에 해양수산부에 이관되었다가 2008년에 다시 통계청으로 이관됨

** 2013년 농촌진흥청 이관

03 주요 농림어업통계의 발전과정

●● 농림어업통계는 다양한 농림어업 정책 수립과 농림어업인·단체 등의 경영의사 결정 지원, 농림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을 위해 2015년 9월 현재 49종의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이 중에서 통계의 연혁, 중요성,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산림기본통계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등 8종의 중요 통계를 선정하고,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목적은 우리나라 농가, 임가 및 어가의 기본구조 현황과 변동추세를 파악하여 농업, 임업, 수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읍면동 단위까지의 소지역 통계를 생산하는 것에 있다. 또한 농림어업 경영 단위의 현황과 변동추세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과 농림어업 종합개발 계획 및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농업총조사'는 세계농업센서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업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1960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어업총조사는 1970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그 이후 농림부에서는 '농업총조사'와 '어업총조사'를 1990년까지는 매 10년마다 연도 끝자리가 '0'인 해에 실시하여 왔으나, 1995년 WTO 체제의 출범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총조사 이후로는 5년 주기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산림청에서도 임업에 관한 기본구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98년에 '임업총조사'를 처음 실시하였다. 농어업 관련 주요조사 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처음 실시된 2000년 기준 '농어업총조사'는 농업총조사와 어업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였고 이후 5년 주기로 실시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실시해오던 임업총조사는 2004년에 통계청으로 이관되었고, 통계청에서는 2005년 기준 조사에서 임업총조사까지 통합하여 농림어업총조사로 실시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업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이다.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조사된 농림어가의 기본정보 및 특성을 기초로 하여 표본조사의 표본들을 구축한다. 이렇게 구축된 표본들은 대부분의 농림어업 통계조사의 표본추출틀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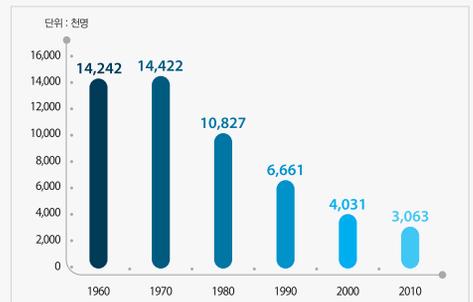
●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본부 현판식(2010)

발전과정

●● 우리나라는 1950년 세계농업센서스에 참가하기 위해 제반 준비를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6·25전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후 FAO의 권고에 따라 1960년부터 총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조사는 연도 끝자리가 '0'이 되는 해에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조사를 실시한 다음해로부터 5년이 되는 해(끝자리가 '5'가 되는 해)에 간이총조사를 실시하였다. 역사적인 첫 조사는 '농업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1961년 2월1일에 실시하였다. 경지 10a(1000㎡)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대적인 조사기법을 도입하였으며, 88개 항목을 이장 및 독농가(모범농가) 2만 5681명을 동원하여 조사하였다. 첫 국세조사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농업통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 농업센서스는 1970년 12월 1일 기준으로 경지 10a(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고등원에·특용작물 각각 3a 이상, 과수·묘목 각각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 소·젓소·고기소를 각각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토끼 40마리 이상·가금 3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꿀벌 5군(통) 이상을 치는 가구, 누에씨 12g 이상의 소잠농가, 복합경영한 농업수입이 10만 원 이상 되는 가구, 가구원 중 연간 농업노동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동일인이 계속 30일 이상 임금농업노동에 종사한 가구 등의 규정에 하나만 해당되면 조사대상이 되었다.

농업센서스는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농업조사란 명칭으로 현실에 맞는 131개의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1970년 12월1일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이용해 초등학교 교사 2만 5762명을 동원하여 조사하였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 농업통계의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였으며 1970년대 농정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 농업센서스는 '농업조사란



● 개인농가인구

명칭으로 142개 항목을 선정하고 1980년 12월11일 기준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독농가 경영주 2만 350명을 동원하여 조사하였다. 1980년 농업센서스의 조사대상은 1970년의 농업센서스에서 규정한 조사대상 중 '복합 규정한 농업수입 10만 원 이상 가구'는 경제적 여건과 농산물의 변화가 있으므로 이 규정을 개정하였다. 복합경영한 연간 농업수입이 각 규정보다 많은 가구에서 가구의 가구원 중 연간 노동일수 90일 이상인 가구, 동일인이 계속 30일 이상 임금농업노동에 종사한 가구는 농가부문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고용 부문에서 조사할 문제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85년 간이농업센서스는 98개 항목을 통계공무원을 동원하여 1985년 12월1일 기준으로 농업기본통계조사에 해당되는 조사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990년 농업센서스는 '농업총조사'란 명칭으로 1990년 12월1일 기준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부녀회장, 독농가 경영주 중에서 2만 2353명을 선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현재 경지(논, 밭, 수원지) 10a(300평) 이상, 과수나 묘목은 각각 7a(667m²) 이상 재배하는 가구, 대가축(한우, 젃소, 고기소) 1마리, 중가축(돼지, 면양, 산양 등) 3마리 이상, 소가축(토끼),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4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또는 꿀벌 5군 이상을 치는 가구, 그리고 연간 농업수입이 4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995년 '농업총조사'는 1995년 12월1일 기준으로 조사원 2만 105명을 동원하여 조사대상 농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1995년은 농업총조사 간이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이나 대내 외적인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화시대 개막에 따라 총조사 규모로 실시하였으며 농가정의도 판매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어업총조사'는 '농업총조사'보다 10년 늦은 1970년 12월1일을 기준으로 '총어업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원 704명을 동원하여 최초로 실시되었다. 그동안은 어업가구, 어업인구, 어업종사자, 어업의 형태, 어선보유현황 등 수산정책수립 및 각종 수산통계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읍면, 시군, 시도의 행정기관을 통해 중앙까지 보고되어 왔다.

1970년 최초 '총어업조사'는 조사 실시 전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나 양식업을 1개월 이상 경영한 사업체(개인경영, 공동·회사경영)와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직접 자기 어업을 하지 않고 타인이 경영하는 해면 어업사업체에 어업종사자로서 고용된 자가 있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최초 총어업조사가 성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어업기본통계조사, 어가경제조사, 어업경영조사 등 각종 수산통계의 표본조사 설계에 필요한 모집단 구축이 가능해졌음은 물론 어업의 생산구조, 취업상황 및 어민의 생활상태 등 각종 기본지표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어업통계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1980년 12월1일 기준 총어업

조사에서는 내수면 어업 및 수산연관시설 조사를 추가하였으며, 1990년 기준 총조사에서는 '총어업조사'를 '어업총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실시되던 '농업총조사'와 '어업총조사'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1998년 7월1일자로 소관업무가 통계청에 이관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2000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통계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 조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준농가 및 준어가 조사는 농어업 법인사업체조사를 신규 개발하여 대체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임업의 기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1999년 처음 실시하였던 '임업총조사'도 감사원 권고로 2004년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5년 기준 조사부터 농업, 어업, 임업 3개 부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농림어업총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조사를 더욱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실시하였다. 농업, 임업, 어업의 상호 관련 항목을 동일시점 기준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조사를 통해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농림어업통계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FAO의 WCA 2010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양식품종별 경영형태 등을 신설하고 지역조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농림어가 조사 대상 소득기준을 연간 1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농림어업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추어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였다.

총조사의 발전과정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농림어업총조사'는 1960년 기준 '농업국세조사'를 시작으로 1970년 '총어업조사', 1999년 '임업총조사'로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국가통계 기능정비 등에 따른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등 농수산 분야의 기본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되면서 2001년에는 2000년 기준 농어업총조사로 통합 실시되고, 2005년 기준 조사는 '임업총조사'를 포함한 '농림어업총조사'로 통합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농림어업통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조사 기법 등 축적된 기술자문을 외국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1993년에 중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농업통계 및 농업센서스 지원국가로 지정되었고 그해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전문가가 중국에 파견되어 자문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1994년 3월에는 한중 농업통계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1997년



•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홍보대사 위촉식

중국농업센서스 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3년 동안 농림부 및 학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지원하였다. 이후 2012년까지 총 9년간 농업통계기술지원을 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 변천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조사명칭	농업국세조사	농업조사	농업조사	농업총조사	농어업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시점	1961.02.01	1970.12.01	1980.12.11	1990.12.01	2000.12.01	2010.12.01
조사원	이장 및 독농가	초등학교 교사	이장, 새마을 지도자, 독농가	이장, 새마을 지도자, 독농가	이장, 채용조사원	이장, 채용조사원
농가정의	① 경지 (논,밭) 10a(300평) 이상 경작 하는 가구	① 좌동 ② 고등원에, 특 용작물을 100평 이상 재 배하는 가구 ③ 과수나 묘 목을 200평 이상 재배하 는 가구 ④ 대가축(한우, 젖소, 고기소)을 1마리 이 상 직접 사육하는 가구 ⑤ 중가축(돼지, 산양, 면 양)을 3마리 이상 직접 사 육하는 가구 ⑥ 소가축(토 끼) 40마리 이상 직접 사 육하는 가구 ⑦ 가금(닭, 오리 등) 30마리 이상 직 접 사육하는 가구 ⑧ 꿀벌 5군 이상 치는 가구 ⑨ 누 예씨 12g(1상자) 이상 소 잡한 가구 ⑩ 복합경영한 농업수입이 1만 원 이상인 가구 ⑪ 가구원 중에서 연 간 노동일수 90일 이상 같 은 사람이 계속 30일이상 임근농업노동에 종사한 사 람이 있는 가구	①~⑧ 좌동 ⑨ 연간 총 수입 중 복합경영한 농업수입이 위의 각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로 하여 ①~⑧ 중 어느 한 가지만 해당되는 가구	① 좌동 ② 시설작물 3a(약 100평) 이상 직접 경 작하는 가구 ③~⑧ 좌동 ⑨ 삭제 ⑩ 위 호별 규모 이외에 연간 농업수 입이 4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 하는 가구	① 좌동 ② 연간 농축 산물의 판매금 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 하는 가구 (단, 판매금액 이 50만 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 원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① 좌동 ② 조사대상기간 (1년) 중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③ 2010. 12. 01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조사항목	농가구, 농가인구, 경지 및 토지, 작물(일반, 과실, 시설), 가축 및 가금, 수리시설, 비료, 농기구, 농업고용	농가구, 농가인구, 경지 및 토지, 작물(일반, 과실, 시설), 가축 및 가금, 수리시설, 비료, 농기구, 농업고용, 지붕개량 및 연료	농가구, 농가인구, 경지 및 토지, 작물(일반, 과실, 시설), 가축 및 가금, 수리시설, 비료, 농기구, 농업고용, 농산물판매, 지붕개량 및 연료	농가구, 농가인구, 경지 및 토지, 작물(일반, 과실, 시설), 가축 및 가금, 수리시설, 비료, 농기구, 농지임차	농림어가구, 농림어가 인구, 경지, 토지, 판매금액, 경영형태, 주요시설 및 면적, 논벼(유기비료, 비료, 농사 방법) 등	농림어가구, 농림어가인구, 경지, 토지, 판매금액, 경영형태, 주요시설 및 면적, 논벼(유기비료, 물관리, 농사 방법) 등
의의 및 특징	FAO의 권고에 따라 제1차 농업센서스를 실시	조사결과를 읍면까지 집계 공표	부가조사로 지역조사 실시	영농형태, 농지임차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추가	농업총조사와 어업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	농어업총조사와 임업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

농림어업총조사 명칭 변경

연도	농업부문	어업부문	임업부문
1961	제1차 1960 농업국세조사		
1970	제2차 농업센서스	제1차 총어업조사	
1975	간이농업센서스		
1980	제3차 농업조사	제2차 총어업조사	
1985	간이농업센서스	간이어업조사	
1990	제4차 농업총조사	제3차 어업총조사	
1995	제5차 농업총조사	제4차 어업총조사	
1999			제1차 임업총조사(1998 기준)
2001	제6차 농업총조사(2000 기준)	제5차 어업총조사(2000 기준)	
2006	제7차 농업총조사	제6차 어업총조사(2005 기준)	제2차 임업총조사(2005 기준)
2010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개요

●● 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가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림어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 조사는 농림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분석 및 평가와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기준일은 12월 1일이며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내의 가구 중 조사기준일 현재 농가·임가·어가이다. 2014년 기준으로는 약 8만 3000여 농림어가가 해당된다.

발전과정

●● 농업조사는 '농업기본통계조사'라는 명칭으로 1949년 농림부에서 행정계통을 통한 전수·보고통계로 작성하였다. 조사 대상은 12월말을 기준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가구로 조사내용은 국적별, 전겸업별, 업태별, 경지규모별 농가수와 국적별, 남녀별, 연령별, 농가인구 그리고 경지는 등록지, 미등록지, 논밭 면적 등이다. 이 조사는 1974년부터 표본조사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되었다. 어업조사는 1948년 '어업기본통계조사'라는 명칭으로 어업가구, 어업인구, 어업종사자, 어업의 형태, 어선보유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1970년까지 어촌계에서 수산업을 생업으로 경영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행정계통을 통하여 보고하는

전수·보고통계로 유지되다가 1971년에 1970년 어업센서스를 토대로 한 표본조사로 전환하였다. 조사기관을 보면 수산청에서 작성하다가 1978년 농수산부 직제개편으로 농수산부로 조사업무가 이관되었으며, 1996년 해양수산부가 발족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199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되었다. 농업기본통계조사와 어업기본통계조사는 2008년 조사명칭을 농업조사와 어업조사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 임업조사를 개발하고 기존의 농업조사와 어업조사를 농림어업조사로 통합하였다.

산림기본통계조사

개요

●● '산림기본통계조사'는 산림자원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림기본계획 및 각종 산림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작성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한 해 동안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의 증감사항을 조사하고 매년 말 기준의 산림면적과 임목축적량을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전국 산림에 대하여 소유별, 소관별, 지종별, 임야별, 임상별, 영급별 임야면적과 임목축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임목·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임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임목·죽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등이다.

조사사항은 ① 소유 및 소관, ② 임지 및 임상, ③ 영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유는 국유림·민유림으로 구분하고 국유림은 다시 산림청소관의 영림서 임업시험장, 임업육종연구소 및 도 소관 국유림과 대부 국유림, 타 부처 소관의 국유림으로 세분하고, 민유림은 다시 공유림과 사유림으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산림면적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군구 행정조직에 의해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감소내역(전용, 정정, 지적변동)과 증가내역(신규 산림조성, 지적복구, 정정, 지적변동)이다. 임목축적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 본부에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일정 간격의 고정표본점(2010, 약 4000개)을 배치하여 5년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집된 고정표본점 자료와 최근 제작된 임상도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통계기법에 의해 산출한다. 임목축적 조사항목은 수종, 본수, 직경, 밀도, 형질급, 영급, 경급, 수고, 5년간 성장량, 수피, 치수(어린나무) 등이다.



● 산림기본통계(2011)

발전과정

•• ‘산림기본통계조사’는 일제의 침략과 더불어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임적 조사에 의해 실적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1917년부터 광복 이전까지 행정통계조사에 의해 매년 실시되어 왔다. 광복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자료를 기초로 행정통계 방식을 유지 하였으나 1960년과 1961년에는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영림서 소관 국유림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조사통계로 실시하였다. 1962년부터는 산림자원의 추정을 위해 전국에 걸쳐 산림자원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970년에 들어서면서 치산녹화 사업으로 인해 임지 및 임상이 급속히 변화하여 왔기 때문에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제1차 전국산림실태조사’를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시행하고, 1975년 3월에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제2차 산림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7년간에 걸쳐 ‘제3차 전국산림자원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때 7년 주기 지역별 순환조사로 변경하였다. 1996년 국가지정통계로 승인된 이후 산림청은 10년마다 산림자원현황을 조사하였다. 정확한 산림기본통계를 작성하고 산림기본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를 지역별 순환조사로 실시하여 오다가 2006년부터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전국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임목축적 산출방식을 간접추정에서 직접추정으로 하는 통계작성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자료는 지역별 행정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매년 공표되고 있다.

농업면적조사

개요

•• ‘농업면적조사’는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 수급안정계획의 수립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10년을 주기로 전국의 전체 농경지정보를 파악하고 나아가 정확한 경지면적과 작물재배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조사표본의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경지총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표본설계에 기반하여 매년 경지면적의 현황과 증감사유를 파악하는 경지면적조사 및 주요 작물의 생육시기별로 매회 표본조사구에서 재배되는 모든 작물을 조사하는 작물재배면적조사로 이루어진다.

한편, ‘농업면적조사’는 다른 농업통계에 비해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동안 농업통계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경지여부와 변동사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 및 면적 등을 확인하여야 했기 때문에 다수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업통계생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격탐사기술의 활용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아리랑 2호 위성의 발사 성공으로 본격적인 자국 위성영상 활용 시대가 개막되면서 항공·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농업통계의 과학화는 물론 저비용·고효율의 농업통계 생산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발전과정

●● '농업면적조사'는 농업기본통계조사의 일환으로 정부수립 이전부터 행정보고 계통을 통하여 작성되어 오다가 1967년 경지면적조사와 작물재배면적조사로 분리되면서 '농업기본통계 및 경지면적조사'는 지정통계 승인번호 11405호로 '작물재배면적조사'는 지정통계 승인번호 11404호로 지정되어 명확한 법적근거를 구비하게 되었다.

한편, '농업기본통계조사'가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오다 1973년 표본조사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경지면적조사'도 표본으로 실시하고자 토지대장, 농지소표, 지적도 등을 이용하여 약 113만 6000개의 조사단위구를 설정하고 지목 및 작물재배형태 등을 반영하여 1973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4만 5000개의 표본조사 단위구 설정을 완료하였다. 1974년에 그간 실시해 온 행정조사를 표본조사로 대체하여 통계기법에 의한 농업면적통계를 작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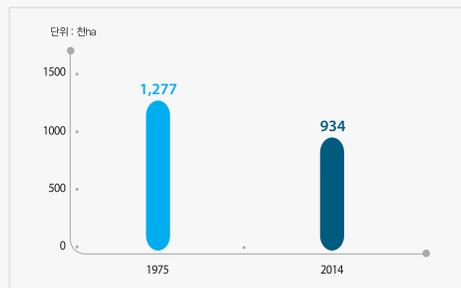
이후 대규모 간척 및 개간사업 등에 따른 경지의 증감 및 주요 작물재배체계의 변화 등 표본의 노후화로 표본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4년부터 1985년까지 전국 각 시군의 지적도를 참고하고 전국 농경지를 현지 답사하여 1987년에 표본을 교체하였다. 이후 대략 10년을 주기로 '경지총조사'를 실시하여 면적표본 설계를 갱신하여 왔다.

1999년에는 그동안 상호 이질적이라고 지적되었던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경지변동에 대한 조사를 분리하여 농업면적통계의 독자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마늘·양파 등 주요 작물의 주산지별로 시군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재설계하여 2006년에 표본을 교체하였다. 또한 경지면적과 작물재배면적의 연계 및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작물재배면적조사'를 농작물생산조사에서 분리하고 '경지면적조사'와 통합하여 '농업면적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현장조사에 의한 통계 작성을 탈피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업통계를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미국은 1972년 지상관측위성 랜드셋을 발사한 이후 농업통계에 위성영상의



● 농업면적조사

이용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주요 작물의 경작지도 구축 및 생육상황을 관측하여 왔다. 또한 EU도 1990년대부터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유럽 전역의 토지이용과 토지피복 및 식량생산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연구를 바탕으로 통계청에서는 2008년 원격탐사 기술의 농업통계 활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면적조사', 쌀 생육모니터링 및 생산량 통계에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12년 이후 '경지면적조사'를 현장조사에서 원격탐사로 조사방법을 전환·공표하고 있으며, 2014~2015년 '경지총조사'를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국의 경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을 복사하여 현장 답사하는 데 따른 인력·예산의 비효율을 크게 극복하였다. 앞으로 통계생산방식의 과학화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작물생산조사

개요

•• '농작물생산조사'는 매년 조사된 작물별 재배면적을 기초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시기별로 해당 작물의 수확기에 실시한다. 지역별, 작물별 승수를 적용하여 전국 및 주산지, 시도단위에 대한 작물별 생산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작물의 수급계획을 세우고, 농가소득을 지원하며,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통계이다. 쌀 등 수급 상황 및 이에 따른 가격변동 등이 중요성을 가지는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및 조사결과에 대한 민감도가 덜하고 정확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청취조사를 하고 있다.

통계생산과정을 살펴보면, 쌀, 마늘, 양파 등 15개 주요 작물 및 과수는 통계청에서 지방청을 통하여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그 외 중요도가 덜한 32개 작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를 통한 보고통계로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표본조사 작물의 경우 논벼, 밭벼는 표본조사구역(3m²)의 벼를 베어 탈곡, 손질하고 이를 건조한 후 왕겨를 벗겨(제현) 현미 무게를 측정하여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을 산출하며, 콩은 표본조사구역(3m²)의 생꼬투리를 따거나 그루로 베어 말린 후 탈곡·손질하여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을 산출한다. 또한 감자는 표본조사구역(3m²) 내의 감자 전부를 캐어 생감자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산출하며, 채소류는 표본조사구역(3m²) 내 조사용 재료의 중량을 실측하여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을 산출한다. 맥류(겉·쌀·맥주보리), 고추, 참깨, 사과, 배는 경작지를 대상으로 면적 청취조사 방법으로 각 작물별로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에 표본조사하여 추계한 작물별 재배면적을 곱하여 작물별 생산량을 산출한다.

그리고 행정조사에 의한 작물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취 조사한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에 표본조사하여 추계한 작물별 재배면적을 곱하여 작물별 생산량을 추정한다.

모집단은 경지총조사를 통해 전국의 경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시군별, 읍면동별 인접 지번을 약 2ha 내외의 크기로 묶어 93만 1000개의 모집단 조사구를 설정하였고, 이를 표본설계의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였으며 조사구 설정 시 등록지뿐만 아니라 하천부지 같은 미등록지라도 경지로 이용되면 포함하였다.

발전과정

이 통계는 정부수립 이전부터 행정보고에 의하여 행정통계로 작성하여 왔다. 작물의 재배면적조사와 10a당 수량조사는 1973년까지는 읍면 직원이 읍면 단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이용하여 경지를 번지 순으로 약 2ha 크기로 묶어 표본설계용지에 이기하여 조사하였다. 이런 방법을 1973년까지 적용하여 오다가 1974년부터는 표본조사 방법으로 전환하여 2회에 걸쳐 논벼, 밭벼, 감자, 고구마, 콩, 팥의 재배면적을 조사하였고 1979년부터는 4회로 품목을 확대하여 전 품목에 대하여 표본조사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쌀 생산량의 경우 논벼 관개시설별로 재배면적, 10a당 생산량, 수확량을 1952년부터 1964년까지 행정보고 계통에 의한 보고통계에 의해서 전수조사하였으며, 1965년부터는 쌀 단위(10a)당 생산량조사가 표본조사로 대체되었다. 1973년부터 미곡의 단위당 수량조사는 제현기, 현미선별기, 수분측정기, 현미 친립중 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현미 중량을 조사하고 현백률 92.9%로 환산하여 백미수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1974년부터는 콩, 팥의 단위당 수량을 표본조사로 실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2010년에는 친립중과 기상을 변수로 하는 중회귀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쌀 예상생산량 추정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쌀 수급관리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였다.

어업생산동향조사

개요

‘어업생산동향조사’는 연근해 해역과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변동을 파악하여 수산물의 수급정책, 한·일, 한·중 어업협정, 수산자원 회복사업, 원양산업 육성 등 수산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및 수산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의 연구 분석 및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업생산동향조사’는 크게 연근해(일반) 어업, 천해양식어업 및 원양어업, 내수면 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 1972년



● 어업생산동향조사

까지는 수협단위조합의 행정통계인 위판량 자료에 일정비율의 미위판량 자료를 합산하여 연근해(일반) 어업생산량과 천해양식 어업생산량을 작성하고 내수면 어업생산량은 행정계통을 통하여 전수로 조사하였으나 지금은 전국 수협에서 운영하는 위·공판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통 판매량과 표본어가를 대상으로 비계통으로 이루어지는 개인판매량을 조사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어업협정 및 수산정책 수립 시 주요 대상으로서 표본오차가 큰 어종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원양어업생산량은 원양산업협회에서 해양수산부에 제공한 기초자료를 수산 DB와 연계하여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발전과정

●● ‘어업생산동향조사’는 1948년 농림부 수산국에서 연근해 및 천해양식고에 대한 행정통계를 내용으로 하는 ‘어업생산고조사’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1950년대 들어서 원양어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1963년 ‘원양어획고조사’가 행정통계에 포함되었으며 1966년에는 ‘어업생산고조사’가 수산청 어정국으로 이관되면서 ‘내수면어업조사’를 신설하고 대게, 꽃게 등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1970년은 ‘어업생산고조사’가 정부지정통계 제24호로 지정되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1972년부터 1978년까지는 「어업생산고 조사규칙」(농림부령 제445호 1971. 02. 09)에 의거하여 위판량과 미위판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위판량은 수협 공동어시장 및 수협중앙회 산하 공판장의 위탁판매량을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보고하는 계통판매된 어획량을 조사하였고 미위판판매량은 어촌계를 통하여 전수조사 방법으로 행정계통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1978년 4월 수산청에서 농림수산부로 조사업무가 이관되었다. 그리고 위판량은 계통생산량, 미위판량은 비계통생산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979년에는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업의 수산물 비계통생산량조사를 표본조사로 대체하기 위하여 어촌계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설계하고 1980년부터 2년간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설계에 사용한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여 표본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전수조사와 대비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 1980년, 1990년 어업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본

개편을 하였고 1993년부터는 125개의 조사구를 확률비례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어업생산동향조사'는 19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발족함에 따라 농림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1998년 7월에는 정부직제 개편으로 통계청에 이관되었다가 2003년에 다시 해양수산부로 재이관된 후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차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작성하는 등 소관부처의 변동이 컸다. 그동안 조사항목은 시대적 상황 및 정책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세부 변화내용은 표(어업생산동향조사의 주요 변천내용)와 같다.

어업생산동향조사 변천

연도별	주요 변천내용
1926년	포경어업, 연근해어업 조사 시작
1950년대	원양어업 생산량조사 추가, 기타 조기, 도루묵, 망둑어류, 학꽂치 조사
1960년대	천해양식, 내수면어업생산량 조사 추가, 굴류, 대게, 꽃게, 보리새우 등 추가
1970년대	보리멸, 아귀 등 추가
1980년대	국제포경위원회(IWC) 결의에 따라 포경어업 조사중단해면(100종): 어류 50, 갑각류 8, 패류 17, 해조류 12 등내수면(27종), 원양어업 45
1990년대	부세, 홍어, 붉은대게, 정새우류 등 추가
2000년대	전수대상품종 추가(전복, 가리비류, 김, 미역, 어류, 굴류, 미더덕, 우렁쉥이, 다시마, 툫, 파래, 매생이, 흰다리새우, 오만둥이, 청각, 매생이, 파래) 2008에 전수 12종을 표본으로 전환(김, 미역, 다시마, 툫, 청각, 파래, 매생이, 전복, 굴, 미더덕, 오만둥이, 우렁쉥이) 표본조사품종(고등어를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로, 소라고둥을 소라와 고등류로) 분리 굴양식을 전수조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 전수표본으로 전환 양식품종 중 홍합을 비계통 표본조사에서 양식품종 표본조사로 변경
2010년대	수협 계통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 비계통(표본) 조사의 조사방법에 CATI 추가, 섬지역 조사대상처의 조사방법 다양화, 어가의 정의를 농림어업총조사와 동일하게 변경, 우렁쉥이의 모집단 조사기간을 2월에서 1월로 조정

농가경제조사

개요

●● '농가경제조사'는 농업의 재생산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농가경제의 동향과 경제사회의 변천에 따르는 농림산업의 구조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농업경영의 개선, 농가소비 수준의 측정, 농가경제지표 및 패리티지수 산출 등을 통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국민소득 추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농가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매달 일계부를 배부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입토록 하는 조사이다.

'농가경제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제조사표와 농가원부로 구분

하여 조사한다. 농가경제조사표는 표본 농가에 비치된 영농일지를 참조하여 농업경영 및 가계운영에 따른 매일의 수입·지출내역을 경영주와의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며 농가원부는 표본농가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초, 분기, 연말(자산 변동 시 수시 조사) 농가의 자산 및 부채 상태를 경영주와의 면접을 통하여 조사한다.

이 조사 결과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액 및 「식물방역법」에 의한 생계안정비용 지원액의 산출, 농업손실 보상 시 보상액 산출(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이농비, 보상 시 보상액 산출(농가 가구당 연간 가계지출액), 국유재산 대부료율 및 대부재산 평가액 산출(시도별 단위경작면적당 농업총수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발전과정

•• 6·25전쟁으로 인해 파폐한 농촌경제의 실태와 농가의 소비수준을 파악할 목적으로 1953년 1월부터 농림부는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농촌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954년에는 '농촌실태조사'를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초기의 '농가경제조사'는 표본수가 모집단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어서 대표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1961년 초에 주한 통계고문단에게 표본설계를 의뢰하여 확률통계이론에 의한 표본설계로 대표성과 신뢰도를 높여 1962년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1973년에 1970년 농업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개편하였으며 농가경제조사의 기본적인 표본설계 방법은 1961년과 동일하나 표본수를 종전의 전국 80개 조사지구 1182호의 표본농가에서 전국 160개 조사지구 2518호의 표본농가로 확대하였다. 1982년에는 1980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래의 활용도가 적었던 지역별 통계 대신 지대별·영농형태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전국 단일 모집단으로 전국 200개 조사지구 2000호 표본농가를 새로운 표본을 설계하여 1983년부터 시행하였다. 1986년에는 1980년 농업총조사 및 1985년 간이농업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대별·영농형태별로 표본설계를 갱신하였다. 1997년에는 서울대 통계연구소에서 1995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영농형태별·도별 지역통계가 산출 가능하도록 표본을 설계하고 표본농가를 선정하였다. 1998년 7월1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2003년과 2008년에는 각각 표본개편과 함께 조사표 및 지침서를 개정하였다.



● 농업통계 응답자 간담회(2014)

농가경제조사 변천

연도	주요 변천내용	특이사항
2002 이전	1993 농업구조, 영농형태 변화 반영	영농실태, 주요농산물소비량 및 재고량, 재배의향 파악 가능
	1982 지역별 통계 대신 영농형태별, 지대별 통계생산을 위해 표본 총화	
	1973 표본수 증가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 통합
2003	가구구분 신설	도시가계와 연계 원부로 이동
	가족현황 수입, 지출항목 조정	
2004	투입내역에서 생산년도 추가	
	작물재배현황에서 구분항목 추가	
2005	토지단가조사에서 차용지는 제외 무형자산 평가기준 조정 : 구입가격 → 시장가격	
2006	건물, 기계기구비품에서 생산비부담 비율란 축소	
2008	산업분류 및 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품목 등 조정	
2009	판매 및 관리비 항목 신설	국제기준에 의한 비교성 제고
	개인별 소비지출 목적분류(COICOP)에 의한 품목분류 개편	
2011	작물 축소(105 → 72개)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조사 농업노동투입내역 작물별 통합, 농산물생산비 투입내역 통합	
2013	가계부 현행 조사내용 세분화	행정자료와의 연계 시작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연금수혜자 등 , 조합원 여부 등 추가 • 친환경작물 구분, 조세, 부담금, 이자 등 지출 카드 추가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개요

●● '농축산물 생산비조사'는 농업경영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업정책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항목을 농가경제조사 일계부와 원부에 통합하여 조사한다. 일계부는 표본농가에 일계부를 비치하여 매일 매일의 농업경영 및 가계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내역, 농업노동 투입내역, 농산물생산비 투입내역 등을 농가에서 직접 작성하고 조사담당자가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농가원부는 표본농가의 자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의 재산상태를 조사담당자가 경영주와의 면접을 통하여 연 2회(자산변동 시는 수시로) 조사한다.

이 조사는 농가경제조사 대상 표본으로 추출된 농가 중에서 작물별로 일정 규모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축산물생산비는 7종 가축에 대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생산비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발전과정

•• '농산물 생산비조사'는 농축산물의 적정가격의 유지와 농업경영 개선 등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얻음 목적으로 1954년부터 '농가경제조사와 같이 시작되었다. 1954년부터 1960년까지는 지대별 규모별 지표를 감안하여 평야부, 중간부, 산간부의 3개 층으로 구분하여 전국에서 16개 마을을 유의선정하고 각 지구에서 기장능력이 있는 농가를 영세농에서 4농가, 소농에서 3농가, 중농에서 2농가, 대농에서 1농가 계 10농가씩 160 표본 농가를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논벼, 보리, 쌀보리, 밀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정확성 및 신뢰성 문제로 공표는 하지 못하였다. 1961년부터는 현대통계이론에 입각하여 확률비례 층화추출방법으로 전국에서 12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농가경제조사와 동일 농가에서 조사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1962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3년, 1977년, 1982년, 1986년 표본 개편을 통하여 통계를 발전시켜왔다. 199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통계청에서 작성하다가 2009년에 축산물 생산비조사와 통합하여 농축산물 생산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비조사는 공식승인통계가 아닌 보고서 형식으로 1966년부터 농업진흥청(1966~1967), 농림수산부(1968~1974), 한국축산단체연합회(1975~1976), 국립농업경제연구원(1977~1978), 축산진흥회(1979~1980), 축협중앙회(1981~1997) 등을 거쳐서 1994년에는 농림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였고, 1999년에 지정통계로 지정되었다. 2008년에 통계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2009년에는 축산물 생산비조사의 가축 7종과 통합하고 과수 4종을 추가하여 농축산물 생산비조사로 통합되었다. 2010년에 농산물 생산비조사의 2종(쌀보리, 참깨) 및 과수 4종(사과, 배, 포도, 감귤)이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었다. 통계청에서는 농산물 생산비조사 5종(쌀, 콩, 고추, 마늘, 양파), 축산물 생산비조사 7종(한우 번식우, 한우 비육우, 육우, 젓소, 비육돈, 산란계, 육계)을 조사하고 있다.

04 맺음말

•• 농림어업은 1차 산업으로서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있어 왔고 통계 또한 다른 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농림어업통계의 작성 동기가 시대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 등이 바뀌어 왔고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통계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 왔다. 또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조사의 정확성을 위한 통계적 기법 등이 개발되어 오면서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한편, FA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 하에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농어업통계 작성 지원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병행하여 중국에 대한 통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통계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어업통계 발전 과정을 평가한다면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인력 및 조직운영 측면이다. 1960년대, 1970년대까지는 인력 및 조직이 확대되다가 1990년대 이후로는 농어업부문에 대한 GDP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조직 및 인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조직의 경우 1960년도에는 농림부 과 단위에서 작성하던 통계가 1971년도에 국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1978년도에는 수산통계 업무가 수산청으로부터 농림부로 이관됨으로써 지방 통계사무소를 포함하여 규모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99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발족하면서 수산통계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1998,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농어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되면서 농어업통계 지방인력 조직도 모두 이체되어 농어업통계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둘째, 정보기기 활용 및 자료처리 측면이다. 초기에는 수집계 수준에 머물렀다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농업총조사의 자료처리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IBM 컴퓨터를 통하여 처리하였다. '농업기본통계', '가축통계조사'와 '쌀 생산량 통계' 등은 총무처 산하 정부전자계산소에 의뢰하여 처리하였다.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는 1972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컴퓨터 공동이용방식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1980년대에는 전국적인 통계자료 전산망을 온라인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농수산통계 처리의 자동화는 물론 가격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 단체, 도매시장 등과도 온라인 터미널을 연결하여 온라인 행정전산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주 컴퓨터의 증설, 터미널 설치 및 근거리통신망 구축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통계조직 이관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이외의 통계조사는 농림어업생산통계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 집계, 내검, 분석 등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어업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집계되는 자료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업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셋째, 통계적 기법 및 정확도 측면이다. 농업통계의 경우 총조사 및 구조통계 대부분을 면접을 통해서 조사하여 집계하거나 현대적인 표본이론에 의거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표본조사구를 대상으로 승수를 적용하여 통계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한다. 생산량조사 등 일부 조사는 현장에서 직접 지역별·경지 특성에 의한 층별로 선정된 표본구역에 대한 생산량 등을 직접 측정하여 총 생산량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

한편, 쌀 예상생산량조사의 경우 지역별 기상자료를 반영한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정확도를 크게 높이고 있으며, 매년 경지면적조사와 2014~2015년 경지총조사를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함으로써 통계생산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활용도 측면이다. 농림어업통계의 정책 활용은 초창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정책의 효과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통계가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정책 수립 시부터 통계를 적극 활용하고 이후의 집행과정, 그리고 정책효과 등을 일관성 있게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농림어업통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양과 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과거 고도성장시기를 지나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및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효율화 요구는 점점 거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면조사 및 현장답사에 의존하는 농림어업통계에 대한 조사방식 선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원격탐사기술이 경지면적조사 및 경지총조사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배면적 및 작물생산모니터링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저비용-고효율의 통계생산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농업관측정보 등이 공식통계와 다름없이 공표·활용되어 이용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는 통계와 정보가 이용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공보처, 『조선통계연감』, 1943.
- 김봉철, 『한국농업통계정책의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9.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4.
- 산림청,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보고서』, 2014.
- 신형석 외, 『신한국통사』, 주류성, 2014.
- 양승룡, 『농업,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교우사, 2011.
- 유엔·세계은행 공저, 『농촌 및 농업 통계발전 글로벌전략』, 2010.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20~1942)』, 각 연도.
-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 1992.
- 통계청, 『통계 행정 편람』, 2013.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 통계청, 『원격탐사 활용 농어업통계작성 중장기계획』, 2014.
- 통계청, 『2013 농림어업조사 보고서』, 201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50년사』, 농림부, 200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13.
-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010.
- FAO 아태지역사무소, 『아태지역 농촌 및 농업통계발전 실천계획』, 2012.



경제통계

제2장

광공업·에너지

1. 개요

2. 발전과정

3. 주요 광공업·에너지 통계의 발전과정

4. 맺음말

01

개요

의의와 종류

•• 우리나라의 광공업이 국내총생산(명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 8.9%, 1960년 14.5%, 1970년 20.4%, 1980년 25.6%, 1990년 28.0%, 2000년 29.3%, 2010년 30.9%, 2014년 30.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난 60년 동안 광공업 비중은 2.5배나 커졌다. 또한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를 보면 광공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수 9.8%, 종사자수 19.5%, 매출액 33.9%를 차지하고 있다. 광공업은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역이었다. 이 과정에서 광공업통계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크게 기여해 왔다.

광공업 전체를 포괄하여 매년 실시되는 ‘광업·제조업조사’는 국민계정추계 및 지역소득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광공업에 관한 표본틀, 광공업생산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의 대표품목 선정 및 가중치 산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매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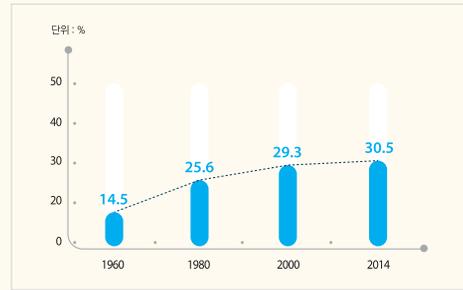


작성하는 광공업생산지수는 경기동향 분석 및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분기별 GDP추계, 노동생산성지수의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와 민간 단체 등에서 작성하는 광공업통계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와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국제 비교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광공업통계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광업 및 제조업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대체로 '산업구조통계'(Structural Industrial Statistics)와 '산업동향통계'(Current Industrial Statistics)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구조통계'는 1년 이상의 주기로 작성되며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출하액, 재고액, 부가가치, 고정자산 등에 관한 업종별·품목별·지역별 등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반면, '산업동향통계'는 주로 월별 및 분기별로 작성되며, 생산, 출하, 재고 등의 변동추이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광공업통계는 1945년부터 2014년까지 구조통계 28종, 동향통계 39종으로 총 67종이 생산되었다.

한편, 에너지통계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원별로 원활한 수요공급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에너지수요전망 및 예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997년 97.6%의 최고점에서 2012년 96.0%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1차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1990년 1.75toe, 2000년 3.19toe, 2010년 3.96toe, 2013년 4.19toe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용 에너지 비중이 커 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수요는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도 기후협약에 따라 화석연료의 소비감소를 강제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에너지자원의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에너지통계는 실효성 있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통계는 에너지원별 공급통계에서 산업과 가정의 소비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통계는 전통에너지인 신탄(장작과 숯)을 비롯하여 석탄(무연탄 및 유연탄), 전력(수력, 화력 및 원자력), 가스(LPG, LNG 및 도시가스), 열에너지(지역난방), 신·재생에너지(태양, 풍력, 지열, 해양, 바이오에너지 등) 등으로 구분한다. 에너지통계는 1945년 이후 2014년까지 구조통계 21종, 동향통계 11종으로 총 32종이 생산되었다.



● 국내총생산 광공업 비중

구분	작성주기별							
	계	월	분기	반기	1년	2~3년	5년	1회한
광공업통계	67	31	6	2	12	5	1	10
에너지통계	32	10	1	-	15	2	1	3

국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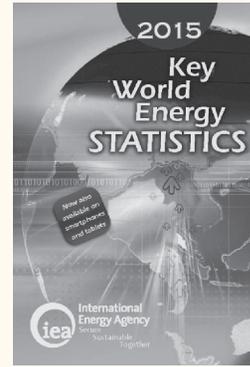
● UN은 각국 및 국제사회가 산업 활동의 측정을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1950년대 이후 『산업통계를 위한 국제권고』(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Industrial Statistics, IRIS)를 발행하여 보급해오고 있다.

IRIS는 1953년의 첫 발행 이후, 1960년, 1968년, 1983년에 개정 발행돼 왔으며, 2008년 IRIS는 1983년 이후 그동안의 산업발전을 감안하여 25년 만에 개정되는 권고이다. 2008년 IRIS는 UN 통계국 주도하에 각국이 도입해 적용할 수 있는 「세계 산업통계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Industrial Statistics)을 통해 구축된 산업통계의 방법과 운영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와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한 기초경제통계에 대한 다른 국제권고와의 통합적인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 IRIS의 산업부문의 범위는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ISIC) 4차 개정판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사업·하수/폐수물처리 및 환경복원업으로 하였으며, 경제활동의 범위 또한 1983년의 국제권고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단기산업통계를 대표하는 산업생산지수(The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IIP)는 1920년대에 최초로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UN은 1950년에 제5차 UN 통계위원회가 승인한 IIP 작성에 관한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1차 권고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IIP에 관한 UN의 최초 간행물이었다.

그 이후 UN은 1977년 가격 수량의 통계체계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1979년 산업재를 위한 생산자가격지수에 관한 매뉴얼을 공표하였다. 이후 각국의 지수 작성 발전과 함께 다양한 기초 및 관련 통계표준과 권고내용의 변경이 있었다. 최근에는 초기 지수 매뉴얼에 적용된 개념과 방법론을 최신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UN은 2005년, 2007년, 2008년에 UN전문가그룹회의를 거쳐 2010년에 IIP 권고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이 개정에서 2008년 국민계정체계와 분기별 국민계정 작성을 IIP 산정과 연결시켰고, 산업상의 포괄범위는 2008년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4)에 따른 2008년 산업통계를 위한 국제권고(IRIS)와 일치되도록 하였다. 또한 IIP 산정 시 사용되는 생산자가격지수(PPPI)를 IMF의

생산자가격지수 매뉴얼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수 및 가중치 기준년도의 변경을 5년 주기의 고정가중접근방법에서 매년 업데이트하는 연쇄접근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통계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에너지통계연보』에 국제동향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2013년 『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주요 에너지통계(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2) 및 OECD 국가의 에너지 밸런스(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 2013)를 인용하여 OECD 및 세계 각국의 에너지생산, 에너지수입, 1차 에너지공급, 최종에너지소비, 전력소비, 가정에너지소비, 수송에너지소비, 1인당에너지소비 등의 세계 에너지 통계와 OECD 국가별 에너지 수입과 수출, OECD 국가별 최종에너지소비(부문별, 원별), OECD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현황 등 주요 에너지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영국 석유 메이저인 BP(British Petroleum)사가 발행하는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의 자료를 인용하여 국별 1차에너지 공급, 원유 매장량 및 국별 원유 생산, 국별 석유제품 소비, 천연가스 매장량, 국별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 석탄 매장량, 국별 석탄 생산 및 소비, 국별 원자력 소비, 국별 수력 소비, 국별 발전 전력량 등의 에너지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 세계 주요 에너지통계

02 발전과정

- 6·25전쟁 후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여기에 광공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역이었으며, 광공업통계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크게 기여해 왔다. 광공업이 주로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에너지는 생산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에너지수요를 전망하여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주역인 광공업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해 준 에너지를 구분하여 광공업과 에너지 통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광공업통계

- 광공업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적인 산업구조통계는 '경제총조사'(2003 이전은 산업총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이다.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0, 5차 연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연도에는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광공업의 단기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월 광공업생산·출하·재고지수와 제조업의 가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동향과 가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지수와 중소기업 가동률을 작성하고 있다. 이들 통계는 1950~1960년대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광공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민간기관에서 작성해오던 동향통계를 중소기업통계를 제외하고 1970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하였다. 조사통계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 광공업의 대표적인 구조통계와 동향통계의 틀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 1990년대까지는 주로 업종별통계와 지역별통계가, 2000년 이후는 첨단산업 및 도시별 통계가 개발되었다. 통계청에서는 2011년부터 광공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까지 포함하는 전산업생산지수를 매월 작성하고 있다. 연대별로 생산된 통계 수는

표와 같다. 다만 민간협회 등에서 작성된 통계 중 본 자료에서 취급하지 않은 통계도 있음을 언급해 둔다.

작성주기별 광공업통계 현황

유형별	생산년대				
	계	1945~1950년대	1960~1970년대	1980~1990년대	2000년 이후
구조통계	28	1	4	10	13
동향통계	39	9	17	2	11
계	67	10	21	12	24

※ 생산통계 수는 통계기준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광복 전후 광공업통계(~1950년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는 1911~1940년의 제조업에 관한 구조통계인 공장수, 종업원수, 공장생산액, 공산품별 생산수량 및 생산액이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공업을 1911년은 18개, 1940년은 10개의 세부공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역을 13개 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다. 또한 전매품인 연초, 홍삼, 아편, 소금 등에 대한 월별 제조수량 및 판매금액을 수록하고 있다.

광공업통계 현황(1910~1944)

통계명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내용	비고
공업 (공장 및 공산물)	1911~1940	1년	- 공장생산액은 종사자 5인 이상 공장 대상 - 작성사항은 공장수, 종업원수, 공장생산액, 공산품별 생산수량 및 생산가액	• 지역은 13도별
광업(광산물)	1910~1936	월	- 광산물 생산수량 및 생산금액 - 출원건수(39종), 허가건수(38종), 허가광구(39종)	• 13도별로 집계 금은광, 금, 은, 동, 연, 아연광, 철광, 중석광, 형석, 흑연, 석탄, 고령토 등
전매(연초)	1914~1943	월	제조수량, 제조연초 수출입 수량 및 금액	• 제조연초매도는 13도별로 집계
전매(홍삼)	1910~1943	월	제조수량, 판매 수량 및 금액, 수출입 수량 및 금액	
전매(아편)	1930~1943	월	제조수량, 매도수량 및 금액	• 아편수납은 1924~1943 수록
전매(염)	1908~1938	월	제조수량, 수출입 수량 및 금액	• 관제염, 사제염

출처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한편, 광복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제조업은 미국의 원조자금에 의해 소비재산업 위주로 발전하였다. 6·25전쟁 피해복구가 개시된 1953년부터 각종 외국원조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들 외국원조자금은 주로 양곡증산을 위한 비료공장이나 전후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와 판유리공장 건설 등을 위한 화학공업 분야와 방직시설 확충이나 염색가공공장 건설 등 섬유공업에 투자되었다. 1953~1955년에 발행된 『대한민국통계연감』(제1~3회)에는 소금,

담배, 홍삼 등은 1945년부터 월별통계가 수록되어 있고, 주요 광산품과 공산품은 1946년부터 수록되어 있다. 1949년 이전의 통계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인용 수록하고 있고, 1950년 이후의 통계는 상공부의 자료를 인용 수록하고 있다. 이들 생산량통계는 한국은행이 1957년 광공업동태 통계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체되었다. 광산물생산량통계는 1952년부터 「광산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체(약 800개)의 신고에 의해 도를 거쳐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품목별 생산량을 『상공통계월보』에 수록 공표하였다. 공산품생산량통계의 경우는 면방직 분야에서는 1947년 대한방직협회, 설탕은 1953년 제일제당(주), 밀가루는 1955년 한국제분협회 등이 설립되면서 민간 협회를 통한 통계수집도 용이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광공업의 품목별 통계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정부기업이나 협회 및 중요 기업의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합계하는 데 그쳤다.



• 일제강점기 최대의 공업도시 홍남시



• 국산 설탕 생산(1953)

광공업통계 현황(1945~195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 내용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	한국은행	1955	-	- 조사대상 : 종사자수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 조사항목 : 종사자수, 급여액, 생산액, 품목별 생산량 및 생산액
	한국산업은행	1958	-	- 조사대상 : 1955 조사와 같음 - 조사항목 :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고정자산, 전동기 및 원동기 마력수, 품목별 출하액 및 생산량
주요광산품생산량	한국은행, 상공부	1946~1956	월	금, 은, 동, 중석, 흑연, 활석 등
주요공산품생산량	한국은행, 상공부	1946~1956	월	면사, 면직물, 생사, 비누, 전구, 시멘트 등
면방직통계	대한방직협회	1946~2008	월	면사 및 면직물의 생산량 및 원료소비량
광산물생산량통계	상공부	1952~계속	월	- 「광산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사업체 - 금, 은, 동광, 연광, 철광, 중석광 등 15개 금속광산물의 생산량 - 인사흑연, 석면, 납석, 고령토, 석회석 등 16개 비금속광산물의 생산량
광공업동태통계조사	한국은행	1957~1968	월	- 제품의 생산액 및 생산량 - 종업원수 및 급여액
산업생산지수	한국은행	1957~1968	월	- 1955 기준은 생산액기준 가중치 - 1958 기준부터는 센서스부가가치 기준 가중치

광공업 전체를 포괄하는 품목별 통계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한 것은 1955년에 한국은행이 실시한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이다. 이 조사를 통해 광공업 전체에 대한 각 품목별 생산액의 비중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광공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광공업생산의 월별분석이 가능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였고, 한국은행은 1957년에 1955년을 기준년으로 하는 산업생산지수를 처음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지수의 대표품목에 대한 매월의 생산량을 수집하기 위하여 ‘광공업동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광공업에 대한 동향통계 작성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성장동력을 위한 광공업통계(1960~1980년대)

1960년대에 들어서는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각종 산업시설의 건설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업화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수출의 급격한 신장은 국민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1960년대 초기에는 철광석, 중석 등 광업 품목 비중이 높았으나 1960년대 말에는 합판을 비롯한 스웨터, 가발 등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수출주도형 경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각종 소비재공업의 내수산업화가 실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공업에 대한 생산동향통계의 작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상공부는 1962년부터 상용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체 중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약 1만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신고방법으로 시군구과 시도를 거쳐 중앙에서 집계한 결과를 『상공통계월보』를 통해 공표하였다.

광공업구조통계 현황(196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 내용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 (광공업센서스 광공업총조사 산업총조사)	한국산업은행 상공부	1960	-	- 조사대상(1968) : 종사자수 5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한국산업은행 경제기획원	1963	-	- 조사항목(1968) :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본사명 및 소재지, 조직형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과정, 종사자수, 급여액 및 복리후생비, 월별 조업월수, 주요생산비, 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내국소비세액, 생산액, 부가가치, 재고액, 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내역, 유형고정자산, 동력시설, 조사표 작성 근거
		1966	-	
	통계청	1973~2003 (연도 끝자리 3, 8년)	5년	
광공업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산업은행	1967	-	- 조사대상(1967) : 종사자수 5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통계청	1969~계속 (연도 끝자리 3, 8년 제외)	1년	- 조사항목(1967) :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본사명 및 소재지, 조직형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과정, 종사자수, 급여액, 주요 생산비, 재고액, 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내국소비 세액, 생산액, 부가가치, 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내역, 유형고정자산, 조사표 작성 근거

한국산업은행에서도 1962년부터 '광공업동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생산지수를 작성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 4분기부터 중소기업의 생산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중소기업동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63년부터는 월별조사로 변경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생산지수를 작성하였다. 또한 산업생산지수와 중소기업 생산지수의 디플레이터를 작성하기 위하여 '광공업 생산자판매 가격조사'(지수)와 '중소제조업 생산자판매 가격조사'(지수)를 병행 실시하였다.

광공업동향통계 현황(196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 내용
광공업동태조사	한국산업은행	1962~1969	월	제품의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원재료의 사용량, 재고량 종업원수 및 급여액
	조사통계국	1970~계속		
산업생산지수	한국산업은행	1962~1969	월	불변부가가치 기준
	조사통계국	1970~계속		
중소기업동향조사	중소기업은행	1961~계속	월	중소제조업의 생산액, 출하액, 재고액
생산동태조사	상공부	1962~1976	월	제품생산량 및 재고량, 원재료 소비량 및 재고량
광공업생산자판매 가격조사(지수)	한국산업은행	1962~1969	월	산업생산지수 금액조사품목의 디플레이터
	조사통계국	1970~1982		
중소제조업 가동상황조사	중소기업중앙회	1962~계속	월	가동률 및 휴폐업상황
중소제조업생산지수	중소기업은행	1963~계속	월	불변부가가치기준
중소제조업생산자 판매가격조사(지수)	중소기업은행	1964~1997	월	중소제조업생산액의 디플레이터
부산지역제조업 조업상황조사	부산상공회의소	1967~1995	월	생산, 출하, 재고, 원자재수입가격
광공업 생산자제품출하지수	한국산업은행	1968~1969	월	불변출하액기준
	조사통계국	1970~계속		
전자전기제조업 실태조사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1969~2010	월	가동률, 생산, 출하, 재고, 내수, 로컬
공장운영실태조사	대전상공회의소	1969~1994	월	생산, 판매, 재고, 종업원수

한편, 광공업에 관한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자료 제공, 광공업생산지수의 기준년 자료제 공 등 광공업에 관한 통계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1965년 정부의 광공업생산통계 단일화 조치에 따라 '광공업센서스', '광공업동태조사',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UN이 권고하는 10년 주기의 범세계 산업통계프로그램의 참여 등으로 그동안 2~3년 주기로 실시해 왔던 광공업 구조통계조사를 1966년부터는 '광공업센서스' 또는 '광공업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었다. 1968년부터는 광공업 생산자 제품출하지수가 작성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해오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1973년 1차 석유과동 이후 국제통화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바뀌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경공업 위주의 수출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73년 5월에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화학공업 육성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공업화의 핵심 중간재 기간산업인 소재산업과 조선, 기계(자동차 포함), 전자 등 대규모 최종재 조립장치산업 등 6대 전략업종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 중화학공업 육성

광공업통계 현황(197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 내용
산업통계조사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	한국산업은행	1970~1976	월	표준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평균조업일수 및 평균조업시간
	조사통계국	1977~2008		
석유산업통계	한국석유 산업연합회	1971~계속	1년	회원사, 통계청, 관세청, 한국은행자료 이용하여 가공 작성 시설, 생산, 판매, 수출입, 기업경영분석
생산자 제품재고지수	조사통계국	1972~계속	월	불변재고액기준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	한국산업은행	1972~1976	월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 적용
	조사통계국	1977~계속		
담배생산실적	전매청	1975~1996	월	담배생산량
의약품생산 등 실적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1975~2007	1년	생산량, 생산단가, 생산가격, 재고량, 업체별 생산현황
철강통계조사	한국철강협회	1976~계속	월	철강재 1차/2차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시멘트통계연보	한국시멘트협회	1977~계속	1년	생산, 출하, 내수, 수출, 재고량, 경영현황
기계수주동향조사	조사통계국	1979~계속	월	신규 수주액, 판매액, 수주잔고액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대형 조선소들이 속속 건설되었고, 자동차산업 역시 고유모델 개발과 양산체제의 구축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1974년에 컬러 TV 조립생산 등 전자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등 중화학공업화가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통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나타났다. 1970년 정부의 기본통계업무 일원화 방침에 의해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이 조사해 왔던 '광공업센서스', '광공업통계조사', '광공업동태조사'와 산업생산지수, 광공업 생산자제품출하지수의 작성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1970년 7월에 이관하였다.

제조업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는 1970년 9월에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1972년 2월에 1971년 기준 지수를 편제하여 공표하였다. 이 지수는 1977년 3월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되었다.

1972년에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생산자 제품재고지수가 개발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1970년대 초반까지는 광공업 전체를 포괄하는 동향통계의 작성은 모두 마무리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후 1970년대 후반기에는 경기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동향조사'가 실시되었고, 민간협회에서도 '철강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광공업센서스'는 가스업 및 수도업을 추가하였으며,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4인 이하의 사업체도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별업종에서도 섬유산업통계, 의약품생산실적, 시멘트통계연보 등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198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그 이후 점차 성장률이 회복되었다. 특히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정책의 결과로 저금리와 저달러가 나타났고 이어 국제유가도 떨어져 1986~1988년 기간에는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1980년대에는 고성장 시기로 제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광공업 전체를 포괄하는 '산업총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에서는 기술연구개발비와 공장 기계보유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개별 업종에서는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제조업인 금형·주물·도금·염색가공·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장비제조업·섬유제조업의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가 실시되었다. 1989년에는 광해방지, 석탄산업 지원 및 폐광지역현황을 조사 수록한 『석탄(광해)통계연보』가 발간되었고, 민간의 통계활동으로는 1978년에 『제지산업통계연보』가 발간되었다.

한편, 지역별 경기동향을 파악하고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지역경제 정책을 수립을 위한 지역통계 개발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과 각 시도가 주관하여 1987년부터 시도별 광공업생산지수(1985 기준)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1989년 1/4분기부터 공표하였다. 시도별 광공업생산지수는 시도별 생산품목, 사업체 분포 및 산업구조 등이 전국의 평균적인 구조와는 다르므로 시도 지수의 평균치가 전국 지수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광공업통계 현황(198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 내용
제지산업통계연보	한국제지연합회	1978~계속	1년	생산, 내수, 수출, 재고, 수입실적
광해(석탄)통계연보	광해방지사업단	1989~계속	1년	광해방지 및 석탄산업 지원, 폐광지역진흥사업

신성장동력을 위한 광공업통계(1990년 이후)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구조 변화를 하게 된다. 국내 임금 상승으로 섬유, 신발, 완구 등 경공업부문과 전자부품의 조립공정 등 일부 노동집약적인 조립가공공정에 특화되어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금이 낮은 동남아지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게 된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현지 생산은 1994년 해외투자 자유화조치 시행으로 급증하게 된다.

1990년대는 정보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세계는 IT 산업을 비롯해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경쟁을 벌였다. 우리나라도 R&D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기술집약화를 이루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상당수 대기업이 도산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지만, 1999년 이후 정보통신산업 호황과 전세계적인 벤처투자 붐에 힘입어 벤처기업 창업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통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나마 '기계산업동향조사'와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 실태조사'가 있었으나, 1999년에 중지되었다. 다만, '산업총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연간운용비용을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에는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추가하였다.

광공업통계 현황(199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 내용
기계산업동향조사	상공부	1990~1994	월	품목별 수주, 생산, 판매, 재고량
광공업사업체발생 및 소멸실태조사	통계청	1993~1999	년	신규, 휴폐업, 진출입현황

그간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어 왔던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전자기기 등 주력 산업은 그 대부분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이 상태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나노융합기술 개발사업, 융합기술 발전계획 등 신기술 관련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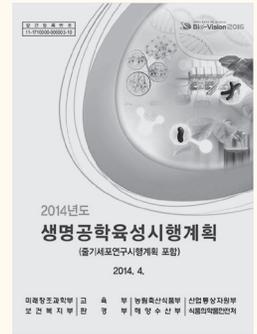
이 시기에 들어와 통계는 신성장동력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대규모 조사인 '산업총조사'는 2003년 기준 조사를 끝으로 '서비스업총조사'와 통합하고 전국의 사업체를 모두 조사하는 '경제총조사'를 2010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광업·제조업조사'는 2008년 기준부터 조사대상을 종사자수 10인 이상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통계 작성 분야도 로봇산업, 부품소재산업, 나노융합산업 등 IT와 연관된 미래 신성장산업의 통계와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의 통계가 생산되었다.

2011년부터는 지금까지의 광공업 및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농림어업(연간지수로만 공표),

건설업, 공공행정활동까지도 포괄하는 전체 산업의 단기적 생산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산업생산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해오고 있다. 그 외에 부품소재산업, 기계산업에 대한 동향통계가 작성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공장등록현황 및 산업단지동향통계가 작성되었다.

한편, FTA 등 국가간의 상품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에 공급되는 제품의 국산화 비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 기류에 맞추어 국내 내수출하와 내수출하 품목과 일치하는 수입품목을 합하여 제조업 공급지수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6년 초에 공표할 예정이다.



● 생명공학 육성시행계획 (2014)

광공업통계 현황(2000년 이후)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 내용
광물자원매장량현황	한국광물자원공사	2001~계속	2년	광산물 종류별 매장량 추정, 가체광량, 품위, 개발가치 등
의료기기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2004~계속	1년	품목별 생산, 수출, 수입액 등
로봇산업실태조사	한국로봇산업회	2006~계속	1년	인력, 경영, 생산, 수출, 수입,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 설비투자 등
봉제업체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9~계속	2년	생산, 유통, 인력, 공장현황, 장비보유대수 등
나노융합산업조사	지식경제부	2012~계속	1년	고용, 생산 및 거래구조, 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등
부품소재산업 동향조사	산업자원부	2002~계속	월	생산, 출하, 재고의 수량 및 금액
공장등록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2005~계속	반기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공장등록
기계산업통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5~계속	월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2005~계속	분기	단지조성 및 분양, 입주 및 고용, 생산 및 수출현황
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한국산업단지공단	2005~계속	월	생산실적, 생산능력, 기동률, 수출, 고용현황
전산업생산지수	통계청	2011~계속	월	불변부가가치 기준

에너지통계

●●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여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제1차, 제2차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이러한 상황은 점차 개선되었다. 이 당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국내 부존 석탄자원을 채굴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전력과 석유부문은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치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1970년대 2차례의 석유과동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절약 대책과 함께 석유공급원 다변화 전략, 탈석유정책의 일환으로 유연탄 전환과 LNG를 도입하였고, 한편으로 원자력발전 정책으로 1978년 고리1호기를 완성하였다. 1980년대 들어와 고급에너지를 선호하면서 가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LPG 비축기지 건설과 비축시설 용량을 확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산업의 자유화와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라는 국제적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발전과정에 따라 에너지통계도 시대에 따라 작성되었다. 1970년대 이전은 신탄, 석탄, 전력통계가 작성되었고, 1980~1990년대에는 에너지 소비 및 공급의 종합통계를 비롯하여 석유, 가스, 열에너지통계가 작성되었다. 2000년 이후는 신재생에너지통계가 작성되었다. 에너지통계에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에너지총조사'와 매년 작성하는 에너지수급통계(『에너지통계연보』)가 있다. 또한 에너지수급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월별 에너지수급통계(『에너지통계월보』)를 작성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력, 열, 재생에너지의 수급통계를 월별로 작성하고 있다. 연대별로 작성된 통계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연대별 에너지통계

유형별	계	1945~1950년대	1960~1970년대	1980~1990년대	2000년 이후
구조통계	21	-	3	13	5
동향통계	11	4	2	5	-
계	32	4	5	18	5

시대별 발전과정

- 광복 이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는 일제강점기의 신탄생산량, 전기발전용량, 가스발생량에 대한 통계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에너지통계 현황(1910~1944)

통계명	작성기간	작성주기	주요내용	비고
임산물생산액(신재, 목탄)	1927~1943	1년	수량 및 금액	- 13도별로 집계
전기사업(발전용량)	1913~1938	1년	전기발전용량	
가스사업(발생량)	1932~1938	1년	가스발생량	- 전기발전업체에서 겸업(2개 업체)

6·25전쟁 후 1956년 에너지 공급을 보면 목재와 숯 등 신탄이 73.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석탄은 18.7%, 석유류는 5.9%에 지나지 않았다. 1.5%를 차지하였던 전력도 발전설비가 노후하였거나 전쟁으로 파괴된 가운데 제한송전이 잦았다. 당시 주민들의 연료난이

산림벌채로 나타나 산림은 피폐해졌다. 1953~1955년에 발행된 『대한민국통계연감』(제1~3회)에 전기발전량은 1945년, 가스생산량은 1946년, 석탄생산량은 1947년, 신탄연료생산량은 1950년부터 월별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에너지통계 현황(1945년부터 195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 내용
전기발전량	조선전업(주)	1945~1960	월	전기발전량
가스생산량	한국은행	1946~1954. 06	월	가스생산량
석탄생산량	상공부	1947~계속	월	무연탄생산량
신탄연료생산량(장작과 숲)	농림부	1950~계속	월	장작, 목탄, 지엽 등

1960년대에는 제1차,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주요 에너지는 석탄에서 석유로 이동하였고 발전설비도 대폭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확대하였고, 한편으론 원자력발전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에너지통계를 보면, 한국전력(주)은 1961년부터 『전력통계속보』를 분기별로 발간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전력생산 및 공급통계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월보로 변경하여 발간하였다.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석유에서 석탄으로 전환되면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수용탄 및 연탄수급상황보고를 1975년부터 매월보고로 작성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민수용탄 및 연탄이 주요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면서 분기별 보고로 변경하여 작성하였다. 1970년대까지의 에너지 연간통계는 한국전력(주)이 1971년부터 『한국전력통계』를 연보로 발간하면서 전력통계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에너지통계 현황(1960~197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 내용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주)	1961~계속	분기 → 월 (1979)	발전설비, 발전량 및 판매량
민수용탄 및 연탄수급상황보고	상공부	1975~2009	월 → 분기 (2004)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 저탄량
상용자기발전업체조사	한국전력거래소	1966~계속	1년	자기발전실적 및 계획, 수전실적 및 설비신증설계획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주)	1971~계속	1년	전력발전, 설비, 구입, 판매, 경영현황
가전기기보급률 및 가정용전력소비형태조사	한국전력거래소	1979~2012	2년	가전기기보유현황, 1일평균 사용시간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가져온 공급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석유 중심의 에너지수급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모색

하였다. 발전용 연료를 석유에서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원자력발전이 석유의 대체에너지로서 적합하다는 인식하에 원자력발전소의 착공 또는 완공으로 1980년대 말에는 원자력 비중이 50%를 상회하였다. 1990년대로 들어와 석유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석유를 대체하는 원자력과 LNG는 계속 증가하였다. 동력자원부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협조로 1981년에 '에너지총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에너지의 산업부문별 에너지소비구조,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지역별 소비구조, 월별소비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982년에는 간이 에너지총조사인 '에너지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업부문에 대한 설비별·공정별 소비통계를, 운송업부문에서는 수송단계별 연료경제를, 가계부문에서는 계절별 도시·농촌가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작성하였다. 그후 '에너지총조사'는 3년 주기로 계속 실시되고 있다.



●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통계 현황(1980~199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 내용
에너지수급통계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경제연구원	1986~계속	월	에너지 수급동향
석유수급통계	한국석유공사	1986~계속	월	석유제품별 수급동향
석유자료	대한석유협회	1986~2006	월	석유제품별 수급동향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	한국도시가스협회	1990~계속	월	도시가스수급통계
석탄수급통계	대한석탄협회	1997~계속	월	무연탄수급통계
에너지총조사	산업통상자원부	1981~계속	3년	수요부문별 및 에너지원별 소비량
석유연보	대한석유협회	1981~계속	1년	석유산업현황
에너지수급통계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1983~계속	1년	1차에너지 공급구조,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산업별에너지 투입액, 에너지밸런스
발전설비현황	한국전력거래소	1986~계속	1년	발전설비, 발전소건설공사비, 발전실적, 전력수급실적
도시가스편람	한국도시가스협회	1986~계속	1년	도시가스수급 및 가스산업통계
열에너지수급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1987~계속	1년	열에너지 수급통계
석탄통계연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89~1996	1년	석탄수급통계
에너지시용량통계	산업통상자원부	1997~계속	1년	다소비업체의 에너지소비
천연가스통계	한국가스공사	1998~2010	1년	천연가스수급 및 설비현황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983년부터 『에너지통계연보』를 발간하여 1차에너지 공급구조, 최종 에너지소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통계, 에너지밸런스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수급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1986년부터 매월 『에너지통계월보』를 발간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1986년부터 매월 석유수급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전력부문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가 1986년부터 발전설비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1990년대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소비 파악을 위해 1997년부터 에너지사용량통계를, 한국가스공사는 1998년부터 천연가스통계를 작성하였다.

한편, 1980~1990년대에 걸쳐 민간협회 등에서도 회원사를 중심으로 각종 에너지통계를 작성하였는데, 대한석유협회는 1981년부터 『석유연보』, 한국도시가스협회는 1986년부터 『도시가스편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987년부터 『열에너지수급통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1989년부터 『석탄통계연보』, 대한석탄협회는 1997년부터 『석탄수급통계』 등을 연간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1960년대부터 작성되었던 전력통계를 포함하여 모든 에너지원의 기본 통계는 1980~1990년대 걸쳐서 모두 작성되었던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모두 가입하여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후반 들어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에너지 발전 패러다임으로 채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통계는 2006년부터 관련 법의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년부터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력부문에서 전력사용의 시간대별 수요예측을 위해 한국전력거래소는 2002년에 전력시장통계, 한국전력공사는 2005년에 전력소비형태분석을 작성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1년부터 '가구에너지 소비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가구의 에너지 소비통계를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수준으로 작성하였고, 에너지 총조사의 가구부문 통계로도 활용하였다.

에너지통계 현황(2000년 이후)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년도	작성주기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보급 실적조사	에너지관리공단	2001~계속	1년	시설용량 및 생산량
전력시장통계	한국전력거래소	2002~계속	1년	일별·시간대별 한계가격 및 수요예측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	에너지관리공단	2005~계속	1년	온실가스배출량
전력소비형태분석	한국전력공사	2005~계속	1년	실시간 전력데이터 검침
가구에너지 소비실태조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계속	1년	에너지이용기기 보유현황, 에너지소비량, 냉방시간 및 조명시간

03

주요 광공업·에너지 통계의
발전과정

산업총조사

개요

●● 산업총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와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산업구조통계의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와 광공업생산 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의 개편, 국민계정의 추계,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산출을 보면, 종사자수 5인 이상의 사업체는 생산액을 출하액에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의 재고증감액을 더하여 산출하고 있고, 부가가치는 센서스 부가가치의 개념으로서 생산액에서 직접생산비를 공제하여 산출하고 있다. 4인 이하의 영세사업체는 재고액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는 출하액에서 직접생산비를 공제하여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총조사의 보고서에 나오는 부가가치는 총산출액에서 모든 중간투입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와는 개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발전과정

●● 우리나라의 산업총조사는 한국은행이 '1955년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조사'의 명칭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1958년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1960년에는 상공부와 한국산업은행의 공동주관으로 실시하였다. 1962년에는 지정통계 제6호로 지정되었고 1963년, 1966년과 1968년에는 경제기획원과 한국산업은행의 공동주관으로 실시하였다.

1970년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던 '광공업통계조사'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광공업센서스'도 함께 이관되어 조사통계국이 전담기관으로 되었다. 1973년부터는 조사통계국의 단독주관으로 연도 끝자리가 3, 8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어 왔다. 특히 1963년에는 UN의 경제사회이사회가 결정한 '1963년 세계 기본산업통계 계획'에 우리나라도 참여하였고, 1968년은 ECAFE 지역의 산업센서스 계획에

참여하였다. 조사통계국에서는 UN이 권고한 1973년 '세계산업 센서스'를 1974년 4월에 실시한 이래 10년 주기의 세계산업센서스의 해에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산업총조사'는 2003년 제13회 조사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2008년으로 계획되었던 조사는 서비스업총조사와 함께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로 통합되었다. 앞으로도 '경제총조사'의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으로서 연도 끝자리가 0, 5인 해를 기준으로 실시될 것이다.

산업총조사 실시기관 및 조사명칭의 변천

조사회수	기준년도	실시기관명	조사명칭
1회	1955	한국은행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조사
2회	1958	한국산업은행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조사
3회	1960	상공부·한국산업은행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조사
4~6회	1963, 1966, 1968	경제기획원·한국산업은행	광공업센서스
7~8회	1973, 197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광공업센서스
9~10회	1983, 198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산업센서스
11~13회	1993, 1998, 2003	통계청	산업총조사

조사범위는 1955년, 1958년, 1960년, 1963년, 1966년 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1963년, 1966년 조사에는 전기업도 추가하였다. 1973년 조사부터는 가스업과 수도업을, 1998년 조사부터는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추가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은 1955년 조사부터 1968년까지는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1973년 조사부터 1988년 조사까지는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와 함께 4인 이하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993년 조사부터는 종사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총조사의 조사범위 및 조사대상의 변천

조사기준년도	조사범위	조사대상
1955, 1958, 1960	광업,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
1963, 1966	광업, 제조업, 전기업	5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
1968	광업,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
1973, ..., 1988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5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 4인 이하 사업체 표본조사
1993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1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
1998, 2003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증기 및 온수공급업	1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

조사항목은 종사자수 5인 이상의 사업체와 4인 이하의 사업체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초기 산업센서스에서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의 조사항목 선정에 기초가 된 것은 UN의 1953년 산업통계 권고안이었다. 이 권고안에서는 산업센서스 조사항목과 관련하여 정규 프로그램과 최소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축소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1955년 제1회 조사는 UN의 권고안 중 축소프로그램(minimum programme)을 적용하였으나, 제2회 조사부터는 정규프로그램(complete programme)을 적용하였고, 그 이후는 대체로 정규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조사연도별로 그 당시의 관심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축소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
사업체개요, 고용 및 급여, 출하액과 기타 수입액	사업체개요, 고용 및 소득, 재고, 고정자본형성, 투입비용·자본·에너지소비, 총산출 및 생산물 내역, 부가가치 측정

1955년 기준조사는 사업체소유형태, 종사자수, 출근일수, 급여액, 생산액의 5개 항목에 그쳤으나, 1958년 조사는 고정자산투자액, 재고액, 출하액, 생산비, 부가가치, 주요 생산품의 출하량 및 금액, 주요 원재료 및 원료소비량, 전동기 및 원동기의 마력수 등이 추가되었다. 1960년 조사는 주요기계설비수를 6·25전쟁의 휴전 전후로 구분 조사하여 시설의 증대과정을 파악하였다. 또한 타인자본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기업의 차입금을 금융기관차입금과 사채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투자소요액을 투자목적별로 파악하고자 기업의 소요자금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그리고 내자대금과 외자대금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966년은 자본금,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 그리고 연간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을 새로이 조사함으로써 이제까지 파악하지 아니한 자본존재량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였다. 1968년은 노동투입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업원의 연간총작업시간을 산출하였고, 광공업부문의 대외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입원재료사용량과 계절별로 재고 파악을 위해 완제품의 분기말 재고를 조사하였다.

1973년은 건설가계정, 1978년은 부지 및 건물연면적, 수원별 용수량, 무형고정자산, 간접생산비 등의 항목을 신설하였다. 1983년은 기술연구활동비, 공해방지시설자산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1988년은 공업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철강, 기계산업에 대한 공작기계 보유현황을 처음 조사하였다.

1993년 이후는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와 환경부문에 대한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2003년은 국민계정추계에 필요한 무형자산을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개발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에너지총조사의 모집단 제고를 위해 에너지사용량을 석유, 가스, 석탄, 열, 전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종사자수 4인 이하의 영세사업체는 정식의 회계장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업내용도 단순하여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73년 산업총조사 이래 조사항목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 종사자수 및 급여액, 부지 및 건물연면적, 연간생산비, 연간

제품출하액, 연간임가공수입액, 유형고정자산, 주요원재료 및 생산공정 등이며 수탁제도가 대부분이어서 재고액은 조사하지 않았다.

산업총조사 주요 추가 조사항목

조사기준년도	주요 추가 조사항목
1955	사업체소유형태, 종업원수, 급여액, 연출근일수, 생산액, 주요품목의 생산량 및 생산액
1958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전동기·원동기마력수, 고정자산투자액
1960	자본금, 유형고정자산의 총액 및 지출총액, 차입금, 운전 및 시설자금
1963	내국소비세액,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 및 처분액, 부가가치, 생산액
1966	유형고정자산(연말총액, 취득액, 처분액), 연간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1968	분기별 종업원수, 월별조업일수, 1일 1인당 평균실작성업시간수, 수입원재료사용량, 완제품의 분기말재고
1973	건설가계정
1978	부지 및 건물연면적, 수원별 용수량, 무형고정자산, 간접생산비
1983	공해배출시설 유무 및 공해방지시설자산액, 자가발전능력 및 자가발전량, 기술연구활동비, 납부세액(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1988	공작기계보유현황
1993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공해방지시설자산 및 연간운용비용
1998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연간운용비용
2003	영업손익·내국소비세, 연간기술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환경오염방지시설자산 연말잔액, 무형자산(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개발비), 연간에너지사용량(석유, 가스, 석탄, 열, 목재·폐열, 전력구입 및 자가발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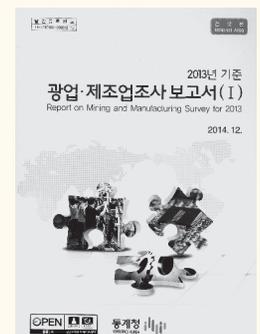
광업·제조업조사

개요

●● ‘광업·제조업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국민계정추계, 지역소득추계, 광공업생산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개편의 자료, 광업·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의 모집단자료,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과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 활동을 위한 자료제공, OECD 등 국제기구와 자료교환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의 대상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광업과 제조업이며, 종사자규모의 대상범위는 1967년 기준조사부터 2007년 기준조사까지는 종사자수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2008년 기준조사부터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생산액은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의



●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2014)

연말재고액을 더하고, 연초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고 있다. 부가가치는 연간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의 주요 생산비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한 부가가치를 UN 권고안의 정의에 따라 센서스 부가가치라고 말하며, 따라서 총산출액에서 모든 중간투입비를 공제하는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와는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다.

발전과정

● 한국산업은행은 1967년 기준 조사를 ‘광공업통계조사’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1968년에는 지정통계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이 조사는 한국산업은행이 1962년 3월부터 산업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월별로 실시하던 것을 보다 충실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연간조사로 발전시킨 것이다.

광업·제조업조사 실시기관 및 조사명칭의 변천

조사기준년도	조사실시기관	조사명칭
1967(제1회)	한국산업은행	광공업통계조사
1969, ..., 198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광공업통계조사
1990, ..., 2000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2001, ..., 2006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7, ..., 2014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회 조사인 1969년 기준 조사부터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산업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 실시해 왔다. 2008년 기준이 실시예정이었던 산업총조사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로 통합이 예정되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업·제조업조사가 대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 실시예정이었던 광업·제조업조사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로 대체되었으며 앞으로는 경제총조사가 실시되는 연도 끝자리가 0과 5인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실시된다.

조사항목을 보면, ‘광업·제조업조사’와 ‘산업총조사’가 거의 같다. 또한 국민계정 등의 추계자료와 학술연구자료, 국제비교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주요 조사항목의 종류나 정의를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1971년 기준 조사부터 건설가계정을 추가하였고, 순부가가치에 접근하도록 1977년 기준 조사부터 감가상각비를, 1990년 기준 조사부터 간접생산비도 포함하여 조사하여 왔다.

2014년 기준조사의 조사항목은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창설연월, ④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조직형태, ⑦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⑧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⑨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⑩ 유형자산, ⑪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⑫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⑬ 재고액 등이다.

조사방법은 1990년대 초반까지 조사표의 입력과 내용검토를 중앙에서 일괄하여 실시하던 것을 1990년대 중반부터는 시군구 현지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조기이용과 공표시기 단축이 가능해졌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는 사업체명, 소재지 등 사업체에 관한 기본사항과 주요 품목명을 조사표에 미리 인쇄 제공함으로써 조사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응답부담도 줄이게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는 국세청의 행정자료(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를 입수·활용하여 조사내용을 추가 검토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게 되었다.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개요

••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는 광공업생산·출하·재고지수,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등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주기는 매월이며 생산·출하의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재고는 매월 말일을 조사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제품의 생산·출하·재고에 관한 사항과 고용 및 조업상황이다. 조사대상사업체의 표본추출방법은 일정 규모이상은 전수조사, 그 이하는 표본조사를 하는 절사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사방법 및 체계는 지방통계청을 통해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매월의 광공업생산·출하·재고지수와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작성에 이용된다.

발전과정

••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는 한국은행에서 산업생산지수(1955년 기준)의 작성을 위해 1955년 광공업센서스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1957년 8월부터 표본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은행도 1962년 3월부터 ‘광공업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1963년 10월부터는 금액조사의 디스플레이터를 얻기 위하여 ‘광공업생산자 판매가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68년부터는 조사명칭을 ‘광공업동태조사’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통계 일원화 방침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산업생산지수의 편제기관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이 조사는 1969년 1월부터는 한국산업은행이 전담기관으로 되었다. 그후 197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고, 동년

7월부터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단일조사기관으로 되었다. 또한 1970년 3월에 지정 통계로 승인되었다. 2008년 7월에는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를 흡수 통합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조사명칭을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로 변경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사대상을 보면, 1985년 기준 산업생산지수 작성까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제조업 및 전기업이었다. 1990년 기준부터 가스공급업을 추가하였고, 2010년 기준부터는 증기·온수공급업, 수도사업을 추가하였다.

조사대상은 1970년 기준 지수부터 1980년 기준 지수까지는 종사자수 5인 이상인 사업체 4500~4700개 수준을 유지하였다. 1985년 기준 지수부터는 시도별 광공업지수 작성을 위해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체 약 9100개로 확대하였다. 1990년 기준 지수부터 원칙적으로 종사자수 20인 이상인 사업체로 되면서 사업체수는 약 8600개로 감소되었다. 대부분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대상사업체와 일치하여 큰 변화가 없는 수준에서 2008년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를 흡수 통합하였다. 2010년 기준 지수에서는 일정 수준의 사업체 대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종사자수 20인 이상 사업체 약 800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1970년에는 제품의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과 원재료의 구입량, 자가생산량, 사용량과 고용 및 급여의 월말 종업원수, 월중 연근무인원수, 월중급여액 그리고 월중조업일수 등을 조사하였다. 2015년에는 생산실적을 자체·위탁·수탁으로 세분하고 있고, 출하를 내수·수출·타 공장 및 기타출하로 세분하고 있다. 다만, 원재료에 관한 사항은 1990년에 2002년에 조사 중지되었고, 2013년에는 조사월 생산이 추가되었다. 고용 및 조업에 관한 사항은 1일 평균조업시간과 조사원 조업일수가 추가된 반면, 월중 연근무인원수와 월중급여액은 1990년에 조사 중지되었다. 그리고 생산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품목별 생산능력, 주요설비 보유수, 표준 조업일수, 1일 표준 조업시간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가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로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광공업생산지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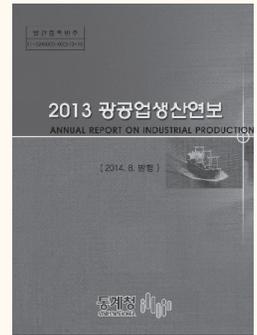
●● '광공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생산동향의 단기적인 변동분석과 평가를 위해 작성하며,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분기별GDP추계, 노동생산성지수의 작성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55년 및 1958년 기준 지수 이후 1960년 기준 지수부터는 지수의 정확성 유지와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평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도 끝자리가 '0, 5'인 해를 기준

으로 매 5년마다 기준년도 개편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1965년 기준 지수(가중치산출 기준년도는 1966)를 제외하고는 지수비교 기준년도와 가중치산출 기준년도를 일치시켜 작성해 오고 있다. 2015년 현재는 2010년 기준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포괄범위는 1985년 기준까지는 광업, 제조업, 전기업으로 하였으나, 1990년 기준부터 가스공급업을 추가하고, 2010년 기준부터는 증기·온수공급업, 수도사업을 추가하여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지수는 월별로 작성한다. 대표품목의 월별생산량 자료는 '광업·제조업 동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자료의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이고, 조사기준시점은 매월 말일이다. 지수작성 산식은 기준시점 고정가중산출 평균산식을 이용하고 있다. 결과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보도자료인 『산업활동동향』, 월간보고서인 『광공업생산동향』, 연간보고서인 『광공업생산연보』 등을 발간하여 제공해 오고 있다. 다만 『광공업생산연보』는 2005년부터 전자도서로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2013 광공업생산연보

발전과정

●● 1957년 8월에 한국은행이 '산업생산지수'라는 명칭으로 1955년을 지수비교 및 가중치산출 기준년도로 한 기준시점 고정가중산출 평균지수를 1954년까지 소급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대표품목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가중치산출을 종업원수로 하는 등의 한계로 잠정치수로 발표하였다. 종사자수를 가중치 산정의 기초자료로 이용한 것은 1955년 기준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에서 부가가치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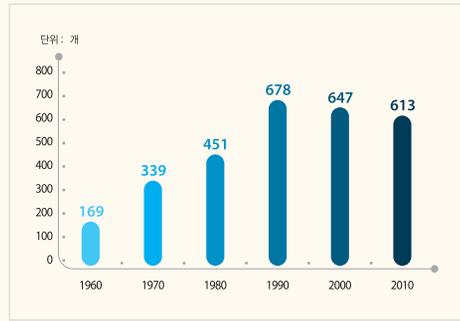
1958년 기준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가 발표되면서 1958년 기준 센서스 부가가치 개념의 산업생산지수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1960년 5월부터 공식지수로 발표하였다. 이후 기준년도를 1960년과 1965년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준년도와 일치시켜 분석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한편으로 한국산업은행도 1962년 3월부터 동일한 산업생산지수를 작성하였는데 양 기관의 지수가 서로 상이하여 정부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1969년 1월부터는 한국산업은행이 산업생산지수 작성의 전담기관으로 되었다. 이어 1969년 8월 제31차 통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단일작성기관으로 변경되어, 1970년 1월부터 6월까지

양 기관이 공동작성한 후, 7월부터는 단독으로 발표하였다. 2009년 1월부터는 지수의 명칭을 광공업생산지수로 변경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표품목의 선정기준은 광공업 총생산액의 5000분의1 이상인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별 대표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기준년도별 대표품목 수

와 대표도는 표와 같다. 대표도는 총부가가치에 대한 대표품목 부가가치 합계의 비율이다. 지수 산출에 이용하는 대표품목의 기초자료는 UN 권고와 각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별 생산량(물량)자료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규격이 다양하고 수량적인 파악이 어려운 의약품, 화장품, 의복류, 자동차부품 등은 금액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금액자료에 대해 1975년 기준 지수까지는 별도의 생산자 판매가격조사를 통해 불변 자료를 산출하였으나, 1980년 기준 지수부터는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해당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고 있다.



● 광공업생산지수 대표품목수

광공업생산지수 대표품목수의 변천

기준년도	대표품목수(개)	대표도(%)	작성기관
1955	77	-	한국은행
1958	149	-	한국은행
1960	169	-	한국은행
1965	278	86.6	한국은행
1965	333	89.6	한국산업은행
1970	339	87.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	420	84.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451(456)*	84.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	666	85.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678	84.2	통계청
1995	665	84.9	통계청
2000	647	84.5	통계청
2005	633	84.7	통계청
2010	613	84.5	통계청

* 1984 연간보정 시 451개에서 456개로 추가되었음

1980년 기준 지수의 대표품목수는 1984년 451개에서 456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인한 전자제품들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VTR, 전자레인지, 전자계측기, 전자복사기 등 5개 품목이다.

가중치산출의 기초자료는 2005년 기준 지수까지는 해당 기준년도의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2010년 기준 지수는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의 광업과 제조업부문을 이용하였다. 그 밖에 전기업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자회사 결산서, 가스업은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공급업체 결산서, 그리고 수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자의 결산서를 이용하였다.

가중치는 1955년은 종사자수로, 그 이후는 부가가치로 하였는데, 1958년과 1960, 1965년은 '센서스 부가가치'로 하였고, 1970년은 총부가가치, 1975년 이후에는 순부가가치로 하였다. 따라서 보통 가중치라 하면 기준년도의 총 부가가치에 대한 산업별 또는 품목별 부가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가중치 산출방법은 비채택 산업이나 비채택 품목의 부가가치를 채택산업 또는 채택품목에 비례배분하여 산출했다.

계절조정방법은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전통적인 방법인 12개월이동 평균법을 적용하였고, 1973년부터 1979년 8월까지의 미국 상무성이 개발한 센서스국법 X-11을 사용하였다. 1979년 9월부터 1999년 1월까지의 캐나다 통계국의 E. B. Dagum을 중심으로 개발한 X-11 ARIMA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후 1992년 2월부터는 미국 상무성의 Monsell, B.C. 등을 중심으로 개발한 X-12 ARIMA 방법을 도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계절요인에는 명절 이동과 조업일수 차이에 의한 효과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정하는 기능이 X-12 ARIMA 방법에 있기 때문에 1992년 2월부터 명절(설, 추석) 효과를 사전 조정하였고 조업일수 효과는 2003년 2월부터 적용하였다.

한편, 지수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본분류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외에도 지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수분류지수를 작성 제공해 오고 있다. 1965년 기준부터 제조업제품 용도별지수(생산재, 소비재)를 작성하였다. 1985년 기준 지수부터는 공업구조별지수(중화학공업, 경공업)와 설비용기계류지수를 추가하였다. 1990년 기준 지수부터는 제조업제품 용도별지수의 분류내용을 세분하여 제조업제품별 분류지수(자본재, 중간재 및 소비재)로 명칭 변경하여 작성해오고 있다. 1995년 기준 지수부터는 산업형태별지수(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와 기업규모별지수(대기업, 중소기업)를 추가하였으며, 2000년 기준 지수부터는 제조업ICT지수를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의 계절조정지수도 있다.

지수의 공표는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통계국을 비롯한 타 기관 월별지표를 취합하여 『월간 경제동향』에 수록하여 발표하였다. 공표는 매월 15일 전후에 발표하는 데, 산업생산지수 기준을 보면 익익월 15일 전후가 된다. 이에 따라 산업생산지수 등 월별통계가 익익월 중순에 발표되어 시의성이 떨어지고 통계발표의 독립성도 상실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 번에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지수의 공표를 직접 생산하는 조사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에 경제기획원과의 협의 끝에 1989년 10월부터 조사통계국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2001년 10월까지의 매일 말경에 전월의 지수를 공표하였으나 공표시각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당시 재정경제부 기자실의 엠바고 제도를 통해 공표일 1~2일 전 기자설명을 하고 공표일의 조건 또는 석간에 게재토록 하였다. 이때 정책부서에도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의 자료이용의 비대칭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2001년 11월부터는 공표일자와 공표시각을 사전 예고함과 동시에 모든 이용자가 동일 시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금융시장 개장 전인 8시 30분으로 하였으나, 몇 차례의 변경이 있는 후 2010년 4월부터는 오전 8시에 공표해오고 있다.

광공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 광공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한국산업은행이 1968년 1월부터 1966년을 지수비교 및 가중치산출의 기준년도로 하여 처음으로 작성하였다. 1970년 7월부터는 광공업생산지수와 함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되어 작성하고 있다. 기준년도, 산업상의 범위, 지수의 분류, 지수산식, 대표계열의 선정기준 및 대표 품목수 등도 광공업생산지수와 동일하다. 다만 가중치산출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의 산업별, 품목별 출하액을 기초로 하였으며, 지수의 분류는 광공업생산지수의 분류 외에 1990년 기준 지수부터 출내역별지수(내수, 수출)를 작성해 오고 있다.

광공업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 한국은행에서 1962년부터 1968년까지 산업생산지수와 함께 재고지수를 작성하였으나 지수의 포괄범위와 자료의 이용도가 제한되어 산업 간의 상관분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1968년에 중지한 바 있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1970년 7월부터 광공업생산지수 및 출하지수의 전담 작성기관이 되면서 생산 및 출하와 함께 재고지수의 작성도 정책부서로부터 요청받아 1973년 2월에 생산자제품재고지수(1970 지수비교 및 가중치산출 기준년도)를 공식적으로 작성 발표하게 되었다. 지수작성의 기준년도, 산식, 가중치산출, 지수분류 등 지수의 작성방법은 생산지수 및 출하지수와 동일하다.

생산지수의 대표품목 중 재고의 의미가 없는 품목과 재고의 비중이 낮은 품목은 제외하고 있다. 가중치는 연간조사의 연말재고액을 연평균재고액으로 조정된 후 산출하며, 지수의

종류도 생산 및 출하지수의 기본분류 및 특수분류 외에 1985년 기준 지수부터 재고수준의 추이를 분석하는 지표인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을 작성 발표하고 있다.

광공업생산자제품 재고지수 대표품목수의 변천

기준년도	대표품목수(개)	대표도(%)	작성기관
1970	244	80.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	320	77.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370	79.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	550	81.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555	80.7	통계청
1995	538	82.5	통계청
2000	540	79.8	통계청
2005	519	77.2	통계청
2010	534	76.8	통계청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개요

이 지수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설비상황 등을 조사하여 공급능력수준을 의미하는 생산능력지수와 설비이용도를 나타내는 가동률지수를 작성하여 경기 동향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표품목의 선정은 광공업생산지수의 대표품목을 기준으로 생산능력의 산정이 가능하고 하위 산업의 대표도를 가능한 한 높일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대표품목의 기초자료는 물량자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품목은 금액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의 작성주기, 작성기준기간, 산식, 계절조정방법, 공표방법 등은 광공업생산지수와 같다. 다만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계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절조정지수를 작성하지 않는다.

발전과정

한국산업은행이 1972년 2월에 1971년을 기준년도로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를 처음으로 공표하였다. 1977년 3월부터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되었고, 그후 1979년 2월에 1976년 기준 지수를 발표하였으며, 1980년 기준 지수부터는 다른 산업활동 동향지수와 같이 연도 끝자리가 '0, 5'인 해를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기준년도 개편작업을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가중치의 산출은 광공업생산지수와 동일한 부가가치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중치의 산출방법은 대표품목의 부가가치만으로 중·소분류의

가중치를 산출하는 단순법과 비대표품목의 부가가치도 대표품목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산출하는 비례배분법이 있다. 1971년, 1976년, 1990년 기준은 단순법을 적용하였으며, 1985년과 1995년 기준 이후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생산능력지수의 가중치를 산출할 때에는 품목별 연간 부가가치를 품목별 가동률로 나누어 환산한 후 비례배분법으로 산출하고 있다.

생산능력의 산정방법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90년 기준 지수까지는 표준생산능력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표준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표준적인 생산제요건(원재료, 자금, 동력, 노동력 등)이 주어지고 해당 업종에서의 관행과 실적을 고려한 표준적인 월간 조업일수와 1일 조업시간으로 생산 활동을 하였을 때의 생산능력이다.

1995년 들어 과거의 생산능력 산정 방법으로는 신기술의 도입, 제품의 고급화, 노동관행의 변화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생산능력 산정방식의 개선과 이론적 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기준 지수부터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여 종전의 표준생산능력에서 적정생산능력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적정생산능력이란 최대생산능력에 설비효율이 감안된 생산능력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사내지정조업시간, 조업일수 및 단위시간당 설비능력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2000년 기준 지수에서는 적정생산능력 산정 방법의 틀 내에서 생산능력 피크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이 방법은 생산실적의 최댓값(수량 또는 금액)을 일정기간의 생산능력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생산능력을 산정하는 품목은 2000년 기준 시는 메모리, 집적회로 등 4개 품목이었고, 2005년 및 2010년 기준 시는 철강선박, 금형 등 17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기계수주동향조사

개요

이 조사는 주요 설비용기계류 제조업체의 수주액을 수요자 및 기계종류별로 매월 조사하여 국내 설비투자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련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단위는 수주액 파악체계를 고려해서 본사 중심의 기업체 단위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일 공장의 경우에는 사업체 단위로 한다. 조사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월 1~말일이며, 조사실시기간은 조사대상기간의 익월 5~19일이다.

발전과정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1978년 6월부터 12월분까지 시험조사를 거쳐, 1979년 1월분 조사부터 '기계수주통계조사'라는 명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79년 3월에는 일반통계로 승인을 받았다. 2008년 10월에는 조사명칭을 '기계수주동향조사'로 변경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사범위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운데 설비용기계류이다. 조사대상은 1979년 처음 조사 시는 1976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 종업원 200인 이상 기업 중 설비용기계류 총생산액의 60%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100개 기업을 유의 선정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설비용기계류 총생산액의 최근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의 종업원수 및 기종별 생산액 등을 고려해서 총생산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업체를 유의 선정하였다. 2015년 현재로는 167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계수주동향조사의 주요 변경내용

변경분야	주요 내용
통계작성승인 및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 03. 08 일반통계 573호 '기계수주통계조사'로 승인(현 승인번호 제10120호) - 2008. 10부터 '기계수주동향조사'로 개칭
조사대상품목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06~1998. 12은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부품류를 조사 대상에 포함 - 1999. 01부터 일부부품을 조사대상에서 제외, 사무자동처리기계 및 정밀측정제어기계를 신규 추가 - 2009. 08부터 일부부품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 휴대용 전화기에 대해 산업연관표의 투자율을 적용하여 1996. 06 이후 자료 보정 - 2011. 01부터 의료용기기(초음파진단기, 광선치료기, 방사선장치 등) 일부 품목포함 - 2012. 01부터 태블릿 PC 추가 - 2013. 01부터 사무용자동처리기계 일부 품목을 조사대상에서 제외, 1996. 06 이후 자료 보정
기종분류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01. 기계종류를 5개에서 11개로 세분, 그에 따른 새로운 집계결과를 소급적용이 가능한 1996. 06 이후 자료부터 수록
수요자분류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01. 국방부 발주분 조사대상에서 제외, 정부출자기관(포항제철, 한국통신 등)은 민영화됨에 따라 공공에서 민간부문으로 분류 - 2001. 09부터 수요자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더욱 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타 • 기타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제조업 • 운수창고통신업 → 운수창고업, 통신업 • 기타비제조업 → 금융보험업, 기타비제조업 - 2009. 06부터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수요자분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금속 → 금속가공으로 개칭 • 전기기계 → 전기장비로 개칭 • 컴퓨터 및 사무기기, 영상음향통신 → 전자 및 영상음향통신으로 통합
불변수주액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12부터 불변금액 개발 - 2006. 01부터 불변금액 공표 - 2008. 07부터 2005 기준(2005 = 100) 생산자물가지수로 불변수주액 작성 - 2013. 01부터 2010 기준(2010 = 100) 생산자물가지수로 불변수주액 작성
계절조정계열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03부터 수요자별 계절조정계열 작성
지표 추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08부터 '선박·선박용 내연기관 제외' 계열 추가 작성(1999. 01 이후 부터 소급 작성)

한편, 1999년 이후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수주동향조사의 조사대상품목, 기종 및 수요자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하였다.

중소제조업동향조사

이 조사는 중소기업체의 생산 및 판매동향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수립, 연구 및 금융업무 수행과 중소기업 생산지수 작성에 필요한 월별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은행이 1961년 4분기부터 '중소기업동향조사'라는 명칭으로 분기별 표본조사를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1963년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기 위하여 분기별 조사를 월별조사로 변경하였다. 1974년 6월에 일반통계로 승인되었다. 1994년 12월에는 통계 명칭을 '중소제조업 동향조사'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산업상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 23개 중분류 중 20개 중분류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제외된 3개 중분류인 담배, 코크스·석유정제업·핵연료,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은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및 부가가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종업원규모상의 범위는 1976년까지는 종업원 5인 이상 199인까지를 중소기업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6년 12월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977년부터는 종업원 200~299인 규모를 추가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표본 사업체수는 월별 조사로 전환한 1963년 1월에 600개로 시작하여 2013년 표본 개편 시는 3070개로 되었다. 주요 조사항목은 1974년에 생산액, 출하액, 종업원수 등이고, 1985년은 수출액이 추가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생산액, 생산제품의 판매단가, 종사자수 등을 지금까지 조사해 오고 있다.

중소제조업 동향조사 항목의 변천

구분	1974	1985	1998~2014
주요 조사항목	생산액, 출하액, 재고액, 종업원수, 급여액, 조업상황 등	생산액, 출하액, 수출액, 종업원수 등	생산액, 생산제품의 판매단가, 종사자수 등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개요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기본분류지수와 특수분류지수로 나누어 작성되는데, 기본분류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 중 22개 중분류에 대해서 특수분류지수는

제조업 공업구조별지수(중화학공업, 경공업)와 산업형태별지수(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를 작성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부문의 생산지수 작성 방식은 물량접근방식보다 금액접근방식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제품은 그 종류와 품질, 규격이 다양하여 대표 품목선정이 어렵다. 둘째, 부품생산업체와 주문생산의 비중이 높은 주문납품제조업의 경우 생산품목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셋째, 정해진 품질, 규격의 제품만을 조사하는 물량접근방식은 신제품의 출현을 생산지수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품질 개량에 따른 빈번한 생산품목의 전환으로 정해진 품목을 계속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상의 포괄범위, 조사주기, 조사기준시점은 중소기업 동향조사와 같으며, 지수산식은 기준시점 고정가중산술 평균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절조정방법은 12개월 이동평균법, X-11, X-12 ARIMA를 단계적으로 도입 적용해 왔다.

이 지수 작성의 기초자료는 금액자료이므로 디플레이터에 의하여 불변가격으로 환산된다. 디플레이터는 별도로 작성하는 중소기업 제품생산자 판매가격지수를 이용한다. 기준치는 기준년도의 월평균생산액이며 산업중분류별(1985 기준 지수 이전은 산업소분류별)로 정해진다. 가중치는 순부가가치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광업·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결과의 센서스 부가가치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이다.

발전과정

•• 중소기업은행이 1963년 1월부터 월별 조사인 '중소기업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제조업 생산지수를 처음으로 작성하였다. 그후 각종 경제지표가 정부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준년도인 1965년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생산지

수도 기준년도를 이에 일치시킴으로써 그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경제개발 계획 기간 중의 성과측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1963년 기준 지수는 전국 산업중분류별로만 작성하였으나, 1965년 기준 지수부터는 전국 및 시도별 산업중분류지수까지 세분화하여 작성하였다. 그후에도 각종 경제지수의 기준년도 변경에 맞추어 기준년도 개편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5년 현재는 2010년 기준 지수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 중소기업은행(1960년대)

가중치 기준년도를 보면, 1965년 기준 지수는 가중치 기준년도를 1963년으로 하였다. 이는 가중치산출 기초자료인 광공업센서스가 1963년 기준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그후에는 모두 지수 및 가중치의 기준년도를 일치시키고 있으며, 연도 끝자리가 0과 5인 해를 기준으로 5년마다 기준년도 개편작업을 해오고 있다.

중소제조업제품 생산자 판매가격지수

이 지수는 중소기업은행이 1964년부터 월별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경상생산액을 불변생산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필요한 디플레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대표품목 선정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의 산업중분류별 출하액이 큰 품목순으로 나열한 후, 절사법에 의해 산업중분류(1985 기준 이전은 소분류) 기준 출하액의 60~70%를 포괄하는 품목으로 하였다. 대표 품목 수는 1965년 기준의 169개 품목에서 2010년 기준에서는 195개 품목이다. 1990년의 279개에서 1995년에 180개로 대폭 감소한 것은 품목분류 기준을 8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일부 품목의 탈락·통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중치는 광업·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의 제조업 출하액을 기준으로 대표품목 이외의 출하액도 가중치 산출에 포함시켜 중분류별 및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해 오고 있다. 한편, 가격지수 산출을 위한 자료는 1996년까지는 '중소제조업 판매가격조사'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중소제조업동향조사'에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판매가격조사 표본업체수의 변화

기준년도	1965	1970	1990	1995	2000	2005	2010
표본업체수(개)	420	3,649	1,038	856	997	850	960

에너지총조사

개요

에너지총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우리나라 수요부문에 대한 에너지 소비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주요 활용처는 수요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및 소비구조 분석, 주요 산업의 에너지 소비형태 및 에너지원 단위 작성, 에너지 수급·온실가스저감·수요관리 등의 정책개발 및 평가자료, 국가 에너지 수급통계의 전환 및 소비부문 세분화를 위한 보완 자료 등이다.

다음으로는 '에너지총조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유지 및 수요통계의 질적 향상을 통한 통계서비스의 확대이다. 이는 국가 에너지통계정보 시스템(KESIS)을 통한 연도별 주요결과 공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 제도, 기술 등 에너지 소비 변화요인 관련 조사내용의 확대, 국제기구 작성수준의 에너지소비통계 세분화 추진, 주요 업종의 원시자료 DB 구축 및 주요 사업체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총조사는 2005년까지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타계식조사와 우편조사에 의한 자계식조사를 병행하였으나, 2008년 조사는 조사표 분실, 보안 등의 이유로 작성된 조사표를 직접 우송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2011년 조사에서는 에너지총조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조사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조사표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였고 가구조사는 망에너지(전력, 도시가스)에 한해 공급사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조사업무는 시행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 투입인력의 한계, 조사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총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

분야	주요 조사항목	주요 조사결과	비고
산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원별 소비 열설비와 에너지 소비 전력설비와 전력 소비 부생에너지 이용현황 자가발전 실적 보일러 이용현황 중장비 에너지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에너지 소비구조 설비별 에너지 소비구조 공정별 에너지 소비구조 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 부생 에너지 이용현황 자가발전 현황 보일러 이용현황 중장비 에너지 소비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 건설업체 및 중장비
수송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원별 소비 수송수단별 보유대수 수송수단별 주행거리 차종별 에너지 소비 차종별 주행거리 자가용승용차 이용 현황 주유방법 등 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수단별 에너지 소비구조 수송수단별 대당 에너지 소비와 주행거리 업종별 연료경제 업종별 에너지 단위 차종별 에너지 사용구조 자가용 차량의 운행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수업 :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자가용 : 개인, 회사, 관용자가용 차량, 이륜차 포함
상업 공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원별 소비 에너지 이용기기 현황 용도별 에너지 소비 자가발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에너지 소비구조 용도별 소비구조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자가발전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소매 · 음식숙박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공공 사회 기타
가정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가구의 일반사항 에너지원별 소비 에너지 이용기기 현황 에너지 절약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주택형태, 가구원수, 난방설비별 에너지 소비구조 용도별(난방/취사) 소비구조 설문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지역 군지역
대형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원별 소비 냉난방설비 전력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용도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업종별 면적당 에너지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에너지 소비 2000 TOE 이상 소비 건물

조사항목은 기본적으로 전 회 조사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시계열 분석 및 패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항목을 조사하였다. 산업부문은 업종별·설비별·산업공정별 에너지 소비구조, 수송부문은 차종별 에너지 소비구조·주행거리·연료경제·승용차 운행일수·승차인원, 가정부문은 주택형태별·난방설비별·난방면적별 에너지소비·가전기기 보유율, 상업 및 대형건물은 업종별 에너지 소비·연면적당 에너지 소비 등이다.

발전과정

•• 한국동력자원연구소(현 에너지경제연구원)가 1981년에 '에너지센서스'(현 '에너지총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1981년 3월에는 일반통계로 1996년 12월에는 지정통계로 변경승인 받았다. 그 후 1984년을 비롯하여 3년 주기로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4년 조사는 제12회 조사가 된다. 1981년부터 1999년의 제7회 조사까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단독 수행하였으며, 2002년 제8회 조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단독 수행하였으나, 광공업부문은 조사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였다.

2005년 제9회 조사는 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단독 수행하고 광공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행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국가에너지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광공업부문 전수조사 결과를 이용한 것이다. 2008년, 2011년 조사는 2005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광공업 부문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제조업·광업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 DB 구축'의 간이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조사부문 및 조사대상 범위를 보면, 1981년의 제1차 조사 이후 2011년의 제11차 조사까지 큰 변화는 없었으나, 1999년 조사 때부터 산업중분류 1차 금속산업은 철강산업과 비철금속산업 및 금속주조업 등 소분류로 구분하였고, 비금속광물 제조업은 시멘트업을 분리하였다. 2014년 에너지총조사를 기준으로 조사부문 및 대상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에너지총조사는 표본조사로 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부문은 산업부문, 수송부문, 상업공공부문, 가정부문, 대형건물부문 5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조사부문별 조사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산업부문은 농업·림업, 건설업, 광업 및 제조업이다. 수송부문은 운수업과 자가용차량이며, 상업공공부문과 대형건물부문은 도소매음식숙박업, 통신금융부동산서비스업, 공공사회기타서비스업이다. 여기에서 대형건물부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가 해당된다. 가정부문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가구이다. 조사대상 에너지원은 비연료유(아스팔트, 용제, 파라핀왁스, 윤활기유)를 제외한 소비부문에서 사용된 모든 에너지로 석탄류, 석유류,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가 해당된다. 조사에서

제외되는 분야는 국방, 일부 공공행정기관,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전기·가스·증기업, 특수형 승합차, 특수용도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이며, 가구에서는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독립가구이다.

조사대상 에너지원의 범위도 달라지는데, 신탄류는 1983년 총에너지소비량의 18.5%에서 1992년 0.7%로 되어 1993년부터 기타에 포함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열에너지는 1999년 조사부터 그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분리하여 집계하고 있다.

에너지총조사 에너지원 변천

조사년도	에너지원	비고
1981, 1984, 1987, 1990	신탄류, 석유류, 가스류, 전력, 신탄류 및 기타	
1993	석탄, 석유, 가스, 전력, 기타	신탄류는 기타에 포함
1996	석탄, 석유, 가스, 전력, 기타	
1999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열에너지, 기타	
2002, 2005, 2008, 2011, 2014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기타	

에너지총조사는 크게 3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다. 산업, 수송, 상업공공부문과 가구부문 그리고 대형건물이다. 표본의 크기를 보면, 1회 조사인 1981년에는 11만 4682개였다. 1984년에는 대형건물 부문을 제외하고 이전의 단순전수조사를 표본조사로 변경하여 표본의 크기는 대폭 줄었다. 1987년에는 대형건물 부문을 다시 추가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3개 부문에 대해 표본을 추출해오고 있다.

에너지총조사 표본 크기의 변화

조사년도	표본의 크기				비고
	산업, 수송, 상업공공 부문	가구부문	대형건물	계	
1981	84,510	30,000	172	114,682	• 단순전수조사(광공업, 건설, 운수) 4만 9000업체 포함 • 가구는 1만 가구 × 3회 조사 = 3만 가구임
1984	19,214	10,775	-	29,989	자가용 및 관용차량 추가
1987	22,205	10,000	690	32,895	
1990	19,900	9,500	600	30,000	
1993	15,900	6,000	600	22,500	
1996	15,584	4,882	1,379	21,845	
1999	15,454	5,089	800	21,343	
2002	17,400	5,000	600	23,000	
2005	14,130	5,000	709	19,839	광업, 제조업 제외
2008	14,101	5,000	832	19,933	광업, 제조업 제외
2011	27,114	8,000	886	36,000	광업, 제조업 제외

모집단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농업총조사, 임업총조사 및 어업총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의 등록자동차,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2000toe 이상 소비하는 건물로 하였다.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 2005년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국가에너지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광공업부문 전수조사결과를 이용하였고, 2008년과 2011년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제조업·광업 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 DB 구축'의 간이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므로 별도로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다.

에너지수급통계

● '에너지수급통계'는 에너지공급통계로서 에너지소비통계인 '에너지총조사'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너지통계라 함은 에너지의 생산, 수출입 및 유통단계에서 공급기준으로 생성된 에너지원별 수급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는 공급통계를 일컫는다.

공급통계는 공급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만큼 소비통계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며, 시의성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비통계는 실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단계의 조사이기 때문에 소비용도에 의한 통계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의 총에너지통계는 공급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다.

'에너지수급통계'는 이미 작성된 통계를 수집하여 작성하는 보고통계이다. 수집대상 통계로는 '유·무연탄수급실적'(대한석탄협회), '석유류수급통계'(한국석유공사), '천연가스수급실적'(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수급실적'(한국도시가스협회), '전력수급통계'(한국전력공사), '열에너지 수급실적'(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시 SH공사, GS파워(주)), '신·재생에너지 공급통계'(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이다. 또한 이 통계는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에너지수급통계 작성기관에서 매월 생산 및 판매실적을 보고받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에너지 수급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작성내용을 보면, 에너지생산 및 수출입(국내생산, 수입, 수출, 국제병커링, 재고 등), 1차 에너지 공급 및 전환(발전, 지역난방, 가스제조, 자가소비 및 손실) 및 최종에너지 소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있다. 최종에너지소비는 산업부문(농림어업, 광업, 11개 업종의 제조업, 건설업), 수송부문(철도운수,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가정·상업·공공부문(가정·상업, 공공)으로 구분하고, 에너지원별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력, 열,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수급통계'는 동력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력자원연구소(현 에너지경제연구원)가 1983년 『에너지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통계연보』와 『에너지총조사보고서』는 국가에너지 수급 자료로서 대표적인 통계보고서이기는 하나, 조사 및 발간주기가 1년 또는 3년이 되어 에너지수급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이에 정부가 매월 에너지 수급 동향자료를 공표하는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들 보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에너지통계월보』를 개발하여 1986년부터 월간으로 정기 발간하였다. 2008년 2월에는 작성기관이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2008년 6월에는 다시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력통계

•• 1961년 7월 조선전업(주), 경성전기(주), 남선전기(주) 등 전력 3사가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되면서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그해 12월 분기보로 창간하였다. 1971년에는 이용목적에 따른 전력통계자료의 전문화 및 세분화의 필요성에 따라 연보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9년 1월부터는 매월 『전력통계속보』를 발간하여 전력생산 및 공급에 관한 주요 실적을 신속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전력통계’는 사외 전력그룹과 한국전력의 사내 각 부서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 작성하는 보고통계이다. 사외 전력그룹은 한국전력거래소, 6개 한전자회사, 6개 메이저급 타사이며, 사외 보고기관 및 사내 보고부서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연보인 『한국전력통계』는 발전부문, 전력설비, 구입부문, 판매부문, 경영관리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고, 월간인 『전력통계속보』는 전력수급, 발전설비, 발송배전, 전력거래, 전력판매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다.

한국전력통계 작성내용

한국전력통계(연보)		전력통계속보(월보)	
부문	주요 작성통계	부문	주요 작성통계
발전부문	발전전력량, 연료사용량	전력수급	전력수급실적
전력설비	발전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정보통신설비	발전설비	발전설비용량, 발전설비현황, 발전소건설현황
구입부문	전력구입	발송배전	발전전력량, 연료사용량, 발전효율 및 송배전손실
판매부문	전력손실, 고객호수, 판매전력량, 전력판매수입, 판매단가	전력거래	전력거래실적, 전력거래가격 및 단가
경영관리	경영분석비율, 종업원수, 노동생산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금 변천	전력판매	수용호수, 판매전력량, 판매수입,

04

맺음말

1955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의 명칭으로 시작한 '산업총조사'의 실시는 우리나라 광공업통계를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 후 1966년부터는 총조사 또는 연간조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 또한 광공업동향의 단기적 분석을 위해 1957년부터 산업생산지수를 작성하고, 1968년부터 광공업 생산자제품출하지수를 매월 작성함으로써 광공업 단기분석통계의 유용성을 제고했다. 1960년대부터 중소기업의 단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지수와 중소기업가동률을 작성함으로써 중소기업정책 수립에도 기여해 왔다. 1970년대 초에는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1973년에 광공업 생산자제품재고지수를 개발 발표함으로써 경제개발연대에 필요한 광업 및 제조업에 관한 통계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1970년 이후에도 총조사 및 연간조사의 주요내용인 부가가치 산출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센서스 부가가치의 산출에 그쳤으나, 그 후 감가상각비, 간접생산비 등의 조사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순부가가치 산출에 접근하도록 발전시켜왔다. 또한 광공업생산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광공업연간조사 자료를 기초로 지수의 대표품목과 가중치를 매 5년 주기로 개정하여 지수의 유용성을 제고해왔다.

1980년대에는 지역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별 동향지수를 작성하였고, 업종별 육성 정책에 필요한 각종 업종별 통계가 개발되었으며, 2000년 이후는 개별 도시에서도 해당 도시의 산업정책에 필요한 도시별 통계가 작성되었다. 이와 같이 광공업통계는 시대에 따라 전국 단위, 업종 단위, 지역 단위의 통계가 개발되어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통계 분야와 마찬가지로 광공업통계 분야에서도 통계수요는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통계가 신속하게 제공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비해 통계자료 수집의 환경은 기업의 정보보호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는 기업의 자료제공 부담을 가능한 한 덜어주고, 통계이용자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원자료의 공개를 확대하는 동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981년에 제1차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통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에너지총조사'는 공급통계가 발달되지 않았던 80년대 전반기에 국가의 에너지구조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으며, 지금도 에너지수급전망,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등의 에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83년부터는 에너지수급통계를 포함하여, 국내외 에너지 관련 지표 자료를 체계화하여 『에너지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에너지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에너지밸런스를 작성하여 국가 에너지전망 및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986년에는 『에너지통계월보』를 발간하여 에너지정책의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였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5년 국가에너지통계 작성 기준을 정립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통계를 작성 제공함으로써 국가에너지통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조사', '전력시장통계',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실태조사', '전력소비형태분석', '가구 에너지 소비실태조사' 등을 연간으로 작성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통계를 신규 개발하여 에너지정책 수요에 그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에너지총조사'는 그동안 에너지공급통계의 발달로 공급통계보다는 더 세분화된 통계가 작성되어야만 의미가 있으므로 현재 3년 주기로 에너지의 각 소비부문을 한 번에 모두 조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공공부문 등으로 나누어 매년 1개 부문씩 조사하되, 조사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것이 조사결과의 유용성을 높이고 국제비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에너지수급통계는 UN, OECD 등이 마련한 국제분류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제외된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서로 다른 기관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관련 통계의 분류를 일치시켜 에너지원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작성기관의 모든 원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인이나 연구자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경제기획원, 『광공업센서스 시계열 연결 결과보고서(1955~1972, 1968 기준)』, 1974.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3 산업센서스 UN권고안(한글번역판)』, 1982.
- 경제기획원·한국산업은행, 『광공업센서스 보고서(I·II·III)』, 1963, 1966, 1968.
- 내무부 통계국, 『제1회~제3회 대한민국 통계연감』, 1953~1955.
- 대한석유협회, 『석유연보』, 각 연도.
- 대한석유협회, 『석유자료』, 각 월.
- (사)대한탄협협회, 『탄협 40년사』, 1988.
- (사)대한석탄협회, 『탄협』, 각 연도.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실시 연도.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각 월.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 상공부·한국산업은행, 『1960년 전국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 종합보고서』, 1961.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사용량통계』, 각 연도.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소비통계』, 각 분기.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각 연도.
- (재)대한통계협회,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조사현황』, 1968.
- 조선총독부, 『1910~1942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 연도.
- 조선총독부, 『1943년 조선통계연보』, 1948.
- 중소기업은행,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및 중소기업제품 생산자 판매가격지수의 개편』, 1985, 1990, 2000.
-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산업, 품목, 기업편)』, 1973~2003.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1969~2012.
- 통계청, 『한국통계조사현황』, 1971~2004 각 연도.
- 통계청, 『산업생산연보』, 1970년 이후 각 연도.
- 통계청, 『산업생산지수 개편보고서』, 1995, 2000, 2010.
- 통계청,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개편보고서』, 1976, 1995, 2005, 2010.
- 통계청, 『주요 통계업무 자료집(경제통계부문)』, 2006.
- 통계청,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보고서』, 2012.
- 통계청, 『광공업생산동향』, 각 월.
- 통계청, 『2008 산업통계를 위한 국제 권고(한글번역판)』, 2010.
- 통계청, 『에너지분야 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보고서』, 2006.
- 한국산업은행, 『1958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 종합보고서』, 1959.
- 한국산업은행, 『1967년 광공업통계조사』, 1968.
- 한국은행, 『1955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 종합보고서』, 1956.

- 한국섬유산업협회, 『섬유산업통계』, 각 연도.
한국시멘트협회, 『시멘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제지산업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철강협회, 『철강보』, 각 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 각 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통계월보』, 각 월.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010.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각 연도.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각 월.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석유공사, 『석유류수급통계』, 각 연도.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월보』, 각 월.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편람』, 각 연도.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 각 월.

경제통계

제3장

건설·주택·토지

1. 개요

2. 발전과정

3. 주요 건설·주택·토지통계의 발전과정

4. 맺음말

01

개요

의의

•• 건설·주택·토지의 활동은 생산물의 특성, 국민경제에 대한 역할과 영향 등의 관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위치가 고착되고 영구사용이 가능한 토지 위에서 진행되는 공통점이 있다. 건설 활동이 생산하는 도로, 항만, 발전시설, 통신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조건이 된다. 또한 주택건설 활동은 주택공급 수준과 직결되므로 주택가격을 변동시켜 결국 국민의 주거생활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건설 활동은 또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수준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한편 토지의 수급과 가격변동은 각종 건축물과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활동과 주택의 공급 및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토지 및 주택은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면서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택 및 주거생활에 관한 통계,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에 관한 통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건설·주택·토지의 통계는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범위와 종류

••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래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뒷받침할 다양한 건설·주택·토지 통계들이 생산되어왔다. 건설통계는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1962), 해외건설수주통계(1966) 등을 시작으로 도로투자현황(2008)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설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상승한 1990년대 이후 주택수요가 급증하였는데, 턱없이 부족한 주택재고로 말미암아 주택부족난이 심각해졌다. 주택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주택총조사'(1960) 외에도 주택보급률(1994), 미분양주택 현황보고(1998)를 비롯하여 개인별 주택소유통계(201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택 관련 통계가 생산되었다. 또한 주택문제에 편승하여 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전국 지가변동률조사(1975)를 비롯한 토지통계도 생산되었다.

건설·주택·토지의 승인통계는 작성중지통계, 1회성통계 등을 모두 포함하면 건설 37종, 주택 56종, 토지 12종 등 총 105종에 이른다. 이 통계들을 작성주기별로 분류하면 표(작성주기별 건설·주택·토지통계)와 같이 매달 생산되는 13종을 비롯하여 5년마다 생산되는 2개의 통계, 그리고 1회성에 그친 40종 등 다양하다. 특히 1회성 통계는 건설에는 없고 토지에는 4개에 그치는 반면, 주택은 36개로 월등히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택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또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의성 있는 주택통계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높았는지 반영하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작성주기별 건설·주택·토지통계

구분	계	작성주기							
		월	분기	반기	1년	2~3년	5년	수시	1회한
건설	37	7	1	-	27	-	-	2	-
주택	56	4	1	-	12	2	1	-	36
토지	12	2	1	1	3	-	1		4
계	105	13	3	1	42	2	2	2	40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건설·주택·토지의 통계는 통계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건설·주택·토지로 나누어진 통계분류 내용은 국민들에게도 익숙하다. 건설과 주택의 통계는 토지 위에서 행해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각종 건축물 등 다양한 활동에 의해 상대적으로 통계의 수가 많은 반면, 토지분야는 토지의 관리, 소유 및 이용에 한정된 관계로 12종에 그친다.

그러나 같은 통계 내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통계들이 포함되어 있고, 관점에 따라 복지, 농업, 재정, 금융, 기업경영, 경기, 도소매, 물가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통계가 다수 있다. 또 같은 건설 내에서도 건설부문과 교통부문, 나아가 수자원 등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되어 중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건설 통계 37종은 그 특성에 따라 건설경기(22), 교통(4), 수자원(2), 도시개발·계획(8), 그리고 기타(1)로 중분류할 수 있다. 주택 56개 통계도 유사한 성격을 집단화하여 주택시장(8), 주택가격(1), 주거수요 및 현황(39), 주택소유(2), 주택금융(3), 주택현황(3) 등으로 중분류할 수 있다. 토지 12개 통계는 토지시장(3), 토지소유(3), 토지이용(1), 지적·국토지리정보(2), 토지인식(3) 등으로 중분류할 수 있다.

건설·주택·토지 분야 통계 현황

분야	통계수	통계명
건설	37	건설경기동향조사, 건설업조사, 국내건설수주 동향조사,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건축물통계, 도로현황, 한국수문조사, 개발제한구역 현황, 수도권정책통계, 도시계획현황 등
주택	56	주택보급률, 미분양주택 현황보고, 임대주택통계, 주택건설실적통계, 아파트실거래가 지수,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월세가격동향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주거실태조사,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양보증 현황, 주택총조사 등
토지	12	부동산거래현황, 전국지가 변동률조사, 토지소유현황, 토지이용실태조사, 국토지리정보, 지적통계,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인식조사 등
계	105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건설·주택·토지통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통계와 정책 활용도가 높은 주요통계를 선정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때 국가승인통계 자료의 분류에 의한 주택통계에는 주택시장의 동향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인 주택가격과 관련된 대표적인 통계인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제외되어 있다. 현행 분류에 속한 주택가격 관련 통계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아파트이면서 실제 거래된 매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유형의 주택(예 : 단독주택)과 임대거래는 제외되어 전체 주택시장 가격동향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개별통계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으로 분류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작성하는 ‘주택금융 및 유동화증권(MBS·MBB)통계’(2004)와 ‘주택금융 및 보급자리론 수요실태조사’(2006), 그리고 국민은행이 작성하는 ‘주택금융수요 실태조사’(1974) 등 3개의 통계는 제외하였다.

건설·주택·토지의 국가승인통계는 105종에 이른다. 이 통계들 중에는 생산중지통계, 1회성통계, 지방정부통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통계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국가승인통계는 건설 22개, 주택 15개, 토지 5개 등 42개이다. 여기에 물가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와 전국 지가변동률조사, 기업경영으로 분류된 건설업조사, 그리고 임금분야의 건설업임금 실태조사와 감리원(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등 성격상 건설·주택·토지의 통계라고 할 수 있는 5개의 승인통계를 포함하면 47개에 이른다.

작성기관별 국가승인통계

통계작성기관	종수	건설분야	주택분야	토지분야
국토교통부	18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건축물통계, 한국수문조사, 도로현황, 도시재정비 사업현황, 수지원현황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분양 보증 현황, 임대주택통계, 택지예정지구 지정 및 공급현황, 주거실태조사, 주택보급률, 주택건설 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 보고, 아파트 주거환경통계	외국인토지현황, 국토지리정보현황, 토지소유현황, 지적통계
한국감정원	6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월세가격동향조사,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거래현황, 전국 지가변동률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¹⁾
대한건설협회	5	완성공사원가통계, 건설업 경영분석, 종합건설업조사,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청	4	건설업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주택총조사, 개인별주택소유 통계	
국토연구원	1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	도시계획현황		
대한주택보증(주)	1		민간아파트분양 시장동향	
기타 관련기관	11	건설 관련 11개 통계		
계	47	25	15	7

주: 1) 주택분야가 물가로 분류된 주택관련 통계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2014. 10

이 통계들은 통계 작성 주무부처인 통계청을 비롯하여 이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 건설의 민간협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건설·주택·토지의 통계는 국토교통부가 18개의 통계를 생산하여 가장 많은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며, 한국감정원이 6개의 통계를, 대한건설협회는 5개 통계를, 통계청이 주택총조사를 비롯한 4개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 외 각종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에서 1개씩의 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국제동향

●● 건설·주택·토지통계의 국제적 동향은 UN의 권고지침에 따라 OECD,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통계를 작성하며 건설·주택·토지의 국제적 비교에 활용되고 있다.

이 중 건설통계는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및 투자(특히 GDP대비 투자율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유지 및 보수에 관심을 두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신규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건설통계(Construction Statistics)와 주택건설추계(Housing Estimates) 등을 작성·활용하고 있다. 주택 관련 주요통계에는 신규 주택 건설, 신규 주택 판매, 신규 주택의 특성, 조립식 주택, 건축 비용(착공 기준), 주택 개량, 건축 센서스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주택 분야의 통계는 주거생활의 수준과 부담가능성 등 주거상황과 주거복지와 관련된 지표 및 기준들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택통계는 주로 주거환경의 국제적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UN은 회원국들에게 주거환경의 국제적 비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지표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주거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 주거지표는 주거생활의 혼잡수준을 나타내는 방당 인원수 혹은 일인당 방수, 일인당 주거면적, 주택의 가용성을 나타내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시장지표인 소득대비주택가격(price to income ratio, PIR) 혹은 소득대비임대료(rent to income ratio, RIR)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주택 분야의 통계는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과 관련된 정책 목표 수립 및 효과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통계 작성이 용이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수급을 보여주는 정책지표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로 활용도가 높다. 한편 토지의 국제통계는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에 그치는 등 그 활용 폭이 제한적이다.

02 발전과정

건설통계

•• 건설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들어 세우는 것을 일컬으며, 건설업은 기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건축물을 신축, 증축·개축·재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건설 부문의 주요 생산물은 건축물과 사회간접자본이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은 국가기반시설로도 불리며 다양하게 정의된다. 통계청은 “개개 경제 주체의 생산 및 소비활동에 직접 동원되지는 않으나,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교통, 통신, 전력 등 자본설비”라는 정의를 사용한다.

경제활동에 필수불가결한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 발전시설, 상수도 등이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생산 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공공(서비스)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하고 운영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게는 비용 없는 생산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각종 자본설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직접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이 구비되거나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다.

건설업은 경기조절 수단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즉, 경기가 침체된 상태이면 건설투자를 부추기고, 반면 경기가 과열되면 건설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을 조절한다. 따라서 건설경기는 반(反)경기적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건설업의 경기동향과 실태를 알려 주는 건설통계가 경제정책수단의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신탁통치에 의한 남북분단, 그리고 6·25전쟁 등으로 산업기반이 불균형적이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하였고 20세기 말까지 세계가 놀라는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공급을 담당한 건설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1961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할 당시 산업구조에서 사회간접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44.7%였으나,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제7차 계획이 시작된 1991년에는 64.6%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건설통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통계를 건설통계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사실 건설통계는 첫째, 성격이 혼재되거나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거나, 둘째, 기업 경영, 임금, 건설금융 및 공사보증 등과 같이 타 분야통계와 중복되는가 하면, 셋째, 주택 건설실적통계 등과 같이 주택건설 및 토지와 연계된 통계들이 다수 있다. 물론 건설통계 중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생산되지만 국가 통계로 승인을 받지 못한 통계도 많다. 건설통계에 대한 주요통계의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 분야 통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통계는 '도로현황통계'이다. 이 통계는 1936년에 최초로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 승인을 받아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상의 전국 도로현황을 파악하여 도로유지 관리 등의 도로행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개발의 초기인 1960년대의 건설 관련 통계는 '건축 허가 및 착공통계'(1962)를 비롯하여 '한국수문조사'(1962), '해외건설수주통계'(1966) 등 국내외 건설 활동의 수준과 수자원 등의 부문에 집중되어 생산되었다. 이 통계 중 '건축물허가통계'는 국토교통부가 작성하는데, 조사내용은 지역별, 구조별, 용도별, 공종별, 건축주별, 주거유형별 허가동수 및 연면적 등이다. 이 통계는 2009년에 '건축물착공통계'와 함께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로 통합되었다.

건설통계 현황(1960년대 이전)

시기	통계명
1960 이전(1)	도로현황
1960년대(3)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한국수문조사, 해외건설수주통계

한편, 정부는 1970년대에 들어와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계속 노력해 나갔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10년을 단위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거점방식의 공업화추진을 핵심으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계획의 기본목표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 공업기반의 구축,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건설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설업조사'(1974), '건설수주통계조사'(1975), '종합건설업조사'(1976) 등 6개의 새로운 통계가 생산되었다.

그중 주요통계의 내용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업조사'는

통계청이 작성하며, 지역별·공사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업체특성, 고용·급여, 매출액, 건설비용, 계약금액, 기성액, 발주자, 공사지역,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통계의 명칭은 ‘건설업통계조사’에서 ‘건설업조사’로 개칭되었다. 건축물착공통계는 국토교통부가 작성하며, 용도별, 공사종별, 구조별, 건축허가 동수 및 연면적을 조사한다. 이 통계는 2009년에 건축착공 및 착공통계로 통합되었다. ‘건설수주통계조사’도 통계청이 작성하며, 공사명, 공중세분류명,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명, 수주액, 착공예정년월, 완공예정년월, 공사지역 등을 조사한다.

이 통계는 1998년 작성되기 시작한 ‘건설기성통계조사’와 ‘월간 건설경기동향파악’이라는 주된 목적이 동일하여 2008년 ‘건설경기통계조사’로 통합된 후 동년 10월 명칭을 ‘건설경기동향조사’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합건설업조사’는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하며, 주요조사항목은 계약, 기성액, 발주자, 공사장 소재지, 납부부가세, 상시근로자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어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1982~1991) 기간인 1980년대에도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를 통한 인구의 지방정착유도를 위하여 지역기능의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생산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건설 분야 통계는 ‘건축물통계’(1985), ‘전문건설업 통계조사’(1988)가 있다. 건축물통계는 국토교통부가 작성하며 용도별, 층수별, 면적별 건축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이 통계는 2005년부터 공표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전문건설업 통계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작성하며, 전문건설업체의 계약액, 기성액, 수령액, 발주처, 계약방법, 선급금 등 공사수행 관련 사항과 자본금, 종사자수, 중기보유 대수 등 경영관련 상황 등을 조사한다. 이 통계는 1986년부터 통계청과 공동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대한건설협회는 1980년부터 국내 건설수주동향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는 통계청에서 표본으로 작성하는 ‘건설수주통계조사’에 협회에서 관리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를 파악하여 전수조사 형태를 띠었다.

1990년대에 들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발적 경제성장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에도 사회간접자본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와 더불어 건설 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높은 파급력을 활용하여 경기조절의 수단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요구되었다. 1990년대에는



● 제4차 국토종합계획현황도

7개의 통계가 작성되었다. 그중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는 1980년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하여 1994년 승인을 받았다. 주요 조사항목은 공종별, 발주기관별, 공사종류별, 건설공사 도급계약액, 자체개발공사건수 및 금액 등이다.

건설통계 현황(1970~1990년대)

시기	통계명
1970년대(6)	건설업조사, 건설수주통계조사, 건축물착공통계, 건설기계등록현황, 종합건설업조사, 무허가 건축물현황
1980년대(2)	건축물통계, 전문건설업 통계조사
1990년대(7)	설비건설업 통계조사,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 정보통신공사통계, 전기공사업 통계조사, 건설기계현황, 건설기성통계조사, 도로보수현황

2000년대에 와서 건설업은 과거에 비해 생산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의하면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생산비중은 2000년도에 6.0%에서 2014년에는 4.5%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무려 17개의 통계가 새로이 작성되었다. 건설통계는 건축물(사회간접자본), 수자원 등 과거의 건설 위주의 통계에서 벗어나, 도시 및 지역개발, 국토의 정보화, 건설 산업의 효율성 등에 초점을 둔 통계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즉 '개발제한구역현황'(2006), '도시계획현황'(2006), '수도권정책통계'(2007), '도로투자현황'(2007) 등 도시 및 지역정책과 관련된 통계와 지수의 생산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수용재결현황'(2008)과 '시설물유지관리업조사'(2008)가 새로이 작성되었다.

건설통계 현황(2000년대 이후)

시기	통계명
2000년대(17)	개발제한구역현황, 건설공사감리현황, 건축사현황, 수자원현황, 골재채취현황, 도시계획현황,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고속국도건설제원, 수도권정책통계, 시설물정보현황,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실적, 도로투자현황, 도시재정비 사업현황, 주택건설 사업자 현황, 도시개발 사업현황, 수용재결현황, 시설물유지관리업조사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주택통계

•• 주택통계를 추출하고자 할 때 다른 부문의 승인통계들 중에서 상당수의 통계들이 주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생활의 주체를 나타내는 인구 관련 통계, 주거수요의 기본 단위인 가구 관련 통계, 주거비용과 관련된 가계지출 및 금융 등의 통계들이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주택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주거실태 및 주택시장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주택보급률, 1000명당 주택수, 1인당 주택면적, 소득대비 주택가격(PIR), 월소득대비

임대료(RIR) 등 다양한 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주택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지표 이외에도 질적인 측면에서 주거복지 수준을 측정하고, 주거실태 파악과 주택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택통계는 이러한 지표를 생산하는 기초가 된다. 이 지표는 양적 지표, 주거혼잡 지표, 주택시장지표, 부담가능성 지표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양적 지표는 자가점유율, 인구 1000명당 주택수 등이다. 주거혼잡지표는 방당 가구원수, 가구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주택가격지수(매매 및 임대가격), 주택보급률, 미분양 주택수, 공가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담가능성 지표로는 소득대비 주택가격 및 월소득 대비 임대료 등을 들 수 있다.

주택 분야의 국가승인통계 중에서도 주택현황을 전수조사로 파악하는 ‘주택총조사’를 비롯하여, ‘주택건설 및 수급상황’, ‘주택가격 및 주거비부담 수준’ 등 국민의 주거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계들을 선정하여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주택수요는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중의 하나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경제발전 초기단계인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통계는 1960년 ‘인구총조사와 병행 실시된 ‘주택총조사’ 이외에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1960~198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개발계획(1~5차)이 중심이 되었고, 주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된 주택수요가 시장에서 나타남에 따라, 수요에 비해 이를 충족할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도 주택건설에 집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10개년 계획(1972~1981, 250만 호 계획), 주택 500만 호 건설계획(1981~1995),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1988~1992), 신 경제 5개년 계획(1993~1997, 285만 호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이었던 단독주택을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대체하면서 아파트주거환경통계(1980)가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주택가격의 폭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주택가격동향’(1985)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는 통계작성기관이 2013년부터 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계속된 주택 붐이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주택수와 가구수의 비율인 주택보급률을 1994년에 처음 작성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에 가서야 국가승인통계로 승인 받았다. 주택을 짓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는 1997년 11월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일단 그 막을 내렸다. 많은 건설회사들이 도산하고 짓다 만 아파트들이 구매자를 찾지 못한 채 미분양상태에 놓였다. 이 시기를 반영하면서 등장한 통계가 미분양주택 현황보고(1998)이다.

주택통계 현황(~1990년대)

시기	통계명
1960~1970년대(2)	주택총조사, 주공아파트 입주자 주거만족도조사
1980~1990년대(7)	아파트주거환경 통계,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별 주거생활실태조사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미분양주택 현황보고

경제 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에 초점을 둔 주택종합계획(2003~2012),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2003~2012) 등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되면서 다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이 급등하여 투기에 대한 규제가 부활된 한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대책을 추진하였다.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도입,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구역 설정 등 수요관리, 특히 가수요의 억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 분야 통계도 저소득층 주거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주거실태조사'(2006),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이 낳은 주택소유의 편중현상을 나타내는 '주택소유현황'(2006) 등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주택소유현황'은 2003년, 2005년 행정자치부에서 2차례 공표한 바 있으나 통계의 신뢰성 문제 및 작성의 한계로 중단되었다. 그 후 2006년 11월에 건설교통부의 국가통계로 승인 받았으나 지속적인 미공표, 통계기준 미정립 등 통계의 신뢰성 확보 불가로 2011년 3월에 승인 취소되었다. '주택소유현황'은 참여정부에서 주택소유의 편중이 얼마나 심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였는데 그 통계의 신뢰성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통계청에서는 2013년 12월에 주택공시 가격자료,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부 등의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성별 연령별 분포, 공동소유현황 등)를 작성·공표하였다.

참여정부가 그토록 노력하면서 낮추고자 하였던 주택가격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를 유행케 만들었고, 급증한 가계부채는 금융부실의 위험성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풀 수 있는 거의 모든 규제를 푸는 등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21세기 들어서 주택정책 및 시장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신규 정책통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주택금융공사 등 새로운 주택 관련 전문기관들이 설립되면서 신규 통계들이 생성되었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 승인받은 통계를 보면 주택분야의 통계수요를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승인통계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주택보급률'(2006), 국민주거생활 수준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서 '주거실태조사'(2006), 주택공급에 관한 통계로서 '주택건설실적통계'

(2002)와 '택지예정지구 지정 및 공급현황'(2006), 주택금융 관련 통계로서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분양보증 현황'(2006), 주택가격동향 중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2009), 임대주택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 '임대주택통계'(2006), 그리고 전세감소-월세증가라는 임대주택시장의 특성 변화를 반영한 '월세가격동향조사'(2009) 등이다. '월세가격동향조사'는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를 폐지하고 조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월세가격동향조사로 개칭하였으며(2012), 2015년에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통합되었다.

주택통계 현황(2000년대 이후)

시기	통계명
2000년대(11)	주택건설실적통계,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분양보증 현황, 임대주택통계, 택지예정지구 지정 및 공급 현황, 주거실태조사, 주택보급률, 주택소유현황, 주택재건축현황, 직업군인 주택보급률현황,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월세가격동향조사
2010년대(4)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개인별주택소유 통계, 민간아파트 분양시장동향,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특히 2010년대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수요자의 심리수준을 나타내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2011), 신규공급주택의 시장동향을 나타내는 '민간아파트 분양시장동향'(2013), 마지막으로 주택소유에 관한 통계인 '개인별 주택소유통계'(2013),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2014) 등이 있다. 이러한 최근의 통계들은 직간접적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토지통계

●● 토지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이 특성이 통계 생산의 기반이 된다. 토지는 그 위치가 영구히 고정되어 있고, 법적으로 등록(등기)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되고, 또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법원의 등기기록은 토지소유 및 거래와 관련된 통계의 기반이 된다. 한편 토지는 국토를 구성하므로 국가 차원에서도 국토종합계획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표하에 개발방향이 설정되고, 이 범주 내에서 토지의 용도와 개발밀도가 정해지기도 한다. 또 토지는 가격과 기업 등 민간의 관점에서 고액의 자산이므로 거래에는 소유규제, 조세, 금융 등이 동반된다. 토지통계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편이며, 지적통계, 토지거래현황, 국토지리정보 등 대부분의 통계를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하고 있고 '전국 지가변동률조사', '부동산거래현황'은 한국감정원이 작성하고 있다. 또한 토지 분야 통계는 토지 및

주택시장의 관리 및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직결되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토지 분야 통계의 활용성을 설명할 때 최근의 정보화·지방화 추세에 적합한 토지정보의 전산화 및 지리정보화 추세를 연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 토지통계의 활용도를 과거적으로 확대한 계기를 가져왔다.

토지통계는 전통적으로 토지의 위치와 면적에 관한 소유 및 용도에 기반한 통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따라 기반시설용 등의 공공용 토지뿐 아니라 산업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 도시용도의 민간 토지 수요도 폭발하면서 토지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또 토지가격의 폭등에 편승한 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토지전산화를 통한 거래투명화, 개발이익의 환수 등 다양한 투기방지정책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토지공급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토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최근에는 토지통계의 전산화 및 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 토지 관리의 효율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토지통계를 시대별로 간략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토지통계는 1970년 이전까지는 국토의 면적 등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이외에는 별다른 통계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토지 분야의 통계수요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성장에 매진하고 또 그 성과가 나타나면서 토지개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토지통계는 1970년대 들어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먼저 작성된 통계는 ‘지적통계’이다. ‘지적통계’는 1970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여 1982년 승인되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의 면적과 필지수를 시도, 시군구별, 지목별로 수록하고 있다. 지적통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다가 2008년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다. 정부는 이를 집계한 결과인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통계는 각종 토지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지적통계’에 더하여 1970년대 중반에 작성되기 시작한 통계는 ‘전국지가변동률조사’이다. 이 통계는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생산되었다. ‘전국지가변동률조사’는 통계작성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2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에는 새로운 토지 분야의 통계가 생산되지 않았다.

1990년 들어 토지가격의 폭등 및 부동산 투기열풍 등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잘 대변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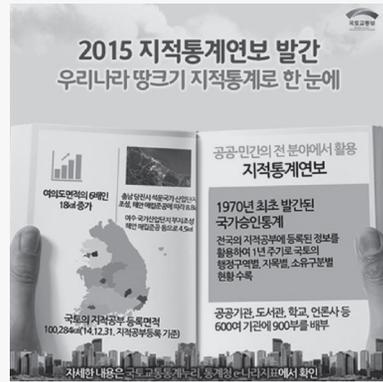


● 지리정보 시스템

라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의 개인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사용권을 통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제도는 88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 토지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1989년 말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분배 정의의 퇴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토지공개념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3법

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은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10년 이내에 무력화되었다. 이외에도 주택거래허가제, 개발분담금 부과 연장,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보유과세 강화 등을 병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분야의 '소프트 인프라'인 통계의 생산에는 소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토지와 주택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아, 필지별 소유자는 알 수 있었으나 소유자(개인, 기업 등)별 토지소유현황은 파악할 수 없었다. 투기꾼들은 이를 활용하여 토지와 주택을 사들이고 미등기 전매 등의 수법으로 거래차익을 남기고 세금을 탈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동산투기 광풍과 정부의 대처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토지거래현황 통계가 1991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토지거래현황은 추후 전산화에 부응하여 부동산거래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지적통계연보 발간 안내

토지통계 현황(∼1990년대)

시기	통계명
∼1990년대(3)	지적통계, 전국지가변동률조사, 부동산거래현황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2000년 이후 토지전산망 등 토지 관련 자료의 전산화가 완성되고 가동되면서 토지통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 21세기에 들어 토지통계는 '토지소유현황'(2006)과 '국토지리정보'(2006) 등의 통계를 작성하면서 그 활용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토지소유현황'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전산화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개인, 법인, 외국인 등 소유자별로 토지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연간 단위로 수집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정책수립과 토지소유 편중실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2007)과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시장 및 정책인식조사'(2007), 그리고 '외국인토지현황'(2008) 등이 작성되었다. '국토지리정보'는 국가적 차원의 토지정보의 전산화·지리정보화의 소산이면서 국토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즉 국토지리정보는 국토의 측량 및 지리정보에 관한 통계를 파악하여 『국토해양통계연보』에 수록하고 이를 각종 국토 및 토지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토지통계 현황(2000년대)

시기	통계명
2000년대(5)	토지소유현황, 국토지리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현황,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시장 및 정책인식조사, 외국인토지현황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03

주요 건설·주택·토지
통계의 발전과정

•• 건설·주택·토지의 통계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계를 선정하여 통계별 발전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통계 중 주택을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주거현황을 나타내는 '주택총조사'를 비롯한 '주거실태조사', '주택보급률통계'를 선정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와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선정하였으며, 건설은 건설업조사와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를, 토지의 대표적인 통계로 '지적통계'를 선정하였다.

주택총조사

개요

•• '인구주택총조사'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는 기본적인 국가통계이다. UN에 의하면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학적 및 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인구조사'는 기원전 36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근대적인 인구조사는 1790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UN 통계처에 따르면 235개 UN 회원국 중 221개국(94%)이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총조사는 1925년 '간이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실시되었고, 주택총조사는 1960년 12월1일 최초로 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인구주택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그 이후 주택총조사는 인간생활의 필수항목인 의식주 중 주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총조사와 함께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주택총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2010. 10. 19. 개정)에



• 2010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의거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통계이다. 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거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국군,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병영 막사, ②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 보호소 등 시설, ③ 외국 군대의 병영 막사, ④ 제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이다.

주택총조사는 인구부문과 가구부문에 연관된 항목이 다수 있다. 그리고 통계청은 UN이 권고하는 항목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여 포함하고자 노력하여왔다. 예컨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항목에는 가구부문에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점유형태, 건물 및 거주층 항목이 있고, 주택부문에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건축연도, 총방수, 주거시설수 등이 포함되었다. 표본조사에도 가구부문에 난방시설, 주차시설, 임차료, 대지면적, 식수사용형태 항목들이, 주택부문에는 대지면적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주택총조사는 인구총조사와 더불어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구총조사와 더불어 주택부문의 기준통계로서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일일이 어떤 분야에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목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택총조사의 결과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지수의 산출 등 국민주거생활과 관련된 시대적 과제를 부각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즉, 과거의 주택총조사는 주택재고와 주거시설(화장실, 부엌, 목욕시설, 난방방식, 취사연료 등)의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 이르러서는 주택유형의 변화 등 질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2010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저출산, 1인가구의 급증, 고령화, 주택수요의 변화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발전과정

●● 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인구주택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인구총조사와 병행 실시되기 시작한 이래 매 5년마다 실시되어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조사방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경되어 왔다.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먼저 주택총조사에서의 표본조사의 도입이다. 인구센서스는 1966년에 표본이론을 도입하여 경제활동 및 출산력에 대해 10% 표본조사를 병행한 바 있다. 주택총조사는 1970년 조사부터 전수조사와 더불어 10% 표본조사를 병행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1975년

5%, 1980~2010년에는 10%, 2015년 20% 등 5~20%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특히 1995년 조사부터는 이농현상에 따른 농어촌의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빈집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수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수	24	21	34	17	19	21	19
표본	16	0	12	11	31	20(3)	28(3)
계	40	21	46	28	50	41(3)	47(3)
가구	11	1	16	7	16	11	13
주택	6	4	9	5	5	6	6

주: 괄호 안은 시도 조사항목 수로서 합계에 포함하지 않았음

그 다음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조사방법의 변화이다. 1990년 조사에는 자료입력의 광학판독 방식(OMR System)이 도입되었고, 21세기 최초의 주택총조사인 2000년 조사에는 아파트 전수조사구에 대한 응답자 기입방식이 도입된 동시에 자료입력의 PC 지방분산 입력방식도 도입되었다. 또한 2005년의 주택총조사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전 교육 기법을 활용하여 웹 기반 현지 입력 방식 및 인터넷 조사 방법을 도입하였다.

조사항목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꾸준히 진화하여 왔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1970년 조사에서는 자기 집, 셋집, 세 없이 빌려든 집 등 3종류에 불과하였으나, 1975년 조사에서는 셋집이 전세와 월세로 분리되고 이후 무상, 보증부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등이 추가되어 다양화된 주택점유형태를 반영하여 왔다. 거처의 종류는 주택 점유형태와 더불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빠짐없이 조사되어 온 주택총조사의 기본항목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일반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숙박업소, 공공목적용 집, 임시로 세운 집, 기타) 등으로 단순하였으나 1980년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신설되고, 단독주택도 다세대주택(1990)으로 분리되었고, 다시 단독주택이 2000년에는 일반단독주택과 다가구단독주택으로 분리되었다. 여기에 2005년에는 영업겸용 단독주택이 추가되는 등 다양화되었다. 또한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공간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 거주층이 2005년과 2010년조사에 전수조사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지붕재료 항목은 1990년까지 조사되어 오다가 지붕개량사업, 신축주택의 대량공급 등으로 인하여 초가집, 함석집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그 이후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다.

주택총조사는 실시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왔다. 예컨대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화·주거의 질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장 최근의 주택총조사인 2010년도 조사는 저비용·고효율, 응답자 부담경감, 정확성 제고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인터넷조사의 확대, 우편조사 도입, 행정 자료 활용, '그린센서스'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중 '그린센서스는 조사표를 재생용지로 사용하고 e-Census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보고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통행조사 항목에 자전거를 추가하였다. 또 농림어업총조사와 연계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비용을 크게 낮추었다. 특히 '인

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인터넷 조사방법을 확대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조사비용의 절약과 조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택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한편, 주택총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의 통계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센서스라고 표현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세계 각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하는 조사이다. UN에서는 인구주택 센서스에 있어 표 UN주택총조사 조사항목 권고(안)에 제시된 주택부문의 조사항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크게 기본항목, 권고항목, 기본항목(파생)으로 구분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항목이 변경되기도 한다.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참여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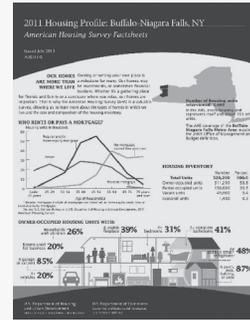
UN 주택총조사 조사항목 권고(안)

조사단위	개수	조사항목
건물	9	건물의 종류, 외벽재료, 건축년도, 거주가능가구수, 승강기시설, 농장건물여부, 바닥·지붕의 건축재료, 수리상태, 건물층수
거처	23	주소, 거처종류, 점유여부 및 빈집사유, 소유형태, 방수, 연면적, 상수도시설, 식수원, 화장실 및 하수처리시설, 목욕시설, 부엌시설, 조명시설, 쓰레기처리형태, 거주가구수, 침실수, 취사연료, 난방시설 및 연료, 온수시설, 도시가스시설, 거처용도, 온도조절시설*, 건물 내 거처의 위치*
가구/가구주	15	가구주 또는 기타 가구원의 성과 연령, 점유형태, 임차료 및 주택유지비용, 임대주택 난방비 등 포함여부, 정보통신기기 보유, 가구와 가족의 구성, 자동차보유대수, 가구용 내구재, 마당면적, 대지 점유형태*, 가구주의 추가적인 특성(사회경제적 그룹, 혼인상태, 산업, 지위·신분, 인종, 소득수준), 거주기간*, 가구형태, 가구규모*, 단일/분할 점유*

주: *가 표시된 항목은 기준권고항목이었다가 2007년 기준에서는 제외된 항목들임

미국의 센서스는 통계국에서 주관하며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주택총조사와 유사한 해외의 대표적 통계는 미국의 American Housing Survey를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기본통계와 정책활용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주요 조사항목은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시설 등에 관한 항목을 비롯하여 근린상태, 이사, 현주거지 선택사유, 소득 및 주거비용특성, 주택 가격, 구매가격, 다운페이먼트(down payment) 출처, 모기지(mortgage) 등 다양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2년마다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영국주택조사(Survey of English Housing, SEH)는 영국의 대표적인 주택조사로 간주할 수 있다. 2002년 4월12일에 시작된 영국주택조사는 1만 9640세대를 면접대상으로 하는 조사통계이다. 영국주택조사는 1993년 4월부터 시작된 연속적인 조사로서, 주택소유권과 관련된 핵심 주택 자료는 물론 소유자, 사회적 임대 부문, 개인 임대 영역과 관련된 원천 정보를 제공한다.



● 미국주택조사(American Housing Survey) 안내

주거실태조사

개요

21세기 들어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함이 부각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인구, 가구 및 주택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관한 조사항목이 없어서, 소득대비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수준을 알 수 없었다. 또 인구주택총조사에 이러한 항목을 포함하더라도 조사가 쉽지 않고 자료생산주기가 5년이나 되어 시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5월의 부동산대책회의에서 '주거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주택법」 제5조(주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2006년도에 최초의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시행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우리 국민의 가구특성, 주거환경, 주거이동 등 주거생활에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조사통계이다. 이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조사체계는 일반가구 → 조사전문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로 이어지며 상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기도 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기도 한다.

모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신축아파트 정보이며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기반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이때 멸실주택은 제외된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수는 1799만 9283가구(2014 기준)이다.

표본은 층화랜덤추출법을 사용하여 16개 시도, 수도권 10개 권역, 읍면동을 고려하여 층화하되, PSU(Primary Sampling Unit)는 조사구 추출방법(확률비례계통추출), SSU(Secondary Sampling Unit)는 가구 추출방법(임의의 시작 가구부터 10가구 계통추출)을 사용한다.

표본규모는 조사기간 내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서 총 2만 가구(2014 기준)이다. 표본오차는 주택사용면적, 가구소득(근로 및 사업소득), 가구주 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월 평균 가구전체 근로소득, 월 평균 생활 등 5개의 변수에 대해 시도별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주거실태조사’는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주거 관련 정책 연구를 가능케 하였다. 일반 국민들도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활용도가 많은 유용한 통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주거실태조사의 성격을 갖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총조사, 주택금융 관련 조사통계(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주택금융 및 유동화증권통계,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 주택자금현황 등), 임대주택통계,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주택 관련 통계에 흩어져 있는 주택현황, 소득, 주거비 등에 관한 개별 가구 단위의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주거복지와 관련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나, 예산제약으로 표본의 수가 제한되어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소지역 단위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발전과정

●●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도에 최초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2007. 07)에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특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일 먼저 실시한 특수조사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이다. 그런데 ‘주거실태조사’ 중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특수가구는 홀수 해마다 단 1개 항목만 조사하다 보니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재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6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2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특수조사 대상을 기존 장애인, 노인가구는 물론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홀수 해에 일괄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일반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인(2009), 임대주택(2011), 저소득가구(2013) 등 특수조사는 홀수 연도에 실시되었다.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시도 단위로 공표되며, 지역, 소득계층, 주택유형, 주택규모, 건축연도, 가구주 연령대, 가구원수, 세대구성, 가구주 성별, 맞벌이 유무, 자녀수, 특수 수요계층 가구에 따라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공표한다. 또한 공표내용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 주거비용과 주거비 부담, 주택자금 조달과 대출 부담, 주거 이동과 주거만족도,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및 주택소유현황, 주거 의식과 가치관, 향후 2년 이내 이사계획과 주거선택 등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주거실태조사’는 지역별·계층별 주거실태와 주택 소요량 및 선호도를 파악하여 공급 지원 등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거실태조사는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시설 및 설비 등과 같은 주택총조사 항목뿐 아니라, 주거 환경 만족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등을 조사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실태조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수준, 소득대비 주택가격, 대출상환 부담수준 등과 아울러 렌트 푸어, 하우스 푸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성이 매우 넓다. 또한 특수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목표 집단이 명확하여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예컨대 2007년 주거실태조사는 노인주거복지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도 생생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을 포함하여 노인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즉, 노인전용주택 공급, 임대주택 정책 등 노인주거지원정책과 역모기지 및 주택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통계

개요

●●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6·25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주택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상승은 주택수요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괴리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을 초래하였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였다.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재고량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주택수요의 기본 단위인 가구수와 비교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1994년부터 주택수급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택재고 확대라는 주택정책목표의 성과지표로서 '주택보급률 통계'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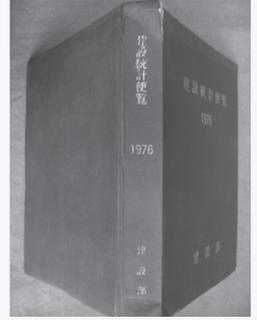
'주택보급률'은 가구와 주택의 상대적 비율을 표시한 지표이다. 즉, 가구는 주택수요의 기본 단위이며 이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주택공급의 기본지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주택 수이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급상황을 동시에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 나라 또는 어떤 지역의 가구수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혹은 여유가 있는지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양적 지표이다.

주택보급률 지표는 단순한 비율지표로 주택의 수급상황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고 또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으로 주택보급률은 일반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잘 알려진 지표이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은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자가보유율)나 거주상태(주거

수준)를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에는 가구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주택보급률을 추계함에 따라 실제의 주택보급률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발전과정

●● 일반적으로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가공통계이다. 지난 1962년 건설부는 주택보급률을 작성하여 『건설통계편람』에 수록, 공표한 후 매년 작성하였다. 그러나 주택보급률 산정 시 주택과 가구의 범위, 가구수 통계의 신뢰도 등에 대한 문제로 당시 1989년 주택보급률의 작성을 중지하고 내부자료로만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2005년 부동산통계 정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은 비승인통계로 활용 중인 주택보급률을 2006년 새로운 개념의 계산식이 결정되는 대로 변경 승인한다는 조건을 붙여 작성 승인하였다. 그 조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통계편람(1976)

‘주택보급률 통계’에는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등을 포함한다. 이때 총 주택수는 사용주택수에 빈집수를 더한 수이고, 보통가구수는 가족을 구성하여 거주하는 혈연가구수이다. 그리고 주택을 거래의 단위로 보았기 때문에 총 주택수에서 다가구단독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또한 1인가구는 가족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가구로 볼 수 없어 가구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 가구, 비친족 가구도 가구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핵가족화의 가속화 및 1인가구의 급증 현상이 두드러지고, 또 이들을 흡수할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단독주택 포함)이 크게 늘어나, 과거의 주택보급률로는 도시의 주택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택보급률 계산에 있어 주택에서 다가구 구분거처 호수를 반영하고, 가구수에도 1인 가구와 5인 이하 비친족 가구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조건이 충족되면서 2008년 말 새로운 주택보급률(신 주택보급률)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당분간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주택보급률과 병행 사용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을 제대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택보급률 계산에 있어 분자가 되는 주택재고량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주택은 더해야 하는 반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에 수반되는 주택의 멸실분은 빼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택의 허가, 착공, 준공 등의 통계는 있으나 얼마나 많은 주택이 없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주택

멸실통계가 없었다. 멸실주택에 대한 정확한 통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2010년 6월 마련된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국가통계위원회)에 따라 2011년 10월 최초로 주택멸실통계를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행정기관을 통해

서 멸실주택수를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건축물멸실대장은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를 기재하지 않거나 통계 집계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신뢰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건축행정정보 시스템(e-AIS), 주택공급통계 정보시스템(HIS)을 통해 멸실 주택을 추출하고, 사례 조사를 통해 시스템 추출 시 발생하는 중복, 누락 등 오류를 보완하였다.

이때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는 다가구 주택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정하였다. 그리고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쳤으며, 2011년 9월 지자체에 '멸실통계 작성 기준'을 별도 시달하였다. 멸실주택통계는 보다 정확한 주택보급률 산정 등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할 중요한 정보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하여 주택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또 일반가구 수도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1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의 주택건설 확대에 힘입어 절대적인 주택 부족문제는 크게 완화되었다.



● 주택공급통계 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http://www.housi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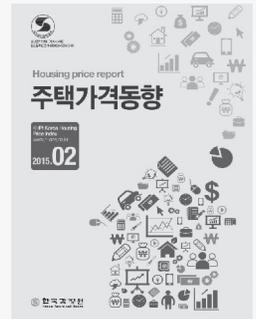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개요

●●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 있고 그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주택은 고가의 상품이라는 특징도 있어 매매와 관련된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전국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 탄생되었다.

이 조사는 국민은행에서 2012년까지 실시하였으나 2013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국 206개(아파트 206개, 연립·단독 207개) 시군구의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2만 45개(아파트 1만 4976개, 단독주택 2313개, 연립·다세대주택 2756개)를 조사 대상 표본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변동률을 매달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표본은 중개업소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으로 조사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중개업소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신고하므로 주택가격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표본조사와 가격동향을 산출하는 방법은 제본스 산식(Jevons Index)에 의하므로 지수의 평활화(smoothing)를 피할 수 없고, 지수의 변동폭이 적어 피부로 느끼는 시장가격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아파트에 한하여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지역별 주택가격지수는 2012년 11월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다. 조사항목으로는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주택수급 및 거래동향(매매수급, 매매거래, 전세수급, 전세거래), 중위주택가격(매매, 전세), 실질주택가격지수 등을 포함한다. 가격은 해당 표본의 실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거래가능가격으로, 실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매매(임대)사례비교법을 활용하여 거래가능가격을 산정한다.



● 주택가격동향(2015)

발전과정

●●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118조에 의거, 작성되는 통계로서 1985년 승인을 받아 1986년 1월 37개 도시 표본주택 2498호에 대한 조사결과를 일반통계로 공표하면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관기관인 국민은행은 서민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은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국책은행인 한국주택은행과 통합되면서 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국민은행이 민영화되면서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자연스럽게 민간기관이 작성하게 되었다.

국민은행에서 2012년 12월까지 통계를 산출할 때에는 매주, 매월 단위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지역별 매매, 전세 변동률과 지수를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작성하였다. 이때 표본설계의 검증, 중개업소 선정 및 관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였다. 특히 표본주택 거래의 경우는 실거래 가격을,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매매(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주요정보인 가격동향조사를 민간기관에 맡기는 것은 통계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6월 제2차 국가통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가격 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작성기관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었다.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전국 주택시장의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한다. 이 통계는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건축연령별로 전국 주택가격의 변화를 측정하여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판단지표 및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추이를 거론할 때에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가장 많이 참고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어온 통계이다. 주택가격은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인 주거비 부담 수준과 주택경기를 반영하므로 정부뿐 아니라 주택 관련 사업체 등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그 활용 폭이 매우 넓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개요

●●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가장 정확한 신호는 가격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주택가격과 관련된 통계는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대표적인 주택가격통계는 국민은행이 작성했던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이다. 그러나 이 가격은 거래가 성사될 만한 가격 혹은 판매자가 받기 원하는 가격(호가)의 성격에 가까워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가격의 변동도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준보다 폭이 낮아 시장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실거래가격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대표적인 통계가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주택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118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 가격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하여 정확한 시장동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부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가공통계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수산정 기간 중 같은 주택이 실제 두 번 이상 거래된 경우에 한정하여 주택(아파트)의 가격변동을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반복매매 모형을 이용하여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으로 지수를 산출한다. 또 반복매매 모형은 아파트 단지, 면적, 층이 같은 아파트를 동일주택으로 가정하므로 지수산정을 위한 변수가 매매가격, 주소, 거래일 등으로 매우 간단한 장점이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발생한 시점부터 2달 정도 후에 정확한 거래가격을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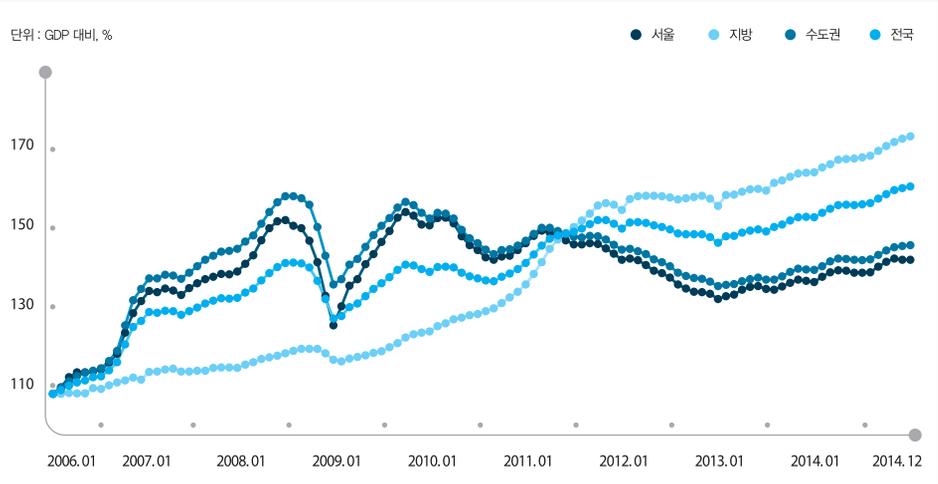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2번 이상 거래된 동일주택인 거래쌍이 추가됨에 따라 지수가 변경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3월에 작성된 지수는 4월에 거래쌍이 추가로 발생되면 3월의 지수가 변경되게 된다. 이러한 지수의 변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적어지지만 상당기간 지수는 매달 변경되는 속성이 있다. 또한 아파트만 조사대상이므로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다른 유형의 실거래가격은 지수에 반영되지 않아 주택시장 전반을 대표하는 주택가격 통계로서는 한계를 갖는다.

발전과정

●●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2005년 7월에 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년 1월부터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격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의 작성체계는 아파트 매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작성에 사용되는 자료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군구 장에게 신고한 실제 아파트 거래가격 자료이다. 그러므로 신고된 모든 아파트가 모집단이 된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에 포함되는 내용은 2014년 현재 2006년 1월을 기준으로(2006.1=100.0)으로 전국을 비롯하여 수도권, 서울 및 서울의 5개 생활권역, 6대 광역시, 9개도, 아파트 규모별 지수 등을 계약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공표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2014년 12월까지의 전국, 수도권, 지방의 지수변동을 그림(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추이)을 통하여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추이



볼 수 있는데 아파트가격이 2011년 전반기까지는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높았으나 그 이후 지방의 가격상승이 수도권을 훨씬 웃도는 것을 알 수 있다.¹

한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2015년 3월(계약월 기준, 2014. 12)부터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의 시군구 단위를 분기별로 확대 공표하였다. 또한 보다 신뢰성 높은 통계로 도약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수가 변동하는 폭을 줄이는 방안,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의 실거래가격지수의 생산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택가격통계 중 유일하게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통계로서 활용처가 넓다. 실제 시장동향이 정확·신속하게 제공됨으로써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주택건설업체, 부동산투자 및 컨설팅 업체, 주택금융기관 등이 정책수립과 평가,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주택가격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산출하는 반복매매 모형은 회귀분석법에 의해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이 산출하다가 2013년 1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산출하고 있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는 표본수집을 통하여 지수가 산출되고 있다. 산출방식의 차이는 주택가격의 흐름을 대표하는 두 지수의 크기뿐 아니라 그 방향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소형주택과 중대형주택의 가격추세가 다를 경우 어떤 규모의 표본을 더 많이 포함하느냐에 따라 지수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두 지수는 통합되어야 하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의 적시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와 공표 단위가 덜 세분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상이한 통계 작성 대상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건설업조사

개요

●● '건설업조사'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이 크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던 1960년대 말부터 '건설업통계조사'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어왔다. 건설업조사는 건설업부문의 종사자수, 급여액, 매출액, 부가가치, 공사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1 그림(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추이)은 2006년 1월의 가격수준을 100.0으로 하여 그 이후의 지수변동을 나타내므로, 절대적 가격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수가 낮다고 가격이 낮은 것은 아니므로 해석상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하여,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1년 주기의 조사통계이다. 조사방법은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한 조사로 건설업체가 자계식으로 작성한다. 조사체계는 건설업체 → 건설 관련 협회 → 통계청의 경로를 거친다.

조사항목은 일반실적사항과 결산사항으로 구분되며 일반 실적사항은 조직형태, 창설연월, 자본금, 겸업 타 산업, 공사명, 공중세분류부호, 공사지역명 및 부호, 발주자명, 도급종류, 발주자분류부호, 착공·준공연월, 총공사금액, 계약액, 기성액, 발주자 공급 원자재금액 등이며, 결산사항은 종사자수, 연간급여 및 임금, 매출액 및 건설비용 등이다. 건설업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은 산업분류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건설업’이고, 업체는 건설 관련 업종을 등록하고 당해 연도에 건설 활동을 수행한 기업체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록업체(종합, 전문, 설비, 시설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도 포함되며, 이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영 공사 및 무면허 공사업자에 의한 공사(주로 주택 및 직영공사)는 제외된다.

발전과정

•• ‘건설업조사’는 1968년에 한국산업은행이 최초로 조사를 실시하다가, 1972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되어 1974년에 승인을 받았다. 그 이후 1986년 3월 건설업부문의 유사통계를 통합하자는 취지로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3개 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다가 대한설비건설협회(1989,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하여 독립),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1993), 대한시설물유지관리업협회(2005,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 독립), 한국소방시설협회(2007) 등 7개의 관련 협회들이 공동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건설 관련 협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방문 면접조사방식에서 인터넷조사방식으로 전환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확대되면서 건설업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건설업통계조사’는 2008년에 ‘건설업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조사는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해 건설업부문을 포함한 종합 경제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건설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작성하는 건설경기동향조사는 건설업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정비율의 표본을 선정하여 국내 건설공사계약실적을 기성액을 기준으로 매월 조사하는 대표도 54%의 표본조사이다. 건설업조사는 건설산업의 구조변화 및 총량을 측정하고 조사자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건설경기동향조사는 건설경기변화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제공을 통하여 선제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양 조사는 조사대상, 규모 및 조사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목적에 따른 자료 활용에 유의가 필요하다.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

개요

●●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활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에 이루어진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파악하는 조사통계이다. 이 통계는 1994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전수조사통계로서 통계작성기관은 대한건설협회이다.

조사내용은 국내건설공사 수주액(도급공사 계약액, 직영공사액), 공사명, 공종세분류명,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명, 착공예정일자, 완공예정일자, 공사지역 등이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민간, 국내외국기관, 민간자본으로 분류되며 공사종류별로는 건축, 토목, 전문공사로 분류된다.

정리된 자료는 조사대상월 익월 하순경에 보도자료로 발표되며 조사대상월 두 달 후 초순에 『건설수주·기성통계』(월보)로 발표된다. 또한 조사대상연도 다음해 5월경에 『건설수주통계연보』(온라인간행물)를 통해서도 발표된다.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는 모든 종합건설업체의 수주활동 수준을 매일 조사하므로 매우 시의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수주통계는 계절별 요인 등에 의해 대규모 건설공사 수주가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른 경제지표에 비하여 월별 진폭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내 건설수주통계를 지역 단위로 작성한 결과와 기업체 소재 단위로 작성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건설업의 생산활동이 제조업과 달리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발전과정

●●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는 1980년부터 작성되기 시작되었으나 공식적인 최초 작성연도는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1994년이다. 통계승인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011년에 몇 가지 개편이 있었다. 먼저 조사대상의 확대이다. 이전에는 종합건설업체 중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를 포함하는 종합건설업체 전체로 확대되었다. 둘째, 조사방법도 응답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에서 온라인조사를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조사항목이 간소화되었다. 즉 발주자 작성 항목으로 구분 가능한 공공·민간공사의 구분을 삭제하고, 통계 집계 시 이용되지 않는 조사항목을 폐지하였다. 대한건설협회는 월별로 국내 건설수주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건설수주동향’은 매월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국내 건설공사수주 조사를 실시, 월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을 집계·분석하여, 건설업체의 경영계획 수립 및 건설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통계는 또한 건설투자의 경기조절 수단적 성격으로 인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특히 ‘건설수주동향조사’는 국내 투자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선행지표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만을 조사하므로 해외 건설공사 수주액을 포함한 전체 수주액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해외건설부문을 포함한 건설 활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66년부터 작성하고 있는 해외건설수주통계와 통합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건설경기를 전망하는 지표인 건설수주 통계와 건축허가면적통계의 증감 변동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 등 모든 부문의 건설공사계약금액을 조사하는 반면, 건축허가면적은 건축부문만을 대상으로 허가면적을 집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건축허가 이후에 건설공사 계약, 즉, 수주로 집계됨에 따라 두 조사 간에 시차가 발생하여 차이가 나기도 한다.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와 유사한 성격의 통계는 1976년부터 작성되어 온 ‘건설수주통계조사’이다. ‘국내 건설수주동향조사’는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하는 전수조사인 반면 ‘건설수주통계조사’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표본조사라는 차이가 있다. 즉 건설수주통계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 가운데 최근년의 건설업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총기성액의 54%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를 선정하여 건설업 중 국내 건설공사를 범위로 해서 조사한다. 매월 전국에 걸쳐 조사하며 조사방식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 및 인터넷조사를 병행한다. 건설수주통계조사는 건설기성통계조사와 병합하여 건설경기통계조사로, 후에는 ‘건설경기동향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지적통계

개요

•• ‘지적통계’는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등 토지자료의 등록·변경 상황을 집계한 자료이다. 지적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토지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목적으로 전국의 국토면적, 토지의 소재, 지역, 면적, 경계 등 지적에 관한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된다. 이 통계의 조사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전국의 토지·임야대장 항목을 소유구분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으로 구분하여 시군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시도(지적업무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로 이어지는 조사체계를 가진 작성주기 1년의 보고통계이다. 따라서 지적통계의 모집단은 전 국토의 토지, 임야 전체가 되며, 작성단위는 필지로 제곱미터(m^2)로 표시된다.

이 통계는 기본통계와 부록편으로 나누는데, 기본통계는 지적공부 등록현황으로서 첫째, 시도 및 시군구별로 분리하고 이를 다시 28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으로 구분하는 항목과 둘째, 소유구분별 10종(창씨명, 개인, 외국인,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중중, 종교단체, 기타단체)으로 분리하고 이를 다시 28개 지목으로 구분하는 항목이다. 부록편은 지적공부목록으로서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토지·임야·집합건물의 대지권), 지적도, 임야도 등에 대한 현황과, 지적사무정리상황으로서 토지이동 상황(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부복구, 등록사항정정, 구획정리, 경지정리), 소유권 정리, 민원처리(통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 등록증명서) 등의 항목,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 표지관리 상황으로서 시도별 기준점 명칭, 전년누계, 설치(신설, 재설치), 폐기, 관리현황(완전, 망실, 기타) 등을 항목으로 두고 있다.

지적통계는 필지 단위로 토지정책과 연구에 도움을 주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적업무부서의 PC입력으로 자료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전산화된 자료는 편집, 정리,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적통계는 현재 추진 중인 바와 같이 지적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 건축물, 토지가격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다른 전문통계 시스템과 연계하면 더욱 활용성이 높은 통계이다.

발전과정

●● ‘지적통계’는 1970년부터 내무부에서 작성되기 시작한 토지 분야의 가장 오래된 통계이다. 작성된 통계는 『지적통계연보』를 통하여 공표되었다. 지적통계는 1982년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다. 21세기 들어 2002년 지적통계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사회발전에 따라 소유구분이 확대되었다. 종전의 국유지, 민유지의 2종 분류에서 소유구분별 7종(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비법인, 기타)으로 분류가 세분화되었고, 2015년에는 외국인 토지소유현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종(창씨명, 개인, 외국인,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법인, 중중, 종교단체, 기타단체)으로 보다 세분화하였다. 둘째, 지적

측량시장의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수치지역 현황에 대하여도 수록하였다. 셋째, 작성주기를 연 1회에서 연 4회(분기)로 변경하고 분기별로 인터넷에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표주기는 2003년 다시 1년 단위로 회귀되었다.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통계작성기관이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넷째, 최근 유·무인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등록된 유·무인섬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여 등록하게 되었다.

‘지적통계’는 작성기관의 변동을 제외하면 특별한 전환점은 없는 편이다. 그러나 자료의 제공방법에 있어서는 정보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최근의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단순한 수치뿐 아니라 지리정보 시스템과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용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토의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의 통계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 그림, 사진 등으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를 수록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지적통계자료는 KOSIS를 통하여 검색 가능하다.

많은 통계들이 그렇듯이 지적통계의 항목과 다른 통계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통계값이 서로 다를 경우 사용자의 혼돈을 초래하고 신뢰성을 의심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적통계’와 ‘경지면적통계’는 모두 논밭 면적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값에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이 다르고 또 공부상 등록여부와 실제 경지 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지면적통계’는 현지답사를 통하여 실측 및 목측조사에 의한 반면, ‘지적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통계를 수집하여 작성하는 차이가 있다. 또 조사대상도 경지면적통계는 지적공부상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경작하는 논·밭을 대상으로 하며,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통계의 값이 다를 수 있다.

04

맺음말

•• 지금까지 건설·주택·토지의 통계를 대상으로 분야별 개별 통계로 구분하여 그 발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다른 분야의 통계도 그렇듯이 건설·주택·토지의 통계들도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통계수요가 변하고, 이에 부응하여 발달된 정보기술의 이점을 도입·활용함에 따라 수록정보가 풍부해지고 활용 폭이 확장되어 왔다.

특히 건설·주택·토지 중 건설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고, 또 경기의 과열과 침체를 대응하는 경기조절 수단으로도 활용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건설통계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건설통계는 건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특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통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택통계는 주택수요가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상승한 후 본격화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198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득상승에 비교할 때 소홀했던 주택공급으로 말미암아 주택가격이 폭등하였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버린 주택임대료의 부담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게 되자 이와 관련된 통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의 주택통계는 주택시장의 발달 및 주거복지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택통계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생산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통계는 지역통계가 부족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를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져왔지만, 지역정책의 기반이 되는 지역통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통계가 전국 단위 혹은 시도 단위로 생산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지역 단위의 통계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는 활용성이 매우 제한된다. 특히 주거복지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지역의 주거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주택통계도 지역 차원에서 유용한 지역통계를 생산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토지통계는 단순한 토지 관련 자료의 생산에서 탈피해, 21세기 국토정책에 어울리도록 한 국토지정보 시스템을 비롯하여 전문화된 통계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디지털화, 지리정보화, 세분화 등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건설·주택·토지의 통계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왔으며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은 시대적 과제이면서 기회이기도 하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서 3V, 즉 양(Volume), 데이터 생성속도(Velocity), 그리고 형태의 다양성(Variety)로 대표된다. 오늘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업무 처리와 커뮤니케이션이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미디어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그 데이터의 규모와 생성주기, 종류가 얼마나 방대한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SNS를 통한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예측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진화를 거듭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생존 및 성공전략은 이러한 통계부문의 발달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끝으로 건설·주택·토지의 통계는 앞으로도 빅데이터와 관련된 시대적 추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전환에 따른 통계기반 구축연구』, 2004.
-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산정 연구용역 보고서』, 2009.
- 김용순 외, 『주택통계 조사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2005.
- 박신영, “우리나라 주거빈곤의 실태” 『보건복지포럼』 18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윤주현 편, 『한국의 주택』, 통계청, 2002.
- 이창무·김병욱·이현, “반복매매모형을 활용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부동산학연구』 제8집 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2.
-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I, II)』, 1992.
- 통계청, 『1925~2000 인구주택총조사자료집(I, II)』, 2001.
- 통계청, 『살아있는 통계 변화하는 통계청』, 2007.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변천 자료집』, 2012.
- 통계청, 『살아있는 통계 함께하는 통계청』, 2013.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목록』, 2014.
- Case, K. and R. Shiller, “Prices of Single-Family Homes since 1970: New Indexes for Four Cities,” New England Economic Review(September) : 45-56, 1987.
- O'Reilly Radar Team, “Planning for big data: A CIO's handbook to the changing data landscape.” Dumbill E, editor. 1st edition, Sebastopol(California): O'Reilly Media Inc, 2012.
- UN,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Construction Statistics,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Information Statistical Division,” New York, 1997.



경제통계

제4장 교통

1. 개요

2. 발전과정

3. 주요 교통통계의 발전과정

4. 맺음말

01

개요

의의

•• 교통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자동차·기차·배·비행기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해 한 장소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정의한다.¹ 여기서 교통주체(사람 또는 화물), 교통수단(자동차, 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시설(도로, 철도, 터미널, 신호등 등)을 교통의 3요소라 한다. 따라서 교통은 사람, 화물 또는 정보를 교통수단 및 체계적인 교통기관과 교통시설을 이용한 공간적 이동을 통해 거리(distance)라는 저항을 극복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교통 수요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목적(통근, 통학, 쇼핑, 여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기 때문에 파생 수요(derived demand)라는 특성이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서로 연결하고 사람이나



1 수송, 운송, 운수, 교통을 영어로는 모두 transport 또는 transport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말의 어감으로는 수송 및 운송은 사람이나 화물의 이동(transport)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운수는 보다 큰 규모로 행해지는 운송을 의미하며, 교통은 이 모두를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물류(logistics)는 화물의 이동과 보관(storage)과 더불어 화물 정보의 이동까지 포함하여 사용된다.

물자를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많아지고,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교통을 더욱 발달시키게 되었다. 운송기술 및 교통 네트워크의 발달로 사람 또는 재화(화물)의 공간적 장소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며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교통시설은 한 지역이나 국가의 성장과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치며 잘 갖추어진 교통 시스템은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발달된 교통망을 통한 원활한 행정은 국토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능률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자연자원과 시장을 개발하고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울러 교통의 발달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간 활동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며 문화적 발달의 기본 요건이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012만 대(승용차 기준 1575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국의 도로연장은 10만 5673km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가 1만 8089km로 전체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수단별 국내여객(인-km) 수송분담률은 도로 82.5%, 철도 8.8%, 지하철 6.4%, 해운 0.2%, 항공 2.1%이다.

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통분야 서비스(운수 및 보관업)의 2014년 기준 총부가가치는 50조 1901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 측면에서는 141만 명으로 전체 산업 고용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통계는 우리나라의 교통현황을 알려줌과 동시에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각각의 활용 목적에 맞게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는 적정수준의 자동차 등록대수 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투자 전략 마련에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도로현황 통계는 도로종류별 현황 파악 및 도로 관련 장래 계획 수립과 도로유지관리, 도로행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교통통계는 정부 교통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교통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교통 주체, 교통 시설, 혹은 사업체 등 조사 대상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토 및 도시, 토지이용 관련 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 타 부문의 계획에서도 교통 관련 통계 및 계획지표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국토개발·도시 분야의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주요 법정계획에서 교통수단·시설 현황 및 수송현황 등의 교통통계가 현황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자동차 및 교통량의 증가로 공해·소음·에너지소비 등의 환경문제와 교통

사고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도로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국가물류비용, 대기오염비용, 온실가스비용, 소음비용 등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의 추정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한 교통정책 수립에 교통통계가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교통통계는 국가의 교통·물류부문의 기본적인 지표일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포괄적인 국가정책에서도 정책효과와 사전예측 및 사후평가, 도시 및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정책의 효과성 판단 등 계획 및 정책수립을 뒷받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범위와 종류

•• 교통통계는 62종으로 이를 작성기관에 따라 구분해 보면, 국토교통부가 작성하는 통계수가 30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양수산부가 10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두 부처가 국가승인 교통통계 전체의 65%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항만, 해운 포함) 관련 주무부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성형태에 있어서는 보고형태가 42종으로 절대적으로 많고, 조사통계가 19종, 가공통계가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²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문화실태조사, 교통부문 수송실적보고, 국가교통조사, 대중교통현황조사,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 도로교통량조사,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철도경찰통계, 철도사고현황, 항공교통 관제업무통계 등이 작성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등록선박통계, 운항선박통계, 입항선박 톤급별 통계, 한국선원통계, 항만국통제 통계, 항만시설 및 능력현황, 해양사고현황, 화물수송실적 등이 작성되고 있다.

현재까지 작성되는 통계를 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1년 주기의 통계가 15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월 단위 통계가 8종으로 조사되었다. 월 단위로 작성되는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하는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철도사고현황, 항공교통 관제업무통계와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하는 등록선박통계, 입항선박 톤급별 통계, 해양사고현황, 화물수송실적 그리고 한국공항공사가 작성하는 항공통계가 있다.

1년 주기의 통계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량통계, 경찰청에서 작성하는 교통사고 발생상황, 통계청의 운수업조사,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 유료도로현황, 철도경찰통계, 도로교통량 조사,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하는 운항선박통계, 한국선원통계, 항만국통제 통계, 항만시설 및 능력현황 등이 있다.

2 가공통계 1종은 '지정항만 교통량조사'로 2001년(1회) 작성되었으나 미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작성기관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통계청	1	1(-)	1(-)		1(-)		
정부기관	중앙행정기관	1	30(20)	2(1)	28(19)	10(6)	19(13)	1(1)
	국토교통부	1	30(20)	2(1)	28(19)	10(6)	19(13)	1(1)
	해양수산부	1	10(2)		10(2)		10(2)	
	기타	2	4(2)		4(2)		4(2)	
	지방자치단체	4	4(2)		4(2)	4(2)		
	시도	4	4(2)		4(2)	4(2)		
	기타	1	1(1)		1(1)	1(1)		
지정기관	공사·공단	3	7(5)		7(5)		7(5)	
	협회·조합	1	4(2)		4(2)	2(1)	2(1)	
	기타기관	1	1(1)		1(1)	1(1)		
전체		15	62(35)	3(1)	59(34)	19(11)	42(23)	1(1)

주: (-)안의 숫자는 중지 또는 1회한 통계임
출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62종의 국가승인 교통통계를 교통수단별로 분류해 보면, 해운(항만) 분야가 18종으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 분야 15종, 철도교통 분야 10종, 항공(공항) 분야 8종 등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다. 특정 교통수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도 11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승인 교통통계를 통계의 조사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통계가 21종으로 가장 많고, 사람 및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통계가 각 5종, 화물 대상 통계가 3종으로 나타났으며, 28종의 통계는 교통수단(시설) 및 기타 내용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³ 현재 작성 중인 교통통계를 교통수단별 및 조사대상별로 매트릭스화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통계는 통행량, 속도 및 시설현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운(항만) 통계는 선박현황, 항만시설현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조사 대상을 '기타'로 분류한 통계에는 교통문화지수, 교통유발원 단위조사, 항공부문 수입실적 등이 있다.

교통수단별·조사대상별 교통통계

구분	작성 통계수	조사대상				
		사람	화물	사업체	교통안전	교통수단 및 기타
도로	15 (5)	•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 국가 교통 조사	• 고속버스수송 실적보고* • 자동차면허상황* • 자동차터미널인 면허상황보고*	• 교통사고 발생현황	• 고속도로교통량통계 •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 • 도로교통량조사 • 부산시 차량교통량조사 •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서울시 차량통행속도실태 • 교통문화실태조사 • 교통유발원 단위조사(1회) • 유료도로현황*
철도	10 (7)		• 운수 성적 일보*		• 철도사고 현황 • 여객사고 통계* • 화물사고 통계*	• 철도경찰통계 • 한국철도통계 • 도시철도일반현황* • 동력차별운전실적* • 지하철투자현황* • 철도보선통계*
항공 (공항)	8 (6)	•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 통계보고*		• 항공통계 • 월간민간항공운항통계* • 항공기보유현황* • 항공사업체현황*		• 항공교통 관제업무통계 • 국내공항시설현황* • 항공부문수입실적*
교 통 수 단	해운 (항만) 18 (10)	• 해상여객 통행 실태조사 (1회)	• 해상화물 통행 실태조사 (1회)	• 한국선원통계 • 운항선박통계 • 화물수송실적 • 입항선박 톤급별통계 • 내항여객선수송실적* • 외항여객선수송실적*	• 해양사고 현황	• 항만국통제통계 • 항만시설 및 능력현황 • 등록선박통계 • 선박운항실태조사(1회) • 여항교통량조사(1회) • 지정항만 교통량조사(1회) • 출입항선박 및 선원통계보고* • 항만장비보유현황* • 해기사면허증 및 선원수첩 교부현황*
종합	11 (7)	• 대중교통 현황조사 • 수도권 가구 통행실태*		• 운수업조사 •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 교통부문 수송실적보고 • 광공업사업체 수송실태조사(1회) • 광주광역시 물류조사* •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 대전광역시 도시물류 현장조사* • 전국 물류현황조사*		• 창고업허가상황보고*
합계	62 (35)	5 (3)	3 (2)	21 (13)	5 (2)	28 (15)

주: *는 중지통계를 의미하며, 작성통계 수 합외 () 안의 숫자는 중지 및 1회만 통계를 의미함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국제동향

●● 전반적인 교통통계의 조사, 수집, 가공, 공표 등과 관련하여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특별한 지침이나 권고안은 찾을 수가 없으나 국가(지역)별로 교통통계 작성과 관련한 지침이나 작성주체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살펴볼 수 있다.

미국

●● 미국의 교통통계는 대부분 교통통계국(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BTS)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BTS는 1991년 제정된 '육상교통효율화법'에 의해 1992년 설립된 유일한 교통통계 기관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 그리고 교통자원의 효과적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 연방교통부 산하 행정기구이다. BTS는 사실에 기반하여 교통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가교통체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보고하고 연계교통 및 다른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충하여 정부 통계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조사계획 및 설계, 자료의 수집, 가공, 분석, 정보의 공표, 정보의 질적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BTS Statistical Standards Manual』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교통체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공공정책결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자들의 교통지식기반을 향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BTS는 교통과 관련된 통계분석, 지도제작, 교통분석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BTS의 조직을 보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상원에 의해 추인된 국장(Director)이 감독, 관리한다. BTS 국장은 4년의 임기를 가지며 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BTS는 교통시스템, 여객 및 화물, 교통 혼잡, 연결성, 교통안전, 교통경제, 교통에너지 및 환경, 항공 및 공항, 해운 등 다양한 분야의 500여 종의 항목에 대해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구통행조사(NHTS)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조사와 추세 전망작업을 통해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BTS가 발간하는 교통통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교통통계』가 있다. 『국가교통통계』는 교통시스템, 교통안전, 교통과 경제, 교통 에너지와 환경 등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분류는 다시 여러 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중분류는 물리적 구성요소, 교통안전 기록, 경제적 성과, 에너지 소비, 환경영향 등 총 219개 항목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BTS는 미국의 전반적인 교통 통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유용한 기초 자료로 주요한

교통통계 항목을 집계하여 요약한 포켓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포켓가이드북은 미국 교통 시스템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집계하여 도표 및 표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 수요의 주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국 교통체계의 전략적 목표를 알 수 있게 여러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포켓가이드북의 구성은 안전, 교통 시스템과 장비, 교통체계 활용과 커뮤니티, 경제적 타당성, 환경 지속성 등 5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 교통부는 포켓가이드북을 통해서 대중들과 교통통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에 활용되길 바라고 있다.

미국 국가교통통계의 구성 및 제공 통계 항목수

대분류(Chapter)	중분류(Section)	제공 항목수(개)
교통시스템 (73)	물리적 연장	10
	차량, 항공기, 선박 수량조사	14
	교통시설 상태(condition)	10
	여객 및 화물이동	29
	물리적 성과	10
교통안전 (50)	복합운송	8
	항공	8
	도로	15
	대중교통	7
	철도	6
	수운	5
	파이프라인	1
교통과 경제 (38)	교통과 경제	10
	교통과 소비 지출	9
	교통 수입, 고용 및 생산성	9
	정부 재정지원	10
교통, 에너지 및 환경(58)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	3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	16
	교통에너지 집중도 및 연료효율	10
	대기오염	24
	수질오염, 소음, 폐기물	5
전체	-	219

출처 : U.S. DOT, National Transport Statistics 2014

일본

•• 일본의 교통통계는 대부분 총무성 산하기관인 통계국과 교통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성에서 주관하고 있다. 일본은 육상통계요람과 교통 관련 에너지요람을 통합하여 발간하고 있는 『교통관련 통계자료집』에서 교통부문별 여객·화물의 수송실적(인, 톤)

및 수송분담률(%), 수송거리(인-km, 톤-km)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송수단은 도로, 철도, 항공, 항만, 기타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문별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등 조사를 통하여 수송실적을 산출하고 있다.

일본의 도로부문 수송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로는 '자동차수송 통계조사', '자동차 연료소비량조사' 등이 있으며, 여객부문은 '여객지역유동조사', 화물부문은 '트럭운송정보', '화물 지역유동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철도의 여객과 화물 수송실적은 '철도수송통계조사'를 통하여 산출되고 있는데, 매월 철도의 영업거리, 열차 운행거리, 운행인(톤)수, 수송량(인-km, 톤-km)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항공의 경우 '항공운송통계조사'를 통하여 항공기 가동 시간, 연료 소비량, 국내 정기 항공 운송 사업 운송 실적, 국제 항공 운송 사업 운송 실적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송실적을 산출하고 있다. 항만은 화물의 품명, 무게, 운송구간 및 거리, 항해거리 및 연료소비량에 대하여 매월(표본) 및 매년(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내항선박 수송통계조사'와 매월·매년 입항선박, 선박승강인원, 해상 수출입화물톤수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하는 '항만조사'를 통하여 수송실적을 작성하고 있다.

일본의 수송실적 산출을 위한 통계 현황

부문		관련 통계명	
도로	여객	- 자동차수송통계조사	- 여객지역유동조사
	화물	- 자동차 연료소비량조사	- 트럭운송정보 - 화물지역유동조사
철도	여객, 화물	- 철도수송통계조사	
항공	여객, 화물	- 항공운송통계조사	
항만	여객, 화물	- 내항선박 수송통계조사, 항만조사	

출처: 김찬성 외, 『국가교통통계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2

유럽(EU)

EU 국가들의 통계정보를 주관하는 유럽통계청(Eurostat)은 교통통계의 수집 및 공표에 관련하여 교통통계의 측정 유형을 화물의 이동, 여객의 이동, 교통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은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내륙수운, 해운, 항공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⁴ 화물운송통계는 톤 혹은 톤-km로 제공하며 여객운송통계는 여객 수, 인-km로 제공하고 교통량통계는 자동차 대수 또는 차량주행거리(VKM)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4 <http://ec.europa.eu/eurostat/web/transport/overview> 참조(2014. 12. 10 접속).

아울러 교통통계의 수집은 EU 회원국, 유럽 FTA(EFTA) 회원국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 Eurostat은 또한 국제교통포럼, UN 유럽 경제위원회(UNECE)와 공동으로 교통용어집을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회원국들이 공통된 기준하에 교통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Eurostat은 도로화물 교통통계 수집을 위한 매뉴얼인 'Road freight transport methodology'를 작성하여 도로화물 교통통계의 조사, 수집, 가공, 분석 등과 관련한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02 발전과정

개관

•• 다양한 교통통계 항목에 대한 수요는 교통수단의 발달 및 교통량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통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교통수단의 기술 진보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이전의 육상 교통수단은 도보와 말이나 소 등 동물을 이용하였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바다나 강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하천을 건너기 위한 수상 교통수단이 발달했다. 한편, 육로는 주로 통신로로 이용하고 화물수송은 뱃길을 이용하는 조운(漕運)에 더 크게 의존했다.

기계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 중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린 것은 철도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철도는 단순한 하나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근대화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대륙 침략의 수단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철도는 전차의 등장(1899)과 더불어 경인선(1899), 경부선(1905), 경의선(1906), 호남선(1914), 경원선(1914), 함경선(1928), 해산선(1937), 평원선(1939), 중앙선(1942) 등의 순으로 개통되었다. 1945년 광복 당시 일제에 의해 건설된 철도의 총길이는 무려 6342km에 달하였으며, 지금도 우리나라의 철도는 KTX(2004 개통)와 지하철(1974 서울 1호선 개통)을 제외한 80%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자동차 교통은 관용 자동차 도입(1911), 택시와 버스 등장(1912), 화물자동차 등장(1928), 정기 노선버스 등장(1928), 택시운송업 시작(1962) 등의 변화를 겪었다. 한국의 자동차 등록



● 경부선 기공식(1901)



● 대한국민항공사

대수는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내의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해 본격적인 자동차 교통시대가 시작되었다.

항공교통은 비행기의 등장(1913), 민간 항공회사인 대한국민항공사(KNA) 창설(1948), 대한항공공사(KAL) 설립(1964) 등의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 김포공항은 1939년 일본군이 3개의 활주로를 건설하면서 생긴 것으로 1958년 대통령령으로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등을 치르면서 폭증하는 항공수요를 해결했다. 현재는 인천국제공항(2001 개항)이 동북 아시아의 허브 공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부산(1876), 원산(1880), 인천(1883)의 3개항이 개항되면서 우리나라 수상교통은 해운 중심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구한말 이래 1945년 광복까지의 20세기 전반부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통체계가 일제의 교통체계로 개편되는 시기였다. 일제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신작로를 닦고 항만 건설사업을 벌여 1930년대 중반 무렵에는 육상·수상 교통망이 새로운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도 교통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첨단기술의 발달은 교통 부문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해주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어우러져 1960~1990년의 30여 년간 교통시설 및 교통량은 놀라운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1990년대 중반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 등 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⁵ 한편, 정부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교통물류 SOC 사업 타당성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얻기 위해 1998년부터 교통물류통계를 구축했고,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시행해 왔다.

20세기 후반의 변화는 단순히 교통시설과 절대적인 교통량의 증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우선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망이 구축되고 광양항 등의 대규모 항구가 여러 지역에 신설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 양상이 달라졌다. 또한 자동차의 증가와 지하철의 등장으로 도시 내의 교통 유형이 크게 변화되어 통행 거리가 길어지고 통행 빈도가 증가했으며 도시 구조까지도 새로운 교통 노선에 맞추어 변모했다.

이러한 교통의 발달과정이 다양한 교통통계의 필요성을 가져왔으며 2000년대 이전에는 수송실적 위주의 통계가 많았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는 운수업 관련 사업체, 통행

5 교통시설특별회계는 휘발유·경유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목적세)로 전환하여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 운영(1994. 01~2003. 12)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연장하다가 2009년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개정으로 영구법화하였다.

실태, 물류현황, 도시철도, 대중교통, 항공교통 등 시대적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른 교통통계의 수요를 반영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교통문화 관련 통계가 국가승인 통계로 승인되었다.

한편 교통통계 조사방식의 변화도 있었다. 최근 교통통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조사 및 통계 수집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조사 인력을 동원한 현장 혹은 지점조사를 통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최근에는 조사지점에 차량검지기(LOOP)를 매설하고 통신망을 활용하여 상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과거의 조사가 표본조사, 노측 면접조사, 행정기관 이용조사 등으로 조사자료의 오차 발생 비율이 높았다면 최근 첨단조사기법은 교통조사 시에 발생하는 오차요인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교통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통계자료의 수집이 용이해지고 자료의 수준 및 자료의 활용성도 높아지면서 교통 DB 구축 및 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최근 교통통계의 흐름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도로법」, 「교통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각종 교통 관련 DB가 구축되고 개인 모바일장치 대중화로 인해 교통 관련 데이터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 DB의 구축은 유관기관(국토교통부, 통계청, 해양수산부,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별도로 생산·관리되고 있는 개별 교통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통합 제공함으로써 교통통계 자료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된 교통 관련 DB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 DB(KTDB), 경기도 DB센터의 교통통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정보 시스템(TASS),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중교통 종합정보 서비스(TAGO), 수도권 대중교통정보 시스템(ALGOGA),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정보 시스템(OASIS),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 시스템(KOTEMS), 항공정보포털 시스템(Airportal), 항공안전관리 시스템(ATIS), 철도광역 정보센터 서비스(KOTRIS), 항만물류 통합정보체계(PORT-MIS) 등이 있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정보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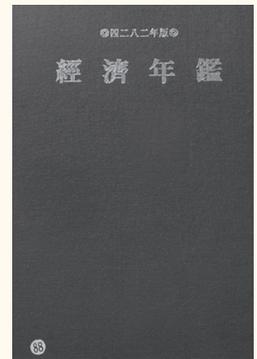
시대별 발전과정

●●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중앙행정부서 외에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부속 관서들이 있었는데 이들 부속관서를 통하여 교통 관련 통계를 수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철도사업은 철도국에서 주관하였고 도로·하천·항만 등은 토목국에서 주관하며 각 부서의 서무과에서 관련 통계보고와 통계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 당시의 통계는 철저하게 행정에 의존하였으며, 군국적 통제하에 업무통계 역할만 하였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08~1943)에서 교통부문은 단독 통계로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건설(토목)부문에서 도로 연장, 수운부문에서 개항현황 및 선박통계, 교통에서 철도 부문 수송실적 등이 주로 정리되고 있었다.⁶

교통통계 현황(광복 이전)

통계간행물	작성기관	통계부문	주요내용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조선총독부	도로건설	도로별 준공거리, 미준공거리, 예산액, 자동차 운전연장 등
		수운	개항 현황, 선박통계, 승객·화물 수송실적 등
		토목	도로 종류별·지역별 연장, 항만공사비 등
		교통	국유철도 및 사설철도 통계, 여객 및 화물 운수실적(월별), 역별 주요화물발송, 철도사고 등

미군정기에도 초기에는 일제의 조선총독부 기구를 그대로 따랐으며 교통국이 운수부로 바뀌었다. 미 군정기의 교통 통계자료를 볼 수 있는 자료는 『남조선통계연감(1948)』이 있는데 전체 19가지 통계항목 중 교통 관련 통계는 토목, 수운, 철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다. 건국 초기 교통통계는 한국은행 정기간행물인 『경제연감』(1949 최초 발간), 『조선경제연감』(1948 최초 발간) 등의 자료에서 운수항목에서 제공되었다. 1950년대에는 『대한민국 통계연감』(1952 창간)에서 철도, 선박, 화물수송 등 교통 관련 통계를 제공하였다.⁷



● 경제연감(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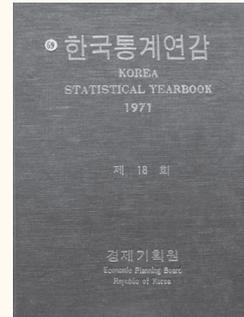
6 통계청에서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08~1943)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교통 관련 통계로는 국유철도, 여객, 화물, 운수수입, 사설철도, 도로, 선박, 조난선박 등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7 창간호에서는 '운송 및 체신' 항목에서 교통통계가 제공되었는데, 제4호에서는 운수항목과 체신항목이 분리되어 통계가 제공되었다(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 (I)』, 통계청, 1992).

교통통계 현황(1945년~1960년대)

통계간행물	작성기관 (작성기간)	통계부문	주요내용
대한민국 통계연감	내무부 (1952~1962)	교량·도로	교량건설, 도로연장 등
		교통·통신	각 항별 입출항 선박, 화물톤수, 궤도, 기관차 보유량, 민간항공 수송실적, 자동차 수, 철도수송실적 등
		범죄·재해	선박 교통사고, 열차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등 교통사고 관련 통계

우리나라는 경인고속도로(1968) 개통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및 호남고속도로(1970), 영동고속도로(1971) 개통 등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자동차·조선공업의 육성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교통·운수업 부문 역시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한국통계연감』이 국가통계의 총괄역할을 하면서 각 부문의 통계를 제공해 주었는데 교통통계는 대분류항목에서 운수(1970), 운수·통신 및 건설(1976) 등 산업분류에 따라 이름이 변경되면서 제공되었다.



● 한국통계연감(1971)

이 시기에는 수송실적 위주의 교통통계가 조사되기 시작하였는데 수송실적을 파악하여 관련 교통수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다. 예를 들어 교통부문 수송실적보고(1975)는 철도, 지하철, 도로, 해운, 항공부문에 대한 수송실적을 파악하여 교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었다. 도로교통량 조사 통계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및 일반 지방도의 통행량을 조사하여 도로의 건설계획과 유지관리 및 도로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와 각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70년대 작성 승인된 교통통계의 내용을 계속통계를 기준으로 조사단위,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를 정리하면 조사통계 2종, 보고통계 10종이다.

1980~1990년대까지는 새로 승인된 교통통계가 모두 5종으로 아직까지는 1970년대 교통통계 자료를 기초로 교통정책이 수립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새로 승인된 교통량 또는 통행속도 조사 통계는 기본적으로 도시 내 주요간선도로와 교차로의 차량교통량 특성 및 차량속도를 조사·분석하여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교통 관련 계획 수립 등 교통·도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에 작성 승인된 5종의 통계 중 2종은 보고통계, 3종은 조사통계이다. 또한, 4종의 조사주기는 1년이며, 3종의 통계는 계속 작성되고 있으며, 2종의 통계는 작성중지되었다.

교통통계 현황(1970~1990년대)

통계명 (승인연도)	작성방법 (통계종류)	조사단위	조사주기	비고
도로교통량조사 (1975)	조사통계 (일반통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1년	전수조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1975)	보고통계 (일반통계)	각종 자동차	월	
등록선박통계 (1975)	보고통계 (일반통계)	선박	월	
입항선박톤급별통계 (1975)	보고통계 (일반통계)	입출항 구분, 입출항일시, 선박명, 선박국적, 선박번호, 선종, 선박종류수 등	월	
화물수송실적 (1975)	보고통계 (일반통계)	선박명, 선박국적, 선박번호, 선종입출항일시, 화물반출입구분, 화물품목, 화물적재항만, 화물중량, 컨테이너 규격 및 단위 등	월	
교통부문 수송실적보고 (1975)	보고통계 (일반통계)	국내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국제수송실적, 교통산업서비스지수 등	분기	
해양사고현황 (1976)	보고통계 (일반통계)	해양사고 발생건수, 해양사고 선박척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월	
교통사고발생상황 (1976)	보고통계 (일반통계)	경찰에 신고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1년	
운전면허 소지자현황 (1976)	보고통계 (일반통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	1년	
항만시설 및 능력현황 (1976)	보고통계 (일반통계)	전국 55개 항만	1년	
고속도로교통량 통계 (1977)	보고통계 (일반통계)	영업소를 통과하는 각종 차량	1년	
운수업조사 (1977)	보고통계 (일반통계)	사업체	1년	전수 및 표본 조사
운항선박통계 (1981)	보고통계 (일반통계)	운항면허 선박	1년 (계속)	
항만장비보유현황 (1981)	보고통계 (일반통계)	전국 항만의 선박장비 및 하역장비	1년 (중지)	
부산시 차량교통량조사 (1985)	조사통계 (일반통계)	차량교통량	1년 (계속)	유의표본
전국물류현황조사 (1996)	조사통계 (지점통계)	화물자동차	5년 (중지)	표본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실태조사 (1998)	조사통계 (일반통계)	간선도로구간, 표본노선	1년 (계속)	표본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2000년대 이후에는 모두 28종의 국가통계가 작성되었으며, 2001년에는 특수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1회한 통계 6종이 작성되었다. 1회한 통계를 제외한 22종의 통계 중 현재 계속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11종이며 중지 통계는 11종에 이르고 있다. 국가교통조사(5년), 기업 물류비실태조사(2년), 한국철도통계(부정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통계가 매년 또는 매월 작성되고 있다.

교통통계 현황(2000년대 이후)

통계명 (승인연도)	작성방법 (통계종류)	조사단위	조사주기	비고
항공통계 (2005)	보고통계 (일반통계)	각 항공편의 운항편, 여객명, 화물 kg 등	월	
국가교통조사 (2005)	조사통계 (지정통계)	여객부문, 화물부문	5년	유의표본
한국선원통계 (2006)	보고통계 (일반통계)	사업체	1년	
항공교통 관제업무통계 (2006)	보고통계 (일반통계)	관제기관 10개소	월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 (2007)	보고통계 (일반통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1년	
철도경찰통계 (2007)	보고통계 (일반통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 및 지방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센터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1년	
철도사고현황 (2007)	보고통계 (일반통계)	철도사고 및 세부기준별 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사상사고 발생건수	월	
항만국통제통계 (2007)	보고통계 (일반통계)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500톤 이상)	1년	
대중교통현황조사 (2008)	조사통계 (일반통계)	대중교통 이용자와 대중교통 사업체	1년	확률표본
교통문화실태조사 (2008)	조사통계 (일반통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1년	유의표본
한국철도통계 (2008)	보고통계 (일반통계)	국내 철도수송 및 관련 시설 현황	부정기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03

주요 교통통계의 발전과정

•• 본 절에서는 62종의 국가승인 교통통계 중 1회 조사로 끝났거나 작성이 중지된 통계를 제외한 계속 통계 27종 중에서 통계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6종의 통계를 선정하여 개별통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대상 개별통계의 선정 기준은 우선 통계의 조사대상 범위가 특정 교통수단이나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지 않는 통계를 중심으로 3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도로를 제외한 각 교통수단별로 철도, 항공, 해운 분야의 통계를 3종 선정하였다. 또한, 작성기관이 통계청이나 중앙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교통수단별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 작성 통계 중에서 선정하였다.⁸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운수업 조사’, ‘국가교통조사’, ‘교통부문 수송실적보고’, ‘한국철도통계’, ‘항공통계’, ‘운항선박통계’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운수업조사’를 제외하고는 주로 보고통계에 의한 것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 주요내용만을 기술하였다.

운수업조사

•• 운수업은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변천내역을 운수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1964년에 운수업은 대분류 운수, 보관 및 통신업으로 분류되었고 5차 개정(1984)까지 유지되었다. 6차 개정(1991)에는 운수, 창고 및 통신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7차 개정(1998)까지 유지되었다. 8차 개정(2000)에서는 운수업과 통신업이 분류되어 9차 개정(2008)까지 유지된다.

운수업은 장소적 격리를 제거함으로써 자원의 개발과 함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운수업조사’는 국내 운수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8 해양수산부의 통계는 그 특성상 해운 또는 항만통계를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하는 통계이다.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하여 1964년에 최초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69년에 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1977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이관하여 조사주기를 연간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2014년 기준조사(2015 실시)가 38회째 조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운수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수업조사의 조사대상 업종의 발전과정을 연대별로 살펴본다.

1977년에는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철도, 항공운송업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의 세부 14개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1978년에는 철도업(지하철 포함), 항공운송업 및 유료도로운영업을 조사대상에 추가하고, 육상운송업 중 택시업(한시 택시)에 한해 최초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979년에는 하역업(육상, 수상), 운송 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창고업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1980년대 들어와 1981년에는 개별용달업종을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하여 조사하였다. 이후 조사대상 업종을 추가하면서 1987년에 버스 및 택시운송업은 해당 조합을 통해 업체에서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그동안 기업을 직접 대면하는 조사방식을 지양하고 조합에서 작성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이었는데 조합에서 직접 기입한 자료가 충실하고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농산물창고업을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하여 조사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업종을 변경·분리·통합하였고, 기업이 늘어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실시하였다. 특히 다른 기관의 조사자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운수업조사를 실시하였다.

1991년에 한국표준산업분류 6차 전면 개정으로 차량임대업은 운수업에서 분리되어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다. 고속버스운송업과 시외버스운송업이 시외버스운송업으로, 도시간철도업(철도업)과 구역내철도운송업(지하철)을 도시간 및 구역내철도운송업으로 통합하였고 항공운송업을 정기항공운송업과 부정기항공운송업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통신업부문을 추가하면서 1998년부터는 정보통신부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2000년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8차 개정과 9차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및 분리가 있었다. 또한 일반택시업 및 전세버스업, 육상운송주선업, 장의차량운영업, 마을버스운송업 등에 대한 조사가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되었으며, IT 기술발달로 인터넷(이메일) 조사방법을 도입하였다. 2004년 외항화물업과 항공운송업을 시작으로 철도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공항운영업, 고속버스운송업 등으로 이메일 및 인터넷 조사방법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후 2007년 조사부터 인터넷 조사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조사표 설계 변경과 지속적인 업종을 추가하였다. 2010년 조사에서는 다른 기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항목을 조사 신뢰성이 낮아 삭제하였고, 급여액(연간총액)을 연간급여액으로 변경하여 조사 현실에 맞게 하였다. 2012년에는 국제택배업체와 한국취항 외국항공업체를 추가하여 외국사업체를 조사하였다.

‘운수업조사’는 2015년 현재 관련 조합에서 조사하는 업종 8종, 지방청(사무소)에서 조사하는 업종 38종 등 총 46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조사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운수업조사는 전국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기업체(46개 업종, 약 36만 개) 중 전수 및 표본으로 선정된 약 7200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크게 8개 항목으로 기업체 일반사항(기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 조직형태, 창설연월, 사업형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장비보유현황,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매출액 및 영업비용, 유형자산 등이다.

운수업조사 조사개요

구분	세부내역	조사항목	주요지표	조사목적
기업관리	기업일반	기업체명, 대표자명, 성별,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일반사항	누락 또는 중복 확인 등 지역 단위 통계작성
	기업형태	조직형태	조직형태별 기업체수	조직형태 구조 파악
기업이해	기업창업	창설연월		신규업체 파악
	기업규모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종사자수 직종별 연간급여액	종사상 고용구조 종사상 급여액
	사업형태	사업형태	업종별 사업형태 현황	업종별 구조
재무	자본의 운용과 조달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금 구조 변화
	경영분석	연간매출액 및 영업비용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납부부가가치세	경영실적 및 부가가치 파악, GDP 추계
		유형자산	종류별 연간증가액 및 연간 감가상가액, 연말잔액	
운반저장	장비 보유 현황	차량신규가격 및 차종	차량신규가격, 차종, 배기량, 차량연식	개별업종의 감가상각비 산출
		차량보유현황	소유형태별, 톤수별, 순차량 및 작업차량	육상업의 운반능력
		선박보유현황	종류별 척수 및 톤수	수상업의 운반능력
		항공기보유현황	종류별 및 기종별	항공업의 운반능력
		창고보유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면적 및 동수, 장비별 보유대수	창고업의 저장능력
		철도지하철 보유현황 및 파이프라인시설	철도지하철 차량별 보유 대수 파이프라인 시설현황	철도업의 운반능력

출처 : 통계청, 운수업조사 지침서, 2015

조사단위는 기업체 단위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영업소, 지사, 사업소 등은 본사에서 조사 하였으나 동일 기업체 내 복수의 운수업종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분리하여 조사했다.⁹⁾ 조사방법은 업종에 따라 전수조사(33종)과 표본조사(13종)로 나뉘었다. 전수조사 업종은 육상운송업 7개 업종, 수상운송업 8개 업종, 항공운송업 2개 업종, 운송관련서비스업 16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본조사 업종은 육상운송업 9개 업종, 운송관련서비스업 4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운수업조사 조사대상

조사방식	업종(개)	세부업종
전수 업종 (33개)	육상운송업 (7)	-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시내버스운송업, 시외버스운송업 - 고속버스운송업, 택배업,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8)	- 외항여객업, 외항화물업, 내항여객업, 내항화물업, 기타해상운송업 - 내륙수상여객업, 항만내운송업, 기타 내륙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2)	-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16)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수상화물취급업, 일반창고업, 냉장및냉동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기타창고업, 철도운송지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터미널,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항구 및 기타해상터미널, -도산업, 기타수상운송지원, 항공운송지원, 화물포장 및 검수관련 서비스업, 기타운송관련업
표본 업종 (13개)	육상운송업 (9)	- 마을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장의차량 -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늘찬배달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4)	- 농산물창고업, 주차장운영업, 육상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출처 : 통계청, 운수업조사 지침서, 2015

조사방식은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지방통계청 담당직원의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타계식)를 하였으며 버스, 택시 및 화물은 각 시도 버스, 택시 및 화물 조합의 응답자 직접 기입 방식(자계식으로 기입된 조사표를 방문하여 회수)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교통조사

●● ‘국가교통조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도로, 철도, 항만, 물류 등 교통 관련 시설 및 수단에 대한 운영실태와 교통량, 통행실태, 교통네트워크 등 여객 및 화물의 교통 기초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다. 조사 및 분석 결과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가교통DB를 구축하고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 교통시설 투자

9) 분리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 업종으로 합산하여 조사했다.

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에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기관 및 학계, 산업계 등에 제공한다. 국가교통조사 이전에 추진하던 기존 교통조사는 사업 시행 시마다 실시되어 조사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조사대상 및 방법 등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자료호환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부실한 교통자료를 이용한 타당성 평가는 투자우선순위의 왜곡 등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관성 있는 시계열 교통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투자의 타당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자 국토교통부는 1998년부터 '국가교통 조사 및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¹⁰

국가교통조사의 기대효과는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시설투자사업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연속적인 시계열 교통자료 확보, 조사주체별로 행해지는 각종 개별교통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수행체계 및 방법론 제시,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를 종합적이고 표준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GIS에 기반한 교통 DB 구축을 통한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다.

국가교통조사는 여객조사와 화물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조사별 조사목적 및 조사항목은 표와 같다.

국가교통조사 조사목적

통계명		최근조사 년도	조사목적
여 객 1)	가구(주말)통행실태조사	2010	- 전수화된 기종점통행량 산출
	교통량 및 재차인원조사		- 전수화된 기종점통행량 보정
	여객교통시설물 이용실태조사		-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장거리통행 보정
	고속도로요금소 우편조사		- 여객수요 전수화 과정에 보정자료로 활용
사업체 물류현황조사		2011	- 물동량 파악, 물동량 추정 기초자료로 활용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 화물자동차 수송실적 작성,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특성 평가 자료로 활용
화 물 2)	사업체 물류현황조사(창고업)		- 물류시설의 차량특성, 통행특성 파악
	고속도로요금소 조사		-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통행량 보정
	물류거점 진출입 통행량 조사	- 화물자동차 통행량 보정자료로 활용	

출처 : 1) 한국교통연구원, 『2010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 - 전국 여객 기종점통행량 조사』, 2011

2) 한국교통연구원 내부자료

10 국가교통조사의 법적 근거는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2조(국가교통조사) 및 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이다.

국가교통조사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여객	- 가구현황 • 가구원수, 6세 미만 아동수, 차량종류별 보유대수, 주택종류, 점유형태, 가구 월평균소득, 도보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정류장 및 소요시간 등 - 가구원특성 • 가구주와의 관계, 출생년도, 성별, 운전면허증 유무, 직업, 고용형태, 근무형태, 가구원별 직장 및 학교의 주소/건물명 - 통행특성 • 통행일자, 조사당일 통행유무, 가구주와의 관계, 출발지/도착지, 출발시간/도착시간, 통행목적/수단, 탑승인원, 고속도로/유료도로 이용요금 - 장거리 통행특성	
	교통량조사	- 차량통행량
	재차인원조사	- 재차인원 : 승용차(일반형/택시/승합차), 버스(시외/시내/공항)
	여객교통시설물 이용실태조사	- 출발/도착 터미널, 통행목적, 출발/도착 터미널까지의 접근 교통수단, 최초 출발지의 출발시간, 동행인수, 자택주소
	고속도로요금소 우편조사	- 통행목적, 출발지, 출발시간, 진입요금소, 도착지, 탑승인원, 차종구분 - 성명, 주소, 연락처
화물	- 총 종사자수 현황, 사업장의 물동량 및 부지면적, 연간 매출액, 기타 물류시설 및 화물차량 보유현황 - 연간수송경향 • 주요 입출하 품목, 입출하량, 톤당 평균가격, 입출하 시 이용한 운송수단, 이용화물차 톤급, 주이용 운송수단 및 화물중계지명, 입출하 빈도 - 수송실적(3일) : 입/출하명, 입/출하품목, 입/출하량, 송/수회인업종, 출발/도착지, 입/출하시 운송수단, 수송비용, 소요시간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 차량특성 : 소속업체명, 작성자, 연락처, 조사장소, 적재능력, 업종 - 통행특성 : 통행일시, 출발지, 출발시간, 출발자유형, 도착지, 도착시간, 도착자유형, 화물품목, 적재톤수, 통행거리
	화물발생중계거점 조사	-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산단 인근도로 노숙조사	- 차종별 통행량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2010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 2011

교통부문 수송실적보고

●● ‘교통부문 수송실적보고’는 육상운송(철도, 지하철, 공로), 해상운송 및 항공 부문을 망라한 중요 교통수단의 수송실적을 집계하여 교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1971년에 최초로 작성된 일반 보고통계이다. 전국의 국내 및 국제 여객, 화물 운송사업체, 내·외항 여객운송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국내 운송의 여객부분에서는 철도, 지하철, 도로(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해운 및 항공부문의 수송실적을 ‘인’, ‘인-km’ 단위로 측정한다. 화물 부문에서는 철도, 도로(일반화물, 개별 화물, 용달화물), 해운 및 항공의 수송실적을 ‘톤-km’ 단위로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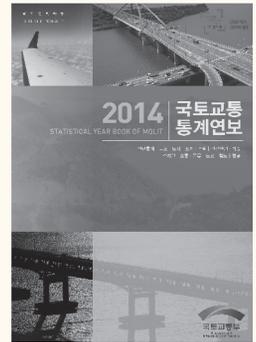
작성방법은 행정보고내용 집계(실적) 및 가공(지수) 또는 사업체의 전산입력자료 집계로 이루어진다. 즉 시도,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운조합, 지방해양항만청 등의 교통시설 운영기관이 집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작성된다.

고속버스, 철도, 항공, 해운의 경우, 주로 해당 수단의 운영기관(사업체)에 의해 전수자료가 집계되고 있다. 각 운영기관은 이들 자료를 경영분석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집계 및 관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전수자료를 1개월 이내의 시차로 집계 가능한데 전체 전산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의 수송실적은 지역 및 운송수단별 상이한 방법으로 집계하고 있다.

제공하는 주요 통계 항목은 국내수송실적, 국제수송실적, 교통산업 서비스지수, 입·출항별 여객(한국인, 외국인), 차량, 화물(일반화물, 컨테이너) 수송실적, 여객선항로(취항선박, 취항거리, 총기항지수, 승선정원, 수송인원) 등이다.

집계된 수송실적자료는 주요 수단별로 별도의 통계자료집이나 『국토교통통계연보』 등을 통해 연도별 및 월별(항공, 해운)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교통부문 수송실적보고의 작성기관은 국토교통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 국토교통통계연보(2014)

한국철도통계

●● ‘한국철도통계’는 철도수송, 영업, 시설 등 철도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 공표함으로써 수송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보고통계(일반통계)로 부정기적으로 작성된다. 한국철도통계는 2008년 기존의 철도 관련 통계인 ‘여객사고통계’, ‘화물사고통계’, ‘철도보선통계’, ‘운수성적일보’를 통합하여 신규 작성 승인된 통계이다.

작성체계를 살펴보면, 수송·운전 분야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여객, 물류, 광역, 수송, 안전 등의 관련 부서에서 정보기술단으로 보고하여 작성한다. 기타 분야는 인사, 기술, 재무 등의 관련 부서에서 정보기술단으로 보고하여 작성한다. 통계의 공표주기는 1년이며 『철도통계연보』를 통하여 공표된다. 제공하는 통계로는 수송인원(명), 수송 인-km, 수송 화물 톤수 및 톤-km, 철도 킬로, 역수(개), 직원수, 레도연장, 차량수 등을 총괄지표, 직원, 수송, 운전, 시설, 차량, 전기, 경리 및 자재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항공통계

●● ‘항공통계’는 「통계법」 제18조 1항에 의해 승인된 통계로 전국 14개 공항의 항공수송(운항, 여객, 화물)에 관한 현황을 한국공항공사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공한다. 항공통계의 작성목적은 항공수송에 관한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공항운영 및 항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작성주기는 월 단위이며, 조사내용은 항공사별, 노선별 운항, 여객·화물 및 공항별 수송실적을 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에 보고를 통하여 작성한다. 여객통계는 유임여객과 무임여객(2세 이하 여객)으로 구분하며, 화물은 여객기 화물과 화물기 화물로 구분한다. 아울러, 국제노선별 자료는 경유구간의 경우 총 운항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여객 및 화물에는 경유지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공하는 통계는 국내선 노선별, 국제선 노선별, 운항편수, 여객(명), 화물(kg) 등이다.

운항선박통계

●● ‘운항선박통계’는 1981년 최초 작성 승인된 통계로 해양수산부가 내·외항 운항선박현황을 파악하여 수송능력 판단 및 각종 해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운항선박통계’는 해상운송업체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전수 보고통계로 지방해양항만청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는 작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통계작성을 위해 적용되는 통계의 개요, 업무흐름도, 통계표, 업무절차 상세설명, 관련 용어설명 등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 표준 매뉴얼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시계열자료는 『해양수산통계연보』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작성주기는 1년이며, 제공되는 통계는 면허구분(연안, 외항, 정기, 부정기), 선종별 면허등록 선박현황 및 국가별, 선종별 정기외항선 취항현황(항로) 등의 자료이다.

04

맺음말

•• 교통통계는 기본적으로 교통 관련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관점에서의 교통 현황분석 및 전망,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지표 제시 및 정책의 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되고 제공된다.

그동안 교통통계는 교통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교통통계의 필요성에 따라 조사 및 수집되었고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교통 및 토지이용, 산업발전 계획 등 정책 개발 측면에서의 교통현황분석, 정책 목표지표 제시 및 정책의 평가를 위해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한편,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 발생할 것이다. 최근에는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개발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통계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모든 통계가 마찬가지겠지만 교통통계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국가의 정책을 수립·평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교통통계이며, 올바른 정책의 수립·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교통통계의 수집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체계적인 통계관리기능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활용되는 통계의 혼선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교통통계는 국가 정책 및 관련 연구 등에서의 활용성이 높을 때 통계자료의 수집 및 공급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통계 품질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자체 통계품질진단'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확성, 일관성, 비교성, 시의성·정시성, 관련성, 접근성·명확성 등의 진단요소를 통해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통해 정책(제도)의 집행과 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통계의 품질관리 및 정책연계성 강화 제도가 도입 초기라 시행착오가 있으나 보다 내실 있는 실행을 통한 교통통계의 활용성 제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교통통계에서 일부 표본조사의 통계학적인 표본산출 방법의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통통계는 서로 성격이 다른 교통수단의 수송실적이나 기타 통계를 집계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및 보고체계의 차이, 통계 공표항목 간의 신뢰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통계항목에 대해 여러 가지 출처의 통계치가 존재하고 통계

작성기관에 따라 통계 결과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여 활용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료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된 교통수단은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통계가 생산되지만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처리 수준이 낮은 교통수단(예 : 도로부문)의 통계는 그만큼 통계의 신뢰성이 낮다. 따라서 전체 전산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수송실적의 통계자료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별로 자료산정방법이 상이하고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일관된 자료산정방식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IT 기술의 발달은 교통 DB 부문에 큰 변화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한층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관심사가 환경, 지속가능성,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존 교통통계의 조사대상인 사람이나 화물 또는 차량의 이동과 관련된 통계 제공 이외에 교통산업과 지속가능한 교통과 관련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을 통해 교통부문에서는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통계 구축 개발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김찬성 외, 『국가교통통계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2.
- 국토교통부, 『2013 국토교통통계연보』, 2013.
- 국토해양부, 『제1차 국가교통조사계획(2009~2013)』, 2009.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교통DB의 정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전략연구』, 2014.
- 수도권교통본부, 『재미있는 교통이야기』, 2007.
-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Ⅰ)』, 1992.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 통계청, 『제1차 국가통계발전(2013~2017) 기본계획 추진방향』, 2013.
-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010.

경제통계

제5장 정보통신

1. 개요
2. 발전과정
3. 주요 정보통신통계의 발전과정
4. 맺음말

01 개요

의의

•• 우리나라는 구한말 전화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전신이 운용되었다. 우편과 통신사업을 관장한 최초의 체신기관에 해당되는 '우정사(郵程司)'가 설립되던 이 시기가 정보통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수탈 기반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통신사업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의 정보통신통계는 체신통계와 통신통계로 구성되었다.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 정보통신통계는 우편중심의 체신통계와 전신, 전화, 무선호출기 등 통신사업의 통신통계로 구분되며 점차 통신통계가 확대되었다. 무선호출기의 경우 1982년 12월에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사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10년 새 무선호출의 황금시대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후 휴대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으로 대체되면서 무선호출은 급격히 사양화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정보통신은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회의(2014, 10)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등으로 통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도입은 PC 보급 확산의 계기가 되었고, 이후 1990년 말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해 새로운 지표에 해당되는 정보보호, 정보화, 보안 등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의 발달은 정보화사회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의 개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전기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기술의 융합·일체화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보의 생산, 가공, 축적, 유통, 공급 등”을 말한다. 또한, 정보통신은 전기통신과 정보처리를 일체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도 쓰인다. 기술적 의미의 정보통신은 “전기통신회선에 문자, 부호, 영상, 음향 등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에 부수되는 입출력 장치 또는 기타의 기기를 접속하여 정보를 송신, 수신 처리하는 전기통신”을 말한다. 즉 정보통신이란 기존의 전기통신에 컴퓨터가 결합되어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화상, 영상 등의 정보를 처리하여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보가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교환되기 위해서는 내장된 구성기기와 소프트웨어 상호 간의 대화 규정, 즉 프로토콜(Protocol)이 필요하다. 이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정보통신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전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기계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단말장치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의미한다.

범위와 종류

●● 정보통신통계는 우정통계로 시작하여 현재에는 우정부문을 포함한 정보통신 부문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오히려 산업통계 관점에서는 우정부문을 제외한 정보통신 분야만을 정보통신통계 분야로 다루기도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각 연구기관의 정보화사회나 정보통신 부문에 관한 연구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 등과 같이 국내 전체 산업 중의 한 산업으로서 정보통신을 다룬 분류가 그 둘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보통신 부문이 여러 산업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범위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분류 단계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대상범위나 분류의 기준에 따라 통계의 범위도 다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산업(ICT)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특수분류할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으로 나눌 수 있다. 통계청의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및 OECD의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를 토대로 하여 4단계로 이루어진다. 한편, ICT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로 '정보통신 부문 상품 서비스 분류체계'가 있다. 1994년에 제정된 정보통신산업 통일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1996년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정보통신산업통계를 산출해 왔다. 기존 6개의 대분류를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의 부문 간 유기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보통신 생태계를 반영하여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정보통신방송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등 3개의 대분류로 개편하였다. 이는 2012년 기준부터 정보통신통계 분류체계에 적용되었다. 정부의 ICT 분야 업무통합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관련 통계 분류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자료 중복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ICT 생태계를 반영한 것이다.

정보통신산업통계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표

舊 분류체계	新 분류체계
통신 서비스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유선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
무선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 서비스 모집, 중개 서비스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부가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지상파방송 서비스	
유료방송 서비스	
프로그램 제작·공급	
기타 방송 서비스	
융합 서비스 및 기기	〈이동〉
IPTV 서비스	〈이동〉
유무선 콘텐츠 서비스	〈이동〉
정보통신 응용기반기기	〈이동〉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방송기기
통신기기	통신기기
방송기기	방송기기
정보기기	정보기기
부품	부품
	정보통신 응용기반기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IT 서비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제작
디지털콘텐츠 제작	

또한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품목 신설(4G 서비스 신설, TV 부분품 신설 등), 제외(호스팅서비스 제외, pre-IPTV 서비스 제외, 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 제외 등), 명칭 변경(유선설비접속 서비스 → 유무선설비접속 서비스, 인터넷광고서비스 → 웹광고서비스 등) 등을 적용하였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품목을 세분하기 위해 하위 항목으로 이동시키고 그에 따른 삭제를 단행하였다. 이는 명확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세분화가 요구되었고, 중복으로 인해 분리 및 삭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통계분류는 개념과 용도에 따라 산업활동 분류와 생산물 분류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통계를 특성별로 분류하기도 한다.

정보통신통계는 2014년까지 총 45종이 국가통계로 승인받았으나, 현재까지 계속 작성되는 통계는 19종이다. 1980년대까지는 총 6종이었으며, 이 중 계속 작성되는 통계는 1종에 불과하다. 1990년대에는 총 9종이 승인통계를 받았으나, 1회한 통계가 3종, 작성중지된 통계가 2종이었으며 계속 작성된 통계는 4종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정보산업 진전으로 정보통신통계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총 30종이 통계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14종은 계속 작성되고 있다.

연대별 정보통신통계 현황

연대	계	계속 통계	중지 통계	1회한 통계
1980년대까지	6	1	4	1
1990년대	9	4	2	3
2000년대 이후	30	14	11	5
합계	45	19	17	9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목록, 2014

국제동향

●● OECD는 정보통신을 정보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산업 및 상품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정보경제 부문은 정보통신 부문과 콘텐츠미디어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통신 부문은 정보통신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로 구분된다.

1998년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발표한 이래, 2002년, 2007년 수정 과정을 거쳐 2008년에 정보통신을 정보통신 재화 및 서비스, 콘텐츠미디어 상품의 통계 분류체계를 발표하였다. 이후 OECD는 북미산업분류(NAICS)에서 정보의 창작 및 전달이 주 생산 활동인 출판, 영화, 음악, 방송, 통신, 정보처리 등의 산업들을 정보산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4차)에서 수용하도록 하였다. 콘텐츠 및 미디어 부문은

정보통신 부문의 하위 산업들 중에서 정보통신산업 분류에 속한 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즉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OECD(2009)의 ICT 산업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ICT 제조업, ICT 유통업, ICT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ICT 제조업은 컴퓨터, 통신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자부품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ICT 유통업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 관련 유통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ICT 서비스업의 경우 ISIC의 정보통신부문의 하위 산업들 중 소프트웨어,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관련 서비스, 데이터 처리, 호스팅, 컴퓨터 및 통신기기 수리업 혹은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2008년 OECD는 정보통신 상품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통신 산업 정의를 차용하며, 정보통신 상품의 정의를 “정보통신 상품은 주로 전송과 영상을 포함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 처리기능 및 통신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품 분류는 정보통신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 콘텐츠 및 미디어 상품을 포함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GDP 비중, 경제성장 기여도, 수출 비중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통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통계청과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통계작성기관에서 정보통신 분류체계를 만들고, 이에 따라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정보통신통계 작성 기관 및 분류명칭

분류명	작성기관	기반 분류	비고
정보통신기술 산업분류	통계청	KSIC	OECD
국민계정 내 정보통신분류	한국은행	국민계정	-
정보통신 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자체분류	KAIT
정보통신산업 수출입통계 품목분류	미래창조과학부	MTI기준	NIPA

주: MTI(수출입품목 분류체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정보통신통계와 관련하여 각 국가별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WTI(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연 2회(6월, 12월) 수집된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ITU에 연 3회 정보통신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계정보센터에서 ① 자체 생성통계, ② 미래창조과학부, ③ 사업자 및, ④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계를 총괄 취합하여 ITU에 제출하고 있다. 제공하는 통계는 13개의 항목, 65개의 통신·정보통신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7월에 ITU 통계 제출 페이지인 'ITU ICT EYE'에 입력한다. ITU에서 수집하고 있는 65개 정보통신통계 지표 가운데 한국은 50개 지표를 제출하고 있다. ITU 요구 통계는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선전화망(6개), 이동전화망(6개), 인터넷(4개), 유선 초고속인터넷 기술측면(5개), 유선 초고속인터넷 속도측면(5개), 무선

초고속인터넷(6개), 서비스의 품질(6개), 트래픽(13개), 인력(2개), 수익(4개), 투자(5개), 지역 사회 접속 지표(2개), 기타(3개), 이것들이 그 항목들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공시자료, 통신사업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생성한 자료와 함께 취합하여 제공한다. 한편, 지역사회 접속 지표와 같이 측정이 불가능한 자료와 통계수집이 되지 않는 품질자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TU는 정보통신통계에 근거한 ICT 발전지수를 통해 국가의 정보통신 발전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ICT 발전지수를 통해 ITU는 국가별 정보통신 발전 정도와 국가 간 정보 격차를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역량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매년 산출하고 있다. ICT 발전지수는 국가 간 ICT 현황 측정을 통하여 격차를 비교하고 개도국들의 경제발전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벤치마킹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ICT 발전지수는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이 3개 부문의 11개 지표로 구성되며, 인프라 보급 측면뿐만 아니라 통신현황, 인터넷 이용자 등 활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 발전 가능성의 척도를 측정한다. 평가결과 한국은 2010년부터 4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에는 세계 2위를 달성하였다.

02 발전과정

- 정보통신통계의 연대별 작성통계를 살펴보면 광복 이전은 체신통계와 통신통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광복 이후 6·25전쟁 등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 1960년대부터 시작한 통신사업 5개년 계획을 통해 통신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 말부터 정보통신통계의 기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70~1980년대의 대표적인 정보통신통계로는 우편물통계, 일반전화수요조사보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때 승인된 통계는 6종이 있었다. 정보통신통계의 정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볼 수 있다.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보통신 업무와 함께 통계 작성도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 승인된 정보통신통계는 9종에 이르며, 이 중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통계는 4종에 이르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에는 30종의 통계가 승인되어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통계의 시대별 승인현황을 고려할 경우 1980년대까지를 정보통신통계의 기반형성기, 1990년대를 정착기, 2000년대를 발전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반형성기에는 체신통계가 중심이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의 등장은 정보통신통계를 다양화하였으며, 새로운 통계분류를 생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정보통신 산업은 1970~1980년대 라디오, TV 등 단순 완제품 조립생산 중심에서 1990년대 이후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첨단 IT 제품, 2010년대 들어서는 스마트 기기 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융합 상품의 생산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의 생성으로 정보통신통계 지표 또한 새롭게 요구되었다. 결국 한국의 정보통신통계는 우편물통계를 시작으로 하여 1990년대 정보통신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 주요 품목 조사로 발전한 셈이다. 1990년대 말에는 정보화와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보보호 및 정보화 통계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에는 인터넷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터넷 이용 및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2010년대에는 미디어 및 전자정부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 전자정부 실태조사가 시작되었다.



- 전자정부 이용실태조사 안내 (2013)

정보통신통계는 초기에는 산업중심, 가구중심의 통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이용자중심의 통계로 확대되고 있다.

기반형성기(~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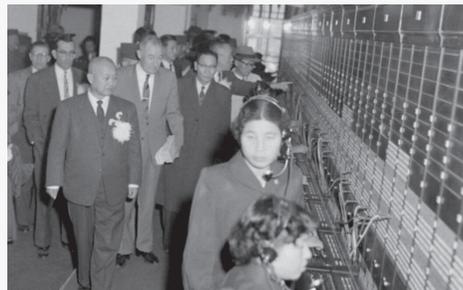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 정보통신통계는 체신통계와 통신통계로 구성된다. 특히 통신통계는 1901년부터 시작하여 주로 일제강점기 이후 나타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정보통신은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는 통신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30년과 1937년에는 통신 확장계획을 수립·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본 본토와 만주를 연결하는 통신망 확충을 위한 것과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항공기 및 선박과의 통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동전화가 서울에서보다 군사적 요충지인 함경북도 나진에서 먼저 개통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일제의 통신사업은 광복 직전까지 방위통신체제로 개편되어 한글 전보 사용 정지, 가입전화 공출, 전보특수취급 제한 등 각종 제한조치가 시행되어 1945년 광복까지 우리나라 통신사업은 참담한 암흑기를 맞이하였다.

광복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체신부가 우편, 전신, 전화, 간이보험 및 우편저금에 관한 사무 등의 통신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당시 체신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남한의 전신전화 취급국수는 527국이었고, 전화가입자는 3만 8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 외 시외전화가 312회선, 전신 148회선 등이었다. 1949년에는 체신부 기구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만국우편연합기구에 재가입했다. 6·25전쟁 이후 1955년 체신부는 전신전화사업에 치중하였으며, 그 결과 1960년 초까지 전신전화 시설이 크게 확대되었다.

1960년대는 통신사업 5개년계획과 함께 통신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1차 계획 결과 인구 100인당 가입전화 보급률이 1960년의 0.44에서 1966년에는 1.07로 늘어났으며, 시외전화는 100인당 이용률이 1960년의 29도에서 1966년에는 120.7도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제2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에서는 시설투자를 늘리고 통신기기 국산화 촉진과 장기공급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우리나라 통신사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는데, 전화가입자는 1967년 33만 9280명에서 1971년에는 56만 3120명으로 늘어났다.

제3차(1972~1976) 및 제4차(1977~1981) 통신산업 5개년계획을 통해 시내·시외전화 회선과 국제통신회선 및 전신회선 등의 증설과 첨단 통신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 대전전화국 개통식(1957)

정보통신통계(~1980년대)

통계 또는 간행물명	수록내용	수록기간	주기
체신통계연보	우편, 환금전금보험, 국내전신전화시설, 국내전신, 국내전화, 국제전신전화, 통신사업, 보험사업, 전파관리, 전기통신연구, 체신공무원교육 등	1977~1992	년
우편물통계	국내접수 우편물 및 국제 접수우편물, 우편물의 취급물수 및 요금, 배달 및 중계 우편물 등	1976~계속	월
체산업무통계	우정, 전무, 재무, 통신요금변천, 국제통계비교 등	1980	1회성

정착기(1990년대)

●● 체신부는 1948년 설치되어 1994년까지 운영되었으며, 1994년 과학기술처, 공보처 및 상공자원부의 분산된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주요 업무는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정보보호, 통신사업자 허가 육성, 전파방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 우편·우체국 금융 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이었다. 1990년대에 작성되기 시작한 주요 정보통신통계로는 ICT 실태조사, ICT 주요품목 동향조사, 개인인터넷이용자 정보보호실태조사, 정보통신기술산업(ICT) 통계, 정보화통계조사 등이 있다.

정보통신통계 현황(1990년대)

통계명	조사내용	시작연도	조사주기
ICT 실태조사	상시종사자,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자본금, 부가가치, 대표산업체수 등	1996	년
ICT 주요품목동향조사	정보통신서비스 : 매출액, 가입자수 등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 생산액, 내수액, 수출액, 수입액 등 정보통신기기 : 생산액, 내수액, 수출액, 수입액 등	1998	월
개인인터넷이용자 정보보호실태조사	정보보호 인식, 침해사고 예방,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 등	1998	년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제조업 주요지표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중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9	년
정보화통계조사	정보화기반 및 이용, 정보이용, 정보화투자, 정보보호 및 보안 등 56개 항목	1999	년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발전기(2000년 이후)

●● 정보통신부는 정책적으로 정보통신통계 수요에 대하여 ‘정보통신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제정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작성하는 정보통신산업의 연보 및 월보와 기타 유관기관이 통계를 작성하는 데 이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정보통신 산업의

영역이 새롭게 재편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통신 통계 분류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 서비스 중심의 방송통신산업 통계를 재구성하였고, 지식경제부에서는 기기 중심의 정보통신산업 통계를 재구성하였다. 하지만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 부문의 재통합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통계분류 또한 재편될 필요가 생겼다.

업무부처 변경에 따른 부처별 정보통신통계의 조정이 필요하였으나,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정보통신통계의 분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IPTV, 인터넷 전화 등의 신규 서비스들이 발생됨에 따라 통계분류의 조정이 요구되었다. 향후 유무선 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 다양한 부가 서비스의 출현 역시 정보통신 통계 분류체계의 적절한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2000년대에 작성되기 시작한 주요 정보통신 통계로는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 활용조사,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조사, 모바일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스팸 수신량조사, 인터넷기반통계, ICT 수출입 통계 ICT 인력동향실태조사, ICT 기업경기조사 등이 있다.

정보통신통계현황(2000년 이후)

통계명	조사내용	시작연도	조사주기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 활용조사	기반, IT 애플리케이션 보유 수준, IT 인프라 보유수준 관리, IT 조직 현황 및 아웃소싱 수준, 정보보안 활동/도입 수준 및 IT 투자 현황 수준 수용, 경영진, IT 전문인력, 일반직원 대상의 IT 교육 수준 프로세스, 기업협업 관계별 전자적 정보교환 수준 환경, IT 활용 투자 저해 요인별 저해 수준 등	2001	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정보통신 기기 보유현황, 인터넷 접속여부, 인터넷 접속방법, 인터넷 공유 환경, 인터넷 비접속 이유, 가입·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컴퓨터 및 이동전화 이용, 인터넷 이용, 이메일 이용,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SNS 이용,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쇼핑, 인터넷금융,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여부, 인터넷 비이용자 등	2003	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사항,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서비스 유형별 사용, 인터넷중독 인지도, 상담 및 치료 경험, 스마트폰 이용, 모바일 메신저 이용, 양극·가족·기업의 사회적 기여 등	2004	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가구 내 PC 본인이용 가능 여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여부, 기기별 보유여부, PC 이용능력, 모바일 스마트 기기 이용능력, PC 및 모바일 기반 콘텐츠 제작 능력 등	2004	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조사	기업일반현황, 정보화 추진의지 및 계획 수립, 정보화 추진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현황, 정보화 효과	2004	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스마트폰 이용 현황, 모바일 인터넷 이용 현황,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 등	2006	년
스팸 수신량조사	휴대전화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스팸 광고 수신 실태, 휴대전화 음성 통화 및 스팸 광고 수신 실태, 휴대전화 스팸 차단 방법 인지 여부 이메일 : 이메일 수신 실태, 광고 이메일 수신 실태, 이메일 스팸 수신 실태 등	2006	반기
인터넷기반통계	국가도메인(.kr) 등록현황, 한국도메인, IP 주소(IPV4 및 IPV6) 보유현황 등	2006	월
ICT 인력동향 실태조사	ICT 부문 인력 현황 수요측면 : 일반항목, 고용현황, 직종별 인력현황, 직무별 인력현황 공급측면 : ICT 관련학과에 대한 교육정도별 입학/졸업현황	2002	년
ICT 기업경기조사	ICT 부문 업황, 수준판단(제품재고, 생산설비, 고용수준, 설비투자실행, 자금사정), 기업경영판단(생산증가율, 내수판매, 수출, 가동률, 채산성)	2003	월
ICT 수출입통계	국가별/IT 산업별/월별 수입 현황, IT 산업별/월별 수출/수입 현황 등	2007	월
경상북도주력IT 분야 역량조사	기업일반사항(14), 사업분야(4), 기술개발 및 사업환경(11), IT 산업기반 및 역량평가(6), 사업애로 및 정책수요(7) 등	2007	격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미디어 보유현황, 통신/방송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가구 내 TV 시청/가정 내 TV 시청, 인터넷 및 개인이용 지출 현황/게임 이용 제한, 휴대폰 이용현황,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현황, 미디어 이용행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등	2010	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행정 서비스 이용(6), 전자 서비스 이용(11), 모바일 전자 서비스 이용(5),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전망(8) 등	2012	년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목록, 2014

03

주요 정보통신통계의
발전과정

ICT 실태조사

ICT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ICT 산업의 사업별·지역별 사업규모와 시장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IT 통계의 출발이자 근간을 이루며 진행되어 왔다. 1991년에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통계로 시작해 1992년에는 소프트웨어 통계, 1993년에는 정보기기산업과 LAN 산업 등의 정보통신기기 통계, 1995년에는 SI 산업 등의 정보통신지원 통계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매년 전수조사를 하며 사업체 일반사항(매출액, 종사자수, 자본금, 유·무형자산 등 20개 항목)과 부문별 사업현황(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등 10개 항목)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은 'ICT 통계 분류체계'에 규정된 품목대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정보통신방송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이며, 전화, FAX, e-mail, 우편조사 등을 병행한다.

ICT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명	ICT 실태조사	지정통계 제92001호
조사목적	ICT 분야의 거시적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 제공, ICT 지표발굴 및 산업 육성, 기업의 경영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정보통신방송서비스·정보통신방송기기·SW 및 디지털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약 3만여 업체	-
범위/주기	전수조사/연 1회	-
조사방법	전화, FAX, e-mail, 우편조사 등을 병행	-
조사항목	사업체 일반사항(매출액, 종사자수, 자본금, 유·무형자산 등 16개 항목)과 부문별 사업현황(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등 8개 항목) 등	-
조사기준 분류체계	ICT 통계 분류체계	-

ICT 실태조사는 1996년에 국가통계로 승인받았으며, 2007년에는 지정통계로 승인되었다. 2005년에는 통계청과 ICT 산업 통계작성 및 발전을 위한 통계업무 MOU를 체결하였다. 정보통신방송기기에 대한 통계 작성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활용,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조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조사하여 ICT 실태조사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정보통신산업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정보통신단체표준(TTAS)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승인하였다. 2010년에는 OECD, ITU 등 국제기구 요구 통계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ICT 산업의 발전 및 신규서비스 출현에 따라 IPTV 등 신규융합서비스를 분류체계에 반영하였다. 2013년에는 ICT 통계범위 조정에 따라 통계를 재분류 하였으며, 특히 이동전화서비스(4G),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방송용스피커, 방송용앰프 등은 신설되고 pre-IPTV, FMC, 통신용전선 및 케이블 등의 품목은 제외되었다.

ICT 산업 통계 분류

연도		조사대상
1996	정보통신 서비스	기간통신서비스(유선통신, 무선통신),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 단순전송, 부가통신망, 데이터 베이스, 온라인 정보처리, 음성정보 제공), 방송서비스(라디오, TV, 종합유선, 중계유선)
	정보통신 기기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통신기기, 방송기기, 부품),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정보처리), 전기통신공사업, 시스템통합(S)사업, 근거리통신망(LAN)사업
	소프트웨어	시스템SW, 개발용SW, 응용SW
	정보통신 지원	컴퓨터 관련서비스, 설비공사, 기기유통
2013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유선통신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회선설비임대 재 판매 및 통신서비스 모집, 중개 서비스), 방송서비스(지상파방송서비스, 유료방송서비스, 프로그램 제작·공급, 기타 방송서비스), 방송통신융합서비스(IPTV 서비스, 유무선 콘텐츠서비스)
	정보통신 방송기기	통신기기, 방송기기, 정보기기, 부품, 정보통신 응용기반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패키지SW, IT 서비스, 임베디드SW(특수분류),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ICT 주요품목동향조사

•• ‘ICT 주요품목동향조사’는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정보통신방송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의 주요품목 400여 개에 대하여 사업체의 월간 생산액, 내수액, 수출액, 수입액과 서비스사업의 경우 매출액, 가입자수 등을 조사하여 ICT 품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조사되었다. 월간주기의 간행물로 배포되며 조사항목은 매출액, 생산액, 내수액, 수출입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CT 주요품목동향조사'는 ICT 통계가 연말에 확정·공표되기 이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매월 ICT 주요분야 통계를 잠정적으로 집계하여 정책 수립, 국회쟁점 등에 시의성 있게 제공된다. 또한 통계분류는 ICT 실태조사의 통계분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ICT 주요품목동향조사'는 2014년 기준 매월 2만 3055개의 모집단 중 1만 9208개를 조사모집단으로 하여 5333개의 표본을 통하여 조사·집계되었으며 매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된다.



● ICT 주요품목동향조사 (2014. 12)

ICT 주요품목동향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명	ICT 주요품목동향조사	승인통계 제92002호
조사목적	ICT 산업의 신속한 동향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조사대상	ICT 분야 약 5300여 개 업체(표본조사)	-
조사기준 분류체계	ICT 통계 분류체계	-
조사주기	월 1회	-
조사방법	전화 및 팩스, 메일조사 병행	-
조사항목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매출액, 가입자수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 생산액, 내수액, 수출액, 수입액 정보통신방송기기 : 생산액, 내수액, 수출액, 수입액	-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 '인터넷 이용실태조사'는 2003년부터 매년 국내 가구의 인터넷 이용환경, 국민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이용 행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국제기구 ICT 관련 국제지수 산출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전국 3만 가구 및 가구 내 상주하는 만 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항목은 최신 인터넷 이슈에 해당되는 인터넷 이용자 비율,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접속률, 이메일 이용자 비율, 인스턴트 메신저,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SNS, 인터넷 주식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조사하여 작성한다.

정보화통계조사

- ‘정보화통계조사’는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업체의 정보화 수준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국제기구 등에 우리나라 공식통계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종사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제주, 세종 포함) 지역에서 대인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약 1만 4000여 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기반 및 이용, 정보이용, 정보화투자, 정보보호 및 보안 등 56개 항목을 설문조사하였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조사하여 작성한다.

개인 인터넷 이용자 정보보호실태조사

- ‘개인 인터넷 이용자 정보보호실태조사’는 1998년부터 매년 조사되었으며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 인식 및 정보화 역기능 대응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용자 정보보호 인식 향상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한다. 전국의 국내 만 12세에서 59세 인터넷 이용자(5000명)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현황, 인터넷 역기능 대응 실태 및 피해 현황, 신규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역기능 대응 현황,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침해 현황 및 대응, 정책성과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하여 작성한다.

우편물통계

- ‘우편물통계’는 ‘우편센서스’, ‘우편총조사’ 등의 통계가 기반이 되어 오늘날의 ‘우편물통계’로 발전되었다. ‘우편물통계’는 1976년부터 월 단위로 조사되었는데, 우편물의 종류별 접수·배달·중계 등의 물량 및 요금을 조사하여 우정사업 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국의 우체국을 대상으로 접수된 우편물을 조사했다. 조사항목은 국내 및 국제 접수우편물, 우편물의 취급물수 및 요금, 배달 및 중계 우편물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작성하고 있다. 우편물통계의 한 부문이 될 수 있는 ‘우편센서스’의 경우 1982년 체신부에서 1회성으로 실시하였는데, 전 국민(개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전수조사였다.

조사대상은 통상우편물(우편물종류, 발송인 등 7개 항목), 소포우편물(요금지불방식, 발송지 등 6개 항목), 여론조사(우체국 이미지, 편지이용 이유 등 8개 항목), 우편물이동(접수물량, 배달물량, 우편물 이동량), 이용수준(구격봉투 사용여부, 우표첨부 상태 등 4개 항목)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편총조사’의 경우 한국은행이 1988년부터 3년 단위로 조사하였으며, 전국의 우편물량 및 이용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우편사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내부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정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일반정부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은행부문과 기타부문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다.

조사항목은 우편행태 및 이용자여론조사(우편물 중량, 발송인 및 수취인 유형, 통상우편물의 종류, 요금납부방법 등), 소포우편물중량 조사(국내·국제소포 우편물의 중별 및 중량별 등), 접수우편물 이동실태조사(자국 배달 우편물수, 관내 이동 우편물수 등)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 12월 내부 전산 시스템에 의한 자료생산 및 민간기관 조사통계 활용으로 인해 통계조사가 중지되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체통신의 확산, 기업의 우편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우정사업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업환경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역량 강화를 통한 통상우편의 확대, 소포사업 운영 내실화 등으로 우편사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특급우편(EMS)은 국가 간 신속한 배송이 요구되는 서류, 상품건본 등을 최우선적으로 송달하는 국제특송 서비스로서 1979년 도입된 이래 서비스 대상 국가와 취급 우체국을 확대해가고 있다.

04

맺음말

••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암흑기를 극복하고 짧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국가가 발전하는 가운데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 또한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산업을 기반으로 지혜롭게 이를 극복하였다. 정보통신은 우리나라를 초일류 정보사회로 이끌었으며 국가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즉 정보통신통계였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통계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ITU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정보통신통계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으며 정보통신통계 관련 통계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 기반 통계, 산업통계, 신규 통계 등 정보통신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초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보통신 분야는 ICT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활양식, 일하는 방식 및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PC 등과 같은 스마트 미디어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유무선의 복합적인 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될 것이다. 현재까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 통계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ICT 기술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과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보통신 산업의 범위 및 시장에 대한 정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CT 환경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연관 기술과 함께 새로운 신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정책 추진을 위한 양질의 정보 생성 및 지식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는 산업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책의 수립, 진행, 평가의 근거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시의적절한 통계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최적의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ICT 산업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방향성 제시 및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의 통계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ITU나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 모바일

커머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지표가 요구되고 있다. ITU 통신·ICT 지표전문가그룹회의(Expert Group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EGTI)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통계지표의 신설·삭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WTI는 연중 2회(6월, 12월) 정보통신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OECD 디지털 경제 측정 및 분석 작업반(WPMADE)에서는 ICT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에 대한 측정 방법, 통계지표,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통계지표 및 지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새로운 통계로 정보통신 발전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접근정도, 이용여부, 기술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통신통계도 필요하다. 국가별 평균 인터넷 접속속도, 1인당 콘텐츠 매출액 규모, 총 TV 가구 중 디지털 TV 가구 비중, 스마트폰 가입자수(3G/4G) 등과 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통계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GDP에서 차지하는 정보통신 기술 지출 비중(%), GDP 대비 통신산업 비중, 인터넷 보안서버 수(100만 명당),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의 비중(%) 등과 같은 통계지표 및 지수 개발이 그러한 통계들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를 가진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이를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정보통신통계의 발굴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정보통신통계가 미래 정보통신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 김승건 외, “정보통신방송 국제통계 및 국제평가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3-진흥-010, 미래창조과학부, 2013.
- 문성배·정현준, “방송통신 분야 통계 분류체계 연구”, 『정책연구』 09-7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한국우정백서 2012』, 2013.
- 양상준, “방송통신분야 통계 분류체계 연구를 위한 조사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09-진흥-바-2, 방송통신위원회, 2009.
- 윤승은, 『정보통신용어사전』, 일진사, 2008.
- 정현준, 『OECD ICT 통계 분류체계 현황 및 국내 ICT 통계체계 개편에 대한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20권 21호 통권 45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 노영희·홍현진, 『정보통신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한국학술정보, 200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정보통신산업동향』, 2012.
- 진한엠앤비, 『기록으로 본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 1(1885~1980)』, 2012.
- 진한엠앤비, 『기록으로 본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 2(1980~2000, IT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2012.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 통신개발연구원, 『정보통신 통계집 작성에 관한 연구』, 1989.
- 통신개발연구원, 『정보·통신부문 통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1990.
-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2010.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3 ICT 실태조사』, 2013.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ICT 주요품목동향조사』, 2014.
- 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0 : 2013,
- UN, “E-Government Survey,” 2010 : 2014.

경제통계

제6장

도소매·서비스

1. 개요

2. 발전과정

3. 주요 도소매·서비스업통계의 발전과정

4. 맺음말

01

개요

의의

•• 서비스업이란 서비스, 즉 물질적인 재화가 아닌 비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공공행정, 개인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업은 그 소비 형태에 따라 물질 재화의 생산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적, 보조적 생산(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등)과 직접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생산(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



1 클라크(Clark, C.)는 전체산업을 3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서비스업을 제3차 산업이라고 하였다. 제1차 산업에는 농업, 목축업, 수산업, 임업, 수렵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차 산업에는 광업·제조업, 건설업, 가스·전기공급업 등이 포함된다. 제3차 산업에는 금융업, 보험업, 운수업, 통신업, 관공업, 공무, 기사노동 등과 기타 비물질적 생산을 담당하는 모든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을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라고 하고,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도매 및 소매업 등 15개 대분류(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대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포함한 서비스분야의 비중은 1970년 44.3% 1980년 48.7%, 1990년 51.9%, 2000년 57.5%, 2010년 59.3%, 2014년 59.4%로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까지 서비스산업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1960년대부터 제조업 수출을 통한 경제개발로 인해 제조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화학공업 진흥 위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와 1996년 12월 OECD 가입을 통한 서비스산업 개방,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서비스 개방 등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경제 서비스화라는 세계적인 현상, 제조업 수출에 의존한 성장전략의 한계 등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통계 작성이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져 주로 인구 관련 통계와 광업·제조업 중심의 생산 관련 통계를 작성하였고, 도소매업 중심의 소비, 판매 등에 관한 통계는 일부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와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서비스산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의 전반적인 통계작성이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범위와 종류

●● 도소매통계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매 및 소매업’이 주로 해당되나 기존 통계의 조정과정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통계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도소매분야의 국가승인통계로 승인·작성된 통계는 총 32종(누적기준)이다. 이를 작성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10종, 지방자치단체가 3종으로 정부기관이 13종을, 지정기관이 7종을 작성하였다. 그 밖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비지정기관 및 공기업에서 12종을 작성하였다. 통계종류별로 보면, 지정통계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한 중앙행정기관에서 5종을 생산했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타기관에서 27종을 일반통계로 작성하였다. 또한 작성형태별로 보면 대부분 일정한 조사체계를 거쳐 우편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 조사원을 통해 직접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조사통계가 28종으로 작성통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로부터 직접 받아 작성하는 보고통계가 4종이었다.

도소매통계 현황

(단위 : 개, 종)

작성기관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기공통계
- 정부기관	6	13(5)	5(3)	8(2)	12(4)	1(1)	0
중앙행정기관	5	10(4)	5(3)	5(1)	9(3)	1(1)	0
통계청	1	4(2)	4(2)	0	4(2)	0	0
이외 기관	4	6(2)	1(1)	5(1)	5(1)	1(1)	0
지방자치단체	1	3(1)	0	3(1)	3(1)	0	0
- 지정기관	1	7(1)	0	7(1)	7(1)	0	0
- 기타	3	12(2)	0	12(2)	9(1)	3(1)	0
계	10	32(8)	5(3)	27(5)	28(6)	4(2)	0

주: ()안은 중지통계 숫자임
출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작성기관의 일시적인 목적에 따라 '1회만 작성'한 통계는 주로 도소매 관련 유관기관에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점가 점포경영 및 경쟁력조사', '상점가(지하도) 실태조사' 등 6종,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등 4종,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 소비성향조사' 등 3종, 중소기업청에서 '소매업실태조사' 등 17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작성하였던 15종 중에 '작성 중지'된 통계는 통계청의 '전자상거래동향조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유통업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보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소매업경영동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점가실태조사' 등 7종이다. 다만 통계청의 '도소매업동태조사'는 '서비스업동향조사'에 흡수되어 조사되고 있다.

한편, 2014년 말 현재 계속하여 작성 중인 도소매통계는 지정통계 2종, 일반통계 5종이다. 통계청에서 작성 중인 '도소매업조사', '온라인쇼핑동향조사'는 지정통계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조사',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화장품제조 유통실태조사', '의약품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전북 전주시의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동향조사', KT&G의 '지역별 담배판매현황'은 일반통계이다. 이 중 '지역별 담배판매현황'은 보고통계로 작성된다. 작성주기별로 보면 1년 주기의 구조통계가 4종이고, 월 또는 반기로 작성하는 동향통계는 3종이다.

도소매통계 현황

통계명	작성시작년도	작성기관	작성방법	작성주기	전수/표본
도소매업조사	1988	통계청	조사통계	1년	표본
온라인쇼핑 동향조사	2000	통계청	조사통계	월	표본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조사	2006	산업통상자원부	조사통계	월	표본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유통 실태조사	2010	보건복지부	조사통계	1년	표본
의약품소비량 및 판매액통계	2008	보건복지부	조사통계	1년	표본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동향조사	2009	전북 전주시	조사통계	반기	전수
지역별담배판매상황	1976	KT&G	보고통계	1년	해당없음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일반적인 서비스통계 범위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국제 및 외국기관’(단, ‘건설업’은 제외)까지에 해당하며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에 따라 일부 업종을 제외 또는 포함한다.²

2014년 말까지 서비스분야의 국가승인통계로 승인·작성된 통계는 총 56종(누적기준)이다. 이를 작성기관별로 보면,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10종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25종, 17개 시도 및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22종을 각각 작성하였다. 그 밖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지정기관에서 3종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비지정기관 및 공기업에서는 6종을 작성하였다. 또한 통계종류별로 보면,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경제총조사’ 등 7종, 17개 시도의 ‘사업체조사’ 등 17종을 포함해 24종이 지정통계이며 일반통계는 32종이다.

서비스통계 현황

(단위 : 개, 종)

작성기관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 정부기관	25	47(11)	24(2)	23(9)	44(8)	3(3)	0
중앙행정기관	5	25(9)	7(2)	18(7)	22(6)	3(3)	0
통계청	1	10(5)	7(2)	3(3)	10(5)	0(0)	0
이외 기관	4	15(4)	0(0)	15(4)	12(1)	3(3)	0
지방자치단체	20	22(2)	17(0)	5(2)	22(2)	0	0
- 지정기관	1	3(1)	0	3(1)	3(1)	0	0
- 기타	3	6(0)	0	6(0)	6(0)	0	0
계	29	56(12)	24(2)	32(10)	53(9)	3(3)	0

주 : ()안은 중지통계 숫자임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2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0 기준년 개편 및 1993년 SNA 이행 결과』, 2004에 의하면 서비스업의 범위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을 포괄하면서 중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비영리서비스 생산자를 해당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작성형태별로 보면 우편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직접 조사원을 통해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조사통계가 53종으로 작성통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로부터 직접 받아 작성하는 보고통계는 3종이다.

작성기관의 일시적인 목적에 따라 '1회만 작성'한 통계는 주로 서비스업 관련 통계로 대한상공회의소의 '2001년 국내택배업체 실태조사', '수출마케팅 실태조사'(1984),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마케팅 활동 및 애로요인조사' 등 유관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와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부품소재산업 종합실태조사', 중소기업청의 '중소전략적 비즈니스 서비스업 실태조사' 등 12종이 있다.

주요 서비스통계 현황

통계명	시작년도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방법	작성주기	전수/표본
경제총조사	2011	통계청	지정통계	조사통계	5년	전수
서비스업동향조사	1999	통계청	지정통계	조사통계	월	표본
서비스업조사	1988	통계청	지정통계	조사통계	1년	표본
전국사업체조사	1994	통계청	지정통계	조사통계	1년	전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2008	통계청	지정통계	조사통계	1년	표본
나노융합산업조사	2012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1년	전수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1997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2년	표본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04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1년	표본
광고산업 통계조사	2005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1년	표본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008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1년	표본
호텔업운영현황	1977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통계	보고통계	월	-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1999	중소기업청	일반통계	조사통계	1년	표본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2007	중소기업청	일반통계	조사통계	3년	표본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작성 중지'된 통계는 통계청의 '총사업체통계조사', '민간비영리단체 실태조사', '벤처기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문화산업통계조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자현황',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실적현황',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현황', 중소기업청의 '중소서비스업 지식기반화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 창업실태조사' 등 12종이다. 이 중 '총사업체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는 각각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총조사'에 흡수되어 조사되고 있다.

2014년 5월 현재 작성되고 있는 서비스업통계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5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나노융합산업조사', '산업디자인통계 조사',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3종, 문화체육관광부의 '광고산업통계조사', '스포츠산업실태조사' 등 3종,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정밀실태

조사' 등 2종, 17개 시도에서 작성 중인 '사업체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중인 2종을 포함한 19종 등 총 32종이다.

02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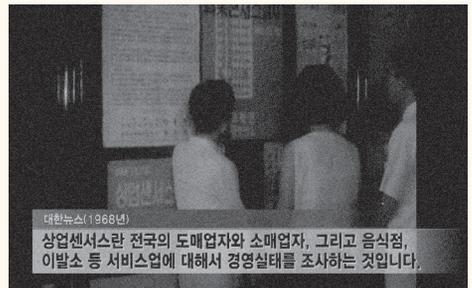
- 인구나 제조업 등 타 분야 통계와는 달리 1960년 이전까지 현재와 같은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로 작성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통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과거 1년간에 국민생활에 소비된 물자의 양과 금액 및 그 지역적 분포와 배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물품유통사업체조사로서의 임시국세조사'를 실시하였다.

물품유통 사업체 조사로서의 임시국세조사 개요

구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물품판매업체, 물품매매의 중개업체, 법인 조합형태의 물품판매 또는 중개업체, 여관, 요리점, 음식점 등
조사사항	사업체명, 본·지점별, 개업년월, 기업조직,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영업 또는 사업의 종류, 경영형태, 종사자수(남녀별, 연령별, 교육정도), 조사기일 전 1년간 매출액(도매, 소매별), 지정물품의 1년간 매출수량 및 금액(도소매별), 특정물품의 현보유량 등
조사방법	응답의무자는 사업자(대표자)로 자계식으로 조사. 다만, 조사표의 배부와 회수는 국세조사원(명예직)이 조사구를 담당하였으며 조사구는 20개 사업체를 묶어 1개 조사구가 되도록 분할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II)』, 1992

1963년에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통계전담 조사원을 채용하여 전국에 배치하는 통계조사 조직망을 구축하여 통계작성 인프라가 갖추어졌다. 이러한 통계환경 개선에 힘입어 1968년에 '상업센서스'를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었다. 1970년대까지는 도소매분야 통계는 '상업센서스' 실시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 전통적인 유통 서비스업에 대한 구조 및 분포와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도소매업동태조사'를 통해서 단기간의 경기 동향 통계를 작성하였다. 그후 1980년대 들어와 서비스 분야의 성장세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통계가 개발되면서 양 통계 분야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에 연간 구조 통계로 '도소매업통계조사'가 실시되었고, 한편으로 '서비스업통계조사'



● 상업센서스 실시 안내 포스터(K-TV 제공)

통계가 개발 실시되었다. 1999년부터는 서비스 분야의 동향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서비스업동태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에 이를 이용한 '서비스업활동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새로운 영업형태인 전자상거래의 확산도를 파악하였고, 새로운 판매형태인 통신판매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쇼핑물 통계조사', '전자상거래통계조사' 등을 연이어 개발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통계의 질적인 개선도 크게 이루어졌다. 시대의 필요성에 대응하고 응답자 부담 경감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사 중복되는 통계들을 과감히 통합하였다. 2008년 3월에 '도소매업동태조사'가 '서비스업동태조사'에 통합되고, 2008년 11월에 '서비스업동태조사'가 '서비스업동향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소매 판매액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로 흡수·통합되었다. '서비스업총조사'는 2006년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다가 2010년에 '경제총조사'에 통합되었다.

연대별 주요 도소매·서비스 통계 개발 현황

시대구분	최초년도	초기 통계명	주기	작성기관	작성여부
1960~	1968	상업서비스(서비스업총조사)	5년	통계청	조사중지(2010)
1970년대	1965	도소매업 동태조사	월	통계청	조사중지(2008)
1980년대	1981	중사업체통계조사	5년	통계청	조사중지(1995)
		소매업경영 동태조사	1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중지(2005)
	1988	도소매업통계조사	1년	통계청	계속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1년	통계청	계속조사
1990년대	1994	전국사업체조사	1년	통계청	계속조사
	1999	서비스업 동태조사	월	통계청	계속조사
2000년대 이후	2000	사이버쇼핑물 통계조사	월	통계청	계속조사
	2001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분기	통계청	조사중지(2014)
		문화산업 통계조사	1년	통계청	조사중지(2003)
	2003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3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중지(2013)
	2010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유통실태조사	1년	보건복지부	계속조사
		2011	경제총조사	5년	통계청

주: 통계명칭은 개발당시의 명칭임
출처 : 통계청, KOSIS, 2014

시대별 발전

●● 도소매 및 서비스분야의 통계는 1960년대부터 2014년까지 88종이 승인되었다. 이를 연대별로 보면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9종이, 1980년대는 11종이 승인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들어서 서비스 분야에서 통계가 집중 개발되어 27종이 승인되어 전체 통계 승인건수의 31%를 차지하였다. 이때 개발된 통계들은 대부분 현재까지

계속 작성되고 있다. 2000년대에는 정책적 수요에 따라 1회 한 통계(14종)를 포함하여 36종이 승인되어 전체의 41%를 차지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승인건수가 5종에 불과하였다.

시대별 도소매·서비스 통계 현황

(단위: 종)

구분	합계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도소매	계속	7	1	1	0	4
	1회한	17	1	5	3	7
	중지	8	3	1	0	4
	소계	32	5	7	3	15
서비스	계속	32	1	1	21	6
	1회한	12	2	2	1	7
	중지	12	1	1	2	8
	소계	56	4	4	24	21
합계	88	9	11	27	36	5

출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목록, 2014

태동기(1960~1970년대)

1960~197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제조업에 비해 다소 낮은 감은 있지만 이 시기는 도소매·서비스 분야 통계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1967~1971년의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도소매업이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갔다. 이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는 1968년 7월1일 기준 '상업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국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사업체의 사업체분포 및 고용구조와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심층적이고 세분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듬해 통계조사 명칭을 '도소매업센서스'로 변경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였다.

도소매·서비스통계 주요발전내용(1960~1970년대)

연도	통계명	주요발전내용
1965	서울 소매업판매액지수	최초작성, 한국은행
1968	상업센서스	최초 실시, 전수조사
1969	도소매업센서스	'상업센서스'를 개칭하여 실시
1970	도소매업판매액지수	'서울 소매업판매액지수'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 및 도매업 추가
1976	지역별 담배 판매상황	전매청, 보고통계
1977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보고	농수산부, 보고통계

자료: 통계청, KOSIS, 2014

또한 1965년 1월부터 한국은행에서는 소매업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인 '서울소매업조사'와 함께 '서울 소매업 판매액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통계는 이후

통계청으로 이관되고 1970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도소매업 판매액지수'를 작성하였다. 1976년 전매청에서는 행정구역별 담배판매수량을 파악하고자 매년 보고통계로 '지역별 담배 판매상황 통계'를 작성하였다. 1977년에 농수산부에서는 도매시장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시설 및 운영현황, 거래현황, 유통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통계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보고 통계'를 반기별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성장기(1980년대)

1980년대는 도소매, 서비스분야의 연간 구조통계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 공산품 및 개인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의 물가안정 종합 대책³의 영향으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소매 및 서비스분야 통계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도소매·서비스분야 업종의 매출, 영업 등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연간 표본조사인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도 '소매업경영 동태조사' 등 관련 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도소매업통계조사'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8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통계이다. 또한 '서비스업통계조사'는 1988년부터 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통계로서 개발 초기에는 작성대상을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한정하였으나 이후 1990년대에는 교육서비스업이 추가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업 전체를 포괄하였다. '소매업경영동태조사'는 '백화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편의점 및 방문판매'의 경영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1년 주기의 조사통계를 시작하였다. 그 밖에 통계수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실시한 주요 통계로는 상공회의소의 '수출마케팅 실태조사', '소비자 소비성향조사', '소비자 외 제상품 구매행동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어린이소비 실태조사'가 있다. 1981년에는 도소매·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총조사 성격인 '총사업체통계조사'가 실시되었다.

3 주요 정책은 1987년 5월15일에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총수요관리와 가격 및 농축산물 등 수급관리 차원의 '종합 물가관리 대책', 1988년 3월10일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및 공산품 수급 및 개인서비스 등의 물가안정 종합 대책 등이다.

도소매·서비스통계 주요 발전내용(1980년대)

연도	통계명	주요발전내용
1981	총사업체통계조사	전 업종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 5년 주기 전수조사(1995 작성중지)
	소매업경영동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에서 주요 소매업태를 대상으로 매년 표본조사, 최초 실시
1988	도소매업통계조사	1년 주기 표본조사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대상, 최초 작성
	서비스업통계조사	1년 주기 표본조사로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

자료 : 통계청, KOSIS, 2014

확산기(1990년대)

●● 1990년대 들어와 지방자치 부활⁴에 맞추어 지역 경제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통계개발이 활발하였다. 아울러 서비스업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기동향 통계 및 특정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에 대해 시험조사가 이루어졌다. 지방자치 부활에 편승하여 1994년에 지역별 사업체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로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15개 시도별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이후 울산광역시는 1997년 승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3년 승인되어 2015년에는 17개 시도별로 작성되고 있다.

1999년에 통계청에서는 '서비스업활동지수'를 작성하고자 '서비스업동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특정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도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통상산업부에서 디자인산업 및 관련 환경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년 주기 표본조사로 '산업디자인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1999년에 벤처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1년 주기 표본조사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제반 창업실태 및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 주기 표본조사로 '중소벤처기업 창업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밖에 정부나 특정 단체에서 일시적으로 통계수요에 따라 '회한'으로 실시한 통계는 1997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구입동기, 소비자불만 및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조사인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설문조사'와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불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조사인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설문조사' 등이 있었다. 한편 '총사업체통계조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 등 그동안 작성해온 통계 중 당시의 통계수요에 부합하도록 '조사중지'한 통계가 처음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4 1991년에 시군구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1961년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가 부활하게 되었다.

도소매·서비스통계 주요 발전내용(1990년대)

연도	통계명	주요 발전내용
1994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년 주기 전수조사(최초 실시), 2008 전국사업체조사로 개칭
1995	총사업체 통계조사	1981부터 작성한 통계로 조사중지
199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2년 주기 표본조사(최초 실시)
1999	서비스업 동태조사	매월 표본조사(최초 실시), 2008 서비스업동향조사로 개칭
	중소벤처기업 창업 실태조사	2년 주기 표본조사(최초 실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1년 주기 표본조사(최초 실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	1977부터 작성한 통계로 조사중지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고도화기(2000년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업의 규모 확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제정책에 부합⁵되는 통계 개발, 기존 통계의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도소매 또는 서비스 한 분야만 다루었던 통계가 좀더 범위가 확대되었고, 서비스분야 전체로의 본격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통계의 중복 내지는 유용성을 반영하여 작성중지, 축소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이 시기에 작성하기 시작한 새로운 통계를 보면 '서비스업동태조사'가 1999년 1월부터 1년간의 시험조사를 거쳐 2000년 1월부터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서비스정책과 관련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서비스업활동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동향을 분석하고, 이들 거래 형태의 확산도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 통계로 '사이버쇼핑물 통계조사', '전자상거래 통계조사'를 개발하였다.

이후 거의 매년 다양한 부문의 새로운 통계를 해당 정책 부서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03년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2005년 '광고산업통계조사', 2006년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조사', 중소기업청의 2007년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통계청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010년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유통실태조사' 등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 이후 해당 자치단체의 통계 수요에 따라 2006년에 '인천 서비스업동태조사', '전라북도 서비스업동향조사', '전주시 도소매업동태조사', 2007년에 '전라북도 서비스업동태조사', 2009년에 '군산시 서비스업동향조사' 등 주로 서비스업 관련 분기별 동향통계에 대한 개발이 각각 이루어졌다.

5 2000년대 주요 서비스산업 관련한 정책은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통계인프라 개선방향'(재정경제부, 2002. 01),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재정경제부, 2006. 12),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기획재정부, 2008. 04) 등이다.

도소매·서비스통계 개발현황(2000년 이후)

연도	통계명
2000	사이버쇼핑물 통계조사
2001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문화산업통계조사
2003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2004	e-러닝산업 실태조사
2005	중소서비스업 지식기반화 실태조사, 광고산업통계조사
2006	상점가실태조사, 주요유통매체 매출동향조사
2007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2008	의약품소비량 및 판매액통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010	의료기기화장품 제조유통실태조사

이 시기는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기존통계의 질적인 개선도 빈번히 이루어졌다. 2006년 4월에는 종전 '1, 6'자 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하던 '서비스업총조사'의 기준년도를 '0, 5'자 연도로 변경하여 타 업종의 총조사와 비교성을 높이고 연간구조통계, 월간 동향통계의 모집단으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그 밖에 통계의 명확한 의미전달, 통계유용성이 떨어지는 통계를 중심으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중지, 유사통계의 통합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전자상거래 통계조사가 개발 초기에는 참여 사업체도 적고, 거래액 규모의 확산도도 낮아 전수조사가 가능했으나 대상 사업체가 증가하여 2008년 5월에는 표본조사로 전환하였고, 2014년에 통계명칭도 조사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온라인쇼핑 동향조사'로 변경하였다.

유사통계의 통합을 통해 유용성을 높이고 통계의 질적 개선 효과를 나타낸 경우를 보면, 2008년에 '도소매업동향조사'가 '서비스업동향조사'로 통합하여 서비스업 전체를 포괄하는 통계조사로 확대 실시되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합하여 2011년에는 2010년 기준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총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통계는 서비스 분야의 주요 모집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소매·서비스통계 주요 발전내용(2000년 이후)

연도	통계명	주요 발전내용
2006	서비스업총조사	실시연도를 종전 '1, 6'자 연도에서 '0, 5'자 연도로 변경
	서비스업동향조사	도소매업동향조사와 통합
2008	전자상거래통계조사	표본조사로 전환 2014년 온라인쇼핑동향으로 명칭 변경
2011	경제총조사	산업총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와 통합

또한 이 시기에는 응답자 부담경감을 위하여 '벤처기업통계조사', '중소유통업실태조사'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통계가 중지되기도 하였다.

도소매·서비스 작성중지 통계(2000년 이후)

중지년도	통계명	주요 연혁
2002	벤처기업통계조사	2000부터 1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작성
2003	문화산업통계조사	2001부터 1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작성
2005	소매업경영 동태조사	1981부터 1년 주기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성
2008	도소매업동태조사	1965부터 월 주기로 통계청에서 작성, 서비스업동태조사로 통합
2010	서비스업총조사	1968부터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작성, 경제총조사로 통합
	중소서비스업 지식기반화 실태조사	2005부터 2년 주기로 중소기업청에서 작성
2013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2003부터 3년 주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
2014	전자상거래 동향조사	2001부터 분기 주기로 통계청에서 작성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한편, 통계청에서는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일관성과 연계성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1년주기 통계조사(전국사업체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를 통합하여 동일시기에 조사하는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03

주요 도소매·서비스업 통계의 발전과정

- 도소매·서비스 분야 통계는 현재 39종이 작성되고 있다. 이 중 전수조사이면서 타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되는 총조사를 비롯하여 정책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7종의 통계를 선정하였다.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의 2종과 이들 분야의 산업구조분석의 기초통계로 중요성을 갖는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의 3종, 그리고 월간 동향통계로 단기 경제정책에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 동향조사',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2종 등이 그것이다.

경제총조사

개요

-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5년 주기의 대규모 전수조사 통계다. '경제총조사'가 실시되기 전에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대상으로 '산업총조사'가 1956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1968년부터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부문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총조사'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총조사는 조사시점, 조사기준 등이 서로 다르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도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일 시점 및 기준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비교 및 구조 분석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신 산업 출현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산업구조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도 다양화 및 세분화되는 등 통계작성에 대한 수요가 변화했다. 이러한 기존 산업구조통계의 문제점 및 통계 작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의 구조와 상태 등을 동일시점에서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파악하는 '경제총조사'(2010 기준)를 2011년에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 왔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는 '경제총조사'로 흡수·통합되어 중지되었다.



- 2011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안내 포스터

이 통계는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관련 통계의 모집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체 생멸에 따른 조사 전후 변화에 대한 보완과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세청 등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등 통계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2011년 최초로 실시하여 아직은 통계자료 축적이 미진하고 타 통계와 상호 비교분석이 곤란하다는 점과 조사단위가 상점, 음식점, 의원, 학교 등과 같은 개별 사업체이고 상용종사자가 없거나 고정시설이 없는 사업체(노점상 등)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기업 단위 통계나 제외한 사업체가 포함된 통계는 별도 활용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대상은 종사자수 1인 이상인 전국의 모든 사업체 약 340만 개인데, 개인 농·림·어가, 군부대, 국제 및 외국기관,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은 제외하였다. 조사대상기간은 2010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사업체에 적용한 산업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랐다.

작성기관 및 자료수집 체계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통계청에서 집계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사업체는 통계청에서 직접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체명·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조직형태·사업체구분·창설년월·사업의 종류 및 종사자수 등 '사업내용에 관한사항', '자본금 및 유·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매출액·영업비용·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에 관한사항', 그 밖에 '사업체 실태 파악에 필요해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들 수 있다.

통계 작성 방법은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일부 업종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수집하는 등 전수조사하였다. 사업체별로 산업세세분류까지 적용하여 집계하였다.

통계 제공은 언론(보도자료)과 통계청 인터넷 및 간행물을 통해 이루어졌다. 간행물로 『경제총조사 보고서』, 보도자료로 '경제총조사 잠정결과', '경제총조사 확정결과'가 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이들 통계의 공표범위는 지역적으로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이며 공표주기는 5년이다.

이 통계는 정부의 경제 및 산업별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의 모집단자료, 국민소득, 지역별 소득, 산업연관표 등의 기초자료, 월간 및 연간통계의 기준점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 통계와의 관계를 보면 산업별 지역별 구조통계와 상호 간 검증, 비교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그동안 작성해온 각종 해당 업종의 총조사 결과물을 이용한 과거계열을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발전과정

•• 통계청에서는 동일한 조건과 기준 하에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조사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에 대해 5년 주기로 '3, 8'자 연도에 실시해 온 '산업총조사'와 '1, 6'자 연도에 실시해 온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1년 5월에 최초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 실시하는 제2차 경제총조사에서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실적, 유·무형자산, 종사자 등의 조사항목을 유지하고 경제총조사로 인해 일시 중지되는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등 연간경제통계조사항목을 최대한 반영한다. 또한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본사에서 지사(점)의 사업실적, 급여액 등을 조사하여 지사(점)에 대한 현장조사 부담을 줄이고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대체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자료 활용은 2011년에 약 20% 사업체의 현장조사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2016년에는 약 42.2% 사업체의 현장조사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경제총조사가 포괄하는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가 있으나 산업총조사는 광공업에너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서비스업총조사에 대한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통계는 1968년 '상업센서스'의 이름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이후 1969년에 '도소매업센서스', 1990년에 '도소매업총조사', 1997년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2006년에 '서비스업총조사'의 명칭을 거쳐 2011년에 현재의 통계명칭인 '경제총조사'로 변경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1968~1982년에는 독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산절감, 응답자부담 경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86~1991년에는 '총사업체조사'와, 1997~2006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유사통계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작성주기는 1968년~1982년에는 '3년 주기'로 실시하다가 1986~2002년에는 타 총조사의 주기와 일치시켜 매 '5년 주기'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통계조사기준은 1968~1991년은 해당년도 7월1일이었으나, 1997년부터는 전년 12월31일로 변경하였다. 통계조사 시기는 그동안 '1, 6'자 연도 기준으로 실시해오던 것을 2006년부터 관련 동향통계를 비롯한 타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0, 5'자 연도로 변경하였다.

산업상 포괄범위는 1968년에 실시한 최초의 '상업센서스'에서는 '도매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1971년에 실시한 '도소매업센서스'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삭제되는 등 ‘도소매업’으로 한정하여 작성하였다. 1986년에 ‘총사업체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함에 따라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부문 외에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대부분을 추가하였다. 1997년부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로 확대 변경하면서 당해 연도에 서비스업 중 ‘부동산 및 임대업’을, 2002년 4월에 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각각 추가하였다. 2011년에 ‘경제총조사’로 통합하면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대분류 중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포괄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경제총조사 발전 주요내용

연월	주요내용
1967. 05	‘사업센서스’로 통계 작성승인, 지정통계 제10108호
1968. 07	1968. 07. 01 기준으로 최초 실시
1969. 11	‘도소매업센서스’로 개칭
1971. 07	07. 01 기준 조사 실시(2회)
1976. 07	07. 01 기준 조사 실시(3회)
1979. 07	07. 01 기준 조사 실시(4회)
1982. 07	07. 01 기준 조사 실시(5회)
1986. 07	07. 01 기준으로 ‘총사업체조사’와 병행 실시(6회)
1990. 04	‘도소매업총조사’로 개칭
1991. 07	07. 01 기준으로 ‘총사업체조사’와 병행 실시(7회)
1997. 02	1996. 12. 31 기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병행 실시(8회),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로 개칭, 조사기준 시점을 조사대상 연도 말로 변경
2002. 04	2001. 12. 31 기준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병행 실시(9회)
2006. 04	‘서비스업총조사’로 개칭, 조사 기준년도를 ‘1, 6’자 연도에서 ‘0, 5’자 연도로 변경하여 제10회 조사 실시(제10회)
2010. 08	지정통계(승인번호 10171, 승인일자 08. 02)로 승인
2011. 05	‘산업총조사’와 통합하여 ‘경제총조사’로 확대 통합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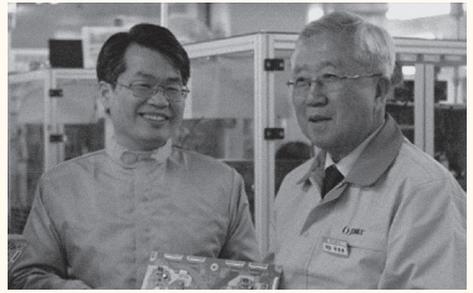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KOSIS, 2014

전국사업체조사(17개 시도별 사업체조사 포함)

개요

●● ‘전국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 통계청의 기술 지원 아래 각 시도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1년 주기의 전수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통계작성 계획과 자료수집 체계 등이 동일한 조건하에 전국 및 17개 시도별로 동시에 작성하기 때문에 이들 상호 간의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표범위가 최소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단위이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분석자료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사결과는 해당 시도에 있는 사업체 단위 조사이므로 특정 지역과 상관하지 않은 기업체 단위 통계조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 자료를 집계한 결과와 전국 단위 통계가 불일치할



● 전국사업체조사 현장 방문

수 있고,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나 통계관리 측면에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항목을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주요 조사항목은 개발초기 사업체 목록 작성에 한정하여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총매출액, 사업자 등록번호 등으로 단순화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전수조사로 작성하며 모집단은 조사기준일(12. 31) 현재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이다. 조사범위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은 제외하고 있다. 공표방법은 인터넷 제공과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고 있으며, 공표범위는 시도별이다. 간행물인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매년 12월)와 KOSIS에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읍면동별 산업대분류 현황을 제공한다.

발전과정

●●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 목록 작성의 성격이 강해 조사범위나 방법은 거의 변동이 없다. 다만 조사항목 등 일부가 발전해오고 있어 다른 통계와 달리 이들을 중점 언급하기로 한다. 이 통계는 각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되, 조사표 설계와 조사지침 그리고 자료처리는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사항목의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1996년에 사업체구분의 ‘본사와 공장’, 2011년에 ‘기간제 근로자수’ 항목 등은 활용도가 낮아 삭제하였다. 반면 기존 항목 중 1997년에 ‘종사자수’, 1998년에 ‘대표자’를 ‘남녀’로 각각 구분하는 등 성인지통계를 강화하였다. 1999년에는 대상 사업체가 ‘공장·지사’인 경우 본사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여 통계조사 시 중복 내지는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추가한 항목을 보면 2000년 들어 ‘사업체 변동’, 2003년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각각 추가하였고, 2012년 이후 시도별 특성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17개 시도별 사업체조사 포함) 발전 주요내용

연도	주요내용
1994	15개 시도별 통계작성 승인
1995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작성 승인(승인번호 제10137호)
1996	조사항목 변경(사업체구분의 '본사+공장' 삭제, 공무원근무기관 파악)
1997	1월 : 조사항목 변경(종사자수 남녀로 구분) 2월 :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와 통합 실시 11월 : 울산광역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 작성승인(승인번호 제20702호)
1998	조사항목 변경(대표자를 남녀로 구분, 무급 가족종사자 독립)
1999	조사항목 변경(공장·지사인 경우 본사현황 파악)
2000	조사항목 변경(사업체변동 추가)
2002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와 통합 실시
2003	조사항목 변경(사업자등록번호 추가)
2006	서비스업총조사와 통합 실시
2008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전국사업체조사로 명칭 변경
2011	경제총조사로 통합실시, 종사자수 중 '기간제근로자수' 조사항목 제외
2012	16개 시도 사업체조사 일괄변경 승인, 경제통계 통합조사에서 분리조사, 시도특성항목 시험조사 실시
2013	세종특별자치시 작성 승인(17개 시도별로 확대)

출처 : 통계청, KOSIS, 2014

도소매업조사

개요

●● '도소매업조사'는 1988년부터 통계청에서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당초 '도소매업통계조사'라는 명칭으로 작성 승인을 받았으나 2008년에 현재의 통계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이 통계는 도소매업이 포괄하는 업종의 연간 구조통계로서는 유일한 통계다. 모집단으로 주로 활용하는 5년 주기의 총조사를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도소매업조사'의 포괄업종 모두에 적용하는 공통항목으로는 사업체 일반사항,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 영업개월수, 일일평균영업시간, 사업체 정기휴무일수,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이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특성항목으로는 '건물연면적, 매장연면적, 상품 매입처별 구입액 구성비, 판매처별 매출액 구성비 및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객실(석) 수, 편의시설 연면적(호텔업), 객실 이용 건수, 호텔업 및 휴양콘도 매출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등이 있다.

통계 작성 방법은 2015년 6월에 실시한 통계조사의 경우 기초자료 수집은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와 팩스, 이메일, 전화, 인터넷조사 등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대상은 전국에 있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매 및 소매업(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과,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을 제외)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동 음식점을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약 10만여 개이다.

표본설계는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선정방법은 185개 산업세세분류 및 17개 시도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층화한 후 표본사업체를 선정하였다. 표본선정은 전수업종 및 사업체 수가 산업세세분류 내에 30개 이하이거나, 시도별 산업세세분류 내 10개 이하인 업종, 매출액 또는 종사자수가 전수경계점 이상인 사업체를 전수층으로 하였고, 표본층은 시도 및 산업세세분류별 종사자규모별로 5개로 층화하였다.

전국 단위 자료는 산업세세분류까지, 시도는 상위 산업세분류까지 집계한다. 이들 통계자료의 총량(액)추정은 사업체수는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승수를 적용하되 조사기준시점과 조사시점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다. 사업체수 외의 모든 항목은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의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 승수를 적용하였으며, 조사대상 기준일 이후 폐업된 사업체는 모집단 추정 시 제외하였다.

발전과정

•• 1987~1988년에 정부는 공산품 물가안정 및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총수요 관리와 가격 및 농축산물 등 수급 관리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⁶을 펼쳤다. 이에 따라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소매분야의 통계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통계수요 및 이용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포괄 범위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이었다. 그러나 1994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 1995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1996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만을 대상으로 각각 작성하였다. 1997년 이후부터는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기 통계작성 범위와 동일하게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을 함께 포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자료수집 체계는 1988년에는 통계청에서 실시하였으나 이후 1989~1991년에 통계청에서는

6 주요 정부정책은 1988년 3월10일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통화증발로 인해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 같아 내놓은 '물가안정종합대책', 동년 7월28일 낙후된 도소매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도소매업진흥 5개년계획', 1989년 8월18일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등 '중소기업 특별지원대책' 등이다.

사업체수가 많은 서울을, 시도에서는 나머지 지역을 담당하는 등 이원화하여 실시하였다. 이후 다시 일원화하여 1992~1993년에는 시도에서, 1994~1997년에는 통계청에서, 1998년에는 시도에서, 1999년부터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였다.

도소매업조사 주요 변경내용

연도	주요 변경내용
1988	통계청에서 7월에 '도소매 및 음식 숙박 통계조사'(지정통계 제10126호)로 통계 작성을 승인받아 1986 '총사업체통계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연간 표본조사로 개발(제1회 실시)
1989~1990	조사체계를 통계청(서울만 조사)과 시도로 이원화, 한국표준산업분류(제5차 개정) 적용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대상으로 실시(제2~3회)
1992~1993	조사체계를 시도로 일원화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제6차 개정) 기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실시(제4~5회)
1994	조사체계를 시도에서 통계청으로 변경하여 도매 및 소매업 대상으로 실시(제6회)
1995	1993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모집단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실시(제7회)
1996	도매 및 소매업을 대상으로 실시(제8회)
1997	조사체계를 시도로 변경,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실시(제9회)
1998	조사체계를 통계청에서 시도로 변경하여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실시(제10회)
1999	조사체계를 시도에서 통계청으로 변경(이후 지방사무소에서 조사)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제7차 개정) 기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실시(제11회)
2000~2007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실시(제12~17회, 2002, 2006 '서비스업총조사' 실시로 연간조사 미실시) • 2005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통계 작성 단위 세분(산업소분류 → 산업세분류) • 2007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통계 작성 단위 세분(산업세분류 → 산업세세분류)
2008~2015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기준 적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실시(제18~23회, 2011 '경제총조사' 실시로 연간조사 미실시) • '도소매업조사'로 개칭(2008.10) • 2013 프랜차이즈통계(가맹점) 조사 추가 • 2014 표본규모 확대하여 통계 작성 단위 세분(시도 산업세분류 → 산업세세분류) • 2015 도매 및 소매업에 '판매관리기기 보유여부' 항목 삭제

출처 : 통계청, KOSIS, 2014

서비스업조사

개요

•• '서비스업조사'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 통계다. 1988년에 '서비스업 통계조사'라는 명칭으로 승인받아 처음 작성하였고, 2008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작성하고 있다.

이 통계의 범위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8개 대분류를 포괄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업종별 공통항목과 특성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항목으로는 사업체일반 사항,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 영업개월수, 일일 평균 영업시간, 사업체 정기휴무일수,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이 있다. 업종별 특성항목으로는 이용인원수, 직능별 종사자수, 전산장비 보유 대수, 전자상거래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등이다.

‘서비스업조사’ 통계는 동일 시기,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는 서비스업 대부분을 포괄하는 연간 구조통계로 서비스업종 간 상호 비교성이 높아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모집단으로 주로 활용하는 5년 주기의 총조사와 월별 동향조사와 상호 비교하여 업종 구조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제약이 있다. 우선 통계의 포괄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시계열 분석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체 총량(액)자료는 종사자수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이 추출한 표본 사업체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추계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낮은 변수의 경우 추계된 자료의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도 있다.

통계 작성과정은 ‘도소매업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통계 결과는 통계조사 연도 말에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고, KOSIS에 서비스업조사 보고서 및 통계표를 게시하고 있다. 공표범위는 전국 및 시도별로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등을 공표한다. 공표주기는 1년이며, 간행물로 『서비스업조사 보고서』가 있다.

발전과정

••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에 따라 국민적 자신감이 고취된 이후 국제수지가 확대되고 소득이 증가하였다.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진화 경제기반 구축 등에 관련한 정부정책⁷과 선진국으로의 진전에 따른 산업 내 서비스업 비중확대로 관련 통계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시기에 ‘서비스업조사’가 개발되었다. 이에 통계확충과 더불어 기존의 통계도 수요 및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포괄업종 범위는 초기 1988년부터 1990년까지는 제5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이후 1991~1994년에는 이들 업종 이외에 교육서비스업,

7 1988년 당시의 주요 사회분위기 및 정부정책을 보면 7월28일 ‘도소매업진흥 5개년 계획’, 8월10일 ‘부동산 종합대책’,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최, 10월14일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화합 경제추진대책’ 등이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추가되어 서비스업 통계로서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5년에는 제6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1996년에는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제한하는 등 통계조사 범위가 일시 축소되기도 하였다. 1997~1999년에는 다시 초기범위로 돌아가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9년에는 제7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다. 2000~2007년에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이 추가되었다.

서비스업조사 변경내용

연도	주요 변경내용
1988	통계청에서 8월에 '서비스업통계조사'(지정통계 제10127호)로 통계 작성을 승인받아 1986 '총사업체통계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연간 표본조사로 개발(제1회 실시)
1989~1990	조사체계를 통계청(서울만 조사)과 시도로 이원화, 한국표준산업분류(제5차 개정) 적용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대상으로 실시(제2~3회)
1992~1993	조사체계를 시도로 일원화, 한국표준산업분류(제6차 개정) 적용,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대상으로 실시(제4~5회)
1994	조사체계를 시도에서 통계청으로 변경하여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대상으로 실시(제6회)
1995	1993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모집단으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대상으로 실시(제7회)
1996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대상으로 실시(제8회)
199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대상으로 실시(제9회 실시)
1998	조사체계를 시도로 변경,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대상으로 실시(제10회 실시)
1999~2000	조사체계를 통계청으로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제7차 개정) 적용,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대상으로 실시(제11~12회)
2000~2007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기준 적용하여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대상으로 실시(제12~17회 실시, 2002, 2006 '서비스업총조사' 실시로 연간조사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표본규모 확대하여 통계 작성 단위 세분(산업소분류 → 산업세분류) • 2007 표본규모 확대하여 통계 작성 단위 세분(산업세분류 → 산업세세분류)
2008~2015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대상으로 실시(제18~23회, 2011 '경제총조사' 실시로 연간조사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조사'로 개칭(2008.10) • 2013 프랜차이즈통계(가맹점) 조사 추가 • 2014 표본규모 확대하여 통계 작성 단위 세분(시도 산업세분류 → 산업세세분류) • 2015 서비스업조사표 1종을 3종(통합,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리 • 201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직능별 종사자수(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항목 추가

출처 : 통계청, KOSIS, 2014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면서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조사범위는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비록 범위의 변경으로 비교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조사로 발전하였다.

자료수집 체계는 최초 실시연도인 1988년에는 통계청에서 단독으로 실시하였으나 1989~1990년까지 통계청에서는 사업체수가 많은 서울지역을 나머지 지역은 시도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하여 실시하였다. 1991~1994년까지는 시도에서, 1995~1997년까지는 통계청에서, 1998년에는 시도에서, 1999년부터는 통계청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개요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는 2008년에 지정통계로 승인받아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여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 통계다. 이 통계의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전국에 있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이다. 표본설계는 모집단으로 ‘전국사업체 조사결과’를 이용하고, 표본추출틀은 조사범위 산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체(약 7만 7000개)로, 표본추출 단위는 시도 및 산업세세분류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와 팩스, E-mail, 전화, 인터넷 조사 등을 병행하여 수집한다. 통계결과는 통계조사연도 말에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고, KOSIS에 보고서 및 통계표를 게시하고 있다. 공표범위는 ‘전국 및 시도별’로 ‘산업별’, ‘중사자규모별’ 등을 공표한다. 공표주기는 ‘1년’이며, 간행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보고서』(매년 12월)가 있다.

발전과정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는 2007년까지 연간조사인 ‘서비스업조사’에 포괄하여 작성되어 왔다. 서비스업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특히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2007년에 지식기반서비스업 통계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발전 주요내용

실시년도	주요내용
2007	'지식기반서비스업 실태조사' 개발계획 수립(6월) '지식기반서비스업 실태조사' 1차 시험조사 실시(11월) '지식기반서비스업 실태조사' 2차 시험조사 실시(11~12월)
2008	'지식기반서비스업 실태조사'에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로 개칭(2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시험조사 실시(3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로 통계작성 승인(승인번호 제10170호)(4월) 2007 기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실시(1회)
2009	조사항목 삭제: 사업장 건물연면적, 설문조사
2010	조사항목 추가: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조사항목 삭제: 유형자산 취득액
2013	조사항목 추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출처: 통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보고서』, 각 연도

먼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30여 개 정부기관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및 이용자 회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2007년 11~12월에 2차례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2월에 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사명칭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로 확정하고 2008년에 최초로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최초로 실시한 2008년 조사에서는 공통항목으로 일반사항, 사업내용, 조직형태, 월평균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영업기간(월평균 휴무일수), 사업장 건물연면적, 사업 실적, 유형자산취득액 등이, 특성항목으로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설문조사 등이 있었다.

2009년 조사에서는 사업장건물 연면적과 설문조사 항목이 삭제되었다. 2010년 조사에서는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항목 등이 새로이 추가되고 유형자산 취득액이 삭제되었다. 2011년은 경제총조사 실시로 인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2013년 조사에서는 프랜차이즈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항목을 추가하였다.

서비스업동향조사

개요

●● '서비스업동향조사'는 1999년 1월부터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다. 이 조사는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통계, 도소매업재고액지수 등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업종별 수급동향 파악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다. 초기에는 '서비스업동태조사'로 실시하였으나 2008년에 기존에 도소매업 판매액지수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해온 '도소매업동태조사'와 통합하면서 통계 명칭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자료수집은 통계청에서 면접조사로 진행되나 일부사업체의 경우는 이메일,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응답자 기입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조사대상기간(조사기준시점)은 매월 1~말일이며 조사실시기간은 익월 1~20일이다.

조사항목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에 관한 월별 동향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항목으로 한정하여 서비스업은 월간 매출액, 영업일수, 종사자수, 특성항목, 비고(매출액증감사유 등), 도소매업은 월간 상품판매액, 영업일수, 종사자수, 매장면적, 월말 상품재고액, 비고(매출액증감사유 등)이다. 조사범위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대분류 중 13개 업종⁸이다. 이 조사 결과는 매월 서비스업 관련 각종 지수 작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 금액을 기본으로 한 실적통계인 '재별 및 상품군별 판매액', '소매업태별 판매액',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등 소매업 판매액 통계를 작성한다. 이외에 이러한 통계조사 결과와 관련한 기관 통계를 이용하여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도소매업 재고액지수'를 작성하여 공표한다.

통계간행물로 『서비스업생산지수(특수분류 포함)』, 『소매판매액통계』가 있으며, 보도자료는 통계청에서 타 동향통계와 더불어 매월 종합적으로 공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 수록하여 공표하고 있다, 또한 KOSIS에 '서비스업동향조사'를 독자적으로 보다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발전과정

•• 1980년대 후반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에서 50% 비중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생산지수만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월별 생산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1999년 1월부터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서비스업동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와 기존의 '도소매업동태조사', 금융 및 보험업 등 관련 자료를 반영한 '서비스업활동지수'를 작성하였다. 당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통계 개발의 어려움이 있었다. 업종별 중요도라 할 수 있는 지수의 가중치 산정을 위해 '도소매 및 서비스업총조사', '운수·통신업통계조사', '금융기관결산서' 등을 이용하였다. 대상 업종 범위도 관련 통계별로 대부분 달라 국민소득 통계의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8 조사범위는 대분류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환경복원업 제외), 대분류 G, 도소매업, 대분류 H, 운수업, 대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 대분류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대분류 K, 금융 및 보험업, 대분류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대분류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대분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대분류 P, 교육서비스업, 대분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대분류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대분류 S,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이다.

사업서비스업, 교육·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범위를 적용하여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1999년 1월부터 '서비스업동태조사'가 개발되면서 도소매업 부문의 '도소매업동태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3월에는 양 통계조사가 통합하게 되었으며, 11월에는 통계 명칭을 현재의 '서비스업동향조사'로 변경하였다. 이들 기초통계를 이용한 통계조사 및 관련 각종지수는 매 5년마다 표본 및 지수개편을 통해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고 타 통계와의 비교성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통계 개선을 이루고 있다.

서비스업동향조사(도소매업동향조사 포함) 변경내용

연월	주요 변경내용
1965. 01	서울지역 소매업조사 실시(한국은행)
1970. 11	도매업 추가조사 및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이관
1982. 07	전국으로 확대
1999. 01	서비스업동태조사 시험조사 실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50), 1999. 01. 06 승인
2000. 02	매월 서비스업동태조사 실시 조사계열 : 매출액, 수량 도소매업동태조사 표본 변경 : 5547개(2000 기준)
2003. 03	조사항목 : 사업체명 및 소재지, 영업형태, 월간 영업일수, 매장면적, 주요취급상품 월간판매액, 월간 재고액, 종사자수, 본·지사, 상품판매방법별 구성비, 판매액동향, 판매처별 구성비, 작성근거
2004. 03	서비스업동태조사 표본 변경(2000 기준) 조사계열 : 매출액, 수량
2005. 03	서비스업동태조사 3개 업종추가 : 부동산 공급업, 초·중·고등교육기관, 예술학원 표본변경 : 9500개(2005 기준)
2008. 03	조사계열 : 매출액, 수량 서비스업동태조사와 도소매업동태조사 통합 조사표 종류(4종) : 일반업종, 종합휴양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2008. 11	'서비스업동향조사'로 개칭
2009. 03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적용 표본변경 : 9270개(2010 기준)
2013. 02	조사표 종류(5종) : '도소매업' 조사표 분리 일반업종, 종합휴양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자료수집 : 월간 영업일수, 월말 종사자수, 매출사항(금액 또는 수량), 증감사유 및 특이사항 조사계열 변경 : 금액에서 수량으로 5개 업종 변경 하수처리업(처리량, 천M/T), 신문발행업(발행부수, 천부), 실내경기장 운영업(입장객수, 명), 실외경기장 운영업(입장객수, 명), 경주장 운영업(입장객수, 명)

출처 : 통계청, KOSIS, 2014

도소매·서비스업 분야의 지수 작성 발전내용을 보면, 도소매업 부문은 서울지역 소매업을 대상으로 '소매업지수'를 작성해오다가 1970년 기준 지수 개편 때 도매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1980년 기준 지수 개편 때에는 작성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도소매업 판매액 지수'를 작성하였다. 이어 1995년 기준 지수 개편 때에는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소매업태별지수', 2000년 5월에는 '소비재별지수' 등 다양한 지수를 신규로 작성하는 등 개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계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5년 기준 지수개편 때에는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작성을 중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소매판매액통계', '소매 판매액지수'를 2005년 1월까지 거슬러 신규로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도소매업의 생산동향 통계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소매업재고액지수'를 최초로 공표하였다.

서비스업생산지수 개편내용

구분	개편내용		
	2000 기준(최초)	2005 기준	2010 기준
지수 개편 (계획, 공표)	2002. 08~2004. 03	2006. 08~2008. 03	2011. 07~2013. 02
대표업종 수	159개	182개	203개
지수분류체계	총지수(1), 대분류(11), 중분류(25), 소분류(67), 세분류(125), 세세분류(60)	총지수(1), 대분류(13), 중분류(36), 소분류(87), 세분류(140), 세세분류(64), 조합지수(4), 특수분류(6)	총지수(1), 대분류(13), 중분류(36), 소분류(92), 세분류(144), 세세분류(109), 조합지수(4), 특수분류(8), 기업규모별(2)
조사계열	매출액·수량	매출액·수량	매출액·수량
가중치 기준액	시장가격기준 부가가치	시장가격기준 부가가치	시장가격기준 부가가치 기초가격기준 부가가치 병행
디스플레이터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OECD 권고안 적용
계절조정	-	X - 12 - ARIMA	X - 12 - ARIMA
기초자료	서비스업동향조사 및 행정자료	서비스업동향조사 및 행정자료	서비스업동향조사 및 행정자료
시계열(최초)	2000. 01	2000. 01	2000. 01
과거지수접속	단순비례법	단순비례법	단순비례법

주: 지수분류체계는 '제9차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특수분류를 작성함
기본분류는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 13개 대분류를 포괄한다.
출처: 통계청, '2010년 기준 서비스업생산지수 개편 보고서', 2013

서비스업 부문은 1996년 기준 '서비스업활동지수'를 1999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시험적으로 작성하였고, 2000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수를 작성하여 2000년 8월에 처음으로 공표하였다. 2005년 기준 지수 개편 때에 '서비스업활동지수'를 '서비스업생산지수'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업생산지수'의 5년 주기 지수개편 내용을 보면 2005년 기준, 2010년 기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주요 발전사항을 보면 지수를 작성하는 대표업종이 처음에는 159개 업종에서 2005년 기준에는 182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그후 2010년 기준에는 203개로 점차 확대되어 이용자들에게 더욱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5년 기준부터는 '경상지수', '불변지수'와 더불어 '계절조정지수'도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기본적인 업종지수 이외에 '특수분류지수'도

작성하였다. 2010년 기준부터는 '기업규모별지수'도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관련 서비스업 통계 부재로 지방자치단체 등 이용자들이 지역별 서비스업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08년부터 16개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내외부 전문가·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부터 처음으로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에 표본을 개편하고 대표업종을 선정하였으며, 2013년에 지수시산을 거쳐 2014년 12월에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를 개발 완료하여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5년 5월에는 시도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동향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200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비스업 단기 동향 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천광역시, 창원시, 전라북도, 군산시 등에서 '서비스업동향통계'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04

맺음말

•• 선진국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내성이 높고 고용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제조업이 기계에 의해 노동이 대체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주로 사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대내외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관련 통계가 정비되고 개발되어 서비스업의 실태를 적시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고용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0년 초반 하더라도 서비스업 관련 통계는 충분치 못했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특성상 범위가 넓고 업종별 특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통계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비스업 기초통계로서 5년마다 생산해온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를 2006년에 '서비스업총조사'로, 2011년에 '경제총조사'로 확대 발전시키고, 2000년에 시의성 있는 서비스업 동향분석을 위해 '서비스업동향조사'를 개발한 것은 서비스업통계 인프라 구축에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소매·서비스 업종 중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 위주의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에 프랜차이즈 통계가 처음 개발되었고 업종별 가맹점 통계의 경영실태를 최초 제공하였다. 2014년에 프랜차이즈 통계는 치킨점, 커피전문점, 제빵·제과점 등 주요 업종(16개)에 대해 자료를 집계하였다. 이는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 뒷받침 통계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통계가 안정적이고 지역 단위의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모집단 구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이 등장하는 신규 프랜차이즈 등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모집단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 통계 이용자는 서비스업의 업종별 세분화 통계를 요청하고 있다. 세분화된 통계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표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표본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표본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며 이는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조사환경이 변하고 있다. 점차 통계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늘고 있으며 행정자료의 활용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료의 활용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조사 단위이다. 서비스업부문의 대다수 조사는 사업체 단위 조사이다. 사업체 단위 조사의 장점은 지역별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1기업 다사업체의 경우 사업체별 사업실적을 조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모든 지사의 사업실적을 본사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으나 협조도가 낮은 형편이다.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업 다사업체의 수는 5%이지만 전체 매출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사업체를 갖고 있는 기업의 조사 협조는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큰 요소이다.

서비스업이 세분화된 미국의 경우, 경제센서스와 사업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관리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대체를 시행한다. 또한 조사표는 세부업종별로 다양하고 업종별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응답 부담을 줄이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면조사 방식이나 최근, 인터넷 조사 병행 실시, 사업실적 행정자료 대체, 본사 일괄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체 일괄조사 등 많은 시도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환경 변화와 함께 조사방법, 행정자료 활용 및 대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도소매·서비스통계는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공하여 정책부처의 서비스업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서비스업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총조사’ 및 ‘연간 구조통계’는 서비스업 기초통계로서 ‘경제총조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여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 등을 추가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간조사’는 ‘총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개별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확대·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월간 서비스업 동향통계는 적시성 있는 공표와 함께 서비스업의 단기 투자동향, 고용동향, 시도별 동향 등 관련 통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계의 작성방법이나 추계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여 개별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통계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13.
- 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1982.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3년 산업센서스 UN권고안(Recommendations for the 1983 world programme of industrial statistics)』, 1982. 기획재정부, 『정책일반자료』, 2000년 이후.
-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 『대의 의존적 경제구조의 문제점과 내수확대방안』, 2011.
- 삼성경제연구소,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략』, 2000.
- 통계교육원, 『경제통계 심화과정』, 2007.
-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 편찬 워크숍』 자료, 2014.
-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 1992.
- 통계청, 『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 통계청, 『2000년 상반기 서비스업활동동향 - 서비스업활동지수 개발내용』, 2000.
- 통계청, 『통계청, 경제분야 통계조사(8종) 통합실시』 보도자료, 2009.
- 통계청, 『2014년 경제통계 통합실시』 보도자료, 2014.
- 통계청, 『중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 2005.
- 통계청,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통계 발전전략』, 2009.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통계 개발(안)』 경제통계분과위원회 심의안건, 2007.
- 통계청, 『2010년 기준 서비스업생산지수 개편보고서』, 2013.
- 통계청, 『2010년 기준 소매판매, 도소매업 생산·재고 개편 보고서』, 2013.
-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 매뉴얼(Compilation Manual for an Index of Service Production-OECD 2007) 번역자료』, 2011.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UN 도소매업통계 권고안』(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Distributive Trade Statistics 2008) 번역자료, 2011.
-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2006.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3.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0년 기준년 개편 및 1993년 SNA 이행 결과』, 2004.
- 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2006.
-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2010.
- Department of Commerc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 『經濟産業省』, 일본,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영국, Statistics Canada, 캐나다, 2014.
- Statistics Canada, www.statcan.ca June, 2014.
- 經濟産業省, 『特定サービス産業動態統計調査』, 2014.
- 經濟産業省, 『지수의 작성과 이용』, 2005.

경제통계

제7장 경기

1. 개요

2. 발전과정

3. 주요 경기통계의 발전과정

4. 맺음말

01

개요

의의

•• 경기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호황과 활발하지 못한 불황이 교차하면서 변동한다. 즉, 경기변동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호황과 불황이 파도와 같은 모양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므로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고도 한다. 경기순환의 파악은 현재의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목적, 수단, 정책 수립, 집행 등이 다르므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하여 경제정책 또는 경영정책 입안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종다양한 경제의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기변동은 얼핏 보면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나름대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번갈아가며 반복하는 순환성, 일정한 기간 내에서 순환하는 주기성, 경기변동이 특정 부문에서 시작되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어 가는 파급성, 경기가 변화할 때 크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속도성, 경제부문 또는 개별 지표의 움직임 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시차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 통계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며 변화하는 경기변동을 측정 또는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즉, 사람들은 “경기가 좋다. 나쁘다. 또는 상승하고 있다. 하강하고 있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기변동의 움직임을 일정한 형태의 숫자나 도표로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객관성을 갖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수단이 경기통계라고 할 수 있다.

범위와 종류

•• 경기통계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경기상황을 어떻게 측정하고 예측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특정한 주요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의해 경기변동을 판단하는 개별 경기지표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다음은 주요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경기변동을 측정하는 종합경기 지표(Composite Business Indicator)에 의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향후 경기 예측을 위해 경제주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경기전망조사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변수 간 회귀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구축한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변동의 측정을 위해 위의 4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개별지표에 의한 방법, 종합경기지표에 의한 방법, 경기전망조사에 의한 방법 모두 「통계법」에 의해 작성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방법은 조사통계나 가공통계와는 달리 경기전망 또는 정책효과 분석 등을 위하여 경제 각 부문(생산, 소비, 투자, 대외거래, 금융, 물가 등)의 관련 경기지표들을 이용하여 설정한 연립회귀방정식의 분석 결과로, 분석자의 주관적 의지가 포함될 여지가 크고 작성승인을 받은 통계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현재 계량경제모형에 의해 한국은행, 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금융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에서 민간소비 설비·건설투자 등 지출측면의 GDP와 수출입 등을 전망하고 있다.

종합경기지표에 의한 방법에는 경기에고지표(Warning Indicator, WI), 경기종합지수(Composite Economic Index, CI), 경기확산지수(Diffusion Economic Index, DI) 등이 있다. 경기전망조사에 의한 방법은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와 설비투자전망조사,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소비자경기전망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 제도가 도입된 1962년 이후 지금까지 작성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경기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경기통계의 종류는 84종이다. 이를 작성 연대별로 보면, 2000년대 36종, 1990년대 19종, 1980년대 9종의 순으로 경기통계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작성연대별 경기통계

(2014. 12 현재)

구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이후
전망조사	68	5	10	8	18	27	-
기업경기	45	4	8	6	7	20	-
설비투자	22	1	2	2	10	7	-
소비자경기	1	-	-	-	1	-	-
종합경기지표	14	-	-	1	1	7	5
기타	2	-	-	-	-	2	-
합계	84	5	11	9	19	36	5

작성주기별로 보면, 경기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성주기가 짧은 통계가 많다. 즉, 매월 작성하는 통계가 24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분기별 통계가 21종으로 이들이 경기통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작성주기별 경기통계

(2014. 12 현재)

구분	계	월	분기	반기	연	수시	1회한
전망조사	68	10	21	6	6	3	21
기업경기	45	8	20	2	4	2	9
설비투자조사	22	1	1	4	2	1	13
소비자경기	1	1					-
종합경기지표	14	14	-	-	-	-	-
기타	2	-	-	-	-	-	2
합계	84	24	21	6	6	3	24

국제동향

●● 경기변동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정하고 예측하기 위한 노력은 외국에서도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국제화되면서 경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경기변동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기상황을 측정하고 예측하기 위해 자국의 실정에 적합하고, 작성이 가능한 경기통계를 개발·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기종합지수를 처음 작성한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및 OECD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 미국에서는 경기변동 측정에 관한 연구가 초기에 학자들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세기 초에 뱀손연구소(Babson Statistical Company)와 같은 민간 경기 예측 기관이 설립되면서 경기변동 측정에 관한 연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17년에 하버드대학에 경제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1919년 1월에 하버드지수를 개발 공표하였다. 하버드지수는 1919년의 호황, 1920년의 불황, 1922년의 회복을 수개월 전에 정확하게 예측하여 세계 각국에 경기지수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1929년부터 시작한 세계대공황 예측에 실패한 후 1941년에 작성이 중지되었다. 하버드지수 이후 경기변동의 예측과 경기지수에 대한 연구는 1919년에 설립된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¹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NBER에서는 1936년에 확산지수를 작성 발표하였으며, 경제지표를 수집·정리하여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21개 선택하여 ‘1938 리스트(list)’라 불렀다. 이와 같은 NBER의 연구에 대해 쿠프만(Koopmans)은 “이론 없는 계측(Measurement without theory)”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였으나 NBER에서는 경기변동에 관한 실증분석을 계속하여 경기확산지수를 개발하게 되었다. 1950년에 무어(Moore)는 경기에 민감한 21개 계열을 이용하여 경기확산지수 및 역사적 경기확산지수(Historical Diffusion Inde, HDI)를 발표하였다. 이후 경기확산지수 및 누적경기확산지수(Burns, 1950), 역사적 확산지수와 당면적 확산지수의 구별(Broida, 1955), 선행·동행·후행 경기확산지수(Moore, 1955)가 연구·개발되었다. 경기확산지수는 1961년부터 상무부의 공식 경기지표로 채택되어 BCD(Business Conditions Digest)²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었으며, 1968년 11월에는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 CI)를 개발하여 공표하였다. 그후 경기종합지수는 주 경기지표, 경기확산지수는 보조경기지표로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에서 작성되어 왔다. 경기종합지수 작성업무가 1996년 1월 민간기관인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로 이관되어 미국 정부 내에는 경기측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컨퍼런스보드 이외에도 민간 연구소인 ECRI(Economic Cycle Research Institute)³에서는 미국 등 19개 국가⁴에 대한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여 International Cyclical Outlook에 그 결과를 수록·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경기전망조사를 일찍부터 실시하고 있었다. 미시간 대학에서 1946년부터 소비자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하였고, 컨퍼런스보드에서도 1967년에 소비자 경기전망조사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기업경기실사지수인 공급자 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지수는 1948년부터 작성하여 발표되고 있다.

일본

●● 일본의 경기변동 측정은 1951년에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에서 ‘산업계의 단기에측이’라는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 NBER에서는 미국의 기준순환일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2 BCD는 미국 상무부의 경기지표를 수록한 책자로 1990년 3월에 마지막 호가 발간된 이후 중단되었다.

3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한 무어(Geoffrey H. Moore) 박사가 1996년에 설립한 민간경제연구소이다.

4 ECRI에서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는 국가는 총 19개 국가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호주, 대만,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1953년에 경제기획청에서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1957년에 일본은행에서 법인기업동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1955년 초부터 경제통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는 경기지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경제기획청은 경기조절정책의 발동·해제 시기 파악을 위해 '경기경고지표(WI)'를 개발하여 1968년부터 1976년까지 발표하였다. 1960년 8월에 20개 구성지표로 이루어진 경기확산지수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표하였다.

한편, 경기종합지수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으며, 수차례의 시산작업을 거쳐 1984년 8월에 27개 구성지표로 이루어진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하고, 경기변동 측정을 위한 보조지표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4월부터는 종전까지 주 경기지표로 사용하던 경기확산지수를 보조지표로 이용하고, 보조지표로 사용하던 경기종합지수를 주 지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에서 경기지수를 매월 작성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현재 39개 도·도·부·현에서 해당 지역의 경기지수(지역에 따라 CI 또는 DI만 작성하거나 2가지를 함께 작성)를 작성하고 있다.

OECD

•• OECD 통계국에서는 1981년 이래 회원국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선행 경기종합지수를 매월 작성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선행, 동행, 후행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OECD에서는 선행 경기종합지수만을 작성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33개 회원국(아이슬란드 제외), 6개 비회원국, 8개의 지역에 대해 매월 작성하여 'Main Economic Indicator'에 수록하고 있다.

02 발전과정

••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측정의 역사는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경기변동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의 경제구조가 산업화되지 못하였고, 외국의 원조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도 적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0년부터 경기변동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6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경기변동이 어떻게 측정되어 왔는지에 대해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통계의 태동기(1960~1970년대)

•• 우리나라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인 1963~1964년에 경기후퇴를 경험하면서 경기변동의 측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64년 하반기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종별 경기동향의 예측'이라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업실사지수(BSI)로 작성하여 경기를 측정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1965년 2월에 한국산업은행에서 '주요기업체 단기경기관측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1966년 7월에는 한국은행에서 분기별 '주요기업의 단기예측조사'를 실시하였다. 1967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경기동향조사(1976. 08. 18 「통계법」에 의해 작성승인)'를 월별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조사는 2008년 6월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계작성기관 지정이 철회되면서 국가통계로서 승인이 취소되어 작성이 중지되었다.

설비투자전망조사는 설비투자의 변동이 경기에 선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비투자의 변동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 개발되었는데, 1965년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한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가 최초의 조사이다.

이와 같이 1960년대는 우리나라 경기변동 측정의 태동기로서 기업전망조사 자료에 의해 경기를 측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1970년대에 들어 경기변동 측정방법이 다양해졌다. 즉,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에 계량경제학이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나 실제 계량경제모형을 작성하여 발표한 것은 1971년에

한국은행의 '금융계량모델 보고'가 최초로 할 수 있다. 그후 1979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계량경제모형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착수하였다.

한편, 기업경기전망조사의 경우 1972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분기별 '기업경기전망조사(1975 작성승인)', 1973년에 중소기업은행에서 분기별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1979 작성승인)'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경기판단지수'⁵와 '수출산업동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분기별 '단기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1977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분기별 '서울 지역 시장경기전망조사'⁶와 반기별 '경기동향의 분석과 예측'⁷을 실시하였다. 또한, 1976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1년 주기 '기업시설투자 동향조사', 1978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반기별 '기업시설투자동향조사'에 대한 작성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와는 별도로 1976년 7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종합경기지표에 의한 경기변동 측정방법이 개발되었다. 즉, 한국은행에서 일본의 '경기경고지표' 방식을 도입하여 '경기예고지표'(WI)⁸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경제통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최초의 종합경기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개발된 경기예고지표는 1981년 3월에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가 공표되기 이전까지 주요 경기지표로 활용되었으며, 그후에도 작성이 중지(1984)될 때까지 경기종합지수와 함께 널리 이용되었다.

경기통계의 정착기(1980~1990년대)

•• 1980년대에 들어 경기변동 측정 수단은 더욱 다양화되어 그때까지 개발된 모든 방법들이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석유파동으로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유발되고 우리나라 또한 1978년의 호황에서 1979년 초부터 급격한 경기후퇴를 겪게 되자 경기변동의 진폭을 측정할 수 있는 경기지표의 작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새로운 경기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1981년 3월에 19개 구성지표로 이루어진 경기종합지수를 처음으로 공표하였다. 경기종합지수는 정부기관에 의해 작성된 최초의 경기통계로서 우리나라 경기동향의 측정과 예측의 중심지표로 지금까지도 가장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5 1979년 12월에 '수출산업 경기전망조사'로 개칭하였다.

6 1983년 7월 18일에 '유통경기전망조사'로 개칭하였다.

7 1979년에 '종합 및 업종별 경기전망조사'로 개칭하였다.

8 경기예고지표는 실제적으로는 1972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작성승인은 1976년 7월에 이루어졌다.

경기종합지수나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와 별도로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향후 소비지출 계획 등이 경기에 선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비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개발되었다. 소비자전망조사는 1982년 작성승인을 받은 '서울시 소비자태도조사'가 최초의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반기별로 조사하였으나 동 조사는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한편, 기업경기전망조사와 설비투자조사는 1980년대에도 계속 새로운 조사가 개발되었다. 기업경기전망조사의 경우 1980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요업종별 수출전망 및 수출에 소요인 조사', 1985년에 경상북도의 분기별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1989년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의 1년 주기인 '100대기업 새해경기전망조사'가 각각 승인되었다. 설비투자조사의 경우 1988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실태조사(부정기)'가 작성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경기종합지수는 각종 경제지표들의 기준년도 개편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기종합지수의 현실 경기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편작업이 추진되어 1984년에 제1차 개편, 1988년에 제2차 개편작업 결과가 공표되었다. 아울러 통계청에서는 경기변동 측정수단을 다양화하여 경기측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983년 1/4분기부터 분기별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미승인 통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종합경기지표의 개발 작업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대우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소에서 각각 경기선행종합지수(미승인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주택은행 연구소에서도 주택경기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기업경기전망조사 7종, 설비투자조사(설비투자지수 포함) 10종, 종합경기지표 1종, 소비자전망조사 2종 등 22종(1회한 통계 포함)의 새로운 경기통계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흐름을 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앞으로의 경제를 예측하기 위한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운용해오다가 2008년 7월 중지하였다.

기업경기전망조사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의 분기별 '경제전망조사(1990)', 한국은행의 분기별 '거시경제지표 전망조사(1991)'와 월별 '기업경기조사(1991)',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의 1년 주기 '중소기업경기 전망조사(1998)' 등이 작성승인되었다.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경기전망조사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991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미승인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1995년 2/4분기 '가계생활지수(미승인 통계)'를 작성하는 등 민간기관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국가통계작성

기관 중 한국은행이 1995년 3/4분기부터 분기별로 '소비자동향조사'⁹를 실시하여 1998년에 공식적으로 작성승인을 받았다. 1999년에는 통계청에서도 월별 '소비자전망조사'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2008년 9월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로 통합되었다.

설비투자조사는 통계청의 분기별 '설비투자동향조사(미승인통계)'가 1990년 3/4분기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의 반기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1990)',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투자진행동향조사(1년 주기, 1992)',¹⁰ 산업통상자원부의 반기별 '200대 주요기업설비투자계획조사(1998)'가 작성승인을 받았다.

또한 경기종합지수의 유용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에서 개편작업을 1991년(제3차 개편), 1993년(제4차 개편), 1997년(제5차 개편)에 각각 실시되었다. 또한 1999년에 충청북도에서 통계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충청북도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함으로써 경기종합지수가 지역단위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기통계의 발전 및 안정화(2000년 이후)

•• 2000년대에는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20종, 설비투자조사 7종, 종합경기 지표 9종 등 총 39종(1회한 통계 포함)의 새로운 경기 통계가 작성되어 1960년대 이후 가장 많이 개발되었다.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의 경우 2001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월 주기의 '중소제조업 경기국면 지수 및 경영환경지수'와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를 각각 개발하였다. 이어 2002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분기별 '제조업경기조사'와 1년 주기의 '부품소재산업 경기전망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분기별 '전자상거래기업 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중앙회의 '월간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한국무역협회의 분기별 '수출산업 경기전망조사', 한국철강협회의 분기별 '철강경기 실사지수'에 대한 작성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3년에도 정보통신부의 월별 '정보통신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월별 '정보통신산업 기업경기조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1년 주기 '전자산업 경기전망조사'가 각각 실시되었다. 2004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기별 '채래시장 경기실사지수', 2005년에는 시장경영진흥원의 월별 '시장경기동향조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기별 '산업단지 경기전망조사', 2007년에는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기업금융 체감지수조사'가 각각 개발되었다. 설비투자조사는 7종의 새로운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모두 1회한 통계로 작성되었다.

9 2008년 9월에 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와 통합하고, 작성 주기를 '월로 변경하였다.

10 1993년 11월에 '기업시설투자전망 및 투자에요인조사'로 개칭하였다.

2007년에 통계청에서는 종합경기지수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기위해 '제조업생산 확산지수'를 작성 추가 공표하였으며, 2008년에 구성지표를 확대하여 '생산확산지수'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9년에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확산지수'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작성·공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에서는 2009년 12월에 주요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순환시계'(Business Cycle Clock, BCC)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지역 단위의 경기종합지수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구광역시, 충청남도,¹¹ 대전광역시(2000), 제주특별자치도(2004), 전라북도(2005), 인천광역시(2009)에서 해당 지역의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통계청에서 경기종합지수의 개편작업을 2003년(제6차 개편), 2006년(제7차 개편)에 실시하였고, 제8차 개편작업 결과를 2012년에 공표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에 5종의 새로운 종합경기지표가 개발되었다. 2011년에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의 경기종합지수 작성승인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한국은행에서 월 단위의 '경제심리지수'를 작성하여 작성승인을 받았다. 경제심리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를 통계적으로 가공하여 합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기지표이다. 2013년에는 관세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작성승인 경기확산지수인 '무역경기확산지수'를 개발하였다. 2014년에는 경상북도에서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하였다.

11 충청남도에서는 2000년 7월5일에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에 대한 작성승인 후 2006년 4월15일에 작성중지를 하였다가 다시 2009년 4월29일에 작성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작성 중이다.

03 주요 경기통계의 발전과정

종합경기지표

•• ‘종합경기지표’란 경제 각 부문의 경기변동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움직임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 가공, 종합하여 경기변동을 측정·예측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종합하는 방법에 따라 경기예고지표(WI), 경기종합지수(CI), 경기확산지수(DI), 경기순환시계(BCC)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경기지표는 다른 경제지표와 달리 속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 단위로 작성하고 있으며, 경기변동 측정 수단으로서의 유용성 등으로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경기변동 측정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예고지표

개요

•• ‘경기예고지표’란 경기변동과 관련이 깊은 주요 경제지표를 선정하고, 이들의 증감률(지표에 따라 6, 9개월 또는 12개월 전 대비 증감률)을 기준변동률¹²과 비교하여 신호등으로 표시한 후, 이를 통해 현재의 경기상태가 과열 또는 침체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경기예고지표의 작성목적은 경기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경기조정 정책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월 단위로 경기변동을 측정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경기지표다.

¹² 과거에 긴축 또는 완화정책이 실시되었던 시점이 속해 있는 분기로부터 2분기 전의 분기 평균증감률을 각각 실시 시기별로 산출한 후 이들을 가중평균(최근으로부터 3, 2,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며, 상한기준율은 과거에 긴축정책이 실시되었던 3개 시점, 하한기준율은 완화정책이 실시되었던 3개 시점의 증감률 이용하여 작성한다.

발전과정

●● 경기예고지표는 일본 경제기획청에서 개발한 ‘경기경고지표(1968)’의 작성 방식을 도입하여 1972년에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작성하였으며, 1976년 작성승인을 받았다. 초기의 경기예고지표의 구성지표는 서울소매액지수, 전국도매물가지수, 산업생산지수, 예금통화, 기계류수입액, 전기기기생산지수, 화폐발행액(평균), 어음교환액, 수출액, 수입액, 화물수송량, 산업용건축허가면적, 외환보유액, 국내여신 등 14개 지표였으며, 그후 1976년과 1981년 2차례에 걸쳐 개편 작업을 하였다.

통계청에서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하기 이전까지 주요 경기지표로서 이용되었으며, 경기종합지수가 개발된 이후에도 한동안 경기종합지수와 함께 사용되었으나, 경기예고지표의 점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변동률이 과거의 고도 성장기를 반영하고 있어 경제 안정기의 경기 측정에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984년에 작성을 중지하였다.

경기종합지수**개요**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경기지표로서 주요 경제지표들의 월별 움직임을 통계적으로 분석·가공·종합¹³하여 작성하며, 경기전환점 시현 시기와 실제 경기와의 시차에 따라 선행종합지수(Leading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Roughly Coincident Composite Index), 후행종합지수(Lagging Composite Index)로 구분한다. 다른 종류의 경기변동 측정 방법들이 경기변동의 방향, 전환점 및 속도 중 일부만을 측정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속도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의 방향과 전환점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지수는 지금까지 개발된 경기지표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의 경기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OECD 등 여러 나라에서 경기변동 측정에 이용하고 있다.

발전과정

●●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서서히 산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경기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

13 구성지표 전월비(전년동월비 계열의 경우 전월차)의 진폭을 평균화한 후 선행, 동행, 후행별로 종합하고, 이를 동행지수와 진폭이 같아지도록 조정한 후 원지수(raw index)를 작성하고, 원지수의 추세를 목표추세치(GDP)의 추세로 조정한 후 선행, 동행, 후행 종합지수를 작성한다.

되는 기업경영자 전망조사에 의존하여 경기변동을 측정하다, 1972년 12월에 한국은행에서 '경기예고지표'를 개발하였으나 작성 방법상의 문제점 등으로 경기변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유발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1978년 사상 최대의 호황에서 1979년 초부터 급격한 경기후퇴를 겪게 되자 새로운 경기변동 측정방법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는 1979년 3월부터 새로운 경기지표의 개발에 착수하였고, 1979년 하반기에 경기변동의 방향과 전환점은 물론 속도까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경기종합지수 개발을 위해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관련자료와 CI작성 프로그램을 입수하였고, 1980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결실을 본 것은 기준순환일이었다. 1961년 8월의 경기 저점에서부터 1978년 8월의 경기 정점까지 8회의 경기 전환점을 확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작성한 최초의 기준순환일이다(부록1 참조).

이후 경기종합지수의 가중치산정, 구성지표 선정 과정을 거쳐 1981년 3월 총 19개 지표(선행 9개, 동행 5개, 후행 5개)로 구성된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하였다. 이후, 경기종합지수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을 측정하고 예측하기 위한 주 경기지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최초 발표 시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경제부문	선행	동행	후행
고용	제조업 입직률	제조업근로자수	
투자투자	건축허가면적		내구생산재 생산지수
	기계수주액(민간)		기계류수입액
재고	제조업재고율지수		
금융, 비용	종합주가지수		단위노동비용
			제조업 시설자금대출금
통화	통화(M ₁ , 말잔)		일반은행 요구불예금 회전을
무역	L/C 내도액		
	수출액		
	I/L 발급액		
생산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소비, 판매		생산지출하지수	
		서울도소매 판매액지수	

경기종합지수는 1981년 3월에 처음으로 공표된 이후 현실 경기 반영도 제고를 위하여 2012년 말까지 모두 8회의 개편 작업이 실시되었다.

제1차 개편은 197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시작된 경기 하강국면이 완전히 경과되고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1983년부터 추진하였다. 제1차 개편은

경기종합지수의 기준년도를 각종 경제지표의 기준년도(1980)와 일치시키고, 구성지표 및 작성방법을 검증·보완하고, 최근의 기준순환일을 검증하여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1984년 3월에 결과를 공표하였다. 총 구성지표수를 종전의 19개 지표에서 22개로 확대하였다(부록2 참조). 선행지수에서 금융부문의 비중을 높이고 무역부문의 비중을 축소하였으며, 후행지수에서는 재고와 통화·금융부문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제2차 개편은 제1차 개편지수 공표 이후 3년 이상이 경과되고 최근의 경기순환 국면 완료와 경제지표의 기준년도가 변경(1980 → 1985)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1988년 7월에 공표하였다. 총 구성지표수는 21개 지표로 종전에 비해 1개 지표가 축소되었다(부록2 참조). 선행지수의 구성지표수는 10개로 종전과 동일하나 총건축허가면적을 건축허가면적(산업+주거용)의 전년동월비, 민간기계주주액을 기계주주액(민간+공공)의 전년동월비 계열로 대체하였으며, 후행지수에서는 제조업시설자금 대출금과 일반은행예대율을 제외하고, 제조업임금(보너스 제외)을 추가하여 구성지표수가 종전의 7개에서 6개 지표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행지수는 종전과 동일한 지표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제3차 개편은 1990년 연말부터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1991년 9월에 공표하였다. 이는 1987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발생하여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노사분규가 1988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내수와 건설 위주로 변경되었으며, 1986년 이후 흑자를 보여 왔던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등 경제여건과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이와 함께 1990년 하반기부터 경기종합지수의 경기 측정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함에 따라 경기 반영도를 점검한 결과 기존의 구성지표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총 구성지표수를 23개로 확대하였는데 당시의 경기가 건설 관련 부문의 영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구성지표에 건설관련 지표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부록2 참조).

제4차 개편은 제3차 개편 이후 선행지수가 동행지수 및 GNP의 움직임을 따라 보이고 있고, 1989년 7월의 경기 저점 이후 약 50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나 최근의 기준순환일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다른 경제지표들의 기준년도가 1985년에서 1990년으로 변경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1993년 9월에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총 구성지표수는 제3차 개편과 동일하나 선행과 후행지수의 구성지표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부록2 참조). 선행지수는 예금은행대출금과 L/C 내도액을 추가하고, 기계주주액(민간+공공)의 전년동월비를 기계주주액(민간+공공)으로, I/L 발급액 전년동월비를 I/L 발급액으로 대체하였으며, 회사채유통수익률과 수출액을 제외하였다. 후행지수는 내구소비재 출하

지수를 추가하고, 시중은행 요구불예금회전율을 회사채유통수익률로 대체하였으며, 자본 재생산지수를 제외하였다.

제5차 개편은 그간의 경제 여건과 구조의 변화를 경기종합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1997년 2월에 결과를 공표하였다. 1996년 들어 반도체 가격의 급락 등 교역조건의 악화와 엔저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과 GDP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의 순환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경기는 하강국면에 진입하였다. 또한 1996년 12월에 OECD 가입으로 금융과 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한 경제구조의 선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함께 「노동법」의 개정에 따른 총파업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경제 성장이 수출과 설비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등 경제 여건과 상황이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구성지표수는 종전의 23개에서 26개 지표로 확대되었다(부록2 참조). 선행지수에서는 내구소비재 출하지수와 수출용원자재 수입액을 추가하고, 중간재출하지수의 전년동월비를 중간재출하지수로, 제조업재고율지수를 재고순환지표로 대체하였으며, 예금은행대출금과 1/L 발급액을 제외하였다. 동행은 제조업전력사용량과 수출액을 추가하고, 비농가취업자수를 노동투입량(전산업)으로 대체하였으며, 후행지수는 근로자수(총)를 추가하고, 회사채유통수익률(전년동월비)을 회사채유통수익률로, 내구소비재출하지수를 가계소비지출(전가구)로 대체하였다.

제6차 개편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경기종합지수 작성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경기종합지수의 작성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현실 경제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2003년 2월에 개편 결과를 공표하였다.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해 GDP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반전되었고, 대다수의 경제지표들 또한 급락하는 등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과 설비투자가 위축되었으며 특히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더욱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아울러 금리와 환율 등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되는 등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총 구성 지표수는 4개 축소되었다(부록2 참조). 선행지수의 경우 기업경기전망지수, 자본재수입액, 종합주가지수, 순상품교역



●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하는 e-나라지표 홈페이지
(www.index.go.kr)

조건을 추가하고, 기계수주(민간+공공)를 설비투자추계지수로, 건축허가면적(산업+주거용, 전년동월비)을 건축허가면적(총)으로, 총유동성을 실질계열로 대체하였으며, 건설용중간재 생산지수, 중간재출하지수, 수출용원자재 수입액 및 L/C 내도액을 제외하였다. 동행지수는 노동투입량(전산업)을 비농가취업자수로, 시멘트 소비량을 건설기성액으로 대체하고, 전력사용량(제조업), 비내구소비재 출하지수 및 생산자출하지수를 제외하였다. 후행의 경우 소비재수입액을 추가하고, 비농가실업률을 이직자 수로 대체하였으며, 기계류 수입액을 제외하였다.

제7차 개편은 경기종합지수가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영향이 과다하게 작용하여 현실과 괴리를 보임에 따라 경기종합지수의 전체 경기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하고, 2000년 8월 경기 정점 이후의 순환국면에 대한 기준순환일을 설정할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어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2006년 2월에 공표하였다. 제6차 개편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IT제품 위주의 수출 호조에 의해 제조업 생산은 확대되는 반면 신용불량자와 가계 부채의 증가 등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어 내수와 수출 관련 지표들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총 구성지표 수를 2개 확대하였다(부록2 참조). 선행의 경우 소비자대지수와 장단기금리차를 추가하고, 제조업 임이직자비율을 구인구직비율로, 건축허가면적(총)을 건설수주액으로, 설비투자추계지수를 기계수주액(선박 제외)으로 대체하였으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제외하였다. 동행지수는 서비스업활동지수(도소매업 제외)와 내수출하지수를 추가하고, 수출액을 제외하였으며, 후행지수는 상용근로자수를 상용임시근로자수로 대체하였다.

제8차 개편은 제7차 개편 이후 5년 이상이 경과되고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급속한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저효과 등으로 선행지수의 경기 반영도가 약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종합지수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2012년 2월에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총 구성지표수를 종전의 23개에서 21개 지표로 2개 축소하였다(부록2 참조). 선행지수는 국제원자재 가격지수를 추가하고, 기계수주액을 기계류내수 출하지수로, 순상품교역조건을 수출입물가비율로 대체하였으며, 자본재수입액과 총유동성(M3)을 제외하였다. 동행지수는 도소매업 판매액지수를 소매판매액지수로, 비농가취업자 수를 비농림어업취업자 수로 대체하고, 제조업가동률지수를 제외하였으며, 후행지수는 상용임시근로자 수를 상용근로자 수로 대체하였다.

8차례의 경기종합지수 개편 작업을 해오면서 현실 경기의 반영도 제고를 위한 구성지표 변경뿐만 아니라 구성지표의 불규칙 변동 조정, 가중치 산출, 순환변동치 산출, 계절조정 방법 등과 같은 작성방법의 개선과 기준년도 변경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부록3 참조).

경기종합지수와는 별도로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어 지역경기 측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지역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 통계청과 충남, 충북, 대전 및 대구광역시 시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통계청에서는 1999년 11월에 『지역경기종합지수 작성요령』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기종합지수 작성에 필요한 각종 기법 및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1999년 12월에 충청지역의 경기종합지수가 통계작성승인을 받음으로써 시도 단위의 지역경기종합지수가 공식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각각 작성승인을 받았으며, 이어 제주도(2004), 전라북도(2005) 등에서 작성승인을 받았다.



● 광주지역 경기종합지수 개발 (2009)

지역경기종합지수 작성승인 현황

통계 명칭	작성승인 번호(승인 일자)	비고
충청북도 경기종합지수	21204(1999. 12. 22)	
대구광역시 경기종합지수	20304(2000. 02. 04)	
대전광역시 경기종합지수	20607(2000. 08. 16)	
제주특별자치도 경기종합지수	21804(2004. 02. 18)	
전라북도 경기종합지수	21404(2005. 06. 01)	
인천광역시 경기종합지수	20408(2009. 03. 09)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21308(2009. 04. 29)	2000. 07. 05 작성승인, 2006. 04. 14 재승인
경상남도 경기종합지수	21708(2011. 02. 10)	
부산광역시 경기종합지수	20210(2011. 07. 08)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21609(2014. 05. 01)	

경기확산지수

개요

●● ‘경기확산지수’란 반복성, 파급성, 다양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경기변동이 특정 부문에서 시작하여 점차 다른 부문으로 확산, 파급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지표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이나 지표 간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변화방향만을 종합¹⁴하여 지표화한 것이다. 따라서 경기확산지수는 경기의 확산 부문과 전환점의 측정은 가능하나 속도의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발전과정

195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된 경기확산지수는 일본에서는 1960년부터, 미국에서는 1961년부터 공식적인 경기지표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국생산성본부(1964~1970)와 한국은행(1971)에서 경기확산지수를 작성하였으나 내부적으로만 사용되었다. 통계청(당시 조사통계국)에서도 1979년

에 종합경기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기확산지수의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작성된 경기확산지수와 경기종합지수와의 차이 등으로 발표하지 않고 경기변동 측정을 위한 내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였다.

그러다가 2007년 2월에 경기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제조업부문의 65개 지표로 이루어진 '제조업 생산확산지수'를 처음으로 발표하였으며, 2008년에는 구성지표를 148개로 확대한 '생산확산지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9년에는 다시 구성지표를 165개로 확대하는 한편 광공업과 서비스업을 분리한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확산지수'로 변경하여 작성공표하고 있다.

2013년 관세청에서 무역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경기 예측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법'에 의해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3404호)로 작성승인을 받아 '무역경기확산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무역경기확산지수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유일한 경기확산지수이며 현재 매월 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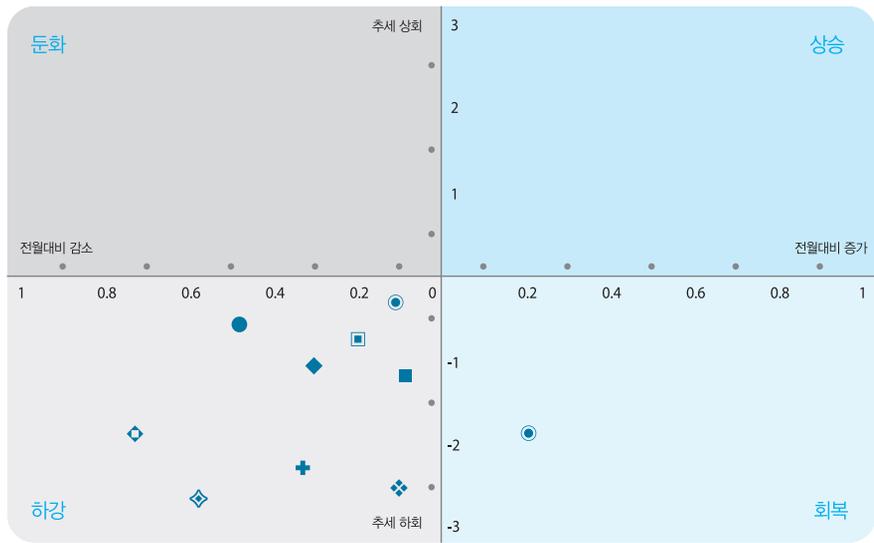
경기순환시계

'경기순환시계'란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상승, 둔화, 하강, 회복의 4가지 국면 중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4분면 좌표 평면상에서 시계처럼 보여주는



● 무역경기확산지수를 발표하는 한국무역통계연구원 홈페이지(www.trass.or.kr)

14 금월과 비교시점의 크기를 비교하여 변화 크기에 관계없이 증가한 경우 '+', 감소한 경우 '-', 동일한 경우 '0'으로 표기하고, 전체 구성지표 중 증가지표 수의 비율(금월 증가지표 수 + 동일 구성지표 수 × 0.5) / 구성지표 수)을 계산하여 금월 확산지수를 작성한다.



도구를 의미한다. 즉, 산업생산지수, 수출액, 취업자 수 등과 같은 주요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이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시계처럼 알려주며, 엄밀한 의미에서 종합경기지표라 볼 수 없으나, 각각의 지표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경기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종합경기지표에 분류하였다. 경기순환시계는 상승 시기를 녹색(1/4분면), 둔화시기를 주황색(2/4분면), 하강시기를 빨간색(3/4분면), 회복 시기(4/4분면)를 노란색으로 표시하여, 지표들이 어느 색깔(분면)에 많이 있는지를 보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여부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경기순환시계는 경기종합지수나 다른 경기지표처럼 경기 전환점이나 변동의 속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계량화하여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과거의 특정 시점에 대해서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위의 그림과 같이 2008년 12월 당시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을 대다수의 지표들이 좌측 하단(3/4분면)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경기순환시계는 최근에 개발된 방법 중의 하나로 주요 개별지표가 경기순환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시계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2000년대에 유럽에서 개발되었다. 현재 네덜란드, 독일, OECD, EUROSTAT 등에서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에 통계청에서 GDP, 수출, 수입, 고용률, 실업률, 생산자물가, 산업생산, 건설기성액 등 11개 지표를 이용하여 경기순환시계를 처음으로 작성하였다. 이후 2013년 11월에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도 무역경기순환시계(Trade Business Cycle Clock, TBCC)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무역경기순환시계는 수출품목 4개(식품 및 직접

소비재, 원료 및 연료, 경공업품, 중화학공업품)과 수입품목 3개(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등 7개 품목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경기순환시계는 통계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으나, 2종 모두 「통계법」에 의해 작성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승인 통계이다.

경기전망조사

•• ‘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에 의한 경기 측정방법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전망을 조사하여 경기변동을 측정하거나 예측하는 방법이다. 경기전망조사는 조사대상에 따라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와 ‘소비자 경기전망조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조사에 의해서 작성되는 지수는 각각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와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CSI)가 있다. 한편, 이 중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전반적인 경기 및 경영 상태 등을 조사하는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와 설비투자 상황 및 전망을 조사하는 ‘설비투자전망조사’로 세분화할 수 있다.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개요

••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란 기업경영 활동의 실적과 계획 및 경기 동향에 관한 기업경영자의 판단을 설문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경기를 판단하고 예측하는 단기 경기예측 방법 중의 하나이다. 기업경기전망조사는 조사가 용이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경기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조사가 ‘경기가 좋음’ 혹은 ‘경기가 나쁨’과 같은 방향조사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변화 방향만 측정이 가능할 뿐 경기변동의 속도와 경기 전환점의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발전과정

••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는 1920년대부터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에는 영국산업연합(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독일의 IFO 경제연구소 등 민간협회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국가통계작성기관인 프랑스의 INSEE,

캐나다 통계청 등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등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하반기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종별 경기동향의 예측'이라는 조사를 실시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계법」에 의해 작성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것은 1965년 2월에 한국산업은행에서 분기별로 실시한 '주요기업체 단기경기관측조사'가 처음이다.

이후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등에서 45종의 '기업경기전망조사'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현황 참조). 1990년 이전의 기업경기전망조사는 대부분 분기별 조사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등에서 속보성을 충족하기 위한 월별 경기전망조사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처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조사에서 FAX를 포함한 우편조사, 전화조사 등 다양화 되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보급에 따라 온라인 인터넷 조사도 실시되고 있다.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현황

조사명칭	작성기관	주기	작성승인	중지승인	비고
업종별경기동향의 예측	한국생산성본부	분기	미승인		1964 하반기 조사 실시
주요기업체단기경기관측조사	한국산업은행	분기	1965. 02. 10	2008. 06. 19	'KDB 산업경기전망조사'로 명칭 변경(1996. 09. 23)
주요기업의 단기예측조사	한국은행	분기	1966. 07. 05	1892. 12. 30	
기업경기전망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분기	1975. 01. 07	2008. 06. 25	1972부터 작성
수출경기판단지수	한국무역협회	분기	1976. 07. 05	1995. 12. 27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로 명칭 변경(1979. 12)
수출산업동태조사	한국무역협회	분기	1976. 07. 13	1978. 02. 10	'수출경기판단지수'에 통합(1978. 02. 10)
기업경기동향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월	1976. 08. 18	2008. 06. 25	1967부터 작성
단기경기전망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분기	1976. 09. 30	1983. 01. 23	
서울지역시장 경기전망조사	한국생산성본부	분기	1977. 03. 18	1984. 03. 22	'유통경기전망조사'로 명칭 변경(1983. 07. 18)
경기동향의 분석과 예측	한국생산성본부	반기	1977. 03. 18	1983. 01. 05	'종합 및 업종별 경기 전망조사'로 명칭 및 반기로 주기 변경(1979)
주택건설경기전망조사	한국주택은행	분기	1978. 08. 24	1998. 07. 01	
중소제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은행	분기	1979. 09. 14		1973부터 작성
주요업종별수출전망 및 수출애로요인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정기	1980. 07. 16	1983. 01. 01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통계청	분기	1983. 1/4	1991. 11. 20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경상북도	분기	1985. 02. 01	1990. 03. 13	
100대기업 새해경기전망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1년	1988. 11. 29	1992. 11. 27	
경제전망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분기	1990. 07. 05	1996. 03. 28	

조사명칭	작성기관	주기	작성승인	중지승인	비고
거시경제지표 전망조사	한국은행	분기	1991. 05. 03	1996. 05. 30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월	1991. 06. 27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1년	1998. 11. 13	2002. 05. 01	
중소제조업 경기국면지수 및 경영환경지수	중소기업청	월	2001. 04. 26	2006. 07. 06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	월	2001. 08. 06		
제조업경기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분기	2002. 01. 21		
전자상거래기업 경기전망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분기	2002. 02. 20	2008. 04. 27	
월간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월	2002. 03. 22		
수출산업 경기전망조사	한국무역협회	분기	2002. 30. 28		
철강경기실사지수	한국철강협회	분기	2002. 10. 08	2007. 04. 13	
부품소재산업 경기전망조사	산업통상자원부	1년	2002. 11. 12	2009. 12. 15	
정보통신산업기업 경기실사지수	정보통신부	월	2003. 04. 30	2013. 10. 28	
정보통신산업 기업경기조사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외 2개기관	월	2003. 10. 28		
전자산업 경기전망조사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원	1년	2003. 11. 15	2010. 07. 12	
재래시장 경기실사지수	전국경제인연합회	분기	2004. 3. 30	2006. 02. 01	
시장경기동향조사	시장경영진흥원	월	2005. 7. 6	2014. 10. 28	
산업단지 경기전망조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분기	2005. 8. 17	2009. 01. 05	
기업금융 체감지수조사	한국산업은행	반기	2007. 2. 15	2008. 07. 16	

그러나 2014년 말 현재,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기업경기전망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등 7개 기관의 7종이 월 또는 분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표,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내용 참조).

주요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내용

작성기관	① 중소기업은행	② 한국은행	③ 중소기업청
조사 명칭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기업경기조사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최초 작성	1973 4/4분기	1991 3/4분기	2001. 08
조사 대상	종업원 5인~300인 이하의 3,070개	전국 2,592개지역 6,731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3,200개
대상 업종	중소제조업	전국(제조업 중분류 23개) 비제조업(대분류 13개) 지역(제조업, 비제조업)	소매업, 음식업, 택시운송업, 부동산중개업, 교육서비스업 등
조사 방법	방문조사	우편조사(FAX)	전화조사
작성 주기	분기	월	월

작성기관	① 중소기업은행	② 한국은행	③ 중소기업청
대상 기간	당 분기 실적 익 분기 전망	당 월 실적 익 월 전망	당 월 실적 익 월 전망
조사 항목	전반적 경기, 수주 동향, 판매 동향, 자금 사정, 설비 및 고용사정 등 14개 항목경영상 애로 요인	제품재고, 생산설비, 설비투자규모, 인력사정, 신규수주, 생산규모, 가동률, 매출규모, 채산성 등	경기전반, 매출, 자금사정, 고용 등

작성기관	④ 산업통상자원부	⑤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⑥ 한국무역협회	⑦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협회
조사 명칭	제조업경기조사	월간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정보통신산업기업 경기실사조사
최초 작성	2002. 01	2002. 03	2002. 03	2003. 10
조사 대상	3,206개	1,500개	2,000개	1,312개
대상 업종	제조업	중소제조업	수출업	정보통신산업
조사 방법	온라인 인터넷	우편조사	방문조사	우편, FAX
작성 주기	분기	월	분기	월
대상 기간	당 분기 실적 익 분기 전망	당 월 실적 익 월 전망	당 분기 실적 익 분기 전망	당 월 실적 익 월 전망
조사 항목	당 분기 및 익 분기 업황경영실적, 자금사정 등	월간 경기동향, 전망 및 실적, 생산, 설비, 제품재고, 종사자수, 가동률, 생산설비 등	수출경기, 자금사정, 수출경기전망, 애로요인 등 12개 항목	기업 현황, 호전 요인, 부진 요인, 생산 활동, 경영 상황 등

설비투자전망조사

개요

●● ‘설비투자전망조사’란 설비투자와 관련한 향후 계획이나 전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한 조사이다.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의 발주에 따라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는 수요 측면의 효과와 신설된 설비가 일정 시간 후에 생산능력의 확대에 이어지는 생산 측면의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7~11년의 순환주기를 갖는 유글라 순환(Jugular cycle)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다.

〈유글라 순환이란〉

유글라 순환의 주요 요인은 기업의 설비투자 변동으로 보는데,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가져오고 생산의 과잉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경기순환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설비투자가 약 10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데 설비투자의 중심이 되는 것은 기계로서 이 기계의 사용연수가 대체로 10년 전후이기 때문에 설비투자는 10년마다 경신된다는 가정 하에 출발한 이론이다. 따라서 유글라 순환은 설비투자 순환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설비투자전망조사는 다른 경기변동 측정방법과는 달리 경기변동의 현황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향후의 설비투자 변동과 시간을 특정(特定)할 수는 없지만 설비투자의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미래의 경기변동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설비투자전망조사가 공식적으로 실시된 것은 1965년 2월에 작성승인을 받은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가 최초이다.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1976), 대한상공회의소(1978), 중소기업중앙회(1988), 중소기업은행(1990) 등에서 총 21종의 설비투자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중에서 7종만이 2회 이상의 조사(표, 주요 설비투자전망조사 현황 참조)를 실시하였을 뿐 나머지 14종은 1회한 조사라는 다소 특이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2014년 말 현재 계속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설비투자조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와 중소기업은행의 '중소제조업설비투자전망조사' 등 2종에 불과하다. 1965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하였으나 2010년부터 한국산업은행에서 분리된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작성되고 있다. 이 조사는 국내 주요기업의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을 조사함으로써 업종별 설비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설비투자의 연구 및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014년 현재 378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산형태별 설비투자 11개 항목, 투자동기별 설비투자 11개 항목, 설비자금 조달방법 10개 항목, 주요 설비투자 내용, 투자 결정 요인, 설비투자 확대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설비투자전망조사 현황

조사명칭	작성기관	주기	작성승인	중지승인	비고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	한국산업은행	반기	1965. 02. 10		2010. 09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작성기관 변경
기업시설 투자동향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1년	1976. 09. 30	2008. 06. 25	작성기관 지정철회
설비투자동향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반기	1978. 01. 11	1983. 01. 01	상동(上同)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부정기	1988. 07. 04	1994. 11. 25	
설비투자동향조사	통계청	분기	1990. 3/4	1991. 11. 20	
중소제조업 설비 투자 전망조사	중소기업은행	반기	1990. 11. 22		
200대 주요기업 설비투자계획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반기	1998. 12. 22	2008. 10. 16	

한편 1990년에 작성승인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조사하여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 중 307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비투자 금액 8개 항목, 설비투자 실시 또는 설비투자 계획 사유, 자금 조달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설비투자전망조사 내용

작성기관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조사 명칭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
최초 작성	1965. 02	1990. 11
조사 대상	3,788개	3,070개
대상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중소제조업
조사 방법	전화조사	우편조사
작성 주기	반기	반기
대상 기간	당 년 실적의 년 계획	당 반기 실적의 반기 전망
조사 항목	자산형태별 설비투자(11개 항목), 투자 동기별 설비투자(11개 항목), 설비자금 조달방법(10개 항목), 주요 설비투자 내용(프로젝트 별), 투자결정 요인, 설비투자 확대·부진 이유, 녹색 관련 투자 등	연도별 설비투자 금액(8개 항목), 투자실시 또는 투자계획 여부 및 사유, 설비투자의 주된 요인, 자금 조달 애로사항 등

소비자경기전망조사

개요

●● 기업경기전망조사가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경기전망조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소비자경기전망조사는 국민경제에서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 부문에 대해 소비 주체인 소비자들의 생활형편, 소비지출 계획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발전과정

●● ‘소비자경기전망조사’는 1982년 12월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반기별 ‘서울시소비자 태도조사’를 실시한 것이 최초이나 당시에는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1990년에 작성이 중지되었다. 그후 삼성경제연구소(1991)와 현대경제연구원(1995), 서울연구원(2008)에서 미승인 분기통계로 작성되었으나, 2014년 말 현재는 서울연구원의 조사를 제외하고 작성 중지된 상태이다(표. 소비자경기전망조사 현황 참조).

2014년 말 현재 국가승인 소비자경기전망조사는 1998년에 개발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가 유일하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는 전국의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조사로 1998년에 개발되었으나, 1999년에 2000가구를 표본으로 개발된 통계청의 월별 ‘소비자경기전망조사’와 2008년에 일원화되면서 월별 조사로 변경하였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소비자경기전망조사는 조사대상, 조사주기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2종의 유사한 통계를 작성하여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응답자의 응답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분기별 조사에서 월별 조사로 변경하고, 통계작성기관을 일원화하면서 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를 2008년에 작성중지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동향조사의 조사대상 규모를 2200개로 축소하는 한편, 조사 항목을 20개 항목(경제인식 2개, 경제전망 8개, 소비지출 계획 4개, 소비지출 금액 6개)으로 확대하여 금월 동향과 다음 달 전망에 대해 우편 및 전자조사시스템에 의해 조사하고 있다.

소비자경기전망조사 현황

조사명칭	작성기관	주기	작성승인	중지승인	비고
서울시소비자 태도조사	전국경제인 연합회	반기	1982. 12. 29	1990. 03. 13	
소비자태도조사*	삼성경제연구소	분기			1991 4/4 작성시작 현재 작성중지 상태
가계생활지수*	현대경제연구원	분기			1995 2/4분기 시작 현재 작성중지 상태
소비자동향조사	한국은행	월	1998. 08. 19		2008 작성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변경
소비자전망조사	통계청	월	1999. 05. 24	2008. 09. 12	
서울지역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조사*	서울연구원	분기			2008 3/4 작성시작

주: * 표시는 미승인 통계(작성기관도 통계작성기관이 아님)

04

맺음말

•• 경기변동 측정을 위해 통계청에서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 경제부문별 경기과약을 위해 매월 작성하고 있으며 경기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경기종합지수,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확산지수와 경기순환시계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7개 기관에서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를,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중소기업은행에서 설비투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전망조사, 관세청에서 무역부문의 경기확산지수와 경기순환시계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지표들이 작성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서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변동 측정을 시작한 지 반세기가 넘어 그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경기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경기지표를 작성하거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초기에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같은 소수의 민간기관에서 담당하였으나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경기측정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였고, 한국은행을 비롯한 한국개발연구원, 민간 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서 경기변동 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경기변동 측정에서는 처음에는 기업경기전망조사로 시작하였으나 그 후 계량경제모형, 경기예고지표, 경기종합지수, 경기확산지수가 순차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경기순환시계뿐만 아니라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conomic Sentiment Index, ESI)도 작성되고 있어 현재까지 개발된 거의 모든 경기변동 측정 수단이 우리나라에서 작성 중에 있다.

업무 수행능력도 통계청의 경우 기준순환일 설정과 경기종합지수의 개편 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이 개발된 작성기법이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기 통계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작성 방법도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계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업경기전망조사, 소비자경기전망조사와 같은

조사를 통해 경기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경기지표 작성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이 적어 경기통계 작성기관들의 경기변동 측정 능력이나 경기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인프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기통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선도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기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들 간 전문지식 및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새롭고 지속적인 경기통계의 개발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개발된 각종 방법과 기법들을 도입하여 사용한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본다면 앞으로 경기변동을 가능한 조기에 예측하고, 측정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기분야 통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사용 중에 있거나 개발되어 있는 각종 기법은 물론 새로운 기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개발 또는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진국의 개발 또는 연구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흐름과 보조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 통계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구조와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는 경기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 기초통계뿐만 아니라 지역을 포함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미시 기초통계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분석 지표로 사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시계열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함께 한발 앞선 기초통계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경기통계 개발과 종합적으로 경기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경기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 적합한 경기측정 수단을 개발하는 동시에 자체 계량 경제모형의 개발·운용을 통해 경기변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문기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및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통계청 및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 관련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다른 경기통계 작성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공유함으로써 저변 확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기통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외 경기 관련 지표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세계화의 진전으로 경제 블록이 단일화되고 있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해외경기의 변동 원인 파악과 함께 해외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영향력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급변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시의적절하게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속보성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경기 관련 지표들이 조사통계 위주로 되어 있어 현장조사에 따른 자료수집 및 가공시간의 소요로 시의성이 다소 떨어지나 정부 및 민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작성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카드 승인, 모바일 폰 이용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속보성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마스킹기법의 개발과 함께 관련 자료를 통계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겠다.

01 부록

기준순환일

의의

●● 기준순환일(基準循環日, Reference Turning Dates 혹은 Reference Dates)이란 한 나라의 전체적인 경기변동의 전환 시점(경기정점peak, 경기저점trough)을 의미하며, 개별 경제지표를 선행(先行), 동행(同行), 후행(後行)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기준순환일을 설정하는 것은 경기확장국면, 경기수축국면과 같은 경기변동국면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인 동시에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기준순환일은 산업생산, 소비 등 주요 월별 경제지표와 경제 총량지표인 GDP 등 주요 동행성 지표들의 전환점과 이들 지표들을 이용하여 작성한 역사적 확산지수(HDI)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을 검토하고 당시의 경제여건과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통계청에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

1960년대의 기준순환일

●●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이용 가능한 경제지표의 종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최초로 기준순환일을 설정할 때에는 산업생산지수의 움직임을 주로 이용하였다. 즉, 산업생산지수만이 1960년 1월부터 자료가 존재하고, 생산자출하지수가 1968년 1월부터, 나머지 지표는 1970년 1월 이후 생산되어 이용이 어려웠다. 1960년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4회의 경기 전환점이 나타났다. 동 기간 중 확장(저점 → 정점) 기간은 38개월, 수축(정점 → 저점) 기간은 26개월이며 평균 순환기간은 약 5년(64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 기준순환일

구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점	정점	저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1961. 08	1963. 02	1965. 02	18	24	42
제2순환기	1965. 02	1969. 12	(1972. 03)	58	(27)	(85)
평균				38	(26)	(64)

1970년대 이후의 기준순환일

•• 1970년대에 들어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개발되고, 시계열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기준순환일 설정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의 종류도 확대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의 기준순환일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종합적인 의미의 기준순환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9회의 경기순환이 완료되었고, 현재 제10순환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동 기간 중 확장기 평균 지속기간은 31개월이며, 수축기는 18개월로 확장기가 약 1년 정도 길며, 전체적인 순환기 지속기간은 평균 4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의 기준순환일

구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점	정점	저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1972. 03	1974. 02	1975. 06	23	16	39
제2순환기	1975. 06	1979. 02	1980. 09	44	19	63
제3순환기	1980. 09	1984. 02	1985. 09	41	19	60
제4순환기	1985. 09	1988. 01	1989. 07	28	18	46
제5순환기	1989. 07	1992. 01	1993. 01	30	12	42
제6순환기	1993. 01	1996. 03	1998. 08	38	29	67
제7순환기	1998. 08	2000. 08	2001. 07	24	11	35
제8순환기	2001. 07	2002. 12	2005. 04	17	28	45
제9순환기	2005. 04	2008. 01	2009. 02	33	13	46
제10순환기	2009. 02	2011. 08 ^p		30		
평균				31	18	49

주: p: 잠정

02 부록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변천

(○ : 추가, △ : 대체, • 동일)

구분	최초 공표(1981. 03)	제1차 개편(1984. 03)	제2차 개편(1988. 07)
	19개 지표 (선행 9, 동행 5, 후행 5)	22개 지표 (선행 10, 동행 5, 후행 7)	21개 지표 (선행 10, 동행 5, 후행 6)
선행	• 제조업 입직률	• 제조업 입직률 ○ 제조업평균근로시간	• 제조업 입직률 • 제조업평균근로시간
	• 건축허가면적(총)	• 건축허가면적(총)	△ 건축허가면적(산업 + 주거, 12MS)
	• 기계수주액(민간)	• 기계수주액(민간)	△ 기계수주액(민간 + 공공, 12MS)
	• 재고율지수(제조업)	• 재고율지수(제조업)	• 재고율지수(제조업)
	• 종합주가지수	• 종합주가지수	• 종합주가지수
	• 통화(M ₁ , 말잔)	△ 통화(M ₁ , 평잔) ○ 총유동성(M ₃ , 12MS)	• 통화(M ₁ , 평잔) • 총유동성(M ₃ , 12MS)
	• L/C 내도액	• L/C 내도액	• L/C 내도액
	• 수출액	△ 수출액(12MS)	• 수출액(12MS)
동행	• L/발급액		
	• 제조업근로자수	• 제조업근로자수	• 제조업근로자수
	• 산업생산지수	• 산업생산지수	• 산업생산지수
	• 생산자출하지수	• 생산자출하지수	• 생산자출하지수
	• 제조업가동률지수	• 제조업가동률지수	• 제조업가동률지수
후행	• 서울도소매판매액지수	• 서울도소매판매액지수	• 서울도소매판매액지수
	• 단위노동비용	• 단위노동비용	• 단위노동비용 ○ 제조업임금(보너스 제외)
	• 내구생산재생산지수	• 내구생산재생산지수	• 자본재생산지수(명칭 변경)
	• 기계류수입액	• 기계류수입액	• 기계류수입액
		• 생산자제품재고지수(12MS)	• 생산자제품재고지수(12MS)
	• 일반은행요구불예금회전율	• 일반은행요구불예금회전율	• 시중은행요구불예금회전율
	• 제조업시설자금대출금	• 제조업시설자금대출금	
		○ 일반은행예대율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변천

(○ : 추가, △ : 대체, • 동일)

구분	제3차 개편(1991. 09) 23개 지표 (선행 10, 동행 8, 후행 5)	제4차 개편(1993. 09) 23개 지표 (선행 10, 동행 8, 후행 5)	제5차 개편(1997. 02) 26개 지표 (선행 10, 동행 10, 후행 6)
선행	△ 입이직자비율(제조업)	• 입이직자비율(제조업)	• 입이직자비율(제조업)
	○ 원재료출하지수(12MS)	○ 중간재출하지수(12MS)	△ 중간재출하지수
	△ 건축허가면적 (산업 + 주거, 12MS)	△ 건축허가면적 (산업 + 주거, 12MS)	△ 건축허가면적 (산업 + 주거, 12MS)
	○ 건설용제품원재료 생산지수, (12MS)	• 건설용중간재 생산지수, (12MS)	• 건설용중간재 생산지수, (12MS)
	• 기계수주액 (민간 + 공공, 12MS)	△ 기계수주액 (민간 + 공공, 선박 제외)	△ 기계수주액 (민간 + 공공, 선박 제외)
	• 재고율지수(제조업)	• 재고율지수(제조업)	△ 재고순환지표(출하(12MS) - 출하(12MS), 제조업)
	○ 회사채수익률(12MS)	○ 예금은행대출금(말잔, 12MS)	
	• 총유동성(M ₃ , 12MS)	• 총유동성(M ₃ , 12MS)	• 총유동성(M ₃ , 12MS)
	• 수출액(12MS)	• L/C 내도액	• L/C 내도액
	○ I/L 발급액(12MS)	△ I/L 발급액	
동행	△ 비농가취업자수	• 비농가취업자수	△ 노동투입량(전산업)
	• 산업생산지수	• 산업생산지수	• 산업생산지수
	• 생산자출하지수	• 생산자출하지수	• 생산자출하지수
	• 제조업가동률지수	• 제조업가동률지수	• 제조업가동률지수
			○ 전력사용량(제조업)
	• 도소매판매액지수	• 도소매판매액지수	• 도소매판매액지수
	○ 비내구소비재출하지수	• 비내구소비재출하지수	• 비내구소비재출하지수
	○ 시멘트소비량	• 시멘트소비량	• 시멘트소비량
○ 수입액	• 수입액	• 수입액	
후행	○ 비농가실업률	• 비농가실업률	• 비농가실업률
			○ 근로자수(총)
	• 자본재생산지수	○ 내구소비재출하지수	△ 가계소비지출(전가구)
	• 기계류수입액	• 기계류수입액	• 기계류수입액
	• 생산자제품재고지수(12MS)	• 생산자제품재고지수(12MS)	• 생산자제품재고지수(12MS)
	• 시중은행요구불예금회전율	△ 회사채유통수익률(12MS)	△ 회사채유통수익률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변천

(○ : 추가, △ : 대체, • 동일)

	제6차 개편(2003. 02)	제7차 개편(2006. 02)	제8차 개편(2012. 02)
구분	22개 지표 (선행 9, 동행 7, 후행 6)	24개 지표 (선행 10, 동행 8, 후행 6)	21개 지표 (선행 9, 동행 7, 후행 5)
선행	• 입이직자비율(제조업)	△ 구인구직비율	• 구인구직비율
	○ 기업경기전망지수(실적)		
	△ 건축허가면적(총)	○ 소비자기대지수	• 소비자기대지수
	○ 자본재수입액(실질)	△ 건설수주액(실질)	△ 건설수주액(실질)
	△ 설비투자추계지수	• 자본재수입액(실질)	
	• 재고순환지표(출하(12MS) - 출하(12MS), 제조업)	△ 기계수주액(선박 제외, 실질)	
	△ 증유동성(M ₃)	• 재고순환지표(출하(12MS) - 출하(12MS), 제조업)	△ 재고순환지표(출하(12MS) - 출하(12MS), 제조업)
	○ 종합주가지수	• 증유동성(M ₃)	
	○ 순상품교역조건	• 종합주가지수	• 코스피지수(명칭 변경)
		○ 장단기금리차	• 장단기금리차
동행	△ 비농가취업자수	• 순상품교역조건	△ 수출입물가비율
	• 산업생산지수		○ 국제원자재가격지수
	• 제조업가동률지수	• 비농가취업자수	△ 비농림어업취업자수
		• 산업생산지수	• 광공업생산지수
		• 제조업가동률지수	
		○ 서비스업활동지수 (도소매업 제외)	• 서비스업생산지수 (도소매업 제외)
	• 도소매판매액지수	• 도소매판매액지수	△ 소매판매액지수
	△ 건설기성액(실질)	○ 내수출하지수	• 내수출하지수
	• 수입액	• 건설기성액(실질)	• 건설기성액(실질)
	• 수출액	• 수입액	• 수입액
후행	△ 이직자수	• 이직자수*	
	• 상용근로자수(총)	△ 상용임시근로자수(총)	△ 상용근로자수(총)
	• 도시가계소비지출	• 도시가계소비지출	• 도시가계소비지출
	○ 소비재수입액(실질)	• 소비재수입액(실질)	• 소비재수입액(실질)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회사채유통수익률	• 회사채유통수익률	• 회사채유통수익률

주: * 이직자수 통계작성 중단으로 2008부터 구성지표에서 제외

03 부록

경기종합지수 작성 내용의 변천

구분	개발	제1차 개편	제2차 개편	
구성지표	19개 지표	22개 지표	21개 지표	
	- 선행 9개	- 선행 10개	- 선행 10개	
	- 동행 5개	- 동행 5개	- 동행 5개	
	- 후행 5개	- 후행 7개	- 후행 6개	
작성방법				
	- 계절조정	X - 11 - ARIMA	X - 11 - ARIMA	X - 11 - ARIMA
- 불규칙조정	모든 구성지표에 2개월 이동평균 적용	모든 구성지표에 3개월 이동평균 적용	구성지표의 불규칙 정도에 따라 1 또는 3개월 이동평균 적용 (MCD가 2 이상일 경우 3개월 이동평균)	
- 구성지표의 진폭 평준화	구성지표별 절대치 평균	구성지표별 절대치 평균	구성지표별 절대치 평균	
- 목표추세	GNP	GNP	GNP	
- 가중치	적용(미국 상무성의 1975 평점체계를 도입, 기준별 점수를 조정, 사용)	적용(기준별 점수를 5점 단위로 변경)	적용(중전의 6개 기준에서 7개 기준(불변성 추가)으로 변경)	
- 순환변동치산출	3국면 평균법	3국면 평균법	3국면 평균법	
보조지표				
	- 선행 ¹⁾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평활화 전년동월비, 후행지수에 대한 동행지수 비율	선행지수 평활화 전년 동월비, 후행지수에 대한 동행지수 비율	선행지수 평활화 전년동월비
	- 동행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년도	1975	1980	1985	
기준순환일 설정	1960년~1978. 08 정점까지 설정	1978. 08 정점을 1979. 02로 변경, 확정 1980. 00 저점 설정 (잡정)	1980. 09 저점(확정) 1984. 02 정점 1985. 09 저점 설정(잡정)	
결과 공표	1981. 03	1984. 03	1988. 07	

주: 1)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984. 1월부터 작성 중지, 2012. 1월부터 다시 작성
후행지수에 대한 동행지수 비율은 1988. 04분 자료까지만 작성

경기종합지수 작성 내용의 변천

구분	제3차 개편	제4차 개편	제5차 개편
구성지표	23개 지표 - 선행 10개 - 동행 8개 - 후행 5개	23개 지표 - 선행 10개 - 동행 8개 - 후행 5개	26개 지표 - 선행 10개 - 동행 10개 - 후행 6개
작성방법			
- 계절조정	X - 11 - ARIMA	X - 11 - ARIMA	X - 11 - ARIMA
- 불규칙조정	구성지표의 불규칙 정도에 따라 1 또는 3개월 이동평균 적용(MCD가 2 이상일 경우 3개월 이동평균)	구성지표의 불규칙 정도에 따라 1 또는 3개월 이동평균 적용(MCD가 2 이상일 경우 3개월 이동평균)	구성지표의 불규칙 정도에 따라 1 또는 3개월 이동평균 적용(MCD가 2 이상일 경우 3개월 이동평균)
- 구성지표의 진폭 평준화	구성지표의 절대치 평균	구성지표의 절대치 평균	구성지표의 절대치 평균
- 목표추세	GNP	GNP	GDP
- 가중치	적용 안함(동일 가중치)	적용 안함(동일 가중치)	적용 안함(동일 가중치)
- 순환변동치산출	3국면 평균법	3국면 평균법	3국면 평균법
보조지표			
- 선행	선행지수 평활화 전년동월비	선행지수 평활화 전년동월비	선행지수 평활화 전년동월비
- 동행	동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기준년도	1985	1990	1990
기준순환일 설정	1984. 02 정점. 1985. 09 저점(확정) 1988. 01 정점. 1989. 07 저점 설정(잠정)	1988. 01 정점 1989. 07 저점(확정) 1991. 01 정점 설정(잠정)	1991. 01 정점을 1992. 01로 변경, 확정 1993. 01 저점(확정)
결과 공표	1991. 09	1993. 09	1997. 02

경기종합지수 작성 내용의 변천

구분	제6차 개편	제7차 개편	제8차 개편
구성지표	22개 지표 - 선행 9개 - 동행 7개 - 후행 6개	24개 지표 - 선행 10개 - 동행 8개 - 후행 6개	21개 지표 - 선행 9개 - 동행 7개 - 후행 5개
작성방법			
- 계절조정	X - 12 - ARIMA	X - 12 - ARIMA	X - 12 - ARIMA
- 불규칙조정	구성지표의 불규칙 정도에 따라 1 또는 3개월 이동평균 적용(MCD가 2 이상일 경우 3개월 이동평균)	선행 및 동행 구성지표 (수입액 제외) 모두에 3개월 이동 평균, 수입액은 4개월 이동 평균	선행 및 동행 구성지표 (수입액 제외) 모두에 3개월 이동평균, 수입액은 4개월 이동평균
- 구성지표의 진폭 평준화	구성지표의 표준편차	구성지표의 표준편차	구성지표의 표준편차
- 목표추세	GDP	GDP	GDP
- 가중치	적용 안함(동일 가중치)	적용 안함(동일 가중치)	적용 안함(동일 가중치)
- 순환변동치산출	3국면평균법	3국면평균법	3국면평균법
보조지표			
- 선행	선행지수 평활화 전년동월비	선행지수 평활화 전년동월비	선행지수순환변동치
- 동행	동행지수순환 변동치	동행지수순환 변동치	동행지수순환 변동치
기준년도	2000	2000	2010
기준순환일 설정	-	2000. 08월 정점(확정) 2001. 07 저점 2002. 12 정점 설정(잠정)	-
결과 공표	2003. 02	2006. 02	2012. 02



- 김경중, 『한국의 경제지표(개정 증보판)』, 매일경제신문사, 1993.
- 김민경, 『주요 통계업무 자료집(경제부문)』, 통계청, 2006.
- 김영국, 『경기순환론』, 법문사, 1988.
- 박찬문, 『經濟指標와 經濟分析』, 일신사, 1977.
- 변효섭, 『경기변동 측정방법의 이론과 실제』, 허원미디어, 2012.
- 변효섭, 『경기확산지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82.
- 서상목, 『景氣綜合指數 作成에 관한 研究報告書』, 1981.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景氣綜合指數 改編報告書』, 1984, 1988.
- 경제기획원·한국개발연구원, 『景氣綜合指數作成과 景氣動向分析』, 1981.
- 조사통계국 통계분석과, 『景氣綜合指數 改編作業 內容』, 1987.
- 조사통계국 통계분석과, 『經濟指標 評點方法의 理論과 實際』, 1988.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개편보고서』, 1991, 1993, 1997, 2006, 2012.
- 통계청, 『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요령』, 1999.
- 통계청, 『통계연혁』, 1999.
- 통계청, 『최근경기순환기(제9/10순환)의 기준순환일설정(보도참고자료)』, 2014.
- 한국은행, 『景氣豫告指標 改編內容(조사월보 제30권 제4호)』, 1976.
- 日本 內閣部 經濟社會總合研究所, 『景氣動向指數(速報)』(平成 26年 6月號), 2014.



경제통계

제8장

기업경영

1. 개요

2. 발전과정

3. 주요 기업경영통계의 발전과정

4. 맺음말

01 개요

의의

••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행하는 경제 단위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상환하는 재무활동, 건물·기계·설비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투자활동, 생산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설계에서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영업활동을 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가능한 이윤을 많이 내어 생산 활동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분배·지출이라는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서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임금과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생산과 분배의 기능을 담당하며, 가계의 소비와 저축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 사업체조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보다는 기업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개방화와 자유화, 세계화라는 큰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사업의 다각화, 국제화 등을 전개하면서 그 경영활동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경영계획, 사업전략 등의 수립을 위해 자체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에서 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기업활동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정부나 가계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기업활동의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다양한 경제활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가 바로 기업경영통계다. 이 통계는 기업이 주주, 채권자, 정부, 종업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한다.

따라서 기업경영통계는 기업 자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 및 기업 관련 정책 수립,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나 투자활동 등에 긴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더욱이 우리 경제는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의 양적 증가와 함께 세계적인 기업도 다수 배출하는 등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업경영통계의 활용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며, 그 만큼 통계를 작성하는 의의나 기대효과도 매우 커질 것이다.

범위

●● 기업경영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단위로는 크게 사업체와 기업체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통계체계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체통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사업체는 자본의 개념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행하는 활동장소를 측정단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UN에서는 사업체를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 또는 기업을 구성하는 부분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체통계가 발전하게 된 것은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기업정책보다는 산업정책이 국가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출증대를 위해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

되면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보다는 생산활동에 대한 정보가 중요했으며, 더욱이 제조업 전반의 생산구조나 세부 제조업의 투입구조에 대한 기초적 정보가 국가 차원의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더욱 절실했던 것이다.

반면에 기업체는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또는 법적 단위로 정의되며,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업체는 다수의 산업분야와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겸업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사업체통계와는 차별화된 방식의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로 기업체통계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모집단의 구축 및 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정부나 기업 등은 주로 사업체통계에 의존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는 빈약한 기업체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체 단위로 작성된 통계를 기업체 단위로 집계하는 시도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 기업체통계의 조사내용 자체가 생산활동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다각화 혹은 기업 간 상호관계 등 다양한 경영활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사업체통계를 기초로 한 기업체통계 개발 시도

연도	주요 작성 내용
1968	광업·제조업부문 기업체명부 작성(광업·제조업통계조사(본사용) 실시)
1998	광업·제조업부문 기업체통계 작성(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기업체편: 공장합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기업 관련 항목(본사, 지사, 단독사업체 구분)추가
2000	광업·제조업부문 기업체 통계 본사부문 추가(광업·제조업의 본사부문을 포함하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기업체편의 부록편 수록)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의 기업활동: 구조, 전략, 성과 - 기업활동조사 분석보고서』, 2009

기업경영통계의 범위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업경영통계를 작성하는 본래의 목적이 기업과 관련된 활동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 또한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통계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체통계 위주의 발전과 기업체통계의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하여 통계청에서도 기업경영통계의 범위에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통계 중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를 선별하여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통계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제별 통계 중 ‘경기·기업경영(사업체)’에서 ‘기업경영(사업체/기업체)’으로 분류된 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국가

승인통계 목록상 기업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파악할 목적인 통계를 대상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경기·기업경영(사업체)'으로 분류된 통계 중에서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통계인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그리고 사업체 기준의 통계조사 중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같이 조사결과를 기업체 기준으로 전환한 통계는 기업경영통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실사 통계청의 주제별 통계에서 '기업경영(사업체/기업체)'으로 분류된 경우라도 가계나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거나 기업활동 중 수출품, 수입품 혹은 노동 등 어느 특정한 활동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도 제외하였다.

종류

통계청의 '기업경영(사업체/기업체)'으로 분류된 국가승인통계 중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적용한 결과, 2013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총 170종이 기업경영통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3종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1회한으로 작성되었고, 47종만이 계속 통계로 생산되었으나, 이중 20종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2013년 기준으로 현존하는 기업경영통계는 27종에 불과한 상황이다.

작성기관별로는 정부기관이 38종, 지정기관이 132종을 작성하여 기업경영통계 전체의 78%를 생산하였다. 정부기관 중에는 통계청의 6종을 포함하여 9개 중앙행정기관이 35종,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3종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지정기관은 협회·조합이 112종, 공사·공단이 7종, 금융기관이 6종을 각각 작성하였다.

기업경영통계의 작성기관별 현황

(단위 : 종)

작성기관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정부기관	12	38(11)	3	35(11)	26(6)	7(5)	5
- 중앙행정기관	9	35(10)	3	32(10)	23(5)	7(5)	5
통계청	1	6(1)	2	4(1)	4(1)	-	2
이외기관	8	29(9)	1	28(9)	19(4)	7(5)	3
- 지방자치단체	3	3(1)	-	3(1)	3(1)	-	-
지정기관	21	132(9)	-	132(9)	132(9)	-	-
금융기관	2	6(1)	-	6(1)	6(1)	-	-
공사/공단	3	7	-	7	7	-	-
연구기관	1	1	-	1	1	-	-
협회/조합	13	112(8)	-	112(8)	112(8)	-	-
기타기관	2	6	-	6	6	-	-
계	33	170(20)	3	167(20)	158(15)	7(5)	5

주: ()안은 중지통계 숫자임.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한편, 통계승인의 종류별로 보면 지정통계는 3종에 불과한데, 이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농어업법인조사'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이다. 나머지 167종은 일반통계이며, 1회한으로 작성된 통계도 123종이다. 이러한 1회한의 통계는 주로 기업 관련 유관기관인 상공회의소(51종), 전국경제인연합회(18종), 중소기업중앙회(25종), 중소기업청(9종) 등에 의해서 생산되었다. 그리고 작성형태로는 조사통계가 158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중 36종은 계속통계로 작성되었으나, 현재 15종이 중지되었고, 122종은 1회한이며, 가공통계로 5종, 보고통계로 7종이 작성되었다.

특히, 5종의 가공통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한국생산성본부의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통계청의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및 '기업생멸행정통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한국기업의 사업다각화지수'로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다. 한편, 보고통계 7종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기업결합동향', '대기업집단 지정 및 채무보증 현황',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과리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의 '농공단지경영현황'의 6종은 계속통계로 생산되었으나, 이중 '대기업집단 지정 및 채무보증 현황'만이 현존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중소기업 정책성과 진단 및 실태조사'가 2006년 1회한으로 작성되었다.

기업경영통계의 작성 현황

(단위: 종)

지속 여부	합계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속	47(20)	3	44(20)	36(15)	6(5)	5
1회한	123	-	123	122	1	-
계	170(20)	3	167(20)	158(15)	7(5)	5

주: ()안은 중지통계 숫자임.
출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02 발전과정

기업경영통계의 태동

통계조사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수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에 대한 수치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기업경영통계의 발전에는 통계작성의 기반이 되는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원칙 등 관련 법규나 제도의 정비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회계기준이 처음 공식화된 것은 1958년 6월 당시 재무부장관의 자문 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가 중간보고의 형태로 공표한 「기업회계원칙」이다. 그리고 실무에 필요한 「재무제표규칙」은 1958년 7월2일 재무부 고시 제169호로 공포되었으며,¹ 이를 적용하여 1958년과 1962년 두 번에 걸쳐 기업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기업경영통계의 기초여건이 형성되면서 한국산업은행에서 1958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재무분석’과 한국은행에서 1960년과 1961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경영분석’을 기업경영통계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기관은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산업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계획·수립 및 집행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실태와 변동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한국산업은행은 1955년까지 한국은행에서 조사해오던 ‘광업 및 제조업체조사’를 이관 받아 1958년과 1960년을 대상으로 ‘산업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계조사의 기반하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총조사’에 기초하여 사업체 대상으로 ‘기업재무분석’을, 한국은행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영분석’을 작성하였다.

1 「기업회계원칙」은 학문적인 견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과 원리를 규정한 것이고, 「재무제표규칙」은 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한 것을 의미하며, 기업회계기준의 역사와 이의 해설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 전문』, 2011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재무분석'과 1958년에,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은 1961년에 승인되었다. 조사대상년도나 승인년도를 고려하면 '기업재무분석'이 우리나라 기업경영통계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이 2008년에 수립된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기업재무분석' 자체가 2007년(조사시점 2008)을 마지막으로 작성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이 현존하는 기업경영통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다. 이외에 1960년대까지 기업 활동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통계로는 1962년 당시 수산청 주관으로 실시한 '어업경영조사'(현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와 1967년에 당시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 그리고 대전상공회의소가 1967년에 승인을 얻어 대전지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969년에 최초로 실시한 '공장운영실태조사'가 존재한다.

이들 통계들은 '어업' 혹은 '중소기업' 또는 '지역'이라는 특정분야에 한정된 조사이지만, 기업 관련 통계조사의 기초여건이 열악하던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업경영통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공장운영실태조사'는 1994년에 중지되었지만, '어업경영조사'와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지금까지도 존재하여 해당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계획과 정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업경영통계의 시대별 발전

●● 기업경영통계의 연대별 승인 종수를 살펴보면 1960년대 태동 이후 1970년대까지 총 9종이 승인되었고, 1980년대에는 22종, 1990년대에는 53종, 2000년대에는 79종으로 승인 건수가 증가하였다. 2010년대에는 2014년까지 7종이 승인되었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1회한 통계를 중심으로 기업경영통계의 개발 및 승인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많은 통계가 중지되는 조정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기업경영통계의 연대별 승인현황을 고려할 경우 1970년대까지를 기업경영통계의 기반형성기, 1980~1990년대를 정착기, 2000년대를 발전기, 2010년대를 안정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업경영통계의 기반형성(~1970년대)

●● 기업경영통계의 기반형성기에는 총 9종이 승인되었고, 이중 3종이 기업체, 6종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1978년 당시 상공부가 1회한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가 1967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해온 것과 동일 명칭으로 승인되었다.

작성주기별로는 1년 주기가 6종, 월별 및 분기별 주기가 각각 1종씩 작성되었고, 작성기관별로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 관련 유관기관이 주로 작성하였다. 한편, 1970년대까지 승인된 9종의 기업경영통계 중 4종만이 현재까지 계속 작성되고 있다.

기업경영통계 현황(~197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종류 (형태)	조사방법	조사대상	작성주기	최초작성 (승인연도)	중지여부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일반 (가공)	전수 (우편)	기업체	1년	1961 (1966)	계속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지정 (조사)	표본 (우편)	기업체	1년	1967 (1967)	계속
상장기업의 부가치분석 (한국생산성본부)	일반 (가공)	전수 (기타)	기업체	1년	1978 (1978)	계속
기업재무분석 (한국산업은행)	일반 (조사)	기타 (면접)	사업체	1년	1958 (1958)	2008
어업경영조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반 (조사)	표본 (우편)	사업체	1년	1962 (1962)	계속
공장운영실태조사 (대전상공회의소)	일반 (조사)	표본 (집합)	사업체	월	1967 (1967)	1994
기업시설투 자동화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반 (조사)	표본 (면접)	사업체	1년	1973 (1973)	2008
중소기업 경영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일반 (조사)	표본 (면접)	사업체	분기	1976 (1976)	2002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기업경영통계의 정착(1980~1990년대)

●● 기업경영통계의 정착기로 볼 수 있는 1980~1990년대에는 총 74종이 승인되었는데, 이 중 24%에 해당하는 18종이 기업체를, 76%인 56종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1회한의 통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3%에 해당하는 15종만이 계속통계로 작성되었다. 한편, 1967년 및 1988년에 작성을 시작한 ‘공장운영실태조사’와 ‘수출기업경영 실태조사’가 1994년에, 1980년부터 작성한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실태조사’가 1998년에 각각 작성이 중지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말을 기준으로 기업경영통계의 승인은 기업체통계 18종과 사업체통계 53종을 합한 71종인 것으로 파악된다.

1980~1990년대 승인된 기업경영통계를 계속통계와 1회한 통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계속통계의 경우 14종 중 10종이 사업체, 4종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작성되었고, 작성주기는 12종이 1년 주기이며, 2종은 분기별, 1종은 부정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작성기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종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청과 대한건설협회가 각각 2종,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각각 1종을 작성하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에서 작성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기업결합동향’,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지주회사현황’ 등의 통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계가 작성된 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경제력이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가 정책적 현안으로 대두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통계는 현재 모두 작성이 중지된 상태이며, 이들 통계를 포함하여 1980~1990년대에 개발된 15종의 계속통계 중 현재에는 4종만이 존재하고 있다.

기업경영통계 현황(1980~199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종류 (형태)	조사방법	조사대상	작성주기	최초작성 (승인연도)	중지여부
수출기업경영실태조사 (한국무역협회)	일반 (조사)	표본 (집합)	사업체	1년	1980 (1980)	1998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조사)	기타 (기타)	사업체	1년	1987 (1987)	2009
중소제조업생산설비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일반 (조사)	표본 (면접)	사업체	부정기	1988 (1988)	1994
건설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일반 (조사)	전수 (인터넷)	사업체	1년	1989 (1989)	계속
완성공사원가통계 (대한건설협회)	일반 (조사)	기타 (인터넷)	사업체	1년	1990 (1990)	계속
수위탁거래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일반 (조사)	표본 (면접)	사업체	1년	1996 (1996)	2008
농공단지경영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일반 (조사)	기타 (전화)	사업체	분기	1998 (1998)	2003
기업의자금사정실태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반 (조사)	표본 (전화)	기업체	분기	1998 (1998)	2005
기업결합동향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조사)	기타 (기타)	기업체	1년	1998 (1998)	2009
중소벤처기업창업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일반 (조사)	표본 (우편)	기업체	1년	1999 (1999)	2002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조사)	기타 (인터넷)	기업체	1년	1999 (1999)	2008
지주회사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조사)	기타 (기타)	사업체	1년	1999 (1999)	201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일반 (조사)	표본 (인터넷)	사업체	1년	1999 (1999)	계속
전기공사업경영분석 (한국전기공사협회)	일반 (조사)	표본 (인터넷)	사업체	1년	1999 (1999)	계속

한편, 특수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1회한 통계는 주로 기업 관련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작성기관별로는 상공회의소가 33종으로 55%를 차지하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종, 중소기업청이 4종, 중소기업은행이 3종 등의 순으로 작성하였다.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성한 1회한 통계 55종 중 기업체 대상은 10종에 불과하며, 45종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본격적인 기업경영통계의 발전(2000년대)

2000년대에는 가장 많은 기업경영통계가 승인된 시기로서, 현재까지 승인된 총 170종 중 47%에 해당하는 80종이 이 시기에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대부분의 통계가 1회한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2000년대에는 1958년에 승인되어 기업경영통계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재무분석'을 비롯하여 총 15종의 통계가 작성이 중지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 말을 기준으로 기업경영통계의 승인현황은 기업체통계 30종과 사업체통계 35종을 합한 65종에 이른다.

한편, 2000년대에 승인된 17종의 통계 중에서 '농어업법인조사'와 '기업활동조사'가 지정통계로 승인되었다. 조사대상은 9종이 사업체, 8종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작성되었고, 작성주기는 1년 주기가 8종으로 가장 많았다. 작성기관별로는 중소기업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9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공기관이 8종이었고, 부천시 경제지표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체통계를 작성하였다.

2000년대 기업경영통계의 특징은 승인통계의 종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이외에 이전에 비해 기업체통계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조사가 36종으로 전체의 4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2000년대에 승인된 총 80종의 기업경영통계 중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승인된 것이 45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었다. 여기에는 통계청의 'e-나라지표' 구축 및 승인장려 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통계청에서는 2006년 9월부터 실시한 'e-나라지표' 구축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 부처가 정책의 수립, 국정운영상황의 점검 및 정책성과 측정 등에 내부적으로 이용하던 자료를 '국정모니터링 시스템'에 일괄 게시함에 따라 'e-나라지표' 중 주요 통계가 승인통계에 추가된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그동안 각 부처나 통계생산기관이 승인을 받지 않고 작성하던 통계를 발굴하여 승인을 받도록 독려하였기 때문이다.

기업경영통계 현황(200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종류 (형태)	조사방법	조사대상	작성주기	최초작성 (승인연도)	중지여부
농어업법인조사 (통계청)	지정 (조사)	전수 (병행) ¹⁾	기업체	1년	2000 (2000)	계속
정보통신공사업 경영분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정 (조사)	표본 (전화)	사업체	1년	2001 (2001)	계속
벤처기업통계조사 (통계청)	일반 (조사)	전수 (우편)	기업체	1년	2001 (2001)	2002
대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조사)	기타 (집합)	사업체	1년	2002 (2002)	계속
여성기업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일반 (보고)	표본 (우편)	기업체	2년	2003 (2003)	계속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과리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보고)	기타 (집합)	기업체	1년	2003 (2003)	2009
인적자본기업 패널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반 (조사)	표본 (우편)	기업체	2년	2005 (2005)	계속
중소기업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일반 (조사)	표본 (우편)	사업체	2년	2005 (2005)	2008
중소기업 세계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일반 (조사)	표본 (전화)	사업체	2년	2005 (2005)	2008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반 (조사)	기타 (우편)	사업체	2년	2005 (2005)	계속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한국산업단지공단)	일반 (조사)	표본 (전화)	사업체	월	2005 (2005)	계속
중소제조업 환경애로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지정 (조사)	표본 (우편)	사업체	1년	2006 (2006)	2008
기업활동조사 (통계청)	지정 (조사)	전수 (면접)	기업체	1년	2006 (2006)	계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분석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일반 (조사)	전수 (전화)	기업체	1년	2007 (2007)	계속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일반 (조사)	표본 (면접)	사업체	3년	2007 (2007)	계속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일반 (조사)	표본 (기타)	사업체	2년	2007 (2007)	계속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현황조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일반 (조사)	전수 (우편)	기업체	2년	2007 (2007)	계속

주: 1) 병행은 면접조사와 비면접조사의 병행을 의미
출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기업경영통계의 안정화(2010년대)

●● 2010년 이후 기업경영통계의 작성 현황은 안정기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전에 비해 큰 변화는 없다. 즉,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기업경영통계의 승인 종수는 총 7종에 불과하며, 작성 중지통계도 ‘지주회사현황’ 등 2종이다.

이 중 4종은 조사통계이며, 3종은 가공통계이다. 조사대상별로는 기업체통계가 3종, 사업체

통계는 4종이다. 이 시기에 승인된 기업경영통계의 특징으로는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행정 자료를 이용한 가공통계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와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가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개인정보의 보호 등으로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자료의 활용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경영통계 현황(2010년대)

통계명 (작성기관)	종류 (형태)	조사방법	조사대상	작성주기	최초작성 (승인연도)	중지여부
경기북부지역 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일반 (조사)	표본 (우편)	사업체	1회한	2011 (2011)	-
정보통신부문 완성공사원가분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일반 (조사)	기타 (전화)	사업체	1년	2011 (2011)	계속
1인창조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일반 (조사)	표본 (우편)	사업체	1년	2012 (2012)	계속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일반 (가공)	전수 (기타)	기업체	1년	2012 (2012)	계속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통계청)	일반 (가공)	전수 (기타)	기업체	1년	2012 (2012)	계속
한국기업의 사업다각화지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 (가공)	전수 (기타)	사업체	5년	2013 (2013)	계속
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일반 (조사)	표본 (기타)	기업체	1년	2013 (2013)	계속

출처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03

주요 기업경영통계의 발전과정

- 기업경영통계는 총 170종 중 27종이 현재까지 작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며, 산업적 포괄범위가 넓고 조사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거나 통계조사상 혹은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도를 고려하여 4종의 통계를 선정하였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실태조사', 한국생산성본부의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가 그것이다. 이들 통계에 대해 작성목적, 조사방법, 주요 활용, 외국의 유사통계 등을 중심으로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업경영분석

개요

- '기업경영분석'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효과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기업의 경영실태와 그 변동요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기업경영분석'은 원래 금융기관에서 여신취급과 수신자의 신용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경제상황의 변화와 함께 이를 활용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을 위한 투자분석으로 주목적이 변경되었고, 점차 경영자가 자기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기업경영분석의 작성목적이 변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여신관리와 기업자신의 경영합리화 계획의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경영분석'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보험업」 이외의 영리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통계의 성격상 작성대상으로 부적합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있다. 제외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임업, 수도사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사회복지 등 영리법인 비중이 낮은 업종과 금융·보험업이다.

2013년 조사에서는 제조업 11만 3000개, 건설업 7만 9000개, 도소매업 12만 5000개, 운수업 2만 2000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산업 3만 개 등 약 49만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가공통계로서, 국세청 법인세 신고 자료에 첨부된 조사대상 법인의 국세청 표준양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이용하고 있다. 작성방법은 조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각 계정금액을 ‘기업경영분석’의 조사항목으로 재분류·집계하고 업종별 계정항목 금액 및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 관련 경영분석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 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 비율

발전과정

●●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법」 제86조에 의거 통계 자료를 수집·작성하고 있다. 1962년에 처음으로 1960년, 1961년의 2개 년도를 대상기간으로 작성하였다. 이후 매년 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는 1967년 통계까지는 『기업경영분석』과 『기업원가분석』 등 2권의 책자로 발간되었으나 1968년 통계부터 『기업원가분석』이 『기업경영 분석』에 흡수 통합되어 발간되었다.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 및 기업규모 변화를 통계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 조사주기, 조사대상의 범위 등이 개선되어 왔다.

기업경영분석의 주요 경영분석지표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미국 2013	일본 ¹⁾ 2013
1. 성장성 관련지표					
매출액증가율	13.6	4.2	0.5	1.0	2.0
총자산증가율	10.7	4.6	5.6	6.1	1.7
유형자산증가율	9.8	6.4	4.8	5.9	-3.3
2. 수익성 관련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5.6	5.1	5.3	7.5	4.1
매출액세전순이익률	5.2	5.2	4.7	9.0	3.6
이자보상비율 ²⁾	486.0	455.4	513.6	464.4	995.2
금융비용부담률 ³⁾	1.2	1.1	1.0	1.6	0.4
3. 안정성 관련지표					
부채비율 ⁴⁾	109.2	101.0	92.9	119.5	121.5
차입금의존도 ⁵⁾	25.5	25.6	24.5	25.2	25.6
자기자본비율 ⁶⁾	47.8	49.7	51.8	45.6	45.1

주: 1) 일본의 2013회계년도는 2013. 04. 01~2014. 03. 31이며 금융·보험업을 제외(출처: 재무성), 2) 영업이익/이자비용, 3) 이자비용/매출액, 4) 부채/자기자본, 5) (차입금+회사채)/총자산, 6) 자기자본/총자산
출처: 한국은행, '2013년 기업경영분석' 보도자료, 2014. 10

특히, 1978년 국세청 법인세 신고업체를 모집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표본설계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구조 및 기업규모의 변화를 통계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개편을 시도하였다. 작성주기는 1988년 연간에서 반기로, 2000년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되었다. 2007년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표본 개편 과정에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한 매출액 최저한도(하위 10%, 2004 기준년 25억)를 폐지하여 2007년 전체 법인세신고대상 법인기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2011년부터 국세청 법인세 신고대상법인의 신고 자료에 첨부되는 각 법인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경영분석통계의 편제방법을 종전의 표본조사방식에서 모집단 집계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변경하였다.

중소기업실태조사

개요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인력을 적기에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여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011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준으로 80만 개의 모집단 중소기업 중 2만 5000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사용되며,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 국가 및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위해, 기업차원에서는 시장분석이나 동일업계의 유사 기업에 대한 재무상황 비교, 산업 관련 협회 차원에서는 산업 성과 측정이나 시장 개발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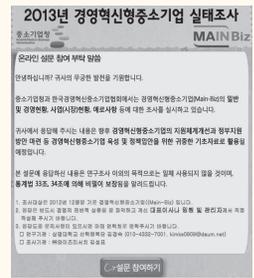
조사항목은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건설업, 중소기업서비스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많은 부분은 기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로 구성되는 재무제표에 기초하고 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결산기 말일 현재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표시하고 있다. 차변에 표시되는 자산항목은 기업소유 재산의 운용 상태를 나타내고, 대변에 표시되는 부채 및 자본항목은 기업의 자본조달 형태를 나타낸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 경영실적 분석에 필요한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기타 계정과목에 합산하여 기입하고 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 회계기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발생케 한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손익계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중소기업제조업과 중소기업서비스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우선 중소기업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수 5~299인 중소기업체 10만 9779개 기업체 중 담배제조업을 제외한 약 7000개 중소기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18개 업종, 48개 산업세세분류에 따른 종사자 수 5~299인 중소기업서비스업체 1만 9120개 기업체 중 1000개의 중소기업서비스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다. 모집단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업체단위로 변환하여 활용하고 있다.

발전과정

●●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통계다. 1967년에 당시 「중소기업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공부의 위촉으로 중소기업은행이 1966년을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기 조사목적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업부문의 전반적인 상황과 경영실적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정책 수립 및 경영지표의 작성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의 증가와 정책적 중요성, 통계조사 기반의 발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 및 구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그 목적이 변화되었으며, 1999년에는 통계작성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전환되었다.

통계조사상의 주요 변화로는 1982년에 조사업무가 중소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되어 제16차 조사가 실시되었고, 1988년에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중소기업 통계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여 제22차부터 적용하였으나, 11년 뒤인 제33차 조사에서는 지역통계의 작성이 중지되고, 표본수도 이전의 4100개에서 3440개로 축소되었다. 1995년 제29차(1994 기준) 조사부터는 중소기업의 범위 개편으로 소기업의 범위가 종사자수 5~19인 기준에서 5~49인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2003년 제37차(2002 기준) 조사부터는 표본수가 4000개로, 그리고 2009년 제43차(2008 기준)에서는 표본수의 확대와 함께 조사업종도 지식기반 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전까지 별도로 조사해오던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와 ‘중소기업 사업전환실태조사’를 ‘중소기업실태조사’에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조사범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법적 범위는 1966년에 최초로 정한 후 2012년까지 14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왔으며,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그 범위도 규모면에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 중소기업실태조사 안내문 (2013)

1982년 이전까지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을 모두 만족하는 병행주의를 택하였으나, 이후에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수 기준만을 충족하는 단일주의로 변경하면서 제조업 내의 업종별로 차등적 기준을 도입하였다. 1995년부터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양적 기준과 함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질적 기준이 도입되었다. 2000년부터는 전체 산업에 대해 모두 택일주의로 전환되었고,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차등적 기준이 도입되었다. 2012년에는 서비스업 업종에 대한 규모기준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의 중소기업에 편입 및 규모가 큰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소기업 범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범위를 작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캐나다는 모든 산업에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는데, 분류 기준은 종사자수 500인 미만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보다는 넓게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실태조사'와 유사한 외국의 통계조사로는 일본의 '중소기업실태기본조사(中小企業實態基本調査)'와 캐나다의 'Survey on Financing and Growth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를 들 수 있다.



• 국가별 제조업의 중소기업 범위



• 국가별 소매업의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의 변천과정

개정 연도	기준	제조업	광업·운수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본법 제정 (1966. 12)	상시종업원수 자산총액	200인 5000만 원			20인 1000만 원
기본법 1차 개정 (1976. 12)	상시종업원수 자산총액	300인 5억 원		50인 5억 원	20인 5000만 원
기본법 3차 개정 (1982. 12)	상시종업원수	300인		200인	20인
기본법 시행령 제정 (1983. 08)	상시종업원수 자산총액	500인 40억~80억 원(자산 4단계)		200인	20인
시행령 개정 (1986. 06)	상시종업원수 자산총액	700인 80억~120억 원(자산 3단계)		200인	20인
시행령 개정 (1987. 12)	상시종업원수 자산총액	1000인 80억~300억 원 (자산 5단계)		200인	20인
시행령 개정 (1992. 07)	상시종업원수 자산총액	1000인 120억~600억 원(자산 8단계)		200인	20인 (도매업 40인)
기본법 4차 개정 (1995. 01)	상시종업원수 자산총액	시행령에서 업종별로 정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도입			
시행령 개정 (1995. 07)	상시종업원수 자산총액	1000인 200억~800억 원(7단계)		200인	20인
시행령 개정 (1997. 12)	상시종업원수 자산총액	상동		300인	상동
시행령 개정 (2000. 12)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300인 자본금 80억 원	300인 자본금 30억 원	30~300인(4단계) 매출액 20억~300억 원(4단계)	
시행령 개정 (2002. 05)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상동 300인 자본금 30억 원		50~300인(4단계) 매출액 50억~300억 원(5단계)	
시행령 개정 (2005. 12)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상동	상동	50~300인(4단계) 매출액 50억~300억 원(5단계)	
시행령 개정 (2012. 01)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상동	상동	상동 (13개 업종 규모상향조정)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 혹은 이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	

출처: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운용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2006

일본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전반에 공통되는 재무정보, 경영정보 및 설비투자 동향 등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중소기업 시책의 기획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부터 ‘중소기업실태 기본조사(中小企業實態基本調査)’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중소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기 입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993년까지 실시해온 ‘중소기업경영조사’(中小企業經營調査)와 ‘상업·서비스업 설비투자 동향조사’(商業·サービス業設備投資動向調査)를 폐지하고, ‘상공업실태 기본조사(商工業實態基本調査)’의 일부를 통합하여 새로 설계한 것이다.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업종	한국	일본	캐나다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기타	자본금 3억 엔 이하 또는 종사자수 3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도매업	자본금 1억 엔 이하 또는 종사자수 100인 이하 전산업 종사자수 500인 미만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산업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소매업	자본금 5000만 엔 이하 또는 종사자수 50인 이하
하수처리·폐기물처리·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기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서비스업	자본금 5000만 엔 이하 또는 종사자수 100인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출처: 중소기업청·K-BIZ중소기업중앙회, 『2013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2013
일본 중소기업청(<http://www.chusho.meti.go.jp>)
캐나다 통계청(<http://www23.statcan.gc.ca>)

표본을 추출하여 우편조사로 실시되는 이 조사는 일본의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운수업, 우편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생활연관서비스업, 오락업 및 레저서비스업)을 포괄하며, 이들 산업에 대해 약 420만 개의 중소기업 모집단 중 11만 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자산 및 부채, 순자산, 매출액 및 영업비용, 설비투자, 종업원수, 거래금융기관, 위탁 및 수탁 현황, 제품의 구입 및 판매처, 체인조직가맹 여부, 전자상거래 등이 있으며, 2008년부터는 해외사업,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등이 추가되었다. 한편, 캐나다의 통계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재무상태와 이들의 자금조달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Survey on Financing and Growth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현재까지 2000년, 2001년, 2004년, 2007년, 2009년, 2010년 및 2011년의 7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조사로 행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실태조사와 외국의 유사통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캐나다
조사명	중소기업실태조사	中小企業實態基本調査	Survey on Financing and Growth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조사기관	중소기업청 주관 중소기업중앙회 실시	중소기업청	캐나다 통계청
최초조사년도	1967	1994	2000
조사주기	1년	1년	1년(2000, 2001, 2004, 2007, 2009, 2010, 2011)
조사단위	기업체	기업체	기업체
포괄범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조사항목	기업개요, 공장,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 판매, 수·위탁 거래, 연구개발활동, 해외진출, 인력현황, 교육·훈련, 사업전환 실태, 기업 재무제표 등	기업개요, 자산 및 부채, 순자산, 매출액 및 영업비용, 설비투자, 종업원 수, 거래금융기관, 위탁 및 수탁, 제품의 구입·판매처, 체인 조직가맹여부, 전자상거래, 해외 사업,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등	기업개요, 종업원수, 거래금융 기관 및 금융거래 규모, 자산 및 부채, 무역신용, 매출액 및 영업 비용, 수출입, 해외투자, 혁신 활동, 지적재산권 등
조사방법	표본에 대한 조사원 면접조사	표본에 대해 우편조사	표본에 대해 전화조사
표본크기	모집단 대비 약 6.2% (2012 조사대상 12만 9000개 모집단 중 8000개사)	모집단 대비 약 2.6% (2013 조사대상 420만 개 모집단 중 11만 개사)	모집단 대비 약 3.1% (2011 조사대상 80만 개 모집단 중 2.5만 개사)

출처 : 중소기업청·K-BIZ중소기업중앙회, 『2013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2013
 일본 중소기업청(<http://www.chusho.meti.go.jp>)
 캐나다 통계청(<http://www23.statcan.gc.ca>)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캐나다의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등록모집단 중에서 ① 종업원이 없거나 500인 이상인 기업, ② 총매출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③ 학교, 병원, 자선단체 등 비영리 기업, ④ 협동조합, ⑤ 합작투자(joint venture), ⑥ 연방정부, ⑦ '북미표준산업분류'(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상 특정산업-유틸리티, 금융·보험, 기업경영,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자동차장비대여·임대, 상업·산업적 기계·장비관리대여·임대, 외래환자진료센터, 의료진단실험실, 기타 외래의료서비스, 일반의료·외과병원, 정신·약물남용병원, 지역사회의 음식·주택 및 긴급·기타구호서비스는 제외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개요

●● 부가가치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의 성과를 분석하는 이유는 기업이 창조한 가치의 분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창조한 가치에 대한 생산요소별 공헌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기업 경영분석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국내의 상장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자료를 수집하여 개별 기업의 부가가치를 집계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성과지표를 산출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은 기업 및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배분 실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혁신 전략의 수립과 추진,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부가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파악하여 그 기간 생산된 제품의 총가치가 매출액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기업의 부가가치는 총산출가치인 매출액에서 산출가치 창출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구입한 가치를 공제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부가가치와 손익의 개념 비교

부가가치 측면		손익측면	
외부구입가치		원가	
① 원재료비		① 원재료비	
② 지불경비		② 지불경비	
③ 감가상각비		③ 감가상각비	
	총산출가치	④ 임금, 급여	매출액
부가가치		이윤	
④ 노동수익		④ 배당가능이익	
⑤ 자본수익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2013

이러한 부가가치는 기업 자체가 창조한 가치로서 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된다. 부가가치는 기업의 사내유보 및 주주에 대한 배당금, 임원에 대한 상여금, 종업원에 대한 임금과 수당, 토지에 대한 지대, 채권자에 대한 이자, 정부에 대한 세금 등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의 개념은 주주에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표시되는 손익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의 부가가치 계산방식은 크게 기업이 창출한 실질가치라는 사고에 입각하는 공제법과 성과분배의 사고에 바탕을 둔 가산법이 있다. 전자는 기업이 특정기간의 생산을 위해 외부로부터 생산과정에 투입될 재화를 구입하여 이를 생산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고 총생산가치에서 외부구입가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후자는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생산과정에 공헌한 참가자 즉, 경영자, 종업원, 자본제공자, 국가 및 사회에 각각 귀속된 금액의 총계로서 공헌한 자들에 귀속되는 영업손익, 대손상각비, 인건비, 임차료,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등을 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의 계산방식

구분	계산식
공제법	부가가치 = 총생산가치 - 외부구입가치
가산법	부가가치 = 영업손익 + 대손상각비 + 인건비 +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방식(가산법)	부가가치 = 영업이익 + 노동수익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2013

현재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은 영업이익에 인건비를 합하는 가산법을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제법을 사용하였으나, 2005년 1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제조원가명세서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됨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공시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감사보고서의 부가가치 관련 항목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조사자료는 개별 상장기업의 공시자료(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구축한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KISDATA를 기초로 사용하고, 자료의 오류 검증 및 보안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²에서 직접 개별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 전자공시 시스템(금융감독원)

발전과정

●● '상장기업의 부가가치 분석'은 1978년부터 매년 금융·보험업과 관리대상 중목을 제외한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부가가치 분석'에 대한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1978~1979년 기간에는 발간물 자료의 제목을 『부가가치분석』으로, 1981~1984년 기간에는 『한국기업의 경영지표』, 1985~1990년 기간에는 『한국기업의 부가가치분석』, 그리고 1992년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으로 변경하였다.

1985~1990년까지는 조사대상을 상장기업에서 등록법인으로 확대하여 상장기업과 등록법인편으로 각각 발간하였고, 1992년 이후부터는 상장기업만을 조사·분석의 대상으로

2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introduction/content1.do>)이다.

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조사부터 수행된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 기업을 포함하였고, 2012년부터는 부가가치 지표동향 분석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기업을 포함하는 등 분석대상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조사대상은 2012년 말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781개사, 코스닥시장 1004개사) 중 총 1242개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 511개사, 코스닥시장 73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장기업 부가가치 분석’의 제외대상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금융지주회사, 관리대상기업, 신규상장사, 결산월 변경기업, 분석대상기간(2009~2012) 중 사업 분할이나 인수합병 등 주요 사업에 변화가 있는 72개 기업, 최근 3개년의 부가가치 및 기타 재무자료의 시계열이 유지되지 않는 기업 등이다.

기업활동조사

개요

●● ‘기업활동조사’는 기업의 경영실적 이외에 다각화, 국제화, 계열화 등 기업의 다면적인 활동 파악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기업에 관한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조사 대상으로 종합적인 경제 단위로서 의미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갖춘 것으로 기대되는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회사법인을 선정하였는데, 다만, 도·소매업 및 기타 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도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활동조사’는 2006년 처음 실시되어 다른 기업경영통계에 비해서는 짧은 연혁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체통계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체통계는 모집단의 구축과 관리 시스템의 마련이 지연되면서 오랫동안 사업체통계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기업체통계의 개발수요를 충족하고자 통계청에서는 여러 차례 사업체통계를 활용하여 기업체통계의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기업체통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기업체통계의 개발을 시도한 결과가 바로 기업활동조사인 것이다.

조사항목은 기업의 점업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출액과 종사자수를 업종별로 세분하고, 기업의 국제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사자수, 관계회사 진출, 기업 간 거래, 외주비 등 해외 부분을 별도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계열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법인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율, 투자잔액, 사업

내용 등 투자부문의 경영전략을 조사항목으로 채택하였다. 아울러 사업체 단위에서 조사가 어려운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전략 등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방식은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택하고 있다.

기업활동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조사분야	조사항목
기업의 구조와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규모별(종사자수, 자본금) 지표 기업의 자본금 중 외국자본 비중 기업의 변동(합병, 분할, 신규 등)
기업의 계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관계회사(투자액, 보유실태, 거래액) 보유실태 모회사, 자회사, 관련회사 구분, 기업의 국제화 기업의 해외관계회사(투자액, 보유실태, 거래액) 보유실태 기업 내 해외사업부 진출 해외기업과의 외주, 전략적 제휴 향후 해외진출 계획
기업의 사업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내 업종별 사업내용, 관계회사의 업종별 사업내용(산업소분류) 신규 사업 진출 분야 기업의 외주 실태 및 아웃소싱 분야
기업의 수익구조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설비투자실태 경영실적(영업이익 등) 비용(부가가치항목, 주요항목)
기업의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소유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자체, 위탁, 수탁) 기술소유 및 사용
기업의 경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e-비즈니스 시스템 도입 실태 기업의 문화 및 사회적 책임이행(성과보상제도) 기업의 경영방향(프랜차이즈, 신규사업진출, 전략적 제휴 추진대상 및 방법)

출처 : 통계청, 2014년 기업활동조사, 2015

발전과정

기업통계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먼저 기업체모집단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3년 6월부터 기업체 모집단 명부의 구축을 위해 기업 단위 행정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조사목적 상이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체통계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통계의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와 통계청 내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조사'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통계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모집단의 확보였다. 모집단 자료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하되, 여기서 누락되는 기업 및 사업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에 실시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법인등록번호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자본금, 기업 내 총 사업체수, 기업 내 총 종사자수 등 기업의 사업내용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반영시킴으로써 정도 높은 기업체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체모집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DB화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단위 통계조사를 위한 모집단 명부 제공은 물론 기업체의 규모 및 특성별 분포 등 다양한 구조 분석이 가능하였다. 모집단 명부를 생성할 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하였으며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추가 정보를 수록하도록 하였다. 기업체모집단 명부는 사업체 단위 조사인 광업제조업 조사결과를 기업단위로 집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조사' 통계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조사는 2006년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작성되고 있다.

'기업활동조사'는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어 이들 조사된 기업에 대한 패널화가 가능하다. 현재 패널 자료는 2006년도 자료부터 DB화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활동조사'와 유사한 외국의 대표적인 통계로는 일본의 '기업활동기본조사'(企業活動基本調査)와 프랑스의 'Structural Enterprise Statistics'를 들 수 있다. 우선 일본의 '기업활동기본조사'는 경제산업성이 기업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업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매년 조사해오고 있는 통계이다. 일본의 통계법상 기간통계(基幹統計)로 승인된 것이다. 조사의 범위 및 대상은 운수업, 건설업 및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기업체 중 종사자 50인 이상 및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기업의 최근 1년간 조직변동, 사업조직 및 종사자 수, 계열화 관련 사항(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등), 재무구조(자산·부채·자본), 매출액, 영업비용, 사업의 위태현황, 연구개발 및 능력개발, 지적재산권 소유현황 등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조사방법은 2013년을 기준할 때 3만 7523개의 기업체 표본에 대해서 우편 및 인터넷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Structural Enterprise Statistics'는 기업의 사업 활동 및 조직의 변화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의 범위 및 대상은 기본적으로 전 산업을 대상으로 종사자 10인 이상의 매출액 3800만 유로 이상과 종사자 10인 미만의 매출액 3800만 유로 이하로 구분하고, 국내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기업체의 변동(조직형태별·규모별·업종별·유형별), 기업의 계열화나 혁신활동(연구개발 등), 자산 및 경영실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상기의 조건으로 선정된 표본 기업체에 대해 우편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기업활동조사와 외국의 유사통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조사명	기업활동조사	企業活動基本調査	Structural Enterprise statistics
최초조사	2006	1992	1996
조사주기	1년	1년	1년
조사대상	기업체	기업체	기업체
포괄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업 • 종사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제외한 전산업 • 종사자 50인 이상,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업 • ① 종사자 10인 이상의 매출액 3800만 유로 이상 및 종사자 10인 미만의 매출액 3,800만 유로 이하로 구분, • ② 국내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의 표본 선정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사업조직·종사자수) • 재무구조 (자산·부채·자본), 사업 내용(매출액, 영업비용) 등 • 기업의 계열화 (자회사, 관련회사 등) • 기업 간 거래 및 국외거래, 연구개발비 • 기업의 경영방향 (외부위탁, 국외진출, 성과보상 관리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최근 조직변동 • 사업조직 및 종사자수 • 기업의 계열화(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등) • 기업의 재무구조 (자산·부채·자본) • 사업내용 (매출액, 영업비용 등) • 기업 간 거래 및 사업의 위탁현황 • 연구개발 및 능력개발 • 지적재산권 소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의 변동 (조직형태별·규모별·업종별·유형별) • 기업의 계열화 • 기업의 혁신활동 (연구개발 등) • 기업의 자산 및 경영실적 등
조사방법	면접·인터넷조사	우편·인터넷조사	우편조사
조사표종류	2종(업종별)	1종	2종(규모별)

출처 : 이재형·김미자, 『한국의 기업활동: 구조, 전략, 성과-기업활동조사 분석보고서』, 통계개발원, 2009
 및 일본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중 통계분야의 기업활동기본조사(<http://www.meti.go.jp/statistics>)

04

맺음말

••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중요성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파악하는 통계의 개발은 그리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70종의 기업경영통계 중 계속통계는 47종으로 전체의 30%에도 못 미칠 정도이며, 더욱이 현재 27종만이 존재하고, 기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통계는 현재 18종만이 작성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특정한 분야나 산업에 국한된 통계로서 기업체 전반 혹은 전 산업을 포괄하여 기업의 경영실태나 사업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경영통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기업재무분석', '중소기업경영실태조사', '수출기업실태조사' 등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성해오던 많은 통계마저 작성이 중단되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 특히 국내외적 경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다양한 기업 관련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월별이나 분기별 기업경영통계의 개발은 차치하더라도 계속통계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기를 지나 선진국형의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과정에서는 경제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은 그동안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경제활동을 펼치는 다국적 기업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내외적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다양한 기업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정부나 가계 또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투자 및 소비 활동을 위해 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많은 통계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체통계 중심의 기업경영통계의 개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업 관련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체통계의 양적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기업경영통계의 개발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패널 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기업 내부에 축적된 인적자본이나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많은 연구들과 함께 기업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업이나 정부차원의 정책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성 있는 패널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사실 '기업활동조사'는 본격적인 기업패널통계의 시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표로서 집계되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마이크로데이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면 이 통계가 갖는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기업활동조사'만으로는 부족하며, 더욱이 '기업활동조사'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기업 패널 통계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중소기업 관련 통계의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은 소위 '9988'로 대변된다.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낸 99%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88%를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에 의해서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가계의 현실적인 문제인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진전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은 단일 기업 스스로의 능력만이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간 네트워크의 능력에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충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관련한 통계는 1회화 위주로 작성되어 온 경향이 강하며,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활용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재무분석,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경영실태조사 등도 작성이 중지된 상태이다. 한국은행의 분기별 기업경영분석만이 연간 조사와 분기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나 분기 조사의 대상은 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 금감원등록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활동조사'의 질적 개선과 활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기업활동조사 통계의 작성은 2000년대에 들어 신규통계의 개발부문에서 올린 일대 쾌거라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체통계의 모집단 확보와 함께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등 민간 기업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별 기업통계의 한계인 통계 간 비교성, 일관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조사항목 중에는 많은 부분 경제적·학술적 정의가 필요한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이용자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교감을 통해 조사항목의 조정과 정의의 확립, 개선사항에 대한 통계작성자와 이용자 간의 협조 등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활동조사’는 그동안 통계청에서 생산해왔던 다양한 사업체대상 통계조사는 물론, 민간기업에서 작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통계들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상승작용을 통해 정보의 유용성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사업체 및 기업대상 통계와의 연계를 통해 한편으로는 서로 특성이 다른 각각의 통계를 개선하여 기업통계를 상승적으로 발전시키는 효과를 도모함과 아울러 통계가 갖는 총 정보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국가통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재형, 『사업체대상 통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이재형·김미자, 『한국의 기업활동 : 구조, 전략, 성과 - 기업활동조사 분석보고서』, 통계개발원, 2009.
- 정수영, 『경영학원론』, 박영사, 1982.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운용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2006.
- 중소기업청·K-BIZ중소기업중앙회, 『2013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2014.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II)』, 1992.
- 통계청, 『살아있는 통계 변화하는 통계청』, 2007.
- 통계청, 『살아있는 통계 함께하는 통계청』, 2013.
- 통계청, 『2012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보도자료)』, 2013.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목록』, 2014.
- 한국생산성본부,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2013.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해설』, 2007.
- 한국은행, 『2013 기업경영분석』, 2013.
- 한국은행, “2013년 기업경영분석” 보도자료, 공보 2014-10-8호, 2014.
-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 전문』, 한국회계기준원, 2011.
- DEUTSCHE BUNDESBANK, “Quality report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statistics,” 2014. 25/SEP: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 statistics(<http://www.bundesbank.de/Navigation/EN/Statistics/>).
- U.S. Census Bureau, Quarterly Financial Report for Manufacturing, “Mining, Trade, and Selected Service Industries, Second Quarter 2014,” Series QFR/14-Q2: Quarterly Financial Report U.S. Census Home page(<http://www.census.gov/econ/>).
- 財務省財務叢合政策研究所, 『法人企業統計調査及び法人企業景氣予測調査の概要と活用状況について』, 2014.



경제통계

제9장 국민계정

-
1. 개요
 2. 발전과정
 3. 주요 국민계정통계의 발전과정
 4. 맺음말

01

개요

의의

••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국민경제의 활동결과와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계정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민계정도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및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¹되어 있다.

한편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활동 규모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가공통계로서 수많은 통계작성 기관들이 생산하는 조사통계, 보고통계, 행정자료 등 다양한 기초통계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국민계정은 경제통계 작성의 일관성 및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경제통계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경제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노력은 17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96년 영국의 페티(W. Petty)와 킹(G. King)이 영국의 국민소득을 추계하였고, 1699년에는 프랑스의 브와귀베르(P. Boisguillebert)가 프랑스의 국민소득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산출한 국민소득은 이론적인 면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 이후 18세기 들어 스미스(A. Smith)와 리카도(D. Ricardo)가 국민소득의 개념을 보다 발전시켰으며 이를 기초로 국민소득을 추계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국민경제의 순환에 관한 이론적 보충자료로서는 이용가치가 있었지만 경제규모의 통계적 포착이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즉, 그 당시에는 국민소득의 추계작업도 시산적인

1 5대 국민경제통계는 이론과 작성방법 측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계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5대 국민경제통계를 일정한 기준·원칙 및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이다.

수준에 머물렀으며 주로 생산측면을 중심으로 국민경제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국민계정이 비교적 정비된 개념과 추계방법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세기 말경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이 국민소득통계²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분석을 위한 통계로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53년에 UN은 최초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³를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이에 기초하여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이후 국민계정체계는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1968년, 1993년 및 2008년, 모두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자산은 한 국민경제가 일정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 시점의 화폐가치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국가자산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생산과정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과 대외순자산을 주로 의미하지만, SNA에서는 재고자산, 귀중품(서화, 골동품 등)과 자연자원(토지, 수자원, 임산자원, 매장광물 등) 등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국가자산통계는 1679년 페티(W. Petty)가 자본환원법이란 간편한 방법으로 영국의 국부를 추산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후 킹(G. King), 데커(M. Decker) 등이 계속 영국의 국부를 추계하였고 1850년에는 영국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국부가 공식적으로 추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독일에서는 1896년에 각각 국부가 추계되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1850년에 센서스방식에 의한 국부추계를 처음 시도하였다. 아시아에서는 1841년 일본의 경제학자 다카하시 히데요미(高橋秀臣)가 처음으로 일본의 국부를 계산한 이래 1905년 일본은행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국부를 추계하였으며 1913년부터는 일본정부가 직접 국부를 추계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국가자산통계를 직접조사방식으로 추계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접추계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다.

2 국민소득통계는 국민계정체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발전된 계정으로 국민총생산과 지출, 산업별 부가가치, GDP, GNI 등 국민소득 총량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

3 국민계정체계(SNA)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과 정의, 분류방식에 의해 작성된 각종 계정과 표로 구성되어 있는 일관성 있고 통합된 통계 시스템인 동시에 종합적인 회계체계이다. SNA의 회계원칙은 「기업회계원칙」을 기초로 하며 기업회계의 전통적인 복식부기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SNA는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경제이론 및 원리에도 크게 의존하는데 생산, 소비, 자본형성과 같은 개념은 경제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기록된 각 계정 항목들은 대응계정에 이기되며 균형항목을 중심으로 계정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됨으로써 일관되고 체계적인 통합 시스템을 이루게 된다.

범위와 종류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국민계정통계는 총 21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5종의 전국계정통계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6종의 지역계정통계가 있다. 전국계정통계에는 국민경제의 활동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민소득통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내역을 기록한 ‘산업연관표’, 경제부문 간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금순환표’, 일정기간 중의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국제수지표’, 그리고 일정시점에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는 ‘국민대차대조표’가 있다. 여기에서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통계로 국민계정에서 국외거래계정과 거래내용이 일치한다. 한 나라의 국민경제는 다른 나라들과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자본의 조달과 축적 등 다양한 형태의 대외거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국외와의 거래내용은 국제수지표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계정에서는 국외거래계정에 기록하고 있다. 국제수지표의 상품 및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국외거래계정에서는 각각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외요소소득, 국외경상이전 등으로 구분·기록된다.⁴

한편, 지역계정통계에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지역소득통계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15종의 시군구 지역내총생산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 현황

유형	통계명칭	통계수	작성주기	작성기관
전국계정	국민소득통계	1	분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	1년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1	분기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	1	월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1	1년	통계청, 한국은행
지역계정	지역소득	1	1년	통계청
	시군구 지역 내 총생산	15	1년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
합계		21		

작성주기를 살펴보면 산업연관표, 국가자산통계 및 지역계정통계는 1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고, 국민소득통계와 자금순환표는 분기별로도 작성되고 있으며 국제수지통계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금융기관의 보고 시스템에 의해서 매월 작성되어 공표되고 있다. 국민계정

4 국제수지표는 제11장 ‘무역·국제수지’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통계의 작성기관을 살펴보면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 4종의 전국계정은 한국은행이,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역계정 중 시도 단위 지역소득통계는 통계청이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시군구 지역내총생산은 15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가 작성·발표하고 있다.

UN 국민계정체계의 변천

•• 국민소득통계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29년 세계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계기가 되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당시의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각국은 종전과 같이 부분적이고 추상적인 경제정책만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민소득에 관한 이론과 통계적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시 경제의 운영과 전후 경제의 부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국민소득통계는 국민경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통계로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47년 국제연맹(League of United Nations)은 영국의 경제학자 스톤(R. N. Stone)이 작성한 ‘국민소득 및 관련 총량지표의 정의 및 측정’(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the National Income and Related Totals)이라는 편제지침을 채택하여 국민소득 관련 총량지표들을 회원국에 소개하였다. 1953년 UN은 최초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를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이에 기초하여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SNA는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1968년, 1993년 및 2008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UN이 권고하는 SNA는 미래에 실현해야 할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회계기준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경제특성 및 기초자료 사정을 고려하여 자국에 적합한 SNA를 제정하여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있다. EU 회원국은 유럽계정체계(European System of Accounts, ESA)에 따라 회원국의 국민계정을 작성하며, 미국은 국민소득 및 생산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of the US, NIPA), 호주는 호주국민계정체계(Australi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SNA), 우리나라는 한국국민계정체계(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KSNA)에 따라 각각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있다.

1953 SNA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소득통계의 편제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1953년 UN에서는 ‘국민계정체계와 부록’(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라는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UN이 권고한 최초의 SNA이었다.

1953 SNA는 국내생산계정, 국민소득계정, 국내자본형성계정, 가계 및 민간비영리기관계정, 일반정부계정, 대외거래계정 등 6개의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953 SNA는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산업 간의 상품흐름을 나타내는 산업연관표,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국제수지표, 경제부문 간의 자금흐름을 기록하는 자금순환표, 국부 등의 축적을 기록하는 국민대차대조표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초를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953 SNA가 산업연관표를 국민소득통계와 연결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하였으나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대차대조표와의 유기적인 연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또한 물량변동추이를 측정하는 불변가격 기준의 국민소득통계 작성을 위한 지침이 충분치 못한 한계가 있었다.

1968 SNA

•• 196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 등의 통계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1953 SNA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리고 계량경제분석을 통한 경제동향의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서도 국민계정통계의 통일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1968년에 UN에서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 1968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국민계정을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1968 SNA는 국민경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국민계정통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민경제의 실물과 금융, 스톡(stock)과 플로(flow)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68 SNA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이나 사용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주체를 산업, 정부 서비스 생산자, 가계에 대한 민간비영리 서비스 생산자 및 가계로 분류하는 한편, 소득의 수취 및 지출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제도 단위들을 부문별로 묶어 법인 및 준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가계 등의 제도부문으로 분류하였고 생산주체는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시장생산자(기업)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비시장생산자(정부 및 비영리기관)로 구분하였다. 또한 불변가격 기준의 국민계정 작성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993 SNA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경제의 국제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 크게 달린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5대 국민경제통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UN, OECD, IMF, EUROSTAT, 세계은행 등 5개 국제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의 연구개발을 통해 개정 초안을 만들고 UN 통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993년에 개정된 국민계정체계(1993 SNA)를 발표하게 되었다. 1993 SNA는 종전의 1968 SNA의 계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다기보다는 그간의 세계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경제정책 및 분석면에서 통계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제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세분화 및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3 SNA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총소득(GNI), 혼합소득(가계소유 비법인기업의 영업잉여) 등 새로운 개념의 통계지표를 도입하고 국외거래계정을 국제수지표의 개념 및 분류와 완전히 일치시켰다. 또한 1968 SNA에서는 금융중개기관의 산출액을 명목산업(금융중개서비스산업)의 중간소비에 전액 배분하여 처리하였으나, 1993 SNA에서는 금융서비스이용자(자금차입자와 자금대여자)의 중간소비 및 최종소비에 각각 배분하도록 권고하였다. 더불어 광물탐사, 컴퓨터소프트웨어, 오락·문학 및 예술품 원본 등을 자산에 포함하여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환경, 관광, 보건복지 등 경제,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해 보다 상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 체계를 도입하였다.

2008 SNA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경제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통계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UN은 2008년에 연구개발(R&D)의 역할 증대, 다국적 기업의 확대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1993 SNA를 개정한 2008 SNA를 발표하였다. 2008 SNA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종전에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R&D와 무기시스템을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거래를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ing) 활동의 거래발생시점을 '국경 통과'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총고정자본형성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R&D와 기타 지식재산생산물(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오락, 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광물탐사 및 평가)로 세분하였다.

02 발전과정

체계적 기틀 마련(~1950년대)

•• 광복 이후 약 10년 동안은 우리나라에 국민소득통계가 처음 소개되고 시험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남한만을 대상으로 당시의 기획처 경제기획국은 생산 국민소득을, 재무부 사세국은 분배국민소득을, 그리고 조선은행 조사부에서는 지출국민소득을 각각 추계하였다.

1950년대에는 국민소득통계와 국제수지통계가 공식적으로 편제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소득통계는 1957년에 한국은행이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UN의 1953 SNA 기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편제되기 시작하여, 1958년에 1953~1957년 기간의 '산업별 국민총생산'과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경상 및 불변가격계열(1955년 기준)로 작성·발표하였다. 1959년에는 분배국민소득계열, 일반정부수지표, 대외거래표 등이 추가 편제됨으로써 국민소득통계의 체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편 국제수지표는 1955년 우리나라의 IMF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행에서 1957년부터 편제하여 1950~1956년 중 국제수지표를 연도별로 작성·공표하였으며, 1958년부터는 IMF의 『국제수지표 작성 편람(Balance of Payment Manual, BPM)』에 의거 반기별로 작성주기를 단축하여 공표하였다.

국민계정통계 작성(1960~1970년대)

••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및 국부통계가 최초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부터는 본격적인 분기국민소득 추계작업에 착수하여 1968년 1분기부터 경상 및 불변가격 국민총생산을 매분기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요청에 의해 한국은행에서 1962년 3월 착수하여 1년 4개월의 작업 끝에 1963년 6월 완료 공표하였다. 1960년 산업연관표는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우리나라 최초 산업연관표이다.

한편, 1965년부터는 한국은행에서 분기 및 연간으로 자금순환표를 작성·발표하였다. 1969년(1968년 말 기준)에는 최초로 국부통계가 작성·공표되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주관 하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이 가계부문, 정부부문, 법인 및 개인기업부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자산은 우리 경제 내에 소재하는 모든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과 대외순자산이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질적 및 양적으로 크게 발전함에 따라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도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개편되었다. 국민소득통계는 더욱 정비된 분기추계방법을 활용하여 1960년 이후의 분기별 경상가격 시계열을 소급 정비하였으며 1973년 3분기부터는 경상 및 불변가격 국민소득을 함께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197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부터 실측 산업연관표는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연장표는 실측표 이후 3년이 지난 연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산업연관표(연장표), 1975년 산업연관표(실측표), 1978년 산업연관표(연장표)가 순차적으로 작성됨으로써 1970년대에 4차례의 산업연관표가 작성·발표되었다.

자금순환표는 1975년에 1차 개편이 있었는데 부문별로 1965년의 5개 대분류 11개 소분류에서 5개 대분류 13개 소분류로, 그리고 형태별로는 24개 분류에서 26개 분류로 세분하였으며, 국제수지표는 1978년부터 분기에서 월로 작성주기를 단축하여 공표하였다.

1978년에는 제2회 국부통계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국민은행과 농림수산부가 추가로 조사에 참여하면서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국민계정통계 체계 완성(1980~1990년대)

•• 1980년대는 1968 SNA에 기초하여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계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기준을 마련한 시기였다. 한국은행에서는 1978년에 1968 SNA에 의한 국민계정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1982년부터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의 3개 국민계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하여 1986년 3월에 1968 SNA에 의한 1980~1984년 시계열을, 1987년에는 1970~1985년 연간 및 분기 시계열을 발표하였다. 이어 1989년에는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를 연결함으로써 대차대조표를 제외한 4개 국민계정을 연결한 국민계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68 SNA 이행에 따라 1980년 산업연관표(실측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자금순환표도 타 계정과의 연결을 위해 부문분류 및 형태별 분류를 세분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85년에 자금순환표를 개편하였다. 부문별로는 1975년의 5개 대분류 및 13개 소분류

에서 5개 대분류 및 22개 소분류로, 형태별로는 26개 분류에서 37개 분류로 세분하였다. 1988년에는 제3회 국부통계조사가 제2회와 마찬가지로 6개 기관 공동으로 실시되어 우리나라의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대외순자산을 조사하였다.

1990년대는 5대 국민경제통계가 실질적으로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통합·연결되고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소득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시기였다. 5대 국민계정통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UN, OECD, IMF, EUROSTAT, 세계은행 등 5개 국제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의 연구개발을 거쳐 개정 초안을 만들고 UN 통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993년에 개정된 국민계정체계(1993 SNA)를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1993 SNA 이행작업을 추진하여 1999년의 1995년 기준 개편 시 부분적으로 이행하였다. 한편 1993년에 통계청에서 작성한 15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통계가 처음으로 공표되었고 1998년 경기도가 시군구 단위 지역내총생산 통계의 작성·발표를 시작한 이래 현재 15개 시도(서울시 제외)가 시군구 단위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1997년에 실시된 제4회 국부통계조사는 통계청을 비롯하여 농림부, 산림청 등 3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자산의 범위는 이전의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대외순자산 외에 비생산자산인 임목과 토지를 포함하였다.

국민계정통계의 고도화(2000년대 이후)

•• 2000~2010년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 국민계정은 1993 SNA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여 작성함으로써 질적으로 크게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지역내총생산(생산계정)에 이어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지출계정)’ 및 ‘지역본원소득 및 처분가능소득(분배계정)’ 통계를 신규로 작성·공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계정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지역산업연관표를 편제함으로써 지역경제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한국은행에서는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005년 1분기부터 국내총생산 분기 속보치를 발표하였으며, 경기흐름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2006년 1분기부터 분기GDP의 성장률의 주지표를 전년동기비에서 전기비로 변경하였다. 한편 2004년에는 국민소득통계의 기준년을 2000년으로 개편하면서 1993 SNA 체계로 이행하였다. 즉 GDP 산출물 가격평가 기준을 생산자가격에서 기초가격으로 변경하였고 종전에 전액 중간투입(비용)으로 처리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 광물탐사에 대한 지출을 투자지출로 처리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계방법을 국제기준(1993 SNA)에 맞춰 기존의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를 파악한 것으로 지역내총생산만으로는 지역별 소비·투자구조와 물류의 흐름 파악이 불가능하여 지역의 경제구조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1997년부터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통계 개발에 착수하여 2001년 7월에 지역내총생산과 함께 발표(1995~1999)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분배계정 개발에 착수하여 2009년에 지역소득 분배계정(2000~2008)을 발표하여 지역별 국민소득통계를 완성하였다.

1993 SNA 이행을 위해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광물탐사 등 무형자산의 고정자본형성 처리, 비군사목적 국방지출의 고정자본형성 처리, 도로·교량·제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고정자본소모 계상 등이 새로 포함된 2000년 산업연관표(실측표)가 작성되었고 이후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를 매년 편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매년 작성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에서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국을 6개 지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으로 구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2007년 3월에 공표하였고, 이후 경제권역을 광역자치단체 기준 16개 시도로 구분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공표하였다.

자금순환표는 2006년에 1993 SNA에 따라 부문별로는 5개 대분류 22개 소분류에서 5개 대분류 28개 소분류로, 형태별로는 42개 분류에서 40개 분류로 개편하였고, 국제수지표는 2006년부터는 지역별 경상수지를 작성하여 공표하였으며 현재 UN, IMF 등 6개 국제기구가 제정한 서비스무역 통계 매뉴얼(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MSITS)에 따른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Extended Balance of Payments Services, EBOPS)에 의거 편제·공표하고 있다. 지역별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은 2009년부터 편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2007년부터 국부통계 작성을 이전의 직접조사방식에서 1년 주기의 간접추계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 시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명칭도 ‘국가자산통계’로 변경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을 2008 SNA 체제로 완전 이행함과 동시에 통계청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추진해 온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발표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5대 국민계정을 모두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작성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국민계정통계를 작성하는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행에서는 2014년에 국민소득통계를 2010년 기준으로 개편하면서 오락·문화 및 예술품 원본의 자산 처리, 국외직접투자 재투자수익의 신규 반영, R&D와 무기시스템의 자산 처리, 가공 및 중계무역의 경제적 소유권 원칙 적용 등을 반영함으로써 2008 SNA 체제로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한편 2013년 12월 공표된 201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산업연관표 중에서 표 형식이나 계정 처리 등에 있어 변화가 가장 큰 표라고 할 수 있다. 동 표에서는 처음으로 공급사용표와 투입산출표를 동시에 편제하였으며, 2008 SNA 이행과 관련하여 수출입 재화의 기록 시점, 공공·민간 파트너십(PPPs)에 의한 건설자산의 고정자본형성 기록시점을 경제적 소유권 변동시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2014년에 UN이 제정한 2008 SNA에 따라 자금순환표의 부문분류를 5개 대분류 28개 소분류에서 5개 대분류 31개 세분류로, 형태별로는 40개 분류에서 47개 분류로 대폭 개편하였고 동년 3월에는 2010년 개정된 IMF의 『국제수지표 작성 편람(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제6판(BPM6)을 기준으로 국제수지표의 개편을 완료하고, 1980년까지 시계열을 소급·작성하였다.

2013년 11월에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대차대조표를 분담하여 개발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2014년 5월에 최초로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5대 국민경제 통계인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가 모두 작성되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었다.

03

주요 국민계정통계의
발전과정

국민소득통계

개요

••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나타내는 통계이다. 국민소득은 포괄범위나 평가방법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국민총소득(GNI), 국민순소득(NNI), 국민소득(NI)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 세 가지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 이를 생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국민소득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센서스 등 각종 기초통계가 지출활동이나 분배활동보다는 생산활동을 측정하기에 더 적합하도록 작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국민소득통계를 편제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통계는 한국은행에서 분기 및 연간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신속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 속보치와 연간 잠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해당 분기가 끝나면 28일 이내에 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70일 이내에 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공표한다. 분기 속보치는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실질가격 기준으로 추계하여 분기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분기 잠정치에는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실질가격 및 명목가격으로 모두 추계하여 발표한다.

한편 연간 잠정 국민소득통계는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발표하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자본재 형태별 및 주체별 총자본형성 등 10개 부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연간 확정 국민소득통계는 연도 종료 후 1년 3개월 이내에 발표하며 연간 잠정치 추계내용 이외에도 제도부문별 생산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그리고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등 7개 부표가 추가로 작성된다.

통상적으로 분기 속보치에서는 직전 분기 가운데 2개월 잠정 수치를 계산에 넣고 마지막 1개월 수치를 예측하여 사용하며, 분기 잠정치에서는 3개월 잠정 수치를 모두 사용한다. 분기별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해당 분기 잠정 추계 때 1차 수정되고, 연간 잠정 및 확정 추계 때 다시 수정된다. 국민소득통계는 센서스 등 기초통계의 활용, 지수의 현실화, 추계기법 변경 등을 위해 5년마다 지수기준년을 개편하며 이에 따라 확정치도 기준년 개편 시 수정된다. 국민소득통계는 보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며 계간 『국민계정』,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에 수록된다.

국민소득통계 작성 체제

구분	공표 시한	공표 내용	이용 자료	비고
분기 속보치	해당분기 종료 후 28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2개월 실적 및 결측월 추정 자료	4/4분기 속보치와 연간 속보치는 동시에 발표
분기 잠정치	해당분기 종료 후 7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실질, 명목)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명목) 	분기 잠정 자료	4/4분기 잠정치는 연간 잠정치에 포함하여 발표
연간 잠정치	해당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자본재 형태별 주체별 총자본형성 등 10개 부표 	연간 잠정 자료	
연간 확정치	해당년도 종료 후 1년 3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부문별 생산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등 7개 부표 	연간 확정 자료	

한편,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가변동 요인을 제거한 실질국민소득을 이용한다. 실질국민소득은 매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기준년의 시장가격(불변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상대가격의 구조가 변화하므로 실질국민소득은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경제의 참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대체로 5년을 주기로 국민소득통계의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57년에 1955년을 기준년으로 국민소득통계를 추계한 후 1964년에 제1차로 기준년(1960) 개편을 실시한 이후 2014년에 11차 기준년(2010) 개편을 완료하였다.

국민소득통계 기준년 개편 현황

개편회차	기준년	공표년도	대상기간	비고
	1955	1958	1953~1957	1953 SNA 체계
1차	1960	1964	1953~1963	"
2차	1965	1967	1953~1966	"
3차	1970	1972	1953~1971	"
4차	1975	1978	1953~1977	"
		1984	1970~1982	"
5차	1980	1986	1980~1984	1968 SNA 체계로 이행
		1987	1970~1985	
6차	1985	1989	1970~1987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연결
7차	1990	1994	1970~1992	
8차	1995	1999	1970~1997	1993 SNA 부분 이행
9차	2000	2004	1970~2002	1993 SNA 이행 완료
10차	2005	2009	1970~2007	
11차	2010	2014	2000~2013	2008 SNA 체계로 이행

발전과정

광복 이후에는 신경제이론의 도입과 더불어 국민소득통계가 부흥계획 및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커져가면서 남한만을 대상으로 당시의 기획처 경제기획국은 생산통계를 이용한 생산국민소득을, 재무부 사세국은 세무자료를 이용한 분배국민소득을, 그리고 조선은행 조사부에서는 1949년에 소비 면에서 본 지출접근방법으로 1947년 이후의 지출국민소득을 각각 추계하였다. 3개의 기관에서 추계한 국민소득은 이론적으로 규모가 비슷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광복 이후 한국의 국민소득

(단위 : 억 원)

구분	1947	1948	1949	1950
기획처	-	6,707	8,868	22,348
재무부	913	1,291	2,029	2,784
조선은행	1,554	6,924	8,772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 - 어제와 오늘』, 1995

우리나라에서 국민소득 추계에 일대 전기를 가져온 것은 당시 UN 원조기관의 위촉으로 한국경제 재건 계획을 만들기 위해 1952년에 내한한 네이산 사절단(Nathan Associates, Inc.)에 의해서였다. 이 사절단이 작성한 '네이산 보고서'는 경제계획 입안을 위해 국민총생산을 생산통계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추계하도록 권고하였고, 기초통계자료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추계방법과 자료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1955년에는 한국은행 조사부와 기획처 경제기획국이 공동으로 1952~1954 회계연도의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총생산액’을 국민계정 작성방식에 의거하여 추계하였다. 한편 재무부 사세국에서는 총예산 설명 자료로서 1947년 이후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을 매년 예측형식으로 추계(사실상은 과세소득에 가까운 개념)하여 계속 발표하였다. 또한 UN 경제조정관실(Office of Economic Coordination, OEC)에서도 원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 달러화 기준(이후에는 원화 기준)의 국민총생산을 추계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총생산 통계가 여러 기관에서 작성되어 왔으나, 1957년 8월 홀(J. K. Hall) 박사를 단장으로 하여 내한하였던 미국 재무부 사세고문단의 ‘한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건의’에 의해 정립되었다. 각 기관의 상호연관성 없는 추계를 지양하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민소득통계를 전담케 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 그 권고가 수용됨으로써 이때부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국민소득통계의 공식 편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1958년 한국은행은 1953 SNA에 따라 산업별 국민총생산과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작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통계는 1957년에 한국은행이 공식 편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비로소 UN의 1953 SNA 기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편제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행에서는 국민계정체계 전반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추계업무의 재정비 및 기존 발표계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1958년에 한국은행에서는 UN이 권고하는 방식(1953 SNA)에 따라 1953~1957년간의 ‘산업별 국민총생산과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경상 및 불변가격계열(1955년 기준)로 작성·발표하였으며 1959년에는 분배국민소득계열, 일반정부수지표, 대외거래표 등이 추가 편제됨으로써 국민소득통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편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경제정책의 입안 및 분석자료로서 국민소득통계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단기종합경제지표로서 분기별 국민총생산을 추계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에 분기별 추계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1965년에 1964년 1분기~1965년 2분기 계열의 분기별 국민총생산을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1967년에는 본격적인 분기별 추계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1965년에서 1967년 상반기에 이르는 5개의 반기 계열을 생산 및 지출측면에서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1968년부터는 본격적인 추계작업에 착수하여 1960년 계열까지 소급 추계함과 동시에 1968년 1분기 이후의 경상 및 불변가격 국민총생산을 매분기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기별 국민소득추계 결과는 분기 경과 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시차를 두고 발표되었으며, 1970년 이후부터는 추계기간 단축을 위하여 경상시장가격 계열의 추계를 중단하고 불변시장가격 계열에 의한 분기국민소득만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1973년 9월 그간의 경상가격 계열을 포함하여 더욱 정비된 분기추계방법의 연구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1960년 이후의 분기별 경상가격 시계열을 소급 정비하였으며 1973년 3분기부터는 경상 및 불변가격 국민소득을 함께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1960년대 이후 각국은 국민경제의 종합적 분석을 위하여 1953 SNA에 의하여 국민소득통계를 편제함과 아울러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자금순환표,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는 레온티에프(W. W. Leontief),⁵ 국제수지표는 1948년에 발간한 IMF의 『국제수지표 편제 편람』, 자금순환표는 코플랜드(M. A. Copeland)⁶에 의해 개발된 기법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편제하였다.

이러한 각 통계에 대한 편제경험을 바탕으로 이들 국민경제통계를 통합한 새로운 국민계정을 작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컴퓨터에 의한 계산 기술의 발달로 5대 국민계정의 통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UN에서는 1968년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1968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국민계정을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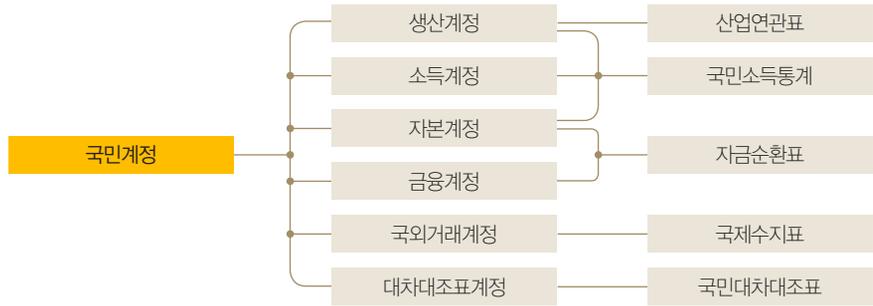
1968 SNA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계정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들 5대 국민계정통계를 연결하여 작성하는 것은 작업량이 방대하고 기초자료의 추가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각국은 자국의 통계환경에 맞추어 5대 국민계정통계의 통합범위와 개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1970년대 전반에, 서독과 일본은 1970년대 후반에 각각 1968 SNA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78년에 1968 SNA에 의한 국민계정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1982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작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1968 SNA의 내용 및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고 선진국의 개편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각종 연구자료를 발간함과 아울러 1978년을 대상으로 모든 플로 계정을 시산하였다. 시산 결과 기초통계의 부족으로 1968 SNA에 의한 5대 국민계정의 완전한 동시 통합 개편이 어렵다고

5 197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레온티에프(W. Leontief)는 투입산출모형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러시아 부농 가문에서 1906년 태어나 레닌대학에서 공부한 후 독일로 이주해 베를린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22세)하였다. 대학시절부터 홀로 연구해온 투입산출 분석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산업 각 부문의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여 산업연관표를 만들려는 작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1931년부터는 하버드대로 옮겨 1940년대 말 미국의 산업연관표 작성을 주도했다.

6 코플랜드(M. A. Copeland, 1896~1989)박사는 미국 로체스터에서 태어나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1년부터 코넬대학에서 경제학교수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자금순환과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경제학자이다. 그는 코넬대학과 여러 연구기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미국의 자금순환에 관한 연구”(1951), “경제학의 이론과 실제”(1958), “정부자금조달 추이”(1961), “우리의 자유기업 경제”(1964), “완전 고용을 향하여”(1966)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민계정의 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와의 관계



판단하여 기초통계의 활용이 가능한 통계를 중심으로 먼저 부분 개편하고 여타부분은 기초통계의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의 3개 국민계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 결과 1986년 3월에 일차적으로 1968 SNA에 의한 1980~1984년 시계열을 발표하였다. 1987년에는 1970~1985년 연간 및 분기 시계열에 대해 1968 SNA를 적용하였다.

1968 SNA 체계로의 개편 추진과정에서 1978년, 1980년 및 1983년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몇 차례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와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를 시산한 바 있으나 기초통계의 부족 등 제반 여건의 미비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5년 산업연관표 작성 및 1985년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을 계기로 1989년에는 보다 많은 기초통계를 확보하여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를 연결하였다. 이로써 대차대조표를 제외한 4개 국민계정통계를 연결한 국민계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68 SNA로 개편하면서 거래주체를 경제활동 및 제도부문별로 2중 분류하였다. 상품의 거래는 산업, 정부서비스 생산자,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 가사서비스 생산자, 가게 등 경제활동별로 분류하고, 소득과 자금의 거래는 법인이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및 개인 등 제도부문별로 분류하였다.

1953 SNA에서는 부가가치 중심으로 추계하였으나 1968 SNA에서는 총산출과 중간투입을 추계한 다음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추계하였다. 또한 각 산업의 부가가치에서 직접 차감하던 금융귀속 서비스를 금융귀속 서비스라는 의제산업을 설정하여 일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계방법도 개선하였는데 지출부문 추계에는 상품

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⁷을 확대 적용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경제의 국제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 달라진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5대 국민경제통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UN, OECD, IMF, EUROSTAT, 세계은행 등 5개 국제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의 연구개발을 거쳐 개정 초안을 만들고 UN 통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993년에 개정된 국민계정체계(1993 SNA)를 발표하게 되었다.

1993 SNA는 종전의 1968 SNA의 계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다기보다는 그간의 세계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경제정책 및 분석 면에서 통계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제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세분화 및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민총소득(GNI), 혼합소득(가계소유 비법인기업의 영업잉여) 등 새로운 개념의 통계지표를 도입하고 국외 거래계정을 국제수지표의 개념 및 분류와 완전히 일치시켰다. 광물탐사, 컴퓨터소프트웨어, 오락·문학 및 예술품 원본 등을 자산에 포함하여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환경, 관광, 보건복지 등 경제,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해 보다 상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1993 SNA 이행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기초자료 사정 등을 감안하여 1999년의 1995년 기준 개편 시 부분적으로 이행을 완료하였다. 즉 국민계정을 1993 SNA가 권고하는 생산계정, 1차 소득분배계정, 2차 소득분배계정, 처분가능소득계정, 자본계정 및 금융계정의 구성체계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지표인 GNI, 실질 GNI, 실제최종소비 등을 도입하였으며 정부가 보유한 모든 재화를 재고에 포함하였다.

이후 2004년의 2000년 기준 개편 시에 1993 SNA 체계로 완전 이행하였다. GDP 산출물 가격평가 기준을 생산자가격에서 기초가격으로 변경하였고 종전에 전액 중간투입(비용)으로 처리하던 컴퓨터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 광물탐사에 대한 지출을 투자지출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생산자 중심의 경제활동 분류체계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였고 조세의 용어 및 분류체계를 수정하여 부가가치세(VAT)를 명시화하였다.

분기 실질GDP가 분기 종료 후 50일경에 발표됨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7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추계에 적용되는 기본적 추계방법은 크게 ① 최종수요자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는 공급접근방법과, ② 최종수요자의 지출자료에서 직접 추계하는 방법, 즉 가계소비조사자료에 의한 민간소비추계, 정부지출자료에 의한 정부지출추계, 기업재무자료에 의한 자본형성추계 및 무역통계자료에 의한 수출입추계에 의존하는 수요접근방법이 있다.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설비투자 등의 지출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1953 SNA에 의한 국민소득의 지출추계는 경제주체 지출자료에 의한 직접 추계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1968 SNA 체계로 전환하면서 공급측면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상품흐름법으로 전환하였다. 즉, 생산된 재화에 수입을 더하고 수출, 중간소비 및 생산자 및 수입재고 증감을 차감하여 국내최종수요를 산출한 후 기준년의 산업연관표에서 계산된 민간최종소비율 및 설비투자율을 곱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과 민간투자지출을 산출한다. 그러나 지출측면의 자료가 보다 신빙성이 높은 정부최종소비지출과 정부부문 건설투자는 정부의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한다.

대처하기 위한 분기GDP 발표 조기화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은행은 2001년부터 분기GDP 속보치를 시험 편제하여 내부자료로 활용해 왔으며 그간의 시험편제 결과 분기GDP 속보치의 정도와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2005년에는 국내총생산 분기 속보치를 발표하였다. 속보치가 분기 종료 후 25일 경에 발표됨으로써 미국 30일 및 영국 25일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시기가 단축되었다.

한국은행에서는 경기흐름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는 분기GDP의 전기비 성장률을 2006년 1분기부터 주지표로 변경하였다. 종전에는 원계열 전년동기비를 분기 경제성장률의 주지표로 발표하여 왔으나 계절조정계열 전기비로 변경하였다. 주지표 변경은 GDP 통계의 경기지표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신속한 경제정책의 수립 등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2009년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계방법을 국제기준(1993 SNA)에 맞춰 기존의 고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국민소득(GDE) 추계방법을 생산국민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흐름법 대신 민간소비, 재고증감 등 지출 항목을 직접 추계하는 지출접근법으로 변경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경제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통계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UN은 2008년에 R&D의 증대, 다국적 기업의 확대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1993 SNA를 개정하여 2008 SNA를 발표하였다. 2008 SNA는 1993 SNA를 전면 개편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증보한 것으로 종전에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R&D와 무기시스템을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였고 또한 국가 간 거래를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ing) 활동의 거래발생시점을 '국경 통과'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하였다.

2008 SNA의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4년에 2010년 기준 개편과 함께 2008 SNA의 주요 변경사항인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자산 처리, 국외직접투자 채투자수익의 신규 반영, R&D와 무기시스템 자산 처리, 가공 및 중계무역의 경제적 소유권 원칙 적용 등을 국민소득통계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민소득통계는 2008 SNA 체제로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2014년에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국민대차대조표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함으로써 5대 국민경제통계인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를 모두 완성하여 국민계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결하였다.

산업연관표

개요

●●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 및 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행렬 형태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로 5대 국민계정통계 중의 하나이다. 산업연관표는 산업연관분석은 물론이고 국민소득통계 작성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국민경제는 소득순환과 산업 간 생산물순환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소득순환은 생산활동 결과로 발생한 국민소득이 이윤, 임금, 이자 등의 형태로 분배되어 소비재와 자본재의 구입이라는 처분활동을 거쳐 다시 다음의 생산과정으로 환류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한편 산업 간 생산물 순환은 생산부문 상호 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산업 간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분석이 소득순환을 대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산업연관분석은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는 배후의 생산과정에 주목하여 산업부문 간의 기술적 상호의존 관계를 각 산업단계별로 포착하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연관분석'은 레온티에프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표현한 경제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936년에 "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투입산출관계"(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라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그는 1919년 및 1929년의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1941년에 『미국경제의 구조』(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29)를 발표하였고 다시 1939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1951년에 『미국경제의 구조』(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39) 제2판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산업연관분석의 기초를 확립한 것이었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은 레온티에프의 지휘 아래 1939년 미국 산업연관표에 이어 1950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BLS의 예산문제 때문에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완성되었다. 그러나 산업연관분석 기법 자체에 대한 회의감



● 2011년 및 2012년
산업연관표

등으로 작성되지 않다가 1959년 기업경제국(Office of Business Economics)⁸이 미국의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의 긴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다시 편제하였다. 그때부터 BEA는 1958년 산업연관표를 기점으로 매 5년마다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이외에 공식통계로서 산업연관표를 작성한 국가로는 영국 1948년표, 일본 1951년표를 들 수 있는데, UN통계국도 1966년에 '투입산출표와 분석의 제 문제'라는 매뉴얼을 간행하여 각국의 산업연관표 작성지침을 제공하였다.

발전과정

•• 1950년을 전후하여 주요국들이 산업연관표를 국가 공식통계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당시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EDC)가 최초로 1957년 및 1958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이 표는 산업개발위원회가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문분류 수가 19개에 불과하였다.

분석에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실질적 의미에서의 우리나라 최초 산업연관표는 1960년 산업연관표(실측표)이다. 이 산업연관표(실측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요청에 의해 한국은행에서 1962년 3월 착수하여 1년 4개월의 작업 끝에 1963년 6월 완료 공표된 실질적 의미에서의 우리나라 최초 산업연관표라 할 수 있다. 1960년표는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연관분석이 새로운 경제분석기법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는 기본부문이 266개, 통합소분류가 109개 그리고 통합중분류가 43개로 분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109개 및 43개 분류로 된 거래표와 43부문 투입계수표 및 역행렬계수표만 공표되었는데, 이처럼 공표된 부문 수가 적고 역행렬계수표도 43부문만 발표된 것은 당시의 계산처리 능력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1963년 산업연관표(실측표)는 정부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1967~1971)계획 수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1965년 9월까지 완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은행은 1960년표의 작성 원칙을 준용하고 일부(통신부문의 독립, 가설부문에 사무용품의 추가, 관세를 수입백터에서 분리 독립)에 대해서만 처리사항 등을 변경하였는데, 이 표가 1960년표의 작성기준을 준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측표로 불리는 것은 투입구조 조사 등 일반적인 작업이 실측표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66년 산업연관표(실측표)는 부문수가 기본부문이 298개로 1963년표에 비해 늘어났는데

8 현재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이전 표와 비교하면 석유제품의 독립, 합성섬유사와 전자제품 등 신제품의 적극적인 반영, 가계외소비지출의 외생부문으로의 이전 등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한편 1968년 산업연관표(연장표)는 3차례에 걸친 실측표 작성 이후 처음 작성된 연장표인데, 동 표는 1966년 표를 연장한 것으로 1966년 기준 1968년의 부문별 가격지수가 이용되어 작성되었다.

1960년대의 네 차례에 걸친 작성 경험을 축적한 한국은행에서는 197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부터 실측 산업연관표는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연장표는 실측표 이후 3년이 지난 연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197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는 여러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고용표도 새로 작성되어 이용도가 크게 제고되었다. 우선 기본부문의 수가 298개에서 340개로 이전 표에 비해 크게 늘어났는데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문분류의 세분화는 석유제품의 연료종류별 구분, 중후장대형 산업의 자세한 분류 등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과 그 기초를 함께 한 것이었다. 또한 수입 처리 방식에 따라 경쟁형표와 비경쟁형표가 각각 작성되어 현실 반영도가 높아졌으며 가설부문에 있던 잔폐물을 부(-)의 처리 방식인 스톤(R. Stone) 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잔폐물 행렬이 추가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총고정자본형성 대상품목의 내구연수를 3년 이상에서 오늘날과 같이 1년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고정자본형성을 지출주체별로 민간과 정부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산업연관표(실측표) 작성 이후에 1973년 산업연관표(연장표), 1975년 산업연관표(실측표), 1978년 산업연관표(연장표)가 순차적으로 작성됨으로써 1970년대에도 4차례 산업연관표가 작성·발표되었다.

198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는 1975년 산업연관표(실측표)의 체제를 따랐으나 1968 SNA 이행 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동 표의 부문분류의 주요 특징은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 일부 서비스 부문이 1968 SNA의 권고 사항인 활동별 분류에 의해 산업, 국공립, 민간비영리 등으로 구분되었고, 비료계정의 적자 전액이 상업 부문의 보조금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정곡의 포괄 범위를 도정서비스 활동은 물론 쌀, 보리, 잡곡 등의 주투입물까지 포함하는 제조 개념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정곡을 제조업의 일반적인 가공활동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금융 산출액은 금융귀속서비스와 기타서비스수수료를 합산하여 대출부문(가계, 정부, 기업)별로 구분한 다음 가계분은 민간소비지출로, 정부분은 정부소비지출로 각각 배분하고, 기업분만 내생부문에 배분하던 방식에서 1968 SNA의 개념에 따라 귀속이자와 서비스 수수료를 분리하여 귀속이자만 내생부문의 중간투입으로 배분하였다. 또한 생명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군인보험이 사회복지사업(국공립)으로 이전되었다. 정부서비스가 1970년표부터 산업으로 인식되기는 했지만 1980년표부터는 정부가 중간재와

본원적 요소를 투입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주체인 정부서비스 생산자로 확장되었다.

199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는 1968 SNA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부문분류에서 다음과 같은 큰 변화가 있었다. 광업에서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 등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원유와 천연가스가 분리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반도체 관련 경제효과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부문을 무전기 및 전자제품의 부품에서 개별소자, 집적회로 그리고 기타반도체로 세분하였다. 서비스의 경우, 배분구조 측면에서 표의 정도 제고는 물론 경제의 서비스 심화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분류체계를 갖추었다. 1990년 산업연관표(실측표) 작성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고정자본형성표가 최초로 작성된 것이다.

2000년 산업연관표(실측표)의 작성은 구조조정의 영향, 경제의 디지털화, 기술구조의 변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상품별 상대가격체계의 변화로 인한 투입산출구조의 변화 등의 반영과 국민계정통계의 기준년 개편 및 1993 SNA 이행을 위해 새로운 실측표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표의 주요 특징으로는 1993 SNA로의 이행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광물탐사 등 무형자산의 고정자본형성처리, 비군사목적 국방지출의 고정자본형성 처리, 도로·교량·제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고정자본소모 계상 등이 있다. 또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부문도 신설되었다.

2003년 산업연관표(실측표)는 2000년표 작성 이후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작성이 필요하였고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도 병행 편제하게 됨에 따라 실측표로 작성되었으며, 2004년 2월 착수하여 3년 1개월의 작업 끝에 2007년 2월 완료 공표되었다. 동 표는 2000년표와 비교하여 계정 처리의 변화는 많지 않았으나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의 기초품목으로 분류되던 무선통신단말기를 산출액 급증에 따라 기본부품으로 독립시켰고, 부가가치의 한 항목인 간접세의 명칭을 1993 SNA에 따라 생산세로 변경하였다.

한국은행에서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을 요청받고 2004년 2월에 작성 계획을 수립한 후 그해 4월 전담반을 투입산출팀 내에 별도로 설치하여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역산업연관표와 전국산업연관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제 작업을 병행한 끝에 전국을 6개 지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으로 구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가 3년이 넘는 작업 끝에 2007년 3월에 완료 공표되었다.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최초로 실측 작성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가 발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경제권역이 세분화되고 최근 경제구조가 반영된 지역 산업연관표의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경제권역을 광역자치단체 기준 16개 시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다. 동 표는 지역별 투입구조 및 상품 이출입내역의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의 자료를 기초로 지역기술계수와 교역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에서는 국민계정통계 간 정합성 제고 및 편제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매년 편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하게 된 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산업연관표(연장표)이다.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 표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표 작성 준비단계에서 표의 체계와 종류, 작성 원칙, 작업 방법, 그리고 국민소득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방안 등을 결정하고 산출액 추계 방법의 표준화는 물론 정부지정통계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였다. 두 번째, 투입구조조사를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실시하였고 주요 원재료의 변동 내역 및 생산제품의 판매에 대한 조사와 협회 및 업체 전문가 자문도 병행하였다. 세 번째, 각 부문별 투입 원부자재의 상대가격 변화가 반영된 잠정 투입계수를 추계하기 위해 부문별 가격지수를 작성하였다. 네 번째, 산업연관표의 투입과 산출을 일치시키기 위한 확정작업을 투입구조조사 결과로 잠정 작성된 거래표에 대해 실시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수정 RAS 기법을 이용하여 매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201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산업연관표 중에서 표 형식이나 계정 처리 등에 있어 변화가 가장 큰 표라고 할 수 있는데, 동 표는 2011년 3월 작성계획이 수립된 이후 34개월이라는 최장 기간의 작업 끝에 2013년 12월 완료 공표되었다. 표에 있었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에서는 투입산출표를 중심으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던 방식에서 2010년 실측표 작성 시 처음으로 공급사용표와 투입산출표를 동시에 편제하였다. 2008 SNA 이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장 큰 변화는 기록시점을 경제적 소유권 변동시점으로 변경한 것인데, 이에 따라 재화의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 수출입 재화의 기록 시점 및 가격 평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s)에 의한 건설, 자산의 고정자본형성 주체 및 시점, 항공기 등 임대 계약에 의해 운용되는 생산자산의 소유 주체, 경제적 소유자 중심의 고정자본소모 추계 등에 대한 처리기준 및 기록시점이 변경되었다. 연구개발(R&D), 군사용 무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지식재산생산물을 고정자산에 포함해 고정자본형성과 자본 스톡이 증가하였고 아울러 고정자본소모와 영업잉여 등의 변동으로 부가가치 규모가 변하였다. 또한 고용표의 주지표가 연인원(man-year)에서 전업환산인원(full-time equivalent)과 총실제노동시간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자금순환표

개요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상호 간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금융활동들이 생산, 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이다. 실물거래의 대표적 통계인 국민소득 통계나 산업연관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금의 금융적 유통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금융통계는 금융기관이라는 자금의 중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의 산업적 유통은 물론 자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하는 유통경로를 알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자금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해 기업, 개인,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자금순환표이다.

“자금순환표”는 크게 ① 스톡 통계인 금융자산부채잔액표, ② 금융거래에 따른 변동분을 기록하는 플로우 통계인 금융거래표, ③ 금융자산의 재평가 등 금융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한 금융자산부채잔액의 변동을 기록하는 거래외증감표로 구성된다.

금융자산부채잔액표는 금융연관비율의 산출, 금융자산 및 부채의 구성변화 추이 등 금융구조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실제 추계과정에 있어서도 먼저 잔액이 산출된 후 거래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잔액표가 거래표와 함께 작성·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잔액표는 그 작성범위에 따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만을 포괄하는 금융자산부채잔액표와 금융자산 및 부채와 실물자산을 모두 포괄하는 부문별 대차대조표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거래표는 일반적으로는 일정기간 중 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액(기말잔액-기초잔액)을 기록한다. 그러나 주식, 채권 등 시장성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거래가 없더라도 금융자산의 가격변동과 대손상각 등으로 잔액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변동한 금액을 제거한 실제 금융거래, 즉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자금의 변동액만을 금융거래표에 반영한다.

거래외증감표는 UN이 권고한 1993 SNA에 의하여 새롭게 작성되는 표로서 가격 또는 환율의 변동과 대손상각, 자산 재평가 등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잔액의 변동을 기록한다. 증권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대손상각이나 재평가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 그리고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는 외화관련 금융자산 등 거의 모든 금융자산이 거래 이외의 요인으로 변동한다. 이러한 거래외증감표는 금융자산 및 부채잔액의 변동액과 기간 중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표 및 금융자산부채잔액표와 동일한 부문분류기준에 의거 금융자산형태별로

작성된다. 자금순환표는 미국의 코플랜드(M. A. Copeland) 교수가 1952년에 발표한 “미국의 자금순환 연구”(A Study of Money Flow in the United States)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1955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939~1953년간의 자금순환표를 작성 발표함으로써 자금순환표가 국민경제의 분석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1958년 일본은행에서 1954~1957년 중의 자금순환표를 작성한 것이 효시이며, 자금순환표의 금융계정은 일본은행 조사통계국에서, 실물계정인 자본계정은 내각부에서 작성하는 등 편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영국은 1963년부터 자금순환표 중 거래표는 영란은행에서, 잔액표는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에서 각각 작성해 오다가 1992년에 통계청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자금순환표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작성되고 있으며 경제분석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발전과정

●●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한국은행에서 분기 및 연간으로 자금순환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현실반영도 및 정도 제고 등을 위해 동 통계의 편제방법을 수차례 개선하여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75년까지는 기본적인 계정체계에는 변함이 없이 거래형태 신설 등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이 개발·보급되는 등 금융구조도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자금순환표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였던 1968 SNA, 1993 SNA 및 2008 SNA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자금순환표는 1975년, 1985년, 2006년 및 2014년에 대폭 개편되었다. 그동안 4차 개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5년의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문별로는 1965년의 5개 대분류 11개 소분류에서 5개 대분류 13개 소분류로, 그리고 형태별로는 24개 분류에서 26개 분류로 더욱 세분화되었다. 우선 부문별 분류의 개편내용을 보면 첫째, 그동안 신설된 비통화금융기관(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투자신탁, 수출입은행 등)을 금융기관 포괄범위에 추가하였고, 둘째, 과거 금융매개기관과 기타금융기관으로 양분하였던 비통화금융기관 부문분류를 기능별로 생명보험, 개발기관, 저축기관, 투자기관으로 세분하였다.

형태별 분류의 개편내용으로는 첫째, 금융거래항목에서 보험, 신탁, 주식 등을 새로운 항목으로 독립·세분하였고 둘째, 금융거래항목의 포괄범위를 재조정하여 비통화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의 예수금을 저축성예금에, 지급보증대지급금과

농협의 부문간 대차를 대출금에, 외환갑계정을 대외자산에 각각 포함했으며 모든 금융거래 항목에 있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순계(netting)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통화 및 유가증권은 총액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예외로 하였다.

1985년 2차 개편은 국민계정체계가 1968 SNA로 이행되고 자금순환표도 타 계정과의 연결을 위해 부문 분류 및 형태별 분류를 세분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커져 실시하였다. 부문별로는 1975년의 5개 대분류 13개 소분류에서 5개 대분류 22개 소분류로, 형태별로는 26개 분류에서 37개 분류로 세분하였다.

먼저 부문 분류의 개편 내용을 보면 개인부문의 공무원연금기금·군인연금기금 등은 민간에 대한 대출업무 등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금융부문의 연금기금으로, 기업부문의 손해보험회사·증권회사·증권금융 등은 금융부문의 손해보험 및 증권기관으로, 정부부문의 국민투자기금·국민주택기금 등은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므로 금융부문의 공적금융으로 각각 전환하였다.

다음으로 형태별 분류의 개편 내용을 보면 금융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축성예금을 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 예금으로, 한국은행 예수금을 한국은행 예수금과 정부당좌예금으로, 유가증권을 장단기채권으로, 금·외환보유액을 금과 외환보유액으로 각각 세분하였다. 또한 새로운 금융자산의 출현 등을 감안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 생명보험 및 연금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은 1988년 회계처리방식이 유가증권거래에서 금융거래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예금항목으로 이관하여 항목을 추가하였다.

2006년 3차 개편은 1993 SNA에 따라 부문별로는 5개 대분류 및 22개 소분류에서 5개 대분류 및 28개 세분류로, 형태별로는 42개 분류에서 40개 분류로 대폭 개편하였다. 부문별 주요내용은 금융부문의 경우 경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포괄범위를 확대 및 재분류하였다. 과거에는 기업부문으로 분류되었던 은행계지주회사·대부사업자(법인)·자금중개회사·투자자문회사·선물회사 등을 금융부문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예금은행·저축기관·개발기관 등을 예금취급기관으로, 증권선물거래소·선물회사 등을 금융보조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공공비영리기관은 개별기관의 주된 경제활동이나 자금지원 및 통제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흡수·통합하였다.

형태별 분류를 보면 금융부문의 하위부문 세분화에 따라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과 기타금융기관의 기타예금을 계약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은 결제 및 단기저축성예금으로, 1년 이상인 금융상품은 장기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채권의 장단기구분을 폐지하고 발행기관의 경제적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 국공채를 국채 및 공공채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구분하였다. 대출금은 금융기관 성격에 따라 예금취급기관대출금, 공적금융대출금, 기타대출금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기존에 기타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던 파생금융상품 및 콜론콜머니를 각각 별도의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였다.

금융자산의 잔액 추계방법도 개선하였는데 주식, 채권 등 시장성 유가증권의 잔액평가방법을 취득가격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에는 동일 그룹에 속하는 기관 간의 예금 및 대출거래 등은 동업자거래로서 서로 상계처리 하였으나 2006년 후에는 동업자 간 거래도 모두 포함하여 총액기준으로 계상하였다.

마지막으로 2014년 4차 개편에서는 UN이 제정한 2008 SNA에 따라 부문별로는 5개 대분류 28개 소분류에서 5개 대분류 31개 세분류로, 형태별로는 40개 분류에서 47개 분류로 대폭 개편하였다.

부문별 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전 및 확장 등을 반영하여 종전 5개 중부문에서 8개 중부문으로 확대하였으며 신설된 중부문은 투자펀드, 연금기금,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이다.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결과에 따라 정부의 포괄 범위가 재정통계와 일치하도록 정부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외국환평형기금, 구조조정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의 기금을 금융법인에서 일반정부로 변경하였고, 양국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사 등을 비금융법인에서 일반정부 부문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국립암센터, 예술의전당 등의 공공기관과 지방개발연구원 등 지자체 설립 공공기관 중 일부는 일반정부에서 비금융법인으로 변경하였다.

형태별 분류를 보면 금융상품의 장단기 구분 등을 통해 기존 금융상품의 하위 항목을 보다 세분하였는데 예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결제성예금과 비결제성예금으로 구분하였고 예금취급기관의 저축성예금을 단기저축성예금과 장기저축성예금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채권의 발행만기를 기준으로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으로 구분하고 추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및 기타파생결합증권(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DLS) 등의 금융상품을 파생결합증권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 ‘국민대차대조표’란 연도 말 기준 국가 내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가액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일반적인 대차대조표가 해당 기업의 재무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민대차대조표는 국가자산의 규모와 그 증감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

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와 함께 5대 국민경제통계를 구성한다. 국민소득통계가 일정기간 동안의 변동물량을 기록한 플로우(flow) 통계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의 지량을 기록한 스톡(stock) 통계에 해당한다.⁹

국가자산통계는 국내경제 전체 및 각 구성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산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서 국민대차대조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별 투입요소 측정 및 생산성 분석 등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¹⁰

발전과정

••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 국부통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부통계조사는 이후 10년을 주기로 4차례 작성되다가, 통계의 시의성 제고 및 조사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대 들어 국가자산통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접추계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14년에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공동작업을 통해 국민계정과 체계적으로 연결된 국민대차대조표로 발전하였다.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의 발전과정

통계명	국부통계조사	국가자산통계*	국민대차대조표
시계열 자료	1968~1997(매 10년)	1997~2012	1970~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등	통계청	통계청, 한국은행
통계대상	유형자산, 재고자산, 토지, 입목, 대외순자산	비금융자산	비금융자산, 금융자산/부채
조사방법	직접조사 및 간접추계	간접추계	간접추계

* 2008, 10 국부통계조사에서 국가자산통계로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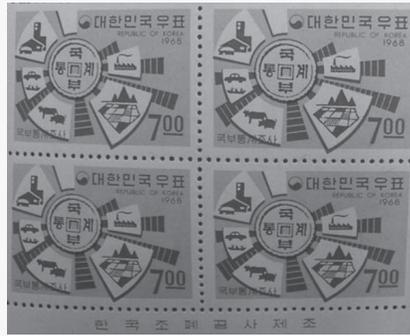
국부통계조사는 1969년(1968년 말 기준) 최초로 실시된 이래 매 10년 주기로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회 국부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이 주관이 되어,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이 가계부분, 정부부분, 법인 및 개인기업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자산은 국민경제 내에 소재하는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대외순자산이었다. 제2회 조사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1978년(1977년 말 기준) 국민은행과 농수산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9 국민대차대조표는 플로우 통계인 국민소득통계와 스톡 통계인 자산통계를 연결하기 위해 1968 SNA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1993 SNA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목적 및 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10 UN의 2008 SNA 및 OECD의 『자본측정 매뉴얼』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순자본 스톡과 함께 자본 서비스물량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소득 및 부의 관점에서 본 자본뿐만 아니라 생산 및 생산성의 관점에서 본 자본을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1988년에 실시된 제3회 국부통계조사는 제2회와 마찬가지로 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기관별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경제기획원에서는 가계 자산과 전국의 토지 및 산림자산을, 한국은행에서는 정부자산 및 대외순자산을, 한국산업은행에서는 법인자산을, 농림수산부에서는 개인기업 중 농림수산부문의 자산을, 중소기업은행에서는 개인기업 중 광공업, 전기·가

스·수도업,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자산을, 국민은행에서는 개인기업 중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업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의 자산을 각각 조사하였다. 1997년에 실시된 제4회 국부통계조사는 통계청을 비롯하여 농림부, 산림청 등 3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자산의 범위는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대외순자산 외에 비생산자산인 임목과 토지를 포함하였다.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취득상태가 신제품인 경우와 중고품인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1997년 말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총자산액과 순자산액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 국부통계조사 기념우표(1968)

국부통계조사 실시 현황

회차	조사기준시점	조사기간	조사대상 자산의 범위	부문별 참여기관
1회	1968말	1969. 01~03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대외순자산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회	1977말	1978. 03~08	상동	국민은행, 농수산부 추가
3회	1987말	1988. 03~08	상동	상동
4회	1997말	1998. 03~08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토지자산, 임목자산, 대외순자산	통계청, 농림부, 산림청

국부(비금융자산) 통계조사가 매 10년 주기로 작성·공표됨에 따라 장기 성장계획 수립 및 생산성 분석을 위한 통계의 활용에 제약이 있고 산업구조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자료의 작성이 곤란한 데다 조사 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및 조사 대상처의 과중한 응답부담으로 인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1999년 말에 간접추계방식으로서의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에 간접추계방법의 개발을 완료하여 1997~2006년 말 기준 국부(비금융자산) 추계결과를 공표 하였다. 2008년부터는 10년 주기 직접조사방식에서 1년 주기의 간접추계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명칭도 '국가자산통계'로 변경하였다. 생산자산(유형·무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은

기본적으로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¹¹ 비생산자산은 토지 및 입목자산의 경우에는 물량가격법으로, 지하자산의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순자산은 자산의 사용연수나 상태에 따른 실질가치로 현재의 자산을 시장에 판매했을 때의 가액, 즉, 시장가격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우리나라의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가액 및 증감을 기록한 스톡 통계이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금융자산 및 부채뿐만 아니라 비금융자산을 포괄하는 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려준다. 또한 국민대차대조표는 소득의 발생, 분배 및 사용, 축적 등 경제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부로 축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통계청에서는 2008 SNA와 OECD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자산통계(비금융자산)의 추계방법 개선작업을 추진하였고, 한국은행에서도 2006년 2월에 국민대차대조표팀을 신설하여 국민대차대조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3년 11월에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는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작성 및 공표’에 합의하고 국민대차대조표를 분담하여 개발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통계청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고정자산 및 비생산자산(토지, 입목 및 지하자원)의 자산계정 작성을 담당하였고, 한국은행에서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산계정에 근거하여 경제활동 및 제도부문별 계정과 금융계정 추계부분을 담당하여 2014년 5월에 최초로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를 기본표로 하며 기초, 증감 및 기말 대차대조표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은 비금융자산계정·제도부문계정·경제활동계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계정은 순자본스톡과 생산자본스톡으로 구성되며, 제도부문·경제활동계정의 경우는 자본서비스가 추가로 작성된다. 자본 스톡과 자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국제통계편제기준(UN의 2008 SNA)과 OECD의 자본측정 매뉴얼(2009, 제2판)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자산의 분류는 국민계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제도부문분류는 2008 SNA의 기준을 따랐고, 경제활동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를 적용하였다.

11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은 영구재고법의 일종인 기준년접속법을 적용하였다.

지역계정

개요

●● ‘지역계정’은 국민계정과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따라 생산, 지출 및 분배 측면에서 추계한다. 생산측면에 해당하는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 즉 부가가치를 말하며, 지출 측면인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지역 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이를 통해 시도별 생산규모와 함께 지역별 소비와 투자 구조 및 지역 간 물류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인 소득계정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이 생산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에게 소득으로 분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지역계정은 지역경제의 생산규모와 산업구조, 소득의 배분과 이전, 소비와 투자 등 지역 경제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종합지표로서 각종 지역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역경제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발전과정

●● 지역계정은 1959년에 주한 UN군의 경제조정관실(OEC)이 도민소득(1955년 기준)을 시험 추계한 것이 최초의 주민소득통계였다. 이후 한국은행이 1964년(1960~1962년 기준)과 1967년(1963~1965년 기준)에 ‘도별소득추계’를 발표하였다. 1967년 이후에는 내무부(새마을기획과)에서 추계하였으며, 1965~1971년에 대해서는 도별소득(서울시 제외)을, 1972년 이후는 도 및 시군별 소득을 추계하였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경제사회 개발전략의 중점과제로 인식되면서 지역별 소득통계는 지역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통계로 부각되었다. 당시 지역소득통계는 내무부에서 주민소득통계의 명칭으로 추계(서울시는 별도 용역)하여 1967~1978년까지 『주민소득연보』 책자를 발간하였으나, 1979년도 이후는 통계의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내부자료로만 활용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1973년부터 내무부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생산 및 시민분배소득을 연구기관(KDI, 대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추계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지역소득통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983년에 통계청에서는 지역소득통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기초통계의 현황 파악 및 시범추계를 위해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지역을 선정하여 1983~1984년에 걸쳐 1981~1982년을 대상으로 도내총생산을 시범 추계하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계정이 통계청에 의해 ‘시도 지역소득’ 통계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는 13개 시도별 도내총생산 추계에 착수하였고 1986년

이후에는 매년 전년의 도내총생산을 시범 추계하였다. 이후 추계방법 보완 및 시계열 비교·검토 등 정제작업을 거쳐 1993년 5월에 15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을 경제활동별로 경상 및 불변가격(1985 기준) 기준으로 처음 공표하였다. 발표 시계열은 1985~1991년까지 7개년이었다. 이후 매년 12월에 전년도의 잠정추계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7월에 전 전년도의 확정추계결과를 연간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해 오고 있다.

1993년에 15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통계가 처음으로 공표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와 함께 1998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서울시 제외)가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단위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자료로는 지역의 생산구조 파악이 가능하나, 생산소득에 대한 소비·투자구조와 물류의 흐름 파악이 불가능하여 지역 경제구조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소득통계 이용자들이 생산소득 자료 이외에도 소비, 투자 등 지출측면의 다각적인 지역소득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지출계정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1997년부터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통계 개발에 착수하여 2001년 7월에 지역내총생산과 함께 발표(1995~1999)하였다. 지역소득지출 계정의 작성으로 지역의 생산수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소비와 투자수준, 소비성향 및 구조, 지역 간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 등 상세한 지역경제 정보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지출 측면에서의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각 지역의 경제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 측면과 지출 측면의 지역소득통계만으로는 지역민이 수취하는 소득은 파악할 수 없다. 생산된 소득이 어떻게 지역민에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 위의 지표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 가지 측면(생산, 지출, 분배)의 지역소득통계가 모두 작성되어야 소득의 발생, 분배 및 사용 등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분배계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통계청에서는 2002년부터 분배계정 개발에 착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거쳐 2004년에 기본 추진방안과 기초자료 수집 및 항목별 추계방향을 설정하였다. 2005년에는 구체적인 추계방안, 추계범위, 연도별 추진일정 등을 내용으로 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개발에 착수한 이후 10회의 시산작업을 거쳐 2009년에 지역소득 분배계정(2000~2008)을 작성 발표하였다.¹²

분배계정의 개념, 정의, 계정체계 등은 UN이 권고하는 1993 SNA를 적용하였다. 제도부문은

12 2002년 분배계정 개발 작업 착수한 이후 2002.11~2009.06까지 본원소득 및 이전소득 분배계정 시산작업을 10회 실시하였다.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및 개인으로 구분하였고, 계정은 본원소득분배계정 및 제 2차 소득분배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역총소득 및 지역 총처분가능소득의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분배계정의 개발로 명실상부한 지역계정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1994년에 1990년을 기준년으로 하는 1차 기준년 개편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매 5년 주기로 기준년을 개편하여 오고 있다. 1차 기준년 개편 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차 개정안을 적용하여 지역소득통계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였다. 1999년에 완료한 2차 개편작업 시에는 산업생산지수,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개편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주요 기초통계자료와의 기준년을 일치시키고 불변가격의 현실화를 도모하였으며, 부가가치율 등의 각종 비율을 갱신함으로써 변화된 경제구조를 반영하였다.

3차 기준년 개편 시에는 1993 SNA 체계로 이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산출물 가격평가 기준을 생산자가격에서 기초가격으로 변경하였고 금융중개 서비스(FISIM)를 해당 산업에 배분하였다. 또한 과거에 중간투입비용으로 처리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에 대한 지출을 투자지출로 처리하였다.

4차 기준년 개편 시에는 경제성장률 측정에 연쇄가중방법을 일부 도입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안을 적용하였다. 또한 역의 이출입 추계방법으로 지역상품균형법을 도입하였다. 최근 5차 기준년 개편 시에는 2008 SNA 체계로 이행하였는데 R&D 및 군사장비의 자산 처리, 연쇄가중방법 전면 도입 등 2008 SNA의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통계의 국제비교성 및 국민·지역계정 간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와 함께 현재 15개 시도(서울시 제외)가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단위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1998년 경기도가 최초로 시군구 단위 지역내총생산을 작성 발표하였고 2011년에는 인천과 제주도가 시군구 단위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공표함으로써 15개 시도가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시군구 지역계정은 경제활동별 산출액,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등 생산측면의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현재 지출 및 분배측면의 시군구 단위 지역소득은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04

맺음말

•• 우리나라 국민계정이 발전되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3차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58년에 최초로 1953 SNA의 기준에 의거 1953~1957년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의 '산업별 국민총생산'과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는 1987년에 1953 SNA에서 1968 SNA로 국민계정의 개편을 완료한 것이다. 이 개편으로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가 하나로 연결되었고, 또한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와도 긴밀히 연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국민계정의 수준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세 번째는 국부통계 및 국가자산통계를 거쳐 국민대차대조표를 2014년에 작성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완전한 5대 국민계정을 모두 작성하게 되었고 명실 공히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계정 작성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UN이 제시한 2008 SNA 이행과정에서 볼 때 최종단계인 6단계에 위치한 최상위 단계의 국민계정을 작성하는 국가가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지역계정은 1967년 내무부가 추계한 '주민소득통계'에서 출발하였으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계정은 1986년 통계청이 시범 추계하기 시작하여 1993년 공표한 지역소득통계이다. 이후 지역소득통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2001년에는 지출 측면의 통계를 개발하여 발표하였고, 2009년에는 분배 측면의 지역소득을 보강하여 지역소득 분배계정을 발표함으로써 지역소득통계는 생산, 지출 및 분배 측면의 완전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와 함께 1998~2009년 기간 동안에 서울시를 제외한 15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단위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국민계정은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가공통계이므로 기초통계의 개발 및 확충이 선행되어야 국민계정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기초통계는 부족한 편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초통계의 개발 및 확충이 선행되어야 국민계정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계정을 작성하는 양질의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훈련되어야 하며 또한 국가의 통계가 국민계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국민계정통계의 발전이 지속될 것이다.

한편 지역소득통계는 보다 시의성 있게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함으로써 통계의 활용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기초자료의 조기 확보방안 모색 등 속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8 SNA가 권고하는 주요 이행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그 적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의 정도 및 국제비교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 적합한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지역통계의 개발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문적인 통계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여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추계방법 추가 개선 및 통계항목의 추가 및 세분 등을 통한 공표지표 다양화와 지역 기초자료의 추가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 I·II』, 1992.
- 통계청, 『GRDP 기준년(1995) 개편 결과 분석』, 1999.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2000 기준년 개편 결과보고』, 2004.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2005 기준년 개편 결과』, 보도자료, 2009.
- 통계청, 『지역소득 분배계정 개발결과』, 2009.
-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2010 기준년 개편 및 2008 SNA 이행 결과” 보도자료, 2014. 07. 23
- 한국은행, 『국민계정체계(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71.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 - 어제와 오늘』, 1995.
- 한국은행, 『1993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1997.
- 한국은행, “1993 SNA의 主要內容과 移行計劃”, 『국민계정』(창간호), 2000.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 2007.
- 한국은행,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의 이해』, 2007.
- 한국은행, 『2008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SNA 번역본, 2010.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10.
-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2010.
-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새로운 국제기준(2008 SNA) 이행 특집호”, 『국민계정』(제3호) 수록, 2014.
- 한국은행, “2008 SNA에 의한 자금순환통계 개편 결과” 보도자료 2014. 05. 12
-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 보도자료 2014. 05. 14
- 韓國銀行, 『國民計定體系와 그 附表(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63.
- OECD, Measuring Capital: OECD Manual, 2nd ed., OECD Publishing, 2009.

경제통계

제10장 재정·금융

-
1. 개요
 2. 발전과정
 3. 주요 재정·금융통계의 발전과정
 4. 맺음말

01 개요

의의

•• 재정통계는 기업의 재무제표처럼 정부의 살림살이를 밝히는 재무제표이다. 정부가 조세·국채발행 등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여 국방·행정·복지 등 공공목적에 위해 어떻게 지출했는지, 정부의 재정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정부의 자산과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재정통계는 정부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재정통계는 정부 재정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물론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 공표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유럽과 남미 일부 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반면, 경제 전체의 유동성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금융통계다. 여기에는 통화 및 유동성



● 사채동결 긴급재정명령(8·3 조치) 관련 기자회견(1972. 08. 03)

지표와 금리,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수신,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통계 등 광범위한 금융 관련 지표들을 포함한다. 금융통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므로 일차적으로 금융 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가 되지만 전체 경제의 금융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더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가계와 기업들이 소비와 투자를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저축하는지를 직접 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정확하므로, 금융통계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범위와 종류

●● 재정·금융 통계는 포괄범위가 매우 넓고 대부분의 통계들이 회계와 집계에 의해 작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통계 작성이 정부의 예산회계나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거나 각 금융시장 거래내역을 분류 집계하여 이루어지므로 표본조사와 모집단 추정에 의한 조사통계들보다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통계의 발전도 편제기법의 개선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관련제도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이 재정·금융통계는 다른 통계와는 달리 통계 발전의 큰 흐름과 정확히 국가승인 통계와 연결되지 않음을 밝혀두고, 통계승인보다는 재정·금융통계에 중요한 지표 또는 통계를 분류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재정통계

●● 재정통계 작성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정부재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이다. 정부 재정활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비영리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의해서도 수행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도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은 물론 수많은 예산외기금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중앙정부에는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 및 64개 기금이 있고 지방정부에는 244개 일반회계, 2178개 특별회계, 17개 교육비특별회계, 2395개 기금이 있다. 비영리공공기관도 중앙정부에 153개, 지방정부에 88개가 있으며 공기업도 184개에 달한다.

이같이 2014년에는 정부재정 포괄 범위가 가장 넓은 통계로서 공공부문계정이 작성되었다. 이는 일반정부에 공기업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재정활동의 소득창출과 처분에 중점을 두는 국민계정통계의 일환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다른 재정통계와는 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재정수지 대신 저축투자차액 개념을 사용한다. 정부재정의 포괄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통계가 작성되지만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나타내는 통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재정수입은 조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재정지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과 기금지출로 구성된다.

재정수입인 조세는 14개 국세와 11개 지방세로 구성되는데 국세는 다시 13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다. 내국세통계는 국세청, 관세통계는 관세청, 지방세통계는 행정자치부가 작성하여 발표한다. 세외수입은 이자 배당 대여료와 같은 재산수입, 벌금 몰수금 가산금 등이 전수입, 면허료·수수료·입장료 등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정부자산 매각대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기금수입은 각종 기금의 수입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대표적이다.

재정지출인 세출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대금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전지출이란 공공목적에 위한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융자금, 예탁금 등을 말한다. 세출은 일반행정, 국방, 교육, 사회복지, 교통통신, 국토개발, 과학기술 등 부문별(기능별)로도 분류된다.

재정수지와 재정수입 및 지출 등 플로우 통계 외에 스톡 통계로서 정부부채통계와 정부자산통계가 있다. 정부부채통계에는 포괄범위를 달리하는 세 가지 통계가 있다. 먼저 「국가채정법」에 의해 작성하는 국가채무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¹의 부채를 포함한다. 이는 국제기준에 의한 통계는 아니지만 정부의 채무관리정책 대상지표로 활용된다. 국제기준에 의한 정부부채통계에는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가 있다. 일반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며 공공부문부채는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것이다. 금융공기업과 비금융공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공공부문계정 통계와 달리 공공부문부채는 금융공기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면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은행예금과 같이 일반기업 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자산통계로는 국가채권과 국유자산 통계가 있다. 국가채권은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융자금, 예금, 예탁금, 조세채권,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금전 청구권을 집계한 것이다. 국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1 「국가채정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국가채무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4개 기금 중 공무원연금기금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23개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형별·작성주기별 재정통계

유형	계	작성 주기					
		월	분기	반기	1년	1회한	수시
정부수입	7	3	-	-	4	-	-
정부지출	4	2	-	-	2	-	-
재정수지	5	2	-	-	3	-	-
정부부채·자산	8	-	-	-	8	-	-
계	24	7	-	-	17	-	-

재정통계를 작성주기별로 보면 표(유형별·작성주기별 재정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연간 단위로 작성된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계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 등 정부수입과 정부지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통계는 월별로 작성된다.

작성연대별로 보면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통계가 많다. 정부재정이 성립하면서 결산서에 의한 각종 통계 작성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국제기준에 의한 세출의 경제적, 기능적 분류통계는 1959년부터 작성되었다. 1960년대에는 기금제도의 도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와 1980년대는 IMF 기준에 따른 통합재정통계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는 정부부채통계가 개편되었다.

유형별·작성연대별 재정통계

유형	계	작성 연대						
		1960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이후
정부수입	7	5	1	-	-	-	1	-
정부지출	4	3	1	-	-	-	-	-
재정수지	5	1	-	1	-	-	1	2
정부부채·자산	8	1	-	-	4	1	-	2
계	24	10	2	1	4	1	2	4

금융통계

●● 금융통계는 각 경제주체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금융통계의 범위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통화량과 같이 경제 전체를 포괄범위로 하는 거시금융지표와 개별 금융기관이나 차입자의 금융상황을 나타내는 미시금융지표를 모두 포함한다. 금융거래방식에 따라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는 직접금융통계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간접금융통계로 구분된다.

직접금융통계

•• 직접금융통계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시장인 자금지장통계와 장기시장인 자본시장통계,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통계로 구분된다.

자금지장통계는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시장, 기업어음(CP) 시장 등으로 나누어 작성된다. 콜시장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서로 단기자금을 차입하고 대여하는 시장이다. 3개 자금중개회사의 중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한국은행이 거래량과 금리를 종합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환매조건부매매 시장은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하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시장이다. 법적으로는 증권매매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차입 및 대여수단으로 이용된다. 거래유형은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거래,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금융기관과 한국은행과의 거래 등 다양하며 거래유형별, 취급기관별 거래액과 금리 통계를 투자금융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에서 작성한다. 양도성예금증서 시장은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가 유통되는 시장이다. 발행액과 발행금리 통계는 한국은행이 작성하며 유통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중개기관인 10개 증권회사로부터 조사하여 집계 작성한다. 기업어음시장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유통어음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유통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은행 증권회사 등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사하여 집계 작성한다.

자본시장통계는 발행시장통계와 유통시장통계로 나뉜다. 발행시장통계는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상황을 나타낸다. 주식은 기업공개에 의한 신주 발행과 유상증자로 구분되며, 채권은 국채 지방채 금융채 특수채 회사채 등으로 구분된다. 유통시장통계는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 및 채권 거래상황을 나타낸다. 주식거래통계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으로 구분하여 작성되며 거래량과 주가지수 외에 배당수익률,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 등 다양한 관련 지표들이 작성된다. 채권거래통계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와 증권회사 창구를 통한 장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된다. 장내거래는 상장채권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외거래는 상장채권과 비상장채권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채권거래액 중 장외거래의 비중이 80% 이상이다. 가격지표로서 채권수익률은 한국거래소가 장내거래 수익률을 발표하지만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하는 장외거래 수익률이 주된 통계로 이용된다.

파생금융상품시장통계는 계약형태에 따라 선물, 선도, 스왑, 옵션으로, 기초자산 유형에 따라 주식, 금리, 통화, 신용관련 상품으로 구분하여 작성된다. 장내거래통계는 한국거래소, 장외거래통계는 금융감독원이 작성한다.

간접금융통계

•• 간접금융통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화 및 유동성지표²로서 이는 경제 내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나타낸다. 통화지표는 현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통화성 자산을 포함하며, 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성된다. 가장 포괄범위가 좁은 통화지표는 본원통화다. 이는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의 지급준비예치금으로 구성된다.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민간이 보유하는 현금, 즉 현금통화에 예금취급기관이 공급하는 통화성 자산을 합한 것을 말한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만을 더한 것이 협의통화, 정기예금·적금과 만기 2년 이내의 실적배당상품 및 금융채 등 유동성이 다소 낮은 자산까지 합한 것이 광의통화다. 예금취급기관이란 중앙은행과 은행뿐 아니라 예금을 취급하는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증권사 CMA(Cash Management Account,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상품) 계정 등을 포함한다. 광의통화에 보험회사, 연금기금, 증권금융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이 공급하는 통화성 자산을 합한 것이 금융기관 유동성(Lf)이며 금융기관 유동성에 국채 지방채 회사채 CP 등을 더한 것이 광의유동성(L)이다.

금융기관 여수신통계는 예금은행 예금 및 대출금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으로 구분하여 작성된다. 예금은행 예금은 종목별, 예금주별, 지역별로 작성되며 예금은행 대출금은 자금별, 산업별, 지역별로 작성된다. 이와 별도로 가계신통계가 작성되는데 이는 차입자 입장에서 보면 가계부채통계가 된다. 가계신통계는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할부금융사 판매회사 신용카드회사의 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여수신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이나 차입자신용 등에 따라 다르므로 평균금리통계가 필요하다. 예금은행의 경우는 신규취급액과 잔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금리가 작성되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는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만이 작성된다.

보험통계는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여수신은 상품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 통화지표와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통계에 포함되지만 보험업은 다른 금융업과 달리 독특한 사업구조를 지니므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보험통계는 생명보험통계와 손해보험통계로 구분된다. 생명보험은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2 통화 및 유동성지표는 금융기관 연결대차대조표에 의해 작성되는 간접금융통계지만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광의 유동성(L)에는 직접금융상품이 포함된다.

보험으로 생명보험협회가 상품별 계약액,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상황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다. 손해보험은 화재 자동차 및 해상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으로 손해보험협회가 상품별 계약액,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상황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다. 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생명표와 각종 사고율 통계는 보험개발원이 작성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서 우체국보험에 대한 통계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종목별 계약액,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 자금운용상황 등을 작성한다.³ 이외에 보험기능을 하는 농협협동조합공제,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의 경우 각 기관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다.

끝으로 지급결제통계는 지급결제 시스템별로 작성된다. 거액결제 시스템인 한국은행 금융망 통계는 한국은행이 작성한다. 원화자금이체,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여신, 국공채 거래, 외화자금이체 통계가 금액 및 건수 기준으로 작성되며 원화자금이체통계는 총액결제와 차액결제로 나누어 작성된다.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 시스템 통계는 금융결제원이 작성한다. 어음교환통계는 교환금액 및 부도율이 금액 및 장수 기준으로 작성되며 지역별, 어음종류별로 작성된다. 지로통계는 일반이체, 자동이체, 대량지급 등 거래유형별로 금액 및 건수 기준 통계가 작성된다. 은행공동망통계는 타행환, 현금자동인출기, 전자금융, 직불카드, 자금관리서비스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금액 및 건수 기준으로 작성된다.

유형별·작성주기별 금융통계

유형	계	작성 주기					
		일	월	분기	1년	격년	수시
통화지표	11	-	11	-	-	-	-
금융기관 여수신	12	-	9	2	-	1	-
보험통계	14	-	7	-	7	-	-
결제통계	5	-	5	-	-	-	-
자본시장통계	10	5	5	-	-	-	-
자금시장통계 ¹⁾	14	14	-	-	-	-	-
계	66	19	37	2	7	1	-

주: 1) 파생금융시장 통계 포함

금융통계를 작성주기별로 보면 대부분이 월 단위로 작성되며 자금시장과 자본시장통계는 일 단위 통계가 많다. 보험통계는 보험회사의 실적에 관한 통계는 월 단위로 작성되지만

3 이외에 공공보험으로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이 있으며, 연금기금으로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으나 금융보다 사회보장 측면이 강하므로 이 절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경험생명표와 입원율 등 기초통계는 연단위로 작성된다. 작성연대별로 보면 금융제도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통계들이 작성되어 왔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등 자금시장의 신설에 따라 관련 통계들이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는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 확대에 대응한 통화 지표 개편과 기초보험통계 개발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금리자유화에 따라 서베이에 의한 금리통계 작성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는 IMF 기준에 의한 새로운 통화지표의 개발과 파생상품시장 개설에 따른 통계작성이 이루어졌다.

유형별·작성연도별 금융통계

유형	계	작성 연대						
		1960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이후
통화지표	11	2	1	1	3	1	3	-
금융기관 여수신	12	2	2	2	-	5	1	-
보험통계	14	1	3	1	5	3	1	-
결제통계	5	1	-	1	1	1	1	-
자본시장통계	10	6	2	-	-	2	-	-
자금시장통계 ¹⁾	14	-	2	3	-	5	4	-
계	66	12	10	8	9	17	10	-

주: 1) 파생금융시장 통계 포함

국제동향

•• 다른 통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재정·금융통계는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의 작성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재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재정·금융통계에 대한 신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통계

•• 재정통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국제기준은 IMF의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이다. IMF는 이 기준에 맞추어 재정통계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국이 제출한 통계를 종합하여 책자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IMF는 1974년에 처음 재정통계편람 초안을 작성하여 이의 채택을 권고하였으며 각국의 편제경험을 반영하여 이를 보완한 1986년 편람을 발표하였다. 이어 개정판인 2001년 편람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3차 개정판인 2014년 편람 초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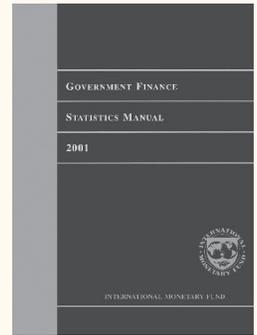
2014년 편람 초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의 포괄범위를 일 반정부와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편제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 출은 발생주의원칙에 의해 계상하며 비회계거래도 포함하도 록 하였다. 시가평가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항목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에서 잘 거래되지 않는 항목도 최대한 시장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정 부부채통계 외에 모든 금융 및 비금융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 는 완전한 형태의 대차대조표를 편제하여 정부수입 및 지출 과 재정수지가 기초 대차대조표와 기말 대차대조표의 증감 과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플로우 통계와 스톡 통계가 통합되도록 하였다.

IMF는 재정통계편람이 각국의 재정제도나 정부회계, 공기업 구조, 기초통계 사정 등에 관 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나 반드시 모든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여건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부분은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6월 말 현재 136개국 이 재정통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01년 기준에 맞추어 작성 하고 있으며 이중 스톡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국가는 65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74년 초안부터 통계 개편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재정통계 작성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2001년 편람에 의한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유럽 재정 위기 등으 로 정부부채문제가 세계경제의 현안으로 대두되자 2012년 IMF는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 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을 발표했는데 우리 나라는 이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2014년 2월 작성 발표하였다.

재정통계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제기준은 UN의 국민계정체계(SNA)에 의한 정부부 문통계 작성기준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소비, 투자, 소득 등 국민계정 측면에서 파 악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므로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정부부채에 초점을 두는 재정통계 와 차이가 있으나 통계작성의 대상이 정부의 재정활동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재정 통계와 국민계정 정부부문 통계의 조화는 필수적이며 실제로 IMF의 재정통계편람은 UN 의 SNA 작성기준의 변천과 맞물리면서 발전해 왔다. 재정통계는 기획재정부, 국민계정 정 부부문통계는 한국은행이 작성한다.

금융통계

•• 금융통계에 대한 국제기준으로는 IMF의 2000년 『통화금융통계편람』(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2000)이 있다. IMF의 통화통계 작성기준은 195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IMF는 종합적인 금융통계 작성을 위한 지침서로는 2000년 편람이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2001)

최초라고 설명하고 있다. 1984년 발간된 『통화금융통계 안내』(A Guide to Money and Banking Statistics in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가 있으나 이는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 책자 수록 통계에 대한 설명 자료이며 통계 편제를 위한 편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IMF의 2000년 통화금융통계편람은 1996년 멕시코 위기와 1997년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보다 정확한 금융상황 파악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상품도 통화지표 작성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이후 2008년에 통화금융통계 편제지침(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Compilation Guide)이 발표되었고 최근에는 2014년 통화금융통계편람 초안이 발표되었다. 금융통계도 다른 통계와의 조화가 중요하며 IMF의 통화금융통계편람 역시 국민계정체계(2008 SNA), 국제수지(2010 BPM6), 재정통계편람(2001 GFSM)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된다.

2014년 통화금융통계편람 초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다 정교한 통화지표 작성을 위해 금융기관을 통화창출기관, 통화보유기관, 통화중립기관으로 분류하고 본원통화, 통화, 신용, 부채 등 각 통화지표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특성을 명확히 하였다. 금융기관의 범위에 MMF, 국부펀드, 특수목적기구(SPE), 결제기구 등을 포함하고 주식투자펀드, 연금형 상품, 중업원 스톡옵션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추가하였다. 여타 통계와 마찬가지로 발생주의원칙과 시가평가원칙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플로우 통계와 스톡 통계가 연결되도록 하였다.

2014년말 현재 140개국이 IMF 편제기준에 의한 금융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2002년부터 2000년 편람에 따라 금융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02 발전과정

재정통계

•• 1948년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편성된 1948년도 하반기 예산은 최초의 대한민국 재정통계라고 할 수 있다.⁴ 1961년 재무부가 발간한 『대한민국정부 결산관계 통계자료』에 의하면 당시 회계연도⁵에 따라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인 하반기 예산은 일반회계와 원조물자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임시외자총국특별회계, 귀속재산 임대·매각자금을 관리하는 임시관재총국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 행정, 사법·경찰, 국방, 교육문화, 사회노동보건, 산업경제, 공공사업, 지방재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고 세입은 조세, 인지수입, 관유재산수입,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하고 내국세는 세목별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1949년도 예산에서는 전매, 교통, 통신 등 8개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1950년도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신설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재정은 비상체제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전쟁수습 비상경비예산을 매월 편성하여 사용하다가 1951년부터는 전란수습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방비, 치안경비, 피난민 구호비 등 전쟁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했는데 재원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차입금이였다. 당시의 재정통계는 일반회계에 전란수습비 특별회계와 국채금 특별회계를 더한 일반재정부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재정상황은 세수기반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전쟁 발발과 전후 복구 수요로 세출은 크게 늘어나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였다.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현대적 재정통계는

4 정부 예산서가 재정통계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IMF(1986)는 재정통계는 정책수립 및 평가, 분석을 위한 요약과 정리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정부예산회계는 예산통제와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작성된다고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결산서도 과거 시계열 및 세입세출 내역을 요약 정리하는 예산·결산개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5 회계연도는 1953년도까지 4월~다음해 3월이었으나 이를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변경하기 위해 1954년도는 1954.04~1955.06(15개월)로 하였다. 이를 다시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하기 위해 1955년도는 1955.07~1956.12(18개월)이 되었고 따라서 1956년도는 없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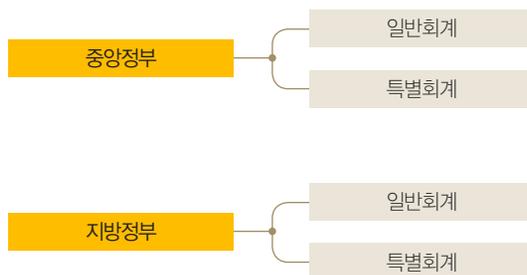
정비되지 못하였지만 결산자료를 통해 유추해 보면 일반재정부문 총세입 중 차입금 및 국채의 비중은 1948년도에 32.0%, 1949년도에 59.5%, 1950년도에 61.5%에 달하여 당시 어려웠던 재정상황을 짐작케 한다.

1953년 휴전 이후 정부재정은 전시체제에서 평시체제로 전환되었고 전제 복구와 경제 재건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었다. 정부재정은 외국원조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전재복구기간인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원조 도입액은 총 7억 1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의 6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전재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1957년부터 재정금융안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재정통계는 일반재정과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데 특별회계의 신설, 개폐가 빈번하였다. 1954년 외국원조 활용을 위한 대충자금 특별회계와 경제부흥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1955년에는 전란수습비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그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방비 특별회계로 이관되었다. 1958년에는 국방비 특별회계, 국채금 특별회계 등이 일반회계로 흡수되어 폐지되었으며 일반재정부문의 포괄범위도 일반회계에 대충자금 특별회계와 경제부흥 특별회계를 더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1950년대 재정통계 발전을 위한 특기할 만한 노력으로 예산 재분류 작업이 있다. 이의 계기가 된 것은 1955년 8월 방콕에서 개최된 ‘예산재분류 문제에 대한 에카페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이었다. 권고안은 예산분류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목적별로 간결하게 표시되고 국민소득 분류법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산의 기능적, 경제적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어 1958년에는 UN 정부계정 분류편람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1957년부터 예산 재분류 작업에 착수하여 1959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기능적 분류는 일반행정비, 국방비, 사법 및 경찰비, 교육·연구, 보건, 사회복지·노동, 주택·공공시설, 농림어업, 광공업, 교통·통신 등으로, 경제적 분류는 인건비, 사무비, 경상이전, 자본이전, 시설비, 출자·융자금 등으로 분류하였다.

정부재정 포괄 범위(1979년 이전)



주: 지방정부 특별회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포함

예산분류작업은 1962년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예산분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분류작업을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1960년대는 빈곤 극복과 자립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로 정부재정은 정부주도 성장전략을 이끌어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제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재정투융자로 재정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1961년과 1967년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이른바 개발세제가 확립되었다.

재정통계는 여전히 정부 예산과 결산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으나 그 내용과 범위는 매우 다양해졌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1969년까지 재정자금운용 특별회계 등 21개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대한석유공사, 호남비료, 대한준설공사, 포항종합제철 등 많은 공기업이 신설되었다. 1961년 「예산회계법」 제정으로 특별기금 설치 허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인연금기금, 조달기금, 과학교육기금 등 9개 기금이 설치(1960 설치, 공무원연금기금은 법 제정 이전)되었다. 또한 재정투융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62년 재정융자를 담당하는 재정자금운용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1963년에는 재정투자를 담당하는 경제개발 특별회계가 신설되었다. 종전 경제부흥 특별회계는 폐지되었다. 1961년도 예산부터 재정투융자 자금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전체 재정투융자 규모와 재원조달 내역, 산업별 배분실적 등 관련 통계가 작성되었다.

1970년대는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 등으로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이 지속되었으나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인한 물가 앙등과 국제수지 적자 확대, 기업 재무구조 악화 등 어려움도 겪은 시기였다. 정부재정은 고도성장 지속을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과 함께 경제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그간 크게 늘어났던 특별회계가 대폭 정비되어 특별회계 수가 1970년 29개에서 1979년 18개로 줄어들었다.



• 국가에서 제작 배포한 경제개발 5개년도표(1963)

정부재정 포괄 범위(1979~2004)



재정투융자 제도 개편도 이루어져 1974년 재정자금운용 특별회계가 경제개발 특별회계로 통합되어 일원화되었다가 1977년에는 다시 폐지되어 재정투자는 일반회계, 재정융자는 신설된 자금관리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으며 재정투융자 명칭도 개발비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종전 일반회계에 경제개발 특별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를 합하여 일반재정부문으로 하던 분류방식도 폐지되었다. 반면 기금 설치는 계속 늘어나 1970년대 중 11개 기금이 신설되었다.⁶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도 지속되어 1974년에 종합소득세제가 실시되고 1975년에 방위세가 신설되었으며 1977년에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1970년대 후반 재정통계는 비로소 국제기준에 맞는 현대적인 통계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다. 1974년 IMF가 재정통계편람 초안을 발표하고 이의 채택을 권고하자 1976년 정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한국은행의 실무자로 구성된 '정부재정통계 개편 합동실무반'을 설치하여 통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4개월여의 작업 끝에 1차로 1972~1977년 통계 개편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1979년부터 매년 IMF 기준에 의한 통합재정통계를 공식 발표하였다. 통합재정통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상계하고 국채 발행, 차입, 채무 상환 등 보전거래를 세입·세출에서 제외함으로써 순계 개념의 수입·지출과 재정수지를 작성한 것이다. 다만 지방정부재정은 예산편성 및 결산작성 시차로 인하여 통합재정통계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통합재정통계는 1970년까지 소급하여 시계열을 정비하였으나 기초자료 부족으로 1969년 이전은 소급하지 못해 시계열 단층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고도성장 우선정책에서 안정성장 정책으로, 정부주도 경제운영 방식에서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정책의 기조전환을 모색한 시기였다. 1970년대 말 석유파동과 정치적 혼란에 따른 불안도 있었지만 그간의 개발 추진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정부 계획과 직접지원에 의한 성장추진전략이 한계에 이른 데다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과 일부 산업의 과잉투자, 비효율, 부동산 투기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재정 면에서도 1982년 중기재정계획 도입, 1983년 영점기준 예산편성제도(zero-base budgeting system) 도입 등 재정 건전화와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1980년대 후반에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흑자재정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특별회계수는 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기금, 농어촌지역

6 기금은 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손쉬운 재정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03년부터는 기금운용계획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개발기금 등 기금 신설은 계속 늘어났다. 특히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기금은 아직 연금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보험료 수입은 크게 늘어나 매년 대규모 흑자를 보임으로써 이후 지속적인 통합재정수지 흑자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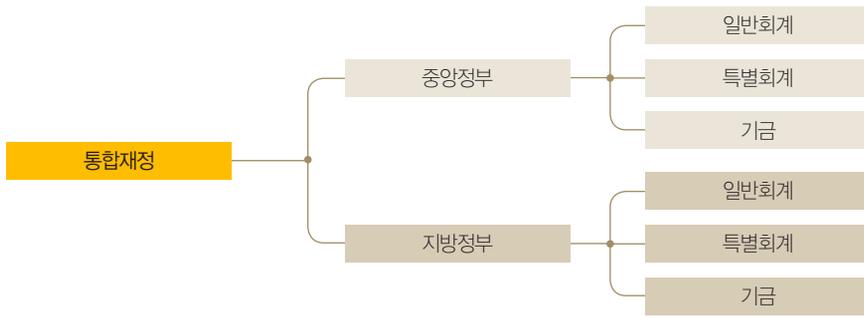
1988년에는 재정투융자 제도도 개편되어 자금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가 신설되었는데 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재정용자와 일반회계의 출자·출연을 이관받아 재정투자와 융자업무가 다시 통합되었다. 1980년대의 재정통계는 이러한 정부예산제도의 변천을 반영한 부분적인 조정 외에는 큰 폭의 개편이 없었다.

1990년대는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가 크게 진전된 시기로 정부재정 면에서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이른바 3저 현상에 따른 호황기를 거치면서 임금의 급속한 상승, 높은 금리 수준, 과도한 물류비용, 부동산 가격 급등, 기업 구조조정 부진 등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형성되어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재정개혁 조치로 정부재정 구조도 큰 변화를 보였다. 농어촌발전기금과 환경오염방지기금 등 11개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환되고 실적이 부진한 40개 기금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114개에 이르던 기금의 수는 1996년 76개로 줄어든 반면 특별회계 수는 17개에서 23개로 다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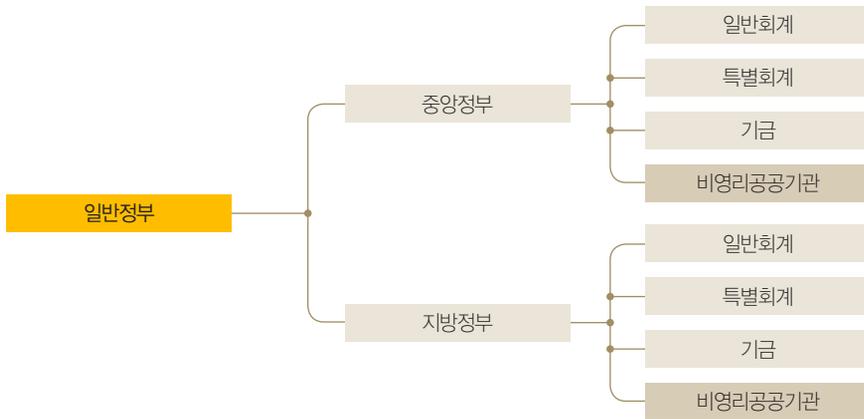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그 재원을 대부분 국공채 발행에 의존함으로써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나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부채통계의 포괄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주요 쟁점은 정부 보증에 의해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과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포함 여부였다. 보증 채무를 정부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은 IMF 통계기준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이후 이와 같은 성격의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2001년 IMF 재정통계편람이 발표되고 우리나라 통계도 이에 맞추어 개편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해소되었다. 또한 통합재정통계의 편제주기도 단축되어 1994년부터는 분기,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되었다.

외환위기 후 거시경제 상황은 빠르게 안정을 회복하였으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부동산시장 안정이 최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진정되지 않는 주택가격 상승세로 강력한 대책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으며 정부재정 면에서도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에는 위기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정부부채통계가 또 다시 집중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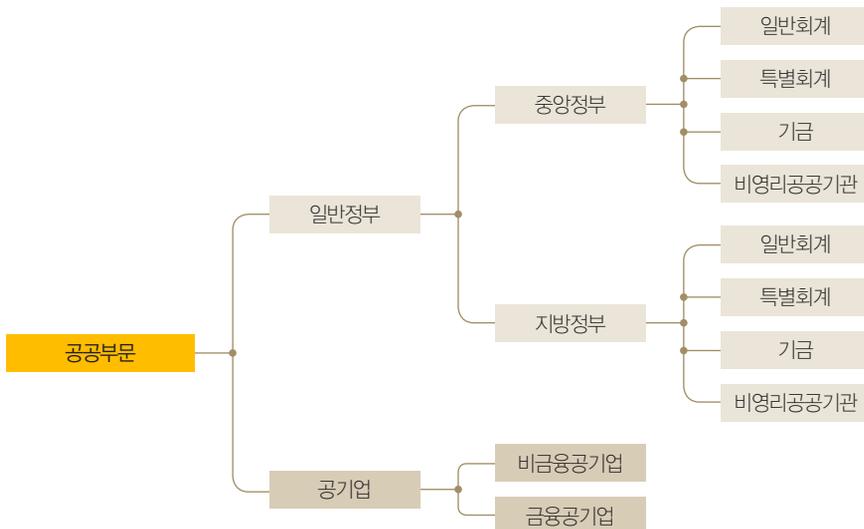
정부재정 포괄 범위(2005~2011)



정부재정 포괄 범위(2012~2013)



정부재정 포괄 범위(2014 이후)



2000년대 들어 재정통계는 투명성과 신뢰성 면에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통합재정통계 작성대상에 지방정부가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지방예산 과목 구조 개편과 회계별 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되는 등 오랜 준비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마련되자 200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통합재정통계가 작성되었다.

이어 새로운 국제기준인 IMF의 2001년 재정통계편람에 따른 통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개편의 핵심은 통계기록 시점을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재정의 범위에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2009년 예산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008년 11월 민관합동 재정통계 개편 T/F를 구성하여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1년 9월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통계를 각각 산출한 후 통합하여 12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개편된 재정통계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되는 통합재정통계와 달리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되고 정부의 범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비영리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정부로 확대됨으로써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다 정도 높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4월에는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재정통계로서 공공부문계정통계가 새로이 작성되었다. 이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에 공기업까지 포함한 것으로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통계 위성계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소득 창출과 처분과정에 중점을 두고 작성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재정수지 대신 저축투자차액통계가 편제된다. 이어 2014년 5월에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국민대차대조표를 공동 개발하여 편제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계정 기준에 의한 일반정부부채 통계가 신규 작성되었다.

금융통계

•• 광복 당시 금융제도는 특수은행인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 조선저축은행 외에 일반은행은 조흥은행, 상업은행 2개에 불과한 단순한 구조였다. 1953년 휴전 이후 전 재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한 금융체제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1954년 한국흥업은행(1960 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 1956년 농업은행, 1959년 서울은행이 설립되는 데 그쳐 통계여건은 비교적 단순하였다. 1956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본시장인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

되었으나 상장종목 수가 12개에 불과하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통계작성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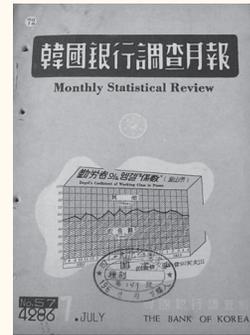
금융통계는 비교적 일찍부터 정비되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 금융통계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단순 합산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1950년 「한국은행법」 초안 작성을 위해 내한한 부름필드 박사가 통화량(money supply)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현대적인 통화금융통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51년 3월 한국은행은 통화량 통계를 최초로 편제하여 발표하였는데 민간보유 현금, 즉 현금통화에 민간 당좌예금을 더한 것을 '통화 공급량 제1의(義)', 현금통화에 모든 예금을 더한 것을 '통화 공급량 제2의(義)'로 규정하였다. 1955년 IMF는 통화통계 편제기준을 발표하고 각국 통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이 기준에 의한 통계작성을 권고하였다. 한국은행은 1955년 8월 IMF 가입을 계기로 통계개편을 추진하여 1958년 9월호 『조사월보』에 1956년부터의 시계열을 발표하였다. 당시 통계는 기초자료 미비 등으로 IMF 기준을 일부만 반영한 것이었으나 금융개관표라는 명칭으로 통화 서베이(monetary survey) 통계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통계 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금 통계는 1947년부터 금융기관별, 중별, 도별로 작성하였는데 1953년 1월 대출금 통계를 업종별, 용도별로 나누어 편제하고 1955년 9월에는 산업용 대출금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같은 해 5월부터는 예금통계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나누어 편제하였다.

1960~1970년대는 고도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체제의 확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현대적 금융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 1960년대에는 은행, 1970년대에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장단기 금융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먼저 1961년에 농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은행, 1963년에 국민은행, 1967년에 한국외환은행, 1969년에 한국주택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설립되었고 1967년에 대구, 부산은행, 1968년에 충청, 광주은행, 1969년에 제주, 경기, 전북은행, 1970년에 강원, 경남은행, 1971년에 충북은행 등 10개 지방은행이 설립되었다. 1967년부터는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도 이루어졌다.

1972년 8·3 긴급조치에 따른 사채동결조치와 함께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이른바 사금융 양성화 3법이 제정되어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설립되었다. 1977년 보험 관련 법 제도 정비와 보험료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계기로 보험산업 발전이 본격화되었다.



● 한국은행조사월보
(1953. 7월호)

단기금융시장을 보면 1960년 점두거래 형식으로 도입되었던 콜시장이 1975년 콜거래실 설치로 집중거래시장으로 발전하였으며 1972년 신설된 투자금융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기업어음(CP)시장이 개설되었다. 자본시장 정비도 이루어져 1962년 「증권거래법」, 19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1977년에는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신설되어 감독체계가 확립되었다. 지급결제제도의 확충도 이루어져 1969년 백화점 신용카드, 1978년 한국외환은행 비자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77년에는 지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시기의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정부주도의 대대적인 저축증대운동이 있다. 1961년 재무부에 전담조직인 저축과가 신설되고 1962년 「국민저축조합법」 제정으로 금융기관별 저축목표액 설정, 학생과 공무원의 의무저축제도 도입, 저축홍보활동 등이 추진되었으며 1969년에는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금융제도의 발전과 함께 많은 통계들이 개발·확충되었다. 1960년대 은행 신설과 함께 은행 유형별 자금조달운용 통계가 확충되고 1969년 7월에는 본원통화가 공식 편제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하반기 재정안정 계획에서 본원통화가 중심통화지표로 채택되어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통화승수의 불안정 등 실시여건의 미성숙으로 1970년 12월 중심통화지표가 국내신용으로 변경되었다.

1974년에는 통화통계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통화개관표(1971. 03 중전 금융개관표에서 개칭) 개편으로 통화지표의 체계적 작성과 통화 공급경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포함하는 총유동성개관표를 분기별로 편제하기 시작했다. 1976년에는 보험계리인회가 국민생명표를 최초로 작성함으로써 그동안 일본통계에 의존하던 보험요율 산정을 국내통계로 대체하였으며, 1977년부터는 제도 도입에 따른 지로통계 작성으로 어음교환통계 이외의 결제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장단기 금융시장통계 정비도 이루어졌다. 1960년 콜 시장과 1972년 기업어음시장 개설로 자금시장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본시장 발전에 대응하여 1964년 최초의 주가지수인 수정주가평균지수가 편제되었고, 1972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범국민적인 저축운동을 통계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1963년부터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시장을 모두 포괄하는 금융저축통계가 작성 활용되었으며, 1967년부터는 서베이 통계인 도시가계 저축시장조사가 격년제로 실시되었다.

1980년대 금융시장은 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수가 크게 늘어나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서로 유사한 성격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이 확대된 시기였다. 1982년 신한은행, 1983년 한미은행이 설립되고 1982~1983년 중 단기금융회사 12개사, 상호신용금고 58개사, 투자신탁회사 1개사가 신설되었다.

1980년대 하반기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1987년 보험시장도 개방되어 외국 생명보험사가 지점, 현지법인, 합작기업의 형태로 국내에 진출하였다. 1988~1989년에는 지방 소재 금융기관의 신규 설립이 크게 늘어나 동화, 동남, 대동은행이 신설되고 지방 투자신탁회사 5개사, 지방 리스회사 11개사 등이 설립되었다. 지급결제제도의 확충도 이루어져 1980년 국민카드, 1982년 5개 시중은행 공동 은행신용카드(1987 BC카드로 변경) 도입으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신용카드의 발달이 본격화되었으며 1988년에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1989년에 타행환공동망이 신설되었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1980년에 증권회사, 1982년에 은행의 RP거래가 허용되어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양도성 예금증서(CD) 제도 도입과 함께 유통시장이 개설되었다. 통화정책 면에서도 은행여신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에서 금리의 가격기능을 활용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988년 금리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정책여건의 미성숙으로 실질적으로는 금리규제가 지속되었다.

금융통계도 금융제도와 정책운용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편되었다. 먼저 비은행금융기관의 급속한 성장으로 통화지표의 개편이 불가피하였는데 1982년 10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총유동성(M3) 지표가 도입되었으며 1984년 7월에는 종전 분기별로 작성하던 총유동성개관표를 금융개관표로 개편하여 매일 편제함으로써 총유동성 지표의 체계적 작성체제가 확립되었다. 1989년에는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격화에 따른 자금이동으로 기존 통화지표 변동이 불규칙하게 되자 M2A와 M2B 등 새로운 통화지표가 개발되어 정책지표로 활용되었다. 한편 1981년 3월 한국은행은 통화, 총통화 등 주요 통화지표의 평균잔액 통계를 1971년부터 소급 작성하여 공식 발표하였는데 이는 통화관리가 월말, 연말 등 기말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한 직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이 점차 공개시장조작, 기준정책 등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평잔기준 통화지표의 중요성이 증대한 데 기인한다.

보험통계에 있어서도 1986년 간이경험생명표가 처음 작성되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생명표 대신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되었다. 지급결제제도 확충과 함께 1988년부터 금융공동망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환매조건부매매 시장과 양도성예금증서 시장 개설로 자금시장 통계가 더욱 확충되었고 자본시장에서도 1983년 종전의 평균주가방식 주가지수가 폐지되고 시가총액방식의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가 크게 진전된 시기로 금융 면에서도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었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1991~1995년에는 금리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외자유입 촉진을 위해 채권시장을 개방한 데 이어 1998년에는 주식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대동·동남·동화·경기·충청은행이 퇴출되고, 상업·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조흥·충북·강원은행이 조흥은행으로, 농협과 축협이 농협으로 합병되는 등 많은 은행 합병이 단행되었다. 종합금융회사는 18개사가 인가 취소되고 3개사가 합병되었으며, 증권회사는 6개사가 인가 취소되고 1개사는 합병되었다. 투자신탁회사도 6개사가 퇴출되었으며 1개사는 합병되었다. 생명보험회사는 5개사가 인가 취소되고 5개사는 합병되었다. 결제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져 1994년 12월 거액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이 가동되고 1996년에 직불카드 공동망, 1997년에 지방은행공동망이 가동되는 등 소액결제제도도 확충되었다.

1990년대에는 금융통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 서베이가 시작되었다. 과거 금리규제 시기에는 규제금리가 곧 실행금리였으므로 금리 서베이가 불필요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금융기관의 종목별, 기간별 금리가 금융당국에 의해 정해졌으며 이후 최고금리 내에서 실행금리가 자유화되었으나 금융단협정 등을 통해 세부 실행금리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금리자유화 이후에는 서베이를 통해 금리 수준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1995년 11월 은행 여수신 가중평균금리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여 1997년 8월에는 조사대상이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확대되었으며 1999년 6월에는 실적배당상품도 조사대상에 추가되었다.

둘째, 1998년 5월 가계신용통계가 도입되었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이후 가계부채문제가 대두되면서 중요 통계의 하나로 부각되게 된다.

셋째, 통화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1990~1995년 여러 차례에 걸쳐 총유동성(M3) 포괄범위가 조정되었고 1996년 12월에는 새로운 통화지표로서 MCT가 편제되어 총통화(M2)와 함께 통화정책 중간목표변수로 활용되었다. MCT는 총통화에 양도성 예금증서와 금전신탁을 더한 것으로 신탁제도 개편으로 인한 교란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금융통계자료 수집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1994년 12월 한국은행 금융망 가동과 함께 이를 이용한 조사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개발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재무제표 자료를 한국은행에 온라인 방식으로 보내게 되어 편리함은 물론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대출, 국공채거래 등 한은금융망통계가 작성되고 신설된 금융공동망통계가 추가되는 등 지급결제통계가 확충되었다.

다섯째,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새로운 주가지수통계 개발이 이루어졌다. 주가지수 선물·옵션

시장 개설을 위해 1994년 6월 KOSPI 200지수가 편제되었으며 코스닥시장 개설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코스닥 주가지수가 작성되었다.

외환위기 후 거시경제는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은 금융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도 불구하고 연쇄적인 대출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규제완화는 카드 과다발급에 따른 대출증가와 신용불량자 급증을 초래했다.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해외자본 유출입 규모 확대는 자산가격 불안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졌다. 2008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과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큰 폭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공급이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 금융통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화 및 유동성지표의 전면 개편이다. IMF가 멕시코와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보다 정확한 금융상황 파악을 위한 통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 통화금융통계편람을 발표하자 2002년 3월 한국은행은 이에 따른 새로운 통화지표로서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편제방식을 기관 중심에서 상품 중심으로 바꾼 것으로 취급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통화지표를 편제하는 것이다. 종전의 통화개관표와 금융개관표도 예금취급기관개관표로 통합되었다.

이어 2006년 6월에는 종전 총유동성(M3)에 단기 채권까지 포함한 광의유동성(L) 지표가 편제 발표되었으며 총유동성의 명칭은 금융기관 유동성(Lf)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계신용통계를 세분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2003년 8월부터 가계신용을 소비용, 주택용, 기타로 구분하고 담보별로 주택담보, 기타담보, 신용·보증대출로 구분하였으며 만기별 통계도 세분화하는 한편 종전 계약만기 기준으로 작성하던 것을 잔존만기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2011년 8월부터는 그동안 속보성 있는 기초자료 수집이 어려워 제외되었던 대부업체, 증권회사, 연금기금 등의 가계대출도 가계신용통계에 포함하였다.

자본시장에서도 새로운 주가지수 개발이 이루어졌다. 2000년 3월 KOSPI 100지수와 KOSPI 50지수가 작성되고 2000년 10월에는 코스닥 50지수가 작성되어 주가지수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의 거래에 활용되었다. 2002년 10월 KOSPI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된 이래 지수 개발이 더욱 활발해져 2003년 7월 배당지수, 2005년 6월 KRX 100지수 등 업종별, 기업규모별, 종목특성별로 다양한 주가지수들이 개발되었다.

03

주요 재정·금융통계의 발전과정

•• 재정통계는 예산회계 및 조세제도의 변천에 따라 그리고 금융통계는 금융제도 발전에 따라 정비·확충되어 왔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중심통화지표와 한국은행기준금리 등과 같이 정책의 주요변수로서 사회의 관심과 논쟁이 집중되면서 능동적으로 개편되어 온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재정·금융통계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요 통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통계의 경우 ‘통합재정통계’, ‘일반정부통계’ 그리고 ‘정부부채통계’를 살펴보고, 금융통계의 경우 ‘통화 및 유동성지표’, ‘가계부채통계’, ‘보험통계’ 그리고 ‘증권·파생상품시장 통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합재정통계

••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재정은 일반회계와 전란수습 특별회계 및 국채금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재정통계도 단순하였다. 재정규모와 재정수지는 일반회계에 두 특별회계를 더한 일반재정부문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1949년 8개 특별회계 신설을 시작으로 특별회계 수가 계속 늘어나고 1960년부터는 예산외기금이 설치되는 등 재정구조가 복잡해졌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대적 재정통계는 개발되지 못하였다. 재정통계는 구 「한국은행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한국은행 창립 시부터 작성되었다. 초기의 재정통계는 정부의 예산·결산서나 한국은행 국고계정의 국고금수급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이었으나 1959년부터는 UN의 정부계정분류편람에 의해 중앙정부의 세입 세출을 일반행정, 국방, 교육, 경제사업 등 경제적·기능적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고 재정수지의 보전내역을 별도로 작성함으로써 국제기준에 의한 재정수지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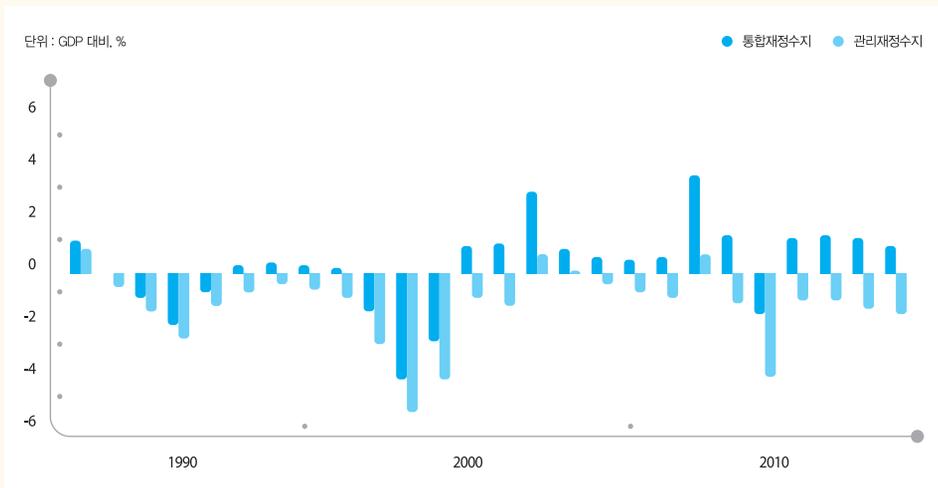
이후 재정통계는 각종 특별회계와 정부기금의 신설, 개폐를 반영하여 변천해 왔으나 예산회계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정부 전체의 재정수지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1975년 특별회계는 25개, 기금은 12개에 달하였으며 기금은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1987년에는

32개까지 늘어났다. 재정수지통계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1979년 IMF 편제기준에 의한 통합재정수지통계가 공식 발표되면서부터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상호거래를 제거하고 수입 지출을 분류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와 재정수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통계가 개발됨으로써 복잡한 구조의 재정활동을 종합하여 재정정책기조 파악과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IMF는 1974년 재정통계 작성에 관한 국제기준인 재정통계편람 초안을 처음 발표하고 각국에 채택을 권고했다. 정부의 생산, 소비와 같은 실물경제활동에 중점을 두는 UN의 국민계정 정부부문 통계편람과 달리 IMF의 통계편람은 조세, 지출, 차입, 대출과 같은 재정활동에 중점을 둬서 재정통계가 정책수립과 분석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통계 개편에 적극 참여하여 1977년에 1차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1979년에 개편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IMF는 각국의 통계편제 경험과 조언을 반영하여 당초 초안을 보완한 제1차 편제기준인 1986년 재정통계편람을 발표했으며 각국의 재정통계는 이 편람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우리나라 통합재정통계는 자료사정의 제약으로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오다가 2005년부터 지방정부를 포함하게 되었다.

국제기준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재정수지통계도 개발되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은 아직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아 보험료 수입이 계속 누적되어 큰 폭의 흑자가 쌓이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가 점점 커져 전체 통합재정수지를 좌우하게 되자 2001년부터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통계를 작성 활용하게 되었다. 기금 흑자는 재정정책 기조와 관계없이 늘어나므로 이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추이



제외하지 않으면 정책지표로서 재정수지의 의미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2003~2006년에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른 정부보증채의 국채전환액도 제외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 항목을 제외한 재정수지의 명칭은 당초에는 단순히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통합재정수지'로 하다가 조정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등을 거쳐 2012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로 정착되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두 통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이후 그 격차가 점점 커져 2000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였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일반정부통계

•• 통합재정통계의 개발이 재정통계의 획기적 발전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었다. 통합재정통계는 실질적으로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않아 정부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수입 및 지출을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에 계상하는 현금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반회계원칙인 발생주의원칙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12월 IMF는 1986년 편람을 개정한 2001년 재정통계편람을 발표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부의 범위에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고 통계기록시점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개편한 것이며 이외에 시가평가 제도를 채택한 것, 재정수지통계가 기초 대차대조표와 기말 대차대조표의 차이와 연결되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재정통계의 분석 유용성을 강화하고 앞서 개편된 국민계정체계(1993 SNA) 등을 반영하여 다른 통계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정통계를 발생주의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회계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07년 7월 「국가회계법」을 제정하고 2009년도 예산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정통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2008년 11월 민관합동 재정통계개편 T/F를 구성하고 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2011년 1월 공청회를 거쳐 2011년 9월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2012년 4월에는 재정통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재정통계를 발표하였다. 개편된 재정통계는 발생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234개 비영리공공기관을 추가함으로써 통계의 포괄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비영리공공기관을 일반



●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 간담회

정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 4단계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1단계로 비영리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아니면 일반정부로 분류하고, 독립된 기관인 경우는 2단계로 기관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구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구조조정기구와 같이 공공목적을 위한 성격이 분명한 기관은 일반정부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3단계 기준으로 판단한다. 3단계에서는 최근 3개년 평균 원가보상률(생산원가/판매액)이 50% 이하면 일반정부로 분류하고 50%를 초과하면 4단계 기준으로 판단한다. 4단계에서는 최근 3개년 평균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 판매액/총 판매액)이 80% 이상이면 일반정부, 80% 미만이면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통계 개편으로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기준의 발생주의 재정통계가 정비되었지만 주된 재정수지통계로는 여전히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통합재정통계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통계의 연속성 등을 위한 것이지만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같은 기준의 통계인 지 유의해야 한다.

정부부채통계

•• 정부부채는 재정수지와 함께 핵심적인 재정통계지만 1990년대 말까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때까지 재정 건전성은 주로 재정수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정부부채 수준이 그만큼 높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자 정부부채의 포괄범위에 대한 논쟁과 함께 다양한 통계들이 개발되게 된다. 주요 정부부채 통계에는 ‘국가채무’, ‘일반정부부채’, ‘공공부문부채’ 등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국가채무이다. 국가채무는 정부수립 이후 결산통계에서 작성되어 왔다. 1961년 재무부가 발간한 『대한민국정부 결산관계 통계자료』를 보면 1948년도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입금과 국채발행 통계가 연도별, 회계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후 결산개요 등을 통해 국가채무통계가 발표되어 왔는데 1996년까지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하여 작성되었다.

국가채무에는 국내외 차입금과 국채발행, 국고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되며 확정되지 않은 정부보증 채무는 제외된다. 이중계산 제거를 위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도 제외된다. 초기에는 정부보증 채무를 제외한 것을 순 국가채무, 포함한 것을 총 국가채무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정부보증 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하여 별도 항목으로 명기하였다. 정부부채의 누증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매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는데 부채관리를 위한 기준지표로

국가채무통계가 활용되었다. 둘째 일반정부부채이다. 1979년 IMF 기준에 의한 통합재정통계가 편제되면서 국제기준에 의한 중앙정부 부채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1979년 통계개편결과를 발표한 『한국의 재정통계』에는 정부부채 통계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1980년판에 1970년까지 시계열을 소급한 중앙정부 부채통계가 발표되었다. 이어 2005년에는 통합재정수지 통계에 지방정부가 포함되면서 중앙정부 부채통계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통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통합재정통계의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만이 포함되며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은 제외된다. 2012년 12월 IMF의 2001년 재정통계편람에 의한 일반정부부채가 작성 발표되었다. 새로운 통계는 포괄범위가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되고 통계작성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예수금, 미지급금 등의 부채항목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부채통계이다. 2014년 2월에는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부채 통계가 작성 발표되었다. 이는 향후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정부부채를 파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기업 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써 세 가지 정부부채 통계가 정비되게 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세 지표의 차이를 보면 국가채무가 490조 원, 일반정부부채가 566조 원, 공공부문부채가 899조 원에 달한다.

한편 국민계정통계에서도 정부부채통계가 작성된다. 자금순환표와 국민대차대조표의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는 앞에서 설명한 정부부채통계와 포괄범위는 같으나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총액기준으로 작성되며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다.

주요 정부부채 통계(2013)

유형	규모	포괄범위	산출기준
국가채무(A)	489.9조 원(GDP의 34.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일반정부 부채(B)	565.6조 원(GDP의 39.6%)	A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기준, 발생주의
공공부문 부채	898.7조 원(GDP의 62.9%)	B + 비금융공기업	국제기준, 발생주의

통화 및 유동성지표

•• 금융통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통계는 통화 및 유동성지표라 할 수 있다. 통화 및 유동성지표는 통화정책이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한 1990년대 말까지 정책의 목표변수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이후에도 정보변수로서 정책과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지표가 최초로 작성된 것은 1951년 3월이었다. 통화량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현금통화에 민간 당좌예금을 더한 것을 통화공급량 제1의, 현금통화에 모 든 예금을 더한 것을 통화공급량 제2의라는 명칭으로 편제하였다. 당시 금융기관이 중앙 은행인 한국은행 외에 특수은행 2개와 일반은행 2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통화지표 작성은 해당항목을 단순 합산하는 수준이었다.

1955년 8월 IMF 가입을 계기로 통화지표를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먼저 1955년 10월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을 합하여 통화, 현금통화와 저축성예금을 합하여 총통화로 편제 함으로써 기본적인 통화지표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58년 9월에는 해당 항목을 단순 합 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통화개관표에 의한 통화지표를 편제하였는데 기초자료 부족 등 으로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으나 국제기준에 맞는 형태의 통계 작성을 처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통화지표는 초기에는 금융상황 분석 목적으로만 이용되었으 나 1957년부터 실시된 재정안정계획에서 통화 공급한도가 설정됨으로써 정책지표로 활용 되기 시작했다.

IMF 기준에 의한 현대적 통화지표통계가 작성된 것은 1974년에 이르러서였다. 통화개관표 의 개편으로 본원통화, 통화, 총통화 등 통화지표가 일목요연하게 작성되고 정부, 정부대행 기관, 민간,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통화정책의 규제대상 지표인 중심통화지표는 통화, 본원통화, 국내신용(DC), 통화 등으로 바뀌어오다가 1979년 부터는 총통화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설, 규제 완화에 의한 금융상품 간 자금이동 확대 등 금융시장 구조 변화로 총통화만으로는 금융시장의 전체 유동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보완하는 통화 및 유동성지표들 이 개발되었다.

1982년 10월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포괄하는 최초의 유동성지표인 총유동성(M3)이 작성 발표되었으며 1984~1988년 수차례에 걸쳐 그 포괄범위가 확대되었다. 1989년 1월에는 M2A와 M2B가 개발되어 통화정책 보조지표로 사용되었는데 M2A는 총통화에서 장기저 축성예금을 제외한 것이고 M2B는 M2A에 유동성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단기예수금 을 합산한 것이다. 1996년 4월에는 신탁제도 개편으로 유인이 약화된 금전신탁 예치금이 대규모로 저축성예금으로 이동하여 총통화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총 통화에 금전신탁과 양도성예금(CD)을 더한 MCT지표가 개발되어 총통화와 함께 복수의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활용되었다.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실시와 함께 통화정책 운영방식이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이행하면서 통화 및 유동성지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1999년과 2000년에는 총유동성이 목표변수로 활용되었으나 2001년과 2002년에는 감시지표(monitoring variable) 로 격하되었으며 2003년 이후는 증가율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통화 및

유동성지표는 통화정책 운영과정에서 금융경제상황을 판단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었으며 통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IMF의 2000년 통화금융통계편람에 따른 통계 개편으로 2002년 3월에 새로운 통화지표인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가 작성 발표되었다. 협의통화는 현금통화와 결제성 예금 및 MMF로 구성되었으며 광의통화는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통화성 상품을 모두 포괄하여 종전의 총통화보다 총유동성에 유사한 지표였다. 이후 협의통화의 범위는 다소 조정되어 2005년 11월 법인 MMF가 제외되고 2007년 3월에는 MMF 전체가 제외되었다.

2006년에는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광의유동성(L) 지표가 작성 발표되었는데 이는 종전 총유동성에 증권회사 RP, 여신전문기관 채권, 예금보험공사채, 자산관리공사채, 자산유동화증권,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포함한 것이다.

통화지표 통계의 변천

지표 명칭	최초 작성일	지표의 구성
통화공급량 제1의	1951. 03	현금통화 + 당좌예금
통화공급량 제2의	1951. 03	현금통화 + 모든 예금
통화(구M1)	1955. 10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총통화(구M2)	1955. 10	현금통화 + 저축성예금
본원통화	1969. 07	현금통화 + 지급준비금
국내신용	1970. 04	총통화 - 순해외자산 - 기타순자산
총유동성(M3)	1982. 10	총통화 + 비은행금융기관 예수금 + 금융채
M2A	1989. 01	총통화 - 장기 저축성예금
M2B	1989. 01	M2A + 비은행금융기관 단기예수금
MCT	1996. 12	총통화 + 양도성예금증서 + 금전신탁
협의통화(M1)	2002. 03	현금통화 + 결제성예금 + MMF
광의통화(M2)	2002. 03	협의통화 + 정기에·적금 + 시장형상품 + 실적배당상품 + 기타
광의유동성(L)	2006. 06	총유동성 + 증권회사Rp + 국채 + 지방채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타

가계부채통계

•• 최근 가계부채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가계신용통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가계신용통계가 개발되기 전에는 자금순환통계 중 개인부문 부채가 대용지표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순수가계 외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민간비영리단체에 대한 부채도 포함한다. 가계신용을 차입자 입장에서 보면 가계부채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가계신용통계가 처음부터 가계부채지표로서 개발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들어 소득 및 소비 증가로 가계의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다 직접금융시장의 발달로 금융기관 대출도 기업금융

위주에서 벗어나 가계대출 비중이 증대되고 신용카드, 할부판매 등을 통한 신용공여도 확대되자 통화정책 참고지표로서 가계에 대한 신용공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계신용통계는 2년여의 시험 편제를 거쳐 1998년 5월 공식 발표되었는데 자료사정으로 1994년까지만 소급 작성되었다. 당초에는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신용(소비자금융 + 판매신용)과 주택금융통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추진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을 주택자금과 순수 소비금융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 작성하였다. 이는 통계개발 당시 조사대상기관이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 등 총 5028개사에 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가계신용은 분기별로 작성되지만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월별로 작성된다.

2000년대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문제가 대두되자 가계부채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계가 요구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2003년 8월 가계신용통계의 대폭 개선이 이루어졌다. 첫째, 가계대출을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주택용, 소비용, 기타로 구분하였다. 둘째, 대출기간 구분기준을 계약기간에서 잔존기간으로 변경하고 기간 구분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셋째, 대출담보별로 신용·보증, 주택담보, 기타담보로 구분하였다. 넷째, 대출증감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신규취급 및 상환통계를 신설하였다. 다섯째,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통계를 신설하였다.

2011년 8월에는 가계신용통계의 포괄범위가 확대되어 증권회사, 대부업체, 연금기금 등의 가계대출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가계신용통계의 신용공급기관 포괄범위가 자금순환통계와 같게 되었다. 다만 자료사정으로 2002년까지만 소급 작성됨으로써 시계열이 더욱 짧아지게 되었다.

보험통계

●● 중요 통계 발전과정에서 보험통계를 빠뜨릴 수 없다. 보험통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통계 중 하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산업의 발달이 늦어 통계가 정비된 역사도 다른 금융통계에 비해 길지 않다. 1921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와 1922년 조선화재보험주식회사 설립을 효시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8개 생명보험회사와 9개 손해보험회사가 설립되었으나 경제 여건 미흡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1977년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고 이후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보험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로소 보험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었다. 보험통계는 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정확한 보험통계를

축적 관리하는 것은 보험산업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1970년대 이전에는 보험통계가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여 보험요율 산정을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통계나 외국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명보험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본통계는 '경험생명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연령별 생존자수와 사망자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 등을 나타내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근거가 된다. 우리나라는 1975년까지 일본 국민생명표를 이용해오다가 1976년부터 보험계리인회가 작성한 국민생명표를 사용하였으며 1986년에 이르러서야 6개 생명보험회사의 1년간 경험통계에 의한 간이 경험생명표가 작성되었다. 1987년에 3개년 통계에 의한 제1회 경험생명표가 작성되었고 이후 매년 갱신되다가 2000년 작성된 제4회 경험생명표부터는 근거자료가 20개 생명보험회사 경험통계로 확대되었다.

1990년부터는 작성기관이 보험개발원으로 변경되었다. 입원을 통계 작성도 늦어 생명보험회사들은 2002년까지 일본 후생성 자료를 이용하여 왔는데 2003년에서야 1996~1998년 실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입원을 통계가 작성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손해보험통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962년 손해보험협회 내에 보험요율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보험요율을 산정하였는데 기초통계 부족으로 외국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6년 손해보험요율산정회가 사단법인 형태로 독립되었으나 1974년 경비절감을 이유로 다시 손해보험협회로 흡수 통합된 것은 통계 정비를 위한 당시 여건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보험요율 산정제도가 1980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로 지적되자 1983년 손해보험요율산정회가 다시 독립됨으로써 요율산정 관련 통계 작성은 손해보험요율산정회가, 보험회사 관련 통계 작성은 손해보험협회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보험통계의 집적 관리는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손해보험요율산정회는 1989년 보험개발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1985년 9월부터 계약 자료를 집적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상보험은 1987년 4월부터, 상해보험은 1989년 4월부터, 화재보험은 1990년 4월부터 기초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신정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자료의 수집, 관리, 오류검색,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증권·파생상품시장 통계

•• 자본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통계는 주가지수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상장종목수가 12개에 불과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주가지수를 작성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1962년 증권시장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정비와 함께 주식거래가 늘어나면서 1964년 1월에 미국 다우지수 방식의 '수정 주가평균지수'가 최초로 작성 발표되었다. 이는 당시 상장주식 15개 종목 중 12개 종목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는데 대상종목 주가합계를 제수(divisor)로 나눈 수정주가평균을 1963. 05. 09~12. 24 주가평균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한 것이었다. 주가합계를 종목수로 나눈 단순주가평균은 특정종목이 액면분할을 하거나 대상종목이 교체될 경우 주가 수준이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되므로 지수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일정한 수로 나누어 조정하는 것이다.

이후 상장주식수가 50개사로 늘어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자 12개 종목을 대상으로 한 수정주가평균지수로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를 개편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972년 1월부터 발표되었다. 이는 지수산출방식은 동일하나 구성종목 수가 우량주 35개 종목으로 확대되고 기준시점을 1972년 1월4일로 변경한 것이었다. 이어 1979년 1월에는 자본시장 발전을 반영하여 또 한 번의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대상종목 수가 153종목으로 확대되고 기준시점도 1975년 1월4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거듭된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상종목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등 주가지수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1983년 1월부터 주가평균방식의 주가지수가 폐지되고 현재와 같은 시가총액방식의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작성되게 되었다.

시가총액방식은 대상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를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합계로 나누어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1957년 미국의 S&P 500지수가 편제되기 시작한 이래⁷ 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한국종합주가지수는 상장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기준시점은 1980년 1월4일이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지수편제방식의 변경 이유로 첫째, 다우방식의 지수가 주가를 가중치로 하기 때문에 기업규모가 작더라도 주식 수가 적어 주가가 높은 종목의 가중치가 더 크게 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둘째, 소수 우량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장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장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며 셋째, 종목 교체나 액면분할에 의한 영향이 제거되므로 지수의 연속성이 개선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어 1996년 7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위한 코스닥시장이 개설되자 1997년 1월부터 코스닥시장 주가지수가 작성 발표되었는데 작성방식은 종합주가지수와

7 이보다 앞선 시가총액방식 주가지수로 미국의 S&P종합지수가 있다. S&P종합지수는 1926년 대형주 90개 종목을 대상으로 편제되기 시작하였으나 1957년 500개 종목의 S&P 500지수로 확대 개편되었다.

동일한 시가총액방식으로 기준시점은 1996년 7월1일이다. 이후 주가지수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주가지수는 주로 전체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되지만 주가지수 자체가 거래대상이 되거나 기준지표(benchmark)로 이용되기도 한다. 주가지수 선물시장과 옵션시장, 인덱스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새로운 시장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용도의 다양한 주가지수들이 개발되었다. 선물옵션시장 개설에 대비하여 1994년 6월부터 대형우량주 200종목으로 구성되는 KOSPI 200지수가 작성 발표되었으며 이를 거래하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이 1996년 5월에, 주가지수옵션시장이 1997년 7월에 개설되었다.

2000년 3월부터는 지수구성종목을 더욱 압축한 KOSPI 100지수와 KOSPI 50지수가 작성 발표되었다. 2000년 10월에는 5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코스닥 50지수가 작성되어 이를 대상으로 한 코스닥지수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이 개설되었는데 거래가 부진하여 2005년 11월 코스닥 50지수가 폐지되고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닥 스타지수로 대체되었다. 2009년 12월부터는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닥 프리미어지수도 작성되고 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주가지수로서 KRX 100지수가 있다. 이는 2005년 6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통합주가지수로서 개발되었는데 기업규모와 재무구조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유가증권시장 87개 종목과 코스닥시장 13개 종목 등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다른 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방식으로 작성되지만 가중치는 대주주와 정부 지분, 자사주 등 유통되지 않는 주식을 제외한 유통가능 주식의 시가총액이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KRX 100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인덱스펀드 시장의 발달이 크게 미흡한 상황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2005년 1월 통합거래소가 출범⁸한 데 따른 통합주가지수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닌다. 2005년 10월 이 지수를 기준지표로 하는 상장지수펀드가 신설되었다.

8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로 통합하였다가 2009년 2월 한국거래소로 개칭했다.

04

맺음말

•• 정부재정과 금융은 그 규모가 크고 범위가 방대하며 구조도 복잡하여 이를 알기 쉽게 통계로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 기본적으로 정부예산회계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의하거나 시장거래 데이터를 집계하여 통계가 작성된다는 점에서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재정통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정책 기초, 재정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비영리공공기관, 공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편제하는가가 통계작성의 핵심과제가 된다.

1979년에 이르러 전체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통계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IMF의 1974년 재정통계편람 초안에 따른 최초의 현대적 재정통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IMF의 두 번째 편제기준인 2001년 재정통계편람에 의한 재정통계가 작성된 것은 2012년에 이르러서였다. 2001년 편람은 통계기록시점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제기준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재정상황 평가와 정책운용에 필수적인 통계 개선이라고 하겠다.

금융통계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대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50년대에 이미 통화량 통계가 도입되었고 초보적 형태의 통화개관표가 작성되었다. 종목별 금융기관 예금 대출금 통계는 이보다 앞서 1947년부터 작성되었다. 이후 많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신설되고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통계가 정비 확충된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라 하겠다. 특히 통화 및 유동성지표는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수정 보완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통화정책의 목표변수로서 활용되었다.

보험통계의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여수신통계 등은 다른 금융통계와 마찬가지로 일찍 정비되었으나 보험가입자의 생존율이나 사망률, 입원율, 사고율 같은 기초통계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작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보험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1989년 보험개발원 설립을 계기로 보험통계의 발전이 본격화되었다.

증권·파생상품시장 통계도 시장 발달과 함께 발전하였다. 상장종목 수가 많지 않았던 1980년대 초반까지 다우지수 방식의 주가평균지수가 작성되다가 상장종목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가총액방식의 종합주가지수로 변경되었는데 시가총액방식 지수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주가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주가평균지수를 폐지하는 대신 계속 병행하여 작성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KOSPI 200 등 다양한 지수들이 개발되어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 상장지수펀드 등 새로운 시장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정·금융통계 발전의 큰 흐름에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기준에 의한 통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한 정확하고 투명한 통계 작성은 국내외의 높은 신뢰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재정·금융통계와 같은 거시경제통계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등 여타 통계와의 조화가 중요한데 국제기준의 이행은 이를 달성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들 통계에 대한 국제기준은 통계 간 조화에 중점을 두면서 서로 맞물려 개편되기 때문이다. 재정통계와 금융통계 모두 IMF의 2014년 편제기준 초안이 나와 있다. 최신기준 이행은 물론 국제기준 개편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재정·금융통계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기초 파악과 영향분석을 위한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의 중점목표와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통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재정통계의 경우 복지재정정책의 기초파악과 영향분석을 위한 통계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며⁹ 국민연금 등 재정여건의 장기전망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지표 개발도 중요하다. 금융통계의 경우 거시건전성 지표의 확충, 파생금융상품 등 이른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포함한 유동성지표 개발 등을 중요한 과제로 들 수 있다.

셋째, 금융기관 및 정부 회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재정·금융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금융기관 및 정부 회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조건이 된다. 재정·금융통계의 기반으로 관련 회계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이나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9 IMF의 2014년 재정통계편람 초안은 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고영선, 『우리나라의 재정통계』(연구보고서 2002-01), 한국개발연구원, 2002.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대한민국재정』, 2014.
- 기획재정부, 『201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4.
-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20년사』, 2003.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60년사』, 2010.
- 손해보험협회, 『한국 손해보험산업과 함께 한 손해보험협회 60년사』, 2006.
- 재무부 『대한민국정부 결산관계 통계자료』, 1961.
- 재무부, 『한국의 재정통계』, 1979.
-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 1992.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 40년사』, 1991.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55년사』, 2011.
- 한국은행, 『저축총람』, 1972.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 - 어제와 오늘』, 1995.
- 한국은행, 『우리나라 통화지표 해설』, 2008.
-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시장』, 2012.
-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2014.
- 한국증권거래소, 『주가지수 해설』, 2003.
- IMF,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한국은행(역), 『재정통계편제요람』, 1977), 1974.
- IMF,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1986, 2001, 2014(a).
- IMF, "Mom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2000, 2014(b).
- IMF,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to Strengthen Fiscal Analysis," November 26, 2013.



경제통계

제11장

무역·국제수지

1. 개요

2. 발전과정

3. 맺음말

01

개요

의의

•• 한 나라의 경제가 움직이려면 생산, 지출, 분배 등 실물거래의 순환과정과 실물경제활동에 수반되어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상품 및 서비스, 통화(교환 및 지급수단)가 거래된다. 이러한 거래가 국내의 거주자 간에 발생하면 국내거래이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것을 대외거래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가 오늘날 처럼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대외거래였다. 대외거래는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상품 및 서비스, 통화 등으로 이루어진다. 대외거래 초기에는 이 중 상품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거래와 자본거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외거래통계는 크게 무역통계(수출입통계), 외환통계, 국제수지통계 등으로 구분된다. 상품의 대외거래를 나타내는 통계를 무역통계 즉 수출입통계라 하고, 상품 등의 무역거래 등에



• 제63차 관세협력이사회 서울총회(1984)

수반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일어나는 외환의 대외거래 곧 대외결제를 나타내는 통계를 외환통계,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경제적 거래를 국제기준에 의거 종합 정리해 놓은 표를 국제수지통계라 한다.

첫째 무역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 중 대외거래를 통해 국가 간에 교류가 일어난 상품의 이동상황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 집계한 통계를 말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인적, 물적 교류의 증가와 더불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각종 대외 관련 통계 작성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특히 서로 다른 경제주체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간 무역통계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IMTS : Concepts and Definition 1970, 국제상품무역통계 : 개념과 정의)에 따른 정확하고 신속한 무역통계의 작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무역통계는 물품계획, 무역정책 나아가서는 산업정책의 수립과 경제 분석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데, 이때 한정된 자원의 국가 간 적정 배분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외환통계는 상품 등의 무역거래 등에 수반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일어나는 외환의 대외거래 곧 대외결제를 나타내는 통계를 말한다. 외환통계는 자국의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대외지급준비의 적정규모유지, 통화가치의 안정 등 경제의 안정유지와 성장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셋째 국제수지통계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를 말한다. 따라서 국제수지통계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대차상황을 기록한 잔액(stock) 개념이 아니라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흐름 개념의 통계이며,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법률상의 국적보다도 경제활동에 있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익의 중심이 다른 나라의 경제권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다. 통상적으로 경제주체가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경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또한 거래유형에 있어서는 모든 경제적 거래가 대상이 되는데 상품 및 서비스, 소득, 자본 간의 교환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증여 등 대가가 없이 이뤄지는 이전거래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기록이라 함은 국제수지통계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거래를 회계학에서 말하는 복식부기의



● 국제상품무역통계

원리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수지표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IMF가 정해놓은 국제수지 통계의 포괄범위, 분류, 평가 등에 관한 국제기준인 『국제수지매뉴얼』(Balance of Payment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BPM)에 의해 작성된다.

범위와 종류

•• 무역통계를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할 것은 통계에 계상할 상품의 범위와 국가의 영역한계이다. 무역통계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UN 권고안¹에서는 대외거래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상품의 범위를 ‘그 상품의 유출입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물적 자원의 저장(stock)에 증감을 가져오는 상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통화나 서비스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무역통계의 계상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품은 상업적 거래물에 한하지 않으며 장기대여 및 리스계약 현물차관수입, 플랜트설비 이전 등의 비상업적 거래물도 무역통계 계상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영역의 한계는 관세선(관세가 부과되는 영역)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료수집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영역으로 모든 상품은 반입(수입)되거나 반출(수출)됨으로써 그 나라의 물적 자원을 증가 또는 감소로 기록된다. 다만, 단순히 한 나라를 통과하는 물품(통과물품)이나 일시적으로 반입 또는 반출되는 물품은 그 나라의 물적자원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작성할 때의 기준이 되는 무역통계지역은 지리적·행정적·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정해지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을 의미하는 관세영역과 무역통계지역은 개념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관세영역을 넘어서 행해지는 화물의 교류 통계가 무역통계라 할 수 있다.

외환 관련 통계로서 환율이란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 비율로 외국화폐와 비교한 우리나라 화폐의 상대적 가치를 말한다.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한다. 장기적으로는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물가변동에 따른 상대적 구매력 변화나 생산성, 내외금리차,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참가자들의 환율에 대한

1 1965년 제13차 UN 통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출간된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 Concepts and Definitions

기대나 각종 뉴스, 경쟁국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또한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 및 자국 통화와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유지 등을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통제가 가능한 외화표시 대외 지급준비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필요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 및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게 된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외화예치금, 금, SDR, IMF 포지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가증권에는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이 있으며, IMF 포지션은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등으로 보유하고 되는 IMF에 대한 교환성통화 인출 권리를 말한다. 국제수지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그 유형에 따라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경상수지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 배당·이자 등의 소득 거래,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가 계상된다. 자본수지에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포함된다. 금융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직접투자,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거래, 대출·차입 및 준비자산 거래 등이 계상된다.

국제수지통계의 다른 형태로 국제투자대조표가 있다. 국제투자대조표(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IP)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대외투자) 및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과 그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스톡 통계로서 플로우 통계인 국제수지 통계의 금융계정과 포괄범위가 동일하다. 국제수지표가 일정기간 동안 국가 간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라면, 국제투자대조표는 이러한 경제적 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한 나라의 금융자산·부채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라 할 수 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국제수지표와 함께 대외거래가 한 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분석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특히 최근 국경 간 자본이동이 빈번해지면서 한 나라의 대외지급능력,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분석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제투자대조표와 유사한 형태인 대외채무·채권 통계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부채(대외채무) 및 금융자산(대외채권)'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표를 가리킨다. 대외채무·채권통계는 장래의 불확실한 상환의무 및 청구권을 나타내는 우발채무 및 우발채권을 포괄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제투자대조표상 지분성 상품(직접투자 내 지분투자와 증권투자 내 주식투자)과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한 것과 개념상으로 일치한다.

국제투자대조표와 대외채무·채권 통계와의 관계

국제투자대조표(IIP)				
대외채무·채권 통계	지분성 투자			파생금융상품
	직접투자 중 지분투자	증권투자 중 지분증권(주식), 기타투자 중 기타지분		

작성주기별 통계를 보면, 무역통계는 2014년 현재 20종이 작성되고 있으며 이 중 연간통계가 9종으로 가장 많다. 또한 국제수지(외환통계 포함) 통계는 6종으로 월간이나 분기별로 작성되고 있다.

한편, 작성방법별로 보면, 조사통계가 16종으로 가장 많으며 주로 연간이나 1회한 통계이다. 또한 통계작성 특성상 월별이나 분기통계는 보고 및 가공통계로 작성되고 있다.

작성주기별 및 작성방법별 무역·국제수지통계

구분	계	작성주기				작성방법		
		월	분기	연간·2년	1회한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무역통계	20	3	1	9	7	13(7)	4	3
국제수지(외환)통계	6	2	4	-	-	-	3	3
계	26	5	5	9	7	13(7)	7	6

주: ()은 1회한 통계로 모두 조사통계임
출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목록』, 2014

국제동향

•• 무역통계의 국제적 기준을 관장하는 UN 통계위원회에서는 1965년 제13차 회의에서 각국의 무역통계들의 비교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무역통계 집계에 대한 관행을 편집·출판할 것을 권고하였고 UN 통계사무국에서 이를 받아들여 1970년 무역통계 작성의 국제적 기준인 『국제상품무역통계: 개념과 정의』를 출간하였다.

국제상품무역의 발전 및 기타 경제 통계분야에서 권고된 방법론을 무역통계 작성에 접목하기 위하여 IMTS 2차 개정판이 1995년 UN 통계위원회의 제28차 회의에서 마련되었다. IMTS 2차 개정판은 국제무역통계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발전과 보완을 위하여 1993년 국민계정체계(SNA) 및 국제수지 매뉴얼 제5판과의 부합성 제고, 국제무역 분야에 있어서 장기적인 지침서가 존속해야 할 필요성 등이 고려되었다.

국제수지통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인 IMF의 『국제수지매뉴얼』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IMF의 『국제수지매뉴얼』은 1948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의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BPM6)이다.

『국제수지매뉴얼』 제1판(BPM1)에서 IMF는 각 가맹국으로 하여금 1946년과 1947년의 국제수지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국제수지통계 작성방법을 지도하였다.

국제수지매뉴얼 제1판을 만든 주요 목적은 IMF에 대한 정기적이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보고방식의 기초를 제공하고 각국에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국제수지 작성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1950년 2월에 『국제수지매뉴얼』 제2판(BPM2)을 발간하였다. 『국제수지매뉴얼』 제2판(BPM2)은 매뉴얼 체계의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를 대폭 늘려 금거래와 자본이동의 개념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부표도 정비하였다.

『국제수지매뉴얼』 제3판(BPM3)은 1961년 7월에 발간하였다. IMF 보고를 위한 기본적 내용과 모든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국제수지 원칙을 수록함으로써 이전 판들을 크게 보완하였다. 즉 상품 및 서비스와 이전지급의 범위를 재조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개념을 UN 및 OECD의 국민소득 계정과 좀더 부합하도록 조정하였다. 1973년 2월에는 제3판의 내용을 보완한 보충판이 발간되었는데 자본의 기능적 분류에 보다 유의하여 자본거래에서 직접투자와 외환보유액항목을 구분,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시켰다. 그후 미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주요 통화의 변동환율제 채택 등 국제통화체제가 변화하고 금융리스거래가 급증하는 등 국제거래 관행도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국제수지표 작성기준 마련이 필요하였다.

『국제수지매뉴얼』 제4판(BPM4)은 1977년에 발간되었으며 국제거래방식과 국제금융체계의 중요한 변화에 대응하여 거주성에 관한 기본원칙, 평가 및 기타 회계원칙의 취급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IMF는 1979년부터 각 가맹국이 『국제수지매뉴얼』 제4판에 의거 국제수지표를 작성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제수지매뉴얼』 제4판에서는 항목분류상 독립 항목으로 되어 있던 비화폐용 금 항목을 상품항목에, 정부거래항목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에 각각 포함시키고, 자본거래는 종래의 민간·정부·금융기관 등 거래주체별 분류에서 직접투자·포트폴리오투자·기타자본·외환보유액 등 자본의 기능적 분류로 변경하였으며, 자본거래를 자산항목과 부채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수지통계 작성원칙을 국민계정체계(SNA)와 더욱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수지의 분석방법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SNA가 UN에 의하여 1968 SNA에서 1993 SNA로 새로이 정립되고 세계교역 및 금융환경도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국제수지통계 작성기준도 재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MF에서는 1993년 새로운 국제수지작성기준을 제정하고 제5판으로 발표하였다.

『국제수지매뉴얼』 제5판(BPM5)은 1993년 9월에 발간되었다. 제5판은 동시에 발간된 1993 SNA와의 부합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이는 거시경제통계들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BPM5에서는 정의, 용어, 계정의 구조 등이 크게 변경되었으며 국제수지통계뿐만 아니라 국제투자대조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제5판에서는 국민소득통계 등

여타 국민계정(산업연관표, 자금순환 등)과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계정에 소득항목을 신설하고 이전거래 중 경상이전만 포함시키고 있으며, 자본계정도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자본 및 금융계정으로 확대 조정하여 자본이전과 파생금융상품을 신규 계상하고, 자본거래의 장단기 구분도 폐지하였다. 또한 플로우 통계인 국제수지통계의 분석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시점에서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총액을 집계한 스톡 통계로서 국제투자대조표의 작성이 추가되었다.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BPM6)은 2010년 발간되었으며 이를 통해 1993년 이후의 세계화 및 경제환경 변화, 금융혁신 등을 반영하고 다른 거시경제통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세계화 관련 이슈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했으며 해외임가공 및 중계무역, 송금, 다국적기업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국제경제 발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플로우 통계인 국제수지통계 위주에서 잔액통계인 국제투자대조표도 중시하는 체계로 변경하였다. 또한 매뉴얼은 특히 ‘국민계정체계 2008(2008 SNA)’과 같은 기타 거시경제통계 매뉴얼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다른 거시경제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BPM6에서 종전 매뉴얼과 달라진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PM6에서는 가공무역 거래를 일반 대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출입으로 계상하던 소유권 이전 없이 해외로 반출되는 원재료와 국내로 반입되는 가공품을 수출입에서 제외하고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가공품의 해외판매액과 가공용 원재료의 해외매입액을 수출입으로 계상한다.

또한 서비스수지에 계상되던 중계무역 마진이 상품수지로 재분류(중계무역 순수출)되었고 이민자들의 재산 반출입 거래는 비거래변동으로 분류되어 국제수지에서 제외되었다. 직접투자의 포괄범위가 일차적 직접투자관계(10% 이상)에서 포괄적 직접투자관계 기업간의 거래까지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특허권·저작권 매매거래가 자본수지에서 기타사업 서비스로 재분류되고 금융중개서비스가 별도로 구분되어 본원소득에서 금융서비스로 이전되는 등 세부항목별 포괄범위가 변경되었다.

IMF는 모든 회원국들이 BPM5에서 BPM6로 완전 이행하는 시기를 2012~2013년 전후로 계획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 3월에 새로운 국제기준인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BPM6)으로 이행하였다.

02 발전과정

•• 앞에서 대외거래의 통계는 크게 무역통계, 외환통계, 국제수지통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대외거래상황을 종합하여 설명해주는 통계가 바로 국제수지통계이다. 무역통계는 UN의 국제무역통계작성 매뉴얼(IMTS)에 의해 작성되며, 품목분류는 ISTC와 HS를 한국의 여건에 맞추어 작성한 KSTC와 HSK를 이용하여 작성된 통계이다. 그리고 외환통계는 대표적인 통계가 외환수급통계와 환율통계, 외환보유고통계 등으로 제도의 변천과 더불어 작성방법 등이 가장 많이 바뀐 통계이다. 그러나 대외거래통계 중에서 외환수급통계가 1996년에 국제수지통계로 흡수 통합되면서 현재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나, 대외거래통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환통계의 발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수지통계는 IMF의 『국제수지매뉴얼』(BPM)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외환통계는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바뀌게 된 「관세법」, 「외환관리법」 등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통계로 발전하여 왔다. 대외거래통계가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하여오다 최근에는 대외거래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거래형태도 다양해지면서 국제수지통계가 한 나라의 경제현상을 종합하여 나타내주는 UN의 SNA(국민계정체계)에 연계되도록 작성방법 등이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무역통계’, ‘외환통계’, ‘국제수지통계’에 대한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무역통계의 발전에서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먼저 무역통계품목분류 코드의 변천을 알아보고 이어서 무역통계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무역통계

무역통계 품목분류(HS) 코드의 변천

••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무역상품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8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831년 벨기에에서 원료, 농산물, 공산품의 포괄적 상품분류를 자국의 무역통계에 사용하였고, 1853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경제협의회에서 국제적인 통일품목분류 체계의 필요성이 인식된 가운데 1908년까지 지속적으로 국제 통일상품분류표의 제정을 위해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92년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에서 관세율표를 제정하고, 1913년 제2차 상업통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5개 그룹 186항목의 국제공통분류표(최초의 국제협약으로 30여 개국 사용)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지속적인 국제 통일상품분류표의 제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1927년 국제연맹이 주관하는 세계경제협의회에서 국제관세율표에 관한 기본 골격이 제시되었고, 1931년 UN의 주관하에 잠정 관세품목분류표가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제네바 품목분류표이다. 이후 제네바 품목분류표를 기초로 통계 목적의 SITC와 관세목적의 BTN(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이 제정되었다.

유럽경제협력위원회는 유럽의 관세동맹 창설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947년 유럽 관세동맹연구단을 설립하였는데, 동 연구단은 제네바 품목분류표를 기초로 하여 1950년 12월 15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관세율의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협약’ 즉 BTN 협약을 제정하였고 이 협약의 부속서로 채택된 것이 BTN이다. EC(유럽경제협력위원회)가 발전하면서 EC의 본부가 브뤼셀에 위치하고, BTN을 기초로 EC 공동체의 관세율표가 작성되었는데 명칭 혼동, 특정 지명인 Brussel 사용에 따른 한계 등을 고려하여 상품분류표의 분류주체인 관세협력이사회(CCC)의 명칭을 딴 CCC로 개칭하기로 1975년 10월에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의하고 1976년 1월부터 CCCN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관세목적의 품목분류는 UN 관세협력이사회(CCC)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1959년의 브뤼셀 품목분류표(BTN) → 1974년의 관세행정품목분류(CCCN) → 1988년의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HS)로 발전하여 왔다. 1931년 제정된 제네바 품목분류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제통일상품 분류표인 HS가 제정되었다. 국제상품분류체계인 CCCN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큰 미국과 캐나다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상품개발기술의 개발과 신상품의 출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해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의 도입이 요구되어 1983년 CCC에서 채택한 것이 HS 제도이다. H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친 것이 HSK이다.

무역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품목분류이다. 국제무역과 관련한 품목분류는 상품별 국제비교가 용이하도록 국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다. 하나는 관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분류로서 동일한 원료로서 얻어진 물품은 동일한 품목군에 분류하고 원료로부터 완제품의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경제분석과 무역통계의 국제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무역상품을 분류한 것으로서 상품을 종류별, 산업구조별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자의 모체는 모두 1931년 UN의 주관 하에 제정된 제네바 품목분류표이다. 전자인

국제표준무역분류(SITC)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추진해 온 분류로 2007년까지 4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UN이 권고하는 국제표준무역분류의 체계를 원칙적으로 따르되 중분류 이하에서는 주로 국내 상품생산 및 거래에 관한 표준상품분류에 적합하도록 분류한 것이 국제표준무역분류이다. 이 국제표준무역분류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친 것이 한국표준무역분류(Standard Korea Trade Classification, SKTC)이다.

무역통계의 발전

•• 무역통계는 UN의 국제무역통계 작성 매뉴얼(IMTS)에 의해 작성하되, 품목분류는 ISTC와 HS를 한국의 여건에 맞추어 작성한 KSTC와 HSK를 이용하여 작성된 통계이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대외거래 관련 통계는 주로 무역통계로 수출입액, 국별 수출입액, 항구별 수출입액, 주요상품별 수출입액 관련 통계로 나누어진다. 외화기준이 아니라 일본의 무역통계와 마찬가지로 자국통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남한과 북한이 합쳐진 수출입 통계이고, 대외국(일본 제외)무역과 대일본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수출입통계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조선은행 통계월보』, 『조선금융사향참고서』, 『조선무역년표』, 『조선무역월보』, 『금융통계』에 월별 또는 연도별로 수록되었다.

광복 이후 무역통계는 정부수립 이후 1961년까지 재무부(1948. 11. 04 재무부에 세관국 설치, 1949. 11 「관세법」 제정하여 관세징수업무 담당)에서 처음으로 무역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2~1964년에는 한국은행이, 1965~1970년에는 다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1971년 이후부터는 관세청이 작성하여 오고 있는데, 관세청은 1976년 7월 무역통계를 일반통계로 승인받았다.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무역통계(SITC)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1974년 12월부터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이용, 전산처리로 무역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1976년 9월 일반통계로 무역통계 공식작성기관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매년 관세청 전산자료를 가공하여 무역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행정인 UN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통계의 품목분류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품목분류방식이 개정되어도 본 통계는 시계열을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해 연도에 적용된 분류방식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한 후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무역통계 작성 시 적용한 품목분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국제분류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던 1962년부터 1964년까지는 한국은행이 국제표준무역분류 SITC에 의한 분류를 적용하여 수출입통계를 작성하였고, 1965년부터 1970년까지는 재무부(기획

무역통계 적용 품목분류의 변천 과정



재정부의 전신)가 SITC를 기준으로 한 한국표준무역분류(SKTC)를 적용하여 수출입통계 곧 무역통계를 작성하였다.

관세청이 무역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1년 이후에도 몇 차례 품목분류가 변경되었는데 1971년부터 1975년까지는 SITC를 기준으로 한 한국 고유의 무역통계 품목분류를 적용하였으며 SITC는 지금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1976부터 1977년까지는 CCC의 브뤼셀 관세품목표(BTN)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고유분류를 적용하여 무역통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1978년부터 1987년까지는 CCC가 제정하였던 CCCN을 기준으로 한 한국고유분류를 적용하여 무역통계를 작성하였다.

관세청은 1987년 7월부터 HS를 기준으로 한 한국통일상품분류(HSK)를 확정 고시하고 새로운 관세행정 분류방식인 HS를 1988년 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무역통계의 상품분류도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HS는 1992년,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등 5차례에 걸쳐 UN에서 개정되었다.

이상 무역통계에 적용된 품목분류의 변천과정을 도해하면 그림(무역통계 적용 품목분류의 변천과정)과 같다.

관세청과 달리 한국무역협회에서는 UN의 표준국제무역분류(SITC)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세분한 한국표준무역분류(SKTC)에 의거하여 무역통계를 작성한다.

외환통계

●● 외환통계는 외환수급통계와 환율통계, 외환보유고통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외환통계는 제도의 변천과 더불어 작성방법 등이 가장 많이 바뀐 통계이다.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추이

연월일	내용	비고
1945. 10. 01	고정환율제도 시행 • 미군정당국의 대민간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1달러당 15원(圓)의 공정환율 결정	
1949. 06. 13	복수환율제도 실시 • 정부보유 외환에 적용되는 공정환율과 외환의 환금에 적용되는 일반환율로 구분	고정환율제도 (1945. 10~1964. 05)
1949. 11. 12	공정환율의 실세화를 위해 외환 경매제 시행	
1955. 08. 08	외환경매제 폐지, 단일공정환율제도로 통합	
1964. 05. 03	단일변동환율 제도로 변경 •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외환증서율을 그대로 환율에 반영하는 단일변동환율 제도로 변경(실제로는 1달러당 255원으로 고정운영)	단일변동환율 제도 (1964. 05~1980. 02)
1965. 03. 22	외국환 및 외환증서의 수급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률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집중고시율을 고시하는 변동환율제도 시행	
1980. 02. 27	복수통화바스켓 제도 실시 • 미달러화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의 국제시세에 연동하는 복수통화바스켓 환율제도 실시	복수통화바스켓 제도 (1980. 02~1990. 03)
1990. 03. 20	시장평균환율제도 시행 • 외국환은행간매매율 : 미달러화의 경우 매매기준율의 상하 0.4% 범위내로 제한 • 대고객환율 : 매매기준율의 상하 0.4% 이내로 제한	
1991. 09. 02	환율변동폭 확대 • 외국환은행간매매율:매매기준율의 ±0.4% → ±0.6% • 대고객환율 : 매매기준율의 ±0.4% → ±0.6%	
1992. 07. 01	환율변동폭 확대 • 외국환은행간매매율: 매매기준율의 ±0.6% → ±0.8% • 대고객환율 : 외국환은행 자율결정 • 한국은행매매율 : 미달러화 ±0.6%, 기타통화 ±0.8% → 구분없이 ±0.8%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 03~1997. 12)
1992. 09. 01	종래의 기준환율제도(1\$당 480원, 1974. 12. 07) 폐지 • 미달러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을 기준환율로, 기타 통화는 재정환율로 명칭 변경 • 한국은행매매율은 한국은행 자율결정(변동폭 제한 없음)	
1993. 10. 01	환율변동폭 확대 • 외국환은행간매매율 : 기준환율의 ±0.8% → ±1.0%	
1994. 11. 01	환율변동폭 확대 • 외국환은행간매매율 : 기준환율의 ±1.0% → ±1.5%	
1994. 12. 01	환율변동폭 확대 • 외국환은행간매매율 : 기준환율의 ±1.5% → ±2.25%	
1997. 11. 20	환율변동폭 확대 • 외국환은행간매매율 : 기준환율의 ±2.25% → ±10.0%	자유변동환율 제도 (1997. 12~)
1997. 12. 16	기준환율의 단일변동폭 완전 폐지	
1999. 04. 01	미달러화에 대한 기준환율을 매매기준율로, 기타통화에 대해서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명칭 변경	

외환수급통계는 무역통계의 통계 계상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결제기준 통계로서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난 외환의 수급을 수반하는 대외거래

자료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아 1952년 1월 한국은행에서 처음 작성한 이래 매월 외환 결제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이후 1959년 1월에 종전의 KFX 자금 결제실적에 AID 원조자금 결제실적을 추가하고 1963년 1월부터 종전의 경상거래실적에 자본거래실적을 추가함으로써 외환보유액 변동요인의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외환통계는 근대적 체제로 정비해 나아갔고 1976년에는 외환수급통계라는 명칭으로 일반통계로 승인받았다.

외환수급통계의 작성방법도 그간 외환관리제도의 변천과 더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개선되어 오다가 1996년 국제수지통계로 외환수급통계가 통합되면서 현재는 별도로 외환수급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자체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바로 국제수지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경제의 발전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다섯 차례 변경되었다. 1964년까지 시행된 고정환율제도와 이후의 단일변동환율제도 기간 중에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집중기준율을 중심으로 외환을 집중·관리하면서 사실상 환율이 고정된 형태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도입하여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중간단계를 거친 후 1990년대에는 시장평균환율 제도를 도입하여 환율의 일일변동 허용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 때는 환율변동 허용 폭 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추이를 요약하면 표(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추이)와 같다.

국제수지통계

●● 국제수지통계는 IMF의 『국제수지매뉴얼』(BPM)의해 작성되는 통계이다. 국제수지표는 1955년 우리나라의 IMF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행이 1957년부터 편제해왔다. 편제주기를 보면, 1957년에 최초로 1950~1956년 중 국제수지표를 연도별로 작성·공표하였으며 1958년부터는 IMF의 『국제수지매뉴얼』(BPM)에 의거 반기별로, 1965년부터는 분기별로, 1978년부터는 월별로 작성주기를 단축하여 공표해왔다.

현행 국제수지표는 2010년 개정된 IMF의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4년 3월 BPM6에 따른 국제수지통계 개편을 완료하고, 1980년까지 시계열을 소급하였다. 1979년 이전 통계는 IMF의 BPM5의 적용 이후 그 체계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과거 시계열 소급을 하지 않고 있다.

2006년부터는 경상수지의 계절조정계열과 지역별 경상수지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동시에 UN, IMF 등 6개 국제기구가 제정한 서비스무역통계 매뉴얼(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MSITS)에 따른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Extended Balance of Payments Services, EBOPS)도 편제·공표하고 있다.

지역별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은 2009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지역별 금융계정의 경우 기초자료 확보가 어려운 기타투자 등을 제외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편제하고 있다.

국제수지통계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크게 개척기와 개발기 그리고 성숙기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55년 IMF에 가입한 이래 한국은행에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IMF 당국에 제출하는 한편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편제 초기에는 무역통계를 비롯하여 국제수지표 작성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IMF 표준양식에 의한 국제수지표 작성이 불가능하였다. 즉 IMF 편제기준에서 상품의 수출입은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FOB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당시 수출입 기초자료로 외환수급통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내지 못하고 실제 결제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수출입자료로서 외환수급통계를 이용하게 된 것은 당시 세관통계에는 원조물자와 정부조달물자의 수입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에 따라 일반무역은 외환수급통계를 이용하고 원조물자와 관련된 거래는 주한 미경제조정관실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가 IMF 표준양식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도 국제수지가 편제된 195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즉 국제수지 편제에 있어 중요한 기초통계인 무역통계가 한국은행에 의해 정비되면서 수출입통계의 기초자료가 종래의 외환수급자료에서 재무부 세관국의 일반무역 자료와 정부조달물자수입 및 간이통관 자료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상품수입의 f.o.b. 가격 환산 평가가 가능해지는 등 기초자료가 확충되었다. 당시의 국제수지표는 IMF의 『국제수지편제요람』 제2판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1961년 IMF가 일부 기준을 수정하여 제3판을 발간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맞추어 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1960년 이후의 국제수지표를 새 기준에 따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의 상품과 용역계정 중에서 상품수출입 관련 운임보험료가 운수 및 보험 항목으로 구분되는 등 무역외거래의 편제내용이 확충되었다. 1961년 7월에 IMF의 『국제수지매뉴얼』 제3판 출간을 계기로 항목의 분류에 있어서 상품 및 서비스와 이전 거래의 범위를 재조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개념을 국제연합 및 구주경제협력기구(OECD의 전신)의 표준 국민소득계정 체계에 좀더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자본 및 화폐용 금과 부문별 외화자산 및 부채의 변화를 세분하는 등 국제수지통계를 개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이 수출보다 항상 많아 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상태였으며, 환율은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외환집중제도가 실시되었다. 「외환관리법」에 의해 모든 대외거래를 정부가 관리하였으며 한국은행 조사제2부(경제통계국의 전신) 금융통계과의 국제수지계에서 국제수지통계 작성업무를 담당하였다.

1977년에 IMF에서 그동안의 국제통화제도 및 국제거래관행의 변화, 1968 SNA 등 관련통계기준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제수지매뉴얼』 제4판을 발간하고 1979년부터는 이 매뉴얼에 의거 국제수지표를 편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제수지통계는 SNA와 달리 『국제수지매뉴얼』이 개정되면 개정된 매뉴얼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특히 국제수지통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속보성과 통계의 다양성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국제수지통계 작성 업무 전담 직원 수를 늘리고 조직도 확대 개편하였다. 1978년 1월부터 국제수지통계 작성주기를 월별로 변경하였으며 1979년 8월에는 1978년 확정 국제수지통계를 이용하여 지역별 경상수지통계를 작성하였다. 『국제수지매뉴얼』 제4판은 제3판과 비교하여 볼 때 통계편제상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개념, 분석방법, 포괄범위, 계상방법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분류방법에 있어 제3판에서는 경상계정을 상품, 비화폐용 금, 운임 및 보험, 기타운수, 여행, 투자수익, 정부거래, 기타항목과 이전거래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자본계정은 국내거래자를 중심으로 한 부문별 분류를 택하여 리저브 항목과 리저브 제외 금융항목으로 구분하고 리저브 제외 금융항목은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및 기타자본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분석방법에 있어서 제2판이 조정적 공적금융의 파악이 가능한 분석방법을 권고한 것, 제3판이 특정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달리 제4판은 경상수지, 기초수지, 종합수지 등에 의한 분석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국이 자국실정에 맞는 분석방법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제2판과 제3판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셋째, 제3판과 마찬가지로 상계거래에 있어서의 평가변동을 국제수지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리저브(외환보유액) 항목의 평가변동만은 총변동과 함께 리저브변동의 보충자료로서 계상토록 하였다. 금의 화폐화와 SDR의 배분의 경우, 제3판에서는 금의 화폐화, 비화폐화를 외환보유액에 계상할 필요가 없었고 SDR의 배분 및 말소는 리저브에 계상은 되었으나 별도 항목에서 조정하였는데, 제4판에서도 이들을 평가변동과 함께 리저브의 재평가변동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금 및 SDR 항목의 보충자료로 표기토록 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관리법」을 「외환거래법」으로 개정하고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가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국제수지통계의 시계열 단절도 있었다. 제5판 매뉴얼 이행 시 과거 통계를 1980년까지만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이는 1980년 이전의 자료 사정상 제5판 매뉴얼 기준으로 1980년 이전 국제수지통계를 재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96년 외환수급통계를 대외공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제수지통계와 유사하여 통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외환위기 이후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고, 환율도 자유변동환율 제도로 바뀌고, 자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수지통계의 속보성, 정확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는 1999년 이후 점차적으로 국제수지 통계업무 담당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종전의 한국은행 조사 제2부 금융통계과의 국제수지계에서 국제수지통계 작성업무만 담당하는 독립 조직인 국제수지팀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국제수지팀은 다시 국제수지통계 작성업무를 전담하는 국제수지팀과 국제투자대조표통계 작성업무를 전담하는 해외투자통계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국제수지의 변경내용

연도	내용
1955	우리나라가 IMF에 가입함에 따라 IMF 협정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국제수지표 편제 및 보고의무 발생
1957	1950~1956년까지의 국제수지표를 소급 작성하였으나 통계미비로 일반무역은 외환통계를, 원조통계는 주한미경제조사관실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1958	1957 확정 국제수지표 작성 시 IMF 표준양식에 따른 국제수지표를 편제하고 작성주기를 연간에서 반기로 단축
1965	편제주기를 분기로 단축
1978	편제주기를 매월로 단축
1979	IMF의 국제수지매뉴얼의 개편으로 1979. 01 국제수지표 작성방법을 변경하고 1979. 08에는 1978 확정 국제수지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경상수지표 편제
1987	자본거래를 자산항목과 부채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등 현행의 편제체제로 개편
1996	외환수급통계 대외공표 중단하고 국제수지표에 포함
2003	국제투자대조표 작성하여 공표
2006	경상수지의 계절조정계열과 지역별 경상수지를 작성하여 공표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 공표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작성
2009	지역별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작성
2014	BPM6에 따른 국제수지통계 개편 완료
현재발표 자료	· 주요경제지표(월간) · 국제수지(월간보도자료) · 조사통계월보(월간) · 경제통계연보(연간)

2006년부터는 경상수지의 계절조정계열과 지역별 경상수지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동시에 UN, IMF 등 6개 국제기구가 제정한 서비스무역통계 매뉴얼(MSITS)에 따른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EBOPS)도 편제·공표하고 있다. 지역별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은 2009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지역별 금융계정의 경우 기초자료 확보가 어려운 기타투자 등을 제외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편제하고 있다. 현행 국제수지표는 2010년 개정된 IMF의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2014년 3월 BPM6에 따른 국제수지통계 개편을 완료하였다.

2003년 3월에는 대외채무·채권통계와 별도로 IMF의 『국제수지매뉴얼』 등에 따라 일정시점(2001말)에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대외투자) 및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과 그 변동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국제투자대조표를 작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편제주기를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하고 대외채무·채권통계를 국제투자대조표에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다.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는 국제투자대조표상의 대외자산 및 부채를 지역별 통화별로 세분류한 것이다. 지역은 비거주자의 소재국 기준으로, 통화는 계약 표시통화 기준으로 분류한다. 한편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에는 준비자산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준비자산 운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제적 관례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06년 11월, 2002~2005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를 공표하였다. 이후 연간으로 작성하여 잠정통계는 다음해 상반기 중, 확정통계는 연간 국제투자대조표 확정 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 관련 통계 중 스톡통계인 대외채무·채권 통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8년 제1차 국부통계의 일부로 대외부채통계가 처음 작성되었으며, 1977년에는 경제기획원의 주요 업무지표에 1972년도 대외부채통계가 수록·발표된 바 있다. 그 후 1983년 7월, 한국은행 외환관리부에 외채관리계가 신설되면서 대외부채통계는 1970년까지, 대외자산통계는 1979년까지 소급 작성되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IMF는 외채통계 포괄범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총대외지불부담(total external liabilities)’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기준으로 외채통계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총대외지불부담은 당시 세계은행 기준에 의한 대외채무(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직접 상환부담이 있는 계약상의 채무)에 금융기관의 역외차입금 및 국외점포 외국계차입금을 합산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 채무와 금융기관 국외점포의 예수금을 제외한 것이었다.

이어 2001년 11월, IMF를 포함한 8개 국제기구 연합 테스크포스에서 ‘외채통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모든 국가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외채통계를 편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03년 9월, 새로운 기준에 의거한 대외채무·채권통계를 1994년말까지 분기 단위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2007년 6월부터 국제투자대조표의 편제주기가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별도 공표하던 대외채무·채권 통계를 국제투자대조표에

포함하여 한국은행이 발표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통계는 플로우 통계로 2001년 2월27일에 2000년 해외직접투자통계를 작성 발표한 이후 분기 및 연간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통계는 신고금액 기준과 송금금액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분기의 경우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로 작성한다.

대외채무·채권통계 변경내용

연월	내용
1968	- 제1차 국부통계의 구성내용으로서 대외부채통계가 처음으로 작성
1977	- 경제기획원의 주요업무지표에 1972 대외부채통계 수록·발표
1983. 07	- 한국은행 외환관리부에 외채관리계가 신설 - 대외부채통계는 1970까지, 대외자산통계는 1979까지 소급 작성
1997. 12	- 정부와 IMF, '총대외지불부담(total external liabilities)'이라는 기준으로 외채통계를 작성하기로 합의
1998. 10	- 한국은행(국제부), '총대외지불부담' 기준으로 외채통계 편제(재정경제부 발표) - 시계열을 1994말까지 소급하여 작성
2001. 11	- IMF 등 8개 국제기구 연합 태스크포스, 『외채통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지침』발표
2003. 09	- 신 기준에 따라 대외채무·채권통계 편제 시작 - 기존 계열을 1994말까지 분기단위로 소급하여 작성
2007. 06	- 국제투자대조표(IP)의 분기 편제 전환으로 대외채무·채권통계를 국제투자대조표에 포함하여 한국은행(경제통계국)이 발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신고금액 기준으로만 해외직접투자통계를 작성 발표하였고 2010년부터 신고금액 기준과 송금금액 기준으로 연간 해외직접투자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지점 및 사무소의 해외투자 통계자료는 2007년부터 집계하여 제공되고 있다.

03

맺음말

•• 우리나라는 기초통계가 발전하면서 가공통계의 정도도 높아지고 속보성 또한 향상되어 왔다. 또한 기초통계 작성여건이 개선되면서 국제통계기준의 부합성도 더 높아져 왔다.

플로우통계인 수출입통계와 외환수급통계, 환율통계, 해외직접투자통계가 1차 통계라면, 플로우통계이면서 2차 통계이고 가공통계인 국제수지통계는 수출입통계나 해외직접투자통계, 외국인직접투자통계 등이 없으면 작성할 수 없고, 국제수지통계가 없으면 국민소득통계나 국제투자대조표통계도 작성될 수 없다.

대외무역통계에서 품목분류의 경우 작성된 기준이나 분류의 목적에 따라 SITC, HS, ISIC, K SIC 등 다양한 분류가 있으나 점차 분류 간 상호 일치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대외거래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역거래는 FTA로 인하여, 자본거래와 금융거래는 자본자유화, 시장개방 및 IT 발달로 인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통계는 경제현상을 나타내는 거울이므로 대외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국제화, 개방화 등 글로벌 시대에 대외거래통계의 계절변동 못지않게 실질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거래통계는 국가의 통계이며 한 나라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거울이다. 따라서 대외거래통계도 통계작성업무의 전담화, 전문화가 향후 대외거래통계의 정확성 및 효율성과 대외거래통계의 발전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IT의 등장으로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의 홍수 한가운데 있는 것이 통계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선제적으로 대외거래통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대외거래 항목 중 세부통계를 예로 들면 외국인직접투자통계, 해외직접투자통계, IT 대외거래통계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통계작성기관이 가지려면 통계작성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거래에서의 규제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 및 국제화(Globalization)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국가 간 교역거래에 있어서도 IT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교역의 비중이 커지고 거래형태도 다양화되는 등 국제금융 및 무역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 투자 환경의 변화는 국제수지통계 등 대외 관련 통계의 작성방법에도 영향을 미쳐 각국마다 거래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거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세계 전체로 볼 때 각국의 경상수지 합계치는 이론적으로는 영(ZERO)이 되어야 하고, 통계상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작은 수준에 머물러야 하나 불일치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UN에 의해 국민계정체계(SNA)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정비됨에 따라 국민계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국제수지통계도 거주자의 정의, 평가방법, 계상시점 등에 있어서 SNA의 기준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IMF의 국제수지매뉴얼 BPM6는 BPM5에 비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경제주체별 부문 분류체계를 SNA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자금순환, 국민대차대조표, 국민소득 등 여타 거시 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상품 분류 형태의 세분화, 직접투자 및 무역 신용 계상방식 개선 등을 통해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려 하였다.

대외통계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및 실물 통계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작성기준 및 방법을 상호 연계 통합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과 시의성이다. 곧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국민소득 통계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어난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 지출상황 등을 통합하여 나타내는 통합 통계표(종합표)라고 한다면,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경제주체의 모든 대외거래를 하나의 표로 통합한 통계이다. SNA에서 GDP 통계와 국제수지통계는 5대 국민 계정 중 하나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수지통계는 외화(미달러화) 기준으로만 작성 발표되는데 GDP 통계는 원화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국제수지와 SNA의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통계 또한 현재의 달러 기준과 더불어 원화 기준으로도 작성되어야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국제수지통계와 국민소득통계의 연계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김적교, 『경제정책론 - 한국의 경제정책』, 박영사, 2013.
- 박기주·김낙현, “한국의 장기무역통계와 무역지수(1877~1963)” 『경제학연구』 제57집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09.
- 윤용만·여택동 외, 『한국의 경제정책』, 박영사, 2012.
- 재무부·한국산업은행, 『한국외자도입 30년사』, 1993.
- 통계청, 『한국통계발전사(II)』, 1992.
- 한국은행,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의 이해』, 2009.
- 한국은행, “신편무역통계에 관한 해설”, 『조사월보』 1959년 4월호, 1959.
- 한국은행, “무역통계개편에 관한 해설”, 『조사월보』 1962년 8월호, 1962.
- 한국은행, “무역통계작성방법 : 한국의 무역통계해설을 검하여”, 『통계실무총서』 제9집, 1964.
- 한국은행, 『우리나라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2014.
- 한국은행, 『우리나라 국제투자대조표의 이해』, 2014.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2010.
-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2004, 2014.
- 한국은행, 『한국은행 60년사』, 2010.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 - 어제와 오늘』, 1995.
- 한국은행, 『한국의 외환관리』, 1981.
- IMF,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2010.
- U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2010,” 2010.

History of Korea Statistics

한국통계발전사
경제통계

위대한 숫자의 역사

발행처 통계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Tel. 042-481-2128 <http://kostat.go.kr>

발행인 유경준
발행일 2015년 12월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839-14

편집디자인 (주)다나기획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5, 3층
Tel. 02-545-0623 <http://www.dani.co.k>

총괄책임 추기숙
윤필 정제한
진행 함정임
교정교열 김성원, 송지원, 김이화
아트디렉팅 한지희
디자인 양혜진, 김재한

ISBN 978-89-97110-75-9

Copyright©2015, by Statistics 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통계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